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7호 2020. 3



# 차례

## 특집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뿌리와 한계(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

전인갑 ▣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 - '민족'과 '천하'의 길항(拮抗) 7

왕원주 ▣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 근대 동아시아인 정치 개념의 범주 49

정치호 ▣ 량치차오[梁啓超]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新秩序) 모색(摸索) 91

김승욱 ▣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 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127

## 논문

김재운 ▣ 4,800~4,100년 전 신석기시대 「압록강문화권」의 고찰  
-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163

윤휘탁 ▣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國境邊緣地帶)에서의 항일투쟁과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조선의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197

윤효정 ▣ 일제 말 『매일신보』의 조선인 학병 동원 담론의 양상과 특징 243

임송자 ▣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과 지역민 273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23



# Contents

## Special Issue **Roots and Limits of Nationalist Historical Perceptions** (Korea-China History Forum: History Division)

- Jeon Ingap ■ Paradigm Shift in State Building and Nationalism 7
- Wang Yuanzhou ■ Political Dynamics in East Asian Countries: Attempts to  
Establish a Modern International Order within the Region 49
- Jeong Jiho ■ Liang Qichao's "Guoxing (國性)" Theory and the Search for a  
New Order of "Zhonghuaminzu (中華民族)" 91
- Kim Seongwook ■ Acceptance of Nation Concepts and Science in Early  
Modern Chinese History: The Case of Liang Qichao (梁啓超) 127

## Articles

- Kim Jaeyoun ■ A Review of the Amnok River Cultural Sphere during the  
Neolithic Period between 4,800 and 4,100 Years Ago 163
- Yoon Hwytak ■ Japan's Response to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the  
Border Area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滿洲國) 197
- Yoon Hyojung ■ Korean Students Forced to Volunteer for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243
- Yim Songja ■ Partisan Activities in the Southern Jeolla Region and its Locals  
during the Korea War 273

## 특집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뿌리와 한계  
(한중역사포럼: 역사분과)



#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

– ‘민족’과 ‘천하’의 길항(拮抗)

전인갑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문제의 소재
- II. 문명제국 패러다임의 해체: ‘천하’에서 ‘민족/국가’로
- III.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국가건설
- IV.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
- V. 맺음말: ‘국민국가’에서 ‘문명대국’ 패러다임으로



## I. 문제의 소재

중국제국은 스스로를 천조(天朝)라 칭하고 지배영역을 천하로 확장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고 주도적으로 운영한 질서를 천하질서, 자신들이 생산한 이념과 가치를 천하주의라 하여 ‘중국의 질서’와 ‘중국의 가치’를 보편화했다. 그러나 실질은 그렇지 않고, 중국 스스로도 자신의 패권에 상응하는 경쟁자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처럼 보편적 존재로 인식했음은 물론이고 중국 밖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처럼 인식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유방식을 천하주의(天下主義)라고 한다. 전통시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천하주의는 보편주의의 다른 이름이라 하겠다. 이러한 보편주의를 전제로 작동되는 질서를 천하질서라 하고 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을 천하체제라고 부른다.

진의 시황제 이래 중국제국은 보편제국/문명제국을 표방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었다. 보편제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은 패권(霸權)과 문명(文明)이었다. 우선 패권의 측면에서 보면 제국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질서를 구축하여 제국의 내경(內境) 전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중화질서(中華秩序)-를 구축하고 자신의 필요[時變]에 따라 그 질서를 변경하면서 유지했다. 중화질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집권질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로 이원화하여 작동되고 있었다.

문명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제국은 천(天), 도(道), 성(性), 리(理) 등으로 개념

---

\* 투고: 2020년 1월 7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3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역사포럼(2018~2019)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작성된 논문임.

회한 보편가치/이념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의 표준(Global Standard)’으로 확산시켰다. 말하자면 보편성은 중국 문명이 생성·진화하는 대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를 대원칙으로 삼은 중국 문명이 종극적(終極的)으로 지향하는 세계는 대동세계였고, 중국 문명의 진화는 대동세계의 구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보편가치/이념이 정립되면 이를 지상에 구현하기 위한 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유교의 제반 규범과 제도가 그것이었다. 전통시대 중국인들은 그러한 가치와 이념에 따라 사유하고, 그러한 규범과 제도에 맞게 행동했다. 말하자면 당위로 여긴 패러다임이 정립된 것이다. 우리는 전통시대에 존재했던 이 패러다임을 유교적 사유방식 혹은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 패러다임을 문명제국 패러다임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구현하려는 질서를 천하질서, 이 패러다임을 구현하려는 시스템을 천하체계라 부른다.

중국의 근현대사는 보편제국/문명제국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이 붕괴를 천하질서의 해체 또는 중화질서/중화체제의 해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보편제국/문명제국은 국민국가(nation state, 이 글에서는 민족국가라는 개념 대신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사용)로 바뀌어야 했고, 천하체제(협의로는 중화체제)는 ‘평등’한 국가들이 병립하는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천하질서(협의로는 중화질서)는 대내적인 면에서는 집권질서가 분권질서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위계적 질서: 책봉·조공질서)가 조약질서(treaty system)로 불리는 근대적 국제질서(‘대등’한 질서)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유의 패러다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는데,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 민족주의적 사유방식, 말하자면 규범과 질서, 체제와 제도의 원천인 이념이 천하주의(천하/문명)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 국민국가/민족)로 바뀌어야 했다.

근현대 중국인에게 근대의 수용이란 이러한 변화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 150여 년 동안 중국인들과 동아시아인들은 민족주의에 충실하게 헌신하고, 국민국가 건설에 매진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식’의 전변(轉

變)은 양무운동이 실패로 귀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유방식-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 변화의 본질은 천하주의-보편성-를 대전제로 정립된 문명제국 패러다임이 민족주의를 상식으로 여기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20세기의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여러 국가가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했던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21세기에 접어들어 20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마치 역사적 소임을 굳건히 완수하려는 늙은 장수처럼 여전히 동아시아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동아시아와 중국의 근현대에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시대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의 보편가치와 개념, 민족주의, 국민국가/민족국가를 ‘진리’로, 그 실천을 당위로 여기는 사유방식”<sup>1</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패러다임은 근대 서구가 생산하고 오늘날의 미국이 심화 발전시킨 이념과 가치 그리고 개념을 전제로 자신과 세계를 사유하고, 실천의 준거로 삼는 사유방식이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정립되면서 중국에서는 다음 세 개의 과제가 시대적 명제(命題)가 되었다. 즉 ‘근대적 보편가치’ 수용(내향성),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민족주의·반제·반패권’ 실현(외향성)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3대 명제였다. 이 패러다임은 내향성과 외향성 양면을 내포했다. 내향성은 ‘근대적 보편가치’의 수용이라는 명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국민국가 내부의 민주주의 확충을 비롯하여 자유, 평등, 인권, 시장(市場) 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내향성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 안정성과 응집력-패어뱅크(J. K. Fairbank)의 표현을 빌리면 “놀라운 타성(remarkable inertia)”<sup>2</sup>-그리고 (정치) 문화전통으로 인하여 항상 격렬한

- 1 전인갑, 2019,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담론의 반전」, 『현대중국연구』 21-2, 118쪽.
- 2 John K. Fairbank, Edwin O. Reischauer & Albert M. Craig, 1965,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문화논쟁과 국가건설 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경제·사회적 쟁론을 수반했다.<sup>3</sup>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sup>4</sup>이라는 명제 그 자체는 이념(理念)과 정파(政派), 신구(新舊)와 보혁(保革)을 뛰어넘어 근현대 중국인이 일치하여 추구한 과제였다.

외향성은 ‘민족주의·반제·반패권’ 실현이라는 명제에서 명확히 보인다. 이 명제는 국민국가의 자주와 독립, 반식민 나아가 반패권-대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할 뿐 아니라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국가 간의 ‘대등’한 공존을 모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외향성이 민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세계 전체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점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민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한 국가건설의 핵심 명제였다. 그리고 20세기 후반기부터 이 패러다임의 외향성은 동아시아 각국 간, 한중 혹은 한일 간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갈등의 토양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동북 공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중·일의 각종 역사 현안과 그로 인해 확산되는 외교 분쟁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 각국이 추구하는 명제에 분화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외향성, 한국은 내향성이 국가건설의 주선율(主旋律)이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패러다임은 청 말 변법운동 시기에 중체서용론적 국가건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모색되는 환경 속에서 생성되어 오사(五四)에서 시대적 명제로 정립되었다. 그 후 이것은 20세기 중국이 숙명처럼 추구해야 했던 ‘우상’이 되었다. 후술

p. 404.

- 3 이 문제는 중서문화 논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체서용론 등장 이후 100여 년 이상의 사상/문화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이 개념들의 중국적 재개념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이하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국가건설(state building)은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하는 바와 같이 량치차오[梁啓超]는 이 패러다임 생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문명’이 아니라 ‘민족’에서 중국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발신한 것은 오사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 패러다임은 장구한 중국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중국 고유의 천하주의적 사유방식- 특히 중국의 전통적 국가론<sup>5</sup>-과는 매우 이질적인 사유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근현대에는 이 패러다임에 압도된 시대였다. 수많은 중국인은 이것을 ‘중화 생존’의 대전제로 여겼다. 양무운동의 실패로 제국체제가 본격적으로 붕괴의 길에 접어들면서부터 20세기가 종언할 때까지 중국은 국민국가 건설에 매진한다. 그 길은 길고도 긴, 그리고 혁명과 건설, 혼란과 격동, 실패와 좌절, 기대가 혼재하는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그럼에도 국민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강한 중국’을 회복하려 했던 고난의 여정은 20세기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강국몽(強國夢)은 청말민초(清末民初)부터 최근까지 거의 모든 지식인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의 공통된 염원이었다. 이 염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구상이 제시되었다.<sup>6</sup> 권력 엘리트들도 자신들이 디자인한 ‘강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집권 경쟁에 돌입했다. 근현대 중국의 지식인 엘리트의 체제구상과 권력 엘리트의 집권 비전의 대전제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었다.<sup>7</sup>

량치차오가 ‘천하 붕괴의 위기 상황’에서 제시한 신중국(新中國) 구상이나 쑨원[孫文]이 창도한 삼민주의 기반의 국가건설 구상, 심지어는 연성자치론적

5 이에 대해서는 전인갑, 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학고방, 23~24쪽과 71~82쪽을 참조.

6 강유웨이, 량치차오 등 立憲派, 쑨원 등 革命派의 체제구상에서부터 訓政論과 憲政論의 충돌 등 다양한 구상이 경쟁한다.

7 물론 국민국가 모델이 아닌 다른 선택지도 있었다. 예컨대 강유웨이의 체제구상이다. 그는 중국이 보편제국에서 국민국가 중의 하나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그리고 이를 인식했음에도-에서도 문명과 보편가치를 국가의 根基로 삼는 문명국가를 중국이 만들어가야 할 국가 모델로 제시했다.

분권국가 구상도 대전제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었다. 장제스[蔣介石]의 중국국민당,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공산당 모두 국민국가 완성을 ‘강한 중국(강국몽)’ 회복의 시작과 끝으로 여기고 그 실현에 매진했다. 장제스의 중국국민당은 자본주의적 건설의 길을,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은 비(非)자본주의적 건설의 길과 사회주의적 건설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다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또 다른 문제는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고자 한 국민국가가 서구의 국민국가가 아니라 중국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국민국가라는 점이다.<sup>8</sup> 엄밀하게 말하면 근현대 중국인이 추구한 국민국가는 중국제국의 유산과 서구 근대의 창안물(국민국가)을 결합한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제국성(帝國性) 국민국가(國民國家)라고 정의했다.<sup>9</sup>

논지 전개와 논지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지난 100여년의 국가건설 과정과 그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가건설 과정을 현재까지 총 여섯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변법운동부터 1911년까지로 국가건설의 모색 단계이며, 제2단계는 1912년 중화민국(中華民國) 성립부터 1927년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성립까지로 국가건설의 방향 정립 및 주체 형성 단계이다. 제3단계는 1928년 남경국민정부 등장부터 1937년 중일전쟁 전까지로 이 시기는 자본주의적 국가 건설의 실험 단계이다. 제4단계는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거쳐 1954년 헌법제정까지로 자본주의적 국가건설과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이 경합하는 단계이다. 제5단계는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제

8 제국의 유산이란 유구한 전통 속에서 생성·진화한 중화문화를 단절시키지 않고 연속시켜야 하는 의무(문명국가, 보편국가의 구현)와 이전 왕조가 확보한 영토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무를 의미한다.

9 전인갑, 「제국에서 제국성 국민국가로(I): 제국의 구조와 이념」(『중국학보』 65, 2012)과 「제국에서 제국성 국민국가로(II): 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중국학보』 66, 2012)에서 이 문제를 상론했다.

〈표 1〉 국가건설 6단계

	단계	시기	방향
청 말	1단계	1895~1911년 제국질서/집권질서 와해, 신해혁명	제국의 국민국가적 재구성
중화민국	2단계	1912~1927년 분권질서 실험, 국민혁명	국가건설의 주체 형성 제국 유산 계승한 국민국가
	3단계	1928~1937년 집권질서 회복, '건설 10년'	자본주의적 국가건설
	4단계	1937~1954년 중일전쟁, 내전	자본주의적 방식과 비자본주의 적 방식의 경합
중화인민공화국	5단계	1954~1982년 집권질서 확립	사회주의적 국가건설
	6단계	1982~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비자본주의·비사회주의 방식) 제국성 국민국가

정부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1978~1982년)까지의 시기로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에 매진했던 단계이다. 제6단계는 1982년 헌법 전면 수정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국민국가 건설을 향한 20세기 중국의 실험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방식으로 귀결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캉유웨이[康有爲]나 량치차오 그리고 쑨원이 그렇게도 복원하고자 염원했던 중국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제국성 국민국가가 국내외적으로 내실을 충실히 확충해가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21세기 벽두부터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문명사적 충격', 즉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를 대체하려는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시화되는 현상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의 위상이 20세기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말하자면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편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위상으로 부상했다는 전제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20세기의 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중국이라는 '천하'의 존망이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 근대가 생산한 ‘진리’를 수용하여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질서와 이념의 설계자로 나서려는 존재로 급부상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전변(轉變)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 특히 민족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통해 20세기 중국과 동아시아의 국가건설 방향을 결정했던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민족주의가 여전히 지속할 것인가, 혹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제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첫째,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민족주의는 국가건설의 단계별로 발현되는 양상이 상이한바, 이는 이 패러다임이 시변(時變)에 따라 진화(進化)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진화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러한 변이가 해당 단계의 국가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둘째, 근현대 중국인들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수단’으로 어떤 중국을 디자인하려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 중국의 엘리트들이 ‘진정으로’ 서구적 맥락에서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했던가?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민족주의/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개념은 서구적 맥락에서의 민족주의/내셔널리즘 개념과 같았던가를 검토하고자 한다.<sup>10</sup> 이 작업은 근현대 중국인들이 만들어온 중국의 민족주의, 그 본질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이 작업 과정에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의 외피를 쓴 보편주의였다는 사실, 그리고 민족주의와 중화주의가 동일한 의미로 상통(相通)했다는 사실이 다소라도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국력이 부상했을 때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국가 중심에서 문명/보편이념,

10 예컨대 중화주의를 중화 민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호명은 중화주의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풍부한 함의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민족주의라는 개념과 중화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각 개념이 만들어진 지역의 역사성-전통과 사회문화·정치적 조건, 사유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들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와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근현대 중국인들이 추구했던 민족주의의 본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의 해명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민족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세기 내내 그토록 집착했고, ‘진리’로 숭상했던 반식민, 반제, 반패권적 언설은 낮은 목소리로 전락[반패권론(反霸權論)의 저조(低調)]한 반면 초대국(超大國)의 패권적 언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치(旗幟)하에 사회적 논란 없이 당연한 듯 확산[대국론(大國論)의 고조(高調)]하는 현상이 중국에서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의 징조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패러다임 전환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 발신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중국의 보편주의) 모색의 실태와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현존의 보편가치 특히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은 뿌리가 다른 세 개의 이념-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을 융합하여 창안한 미국의 보편이념이다. 중국은 지금 이것과의 경쟁 혹은 대체한 패러다임 창안에 도전하고 있다. 이 글은 초보적이거나 이 돌파(突破)에 도전하는 지식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의 실험을 추적, 분석하면서 패러다임의 새로운 돌파 가능성을 가늠해보려 한다. 이 작업은 중국이 어떠한 미래를 기획하는가? 말하자면 어떤 중국을 재조(再造)하고 있는가를 전망하는 일이기도 하다.<sup>11</sup>

---

11 오늘날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진통기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 중심의 사유방식을 止揚하고 상호 변영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인식의 패러다임을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창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이 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입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 II. 문명제국 패러다임의 해체: ‘천하’에서 ‘민족/국가’로

근대 중국에서 기존 상식이 전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양무운동의 실패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를 계기로 천하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생성·진화해 온 ‘문명제국 패러다임’-이하 이 개념은 ‘천하’로 표현한다-이 해체되고 내셔널리즘을 전제로 생성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하 이 개념은 ‘민족/국가’로 표현한다-이 새로운 상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천하’에서 ‘민족/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양무운동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이후 심각하게 동요하던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제국의 내적 질서(군현질서)와 외적 질서(조공질서)-를 강력한 군사력 확보와 근대적 산업 육성을 통해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3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때 중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두 가지였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집권질서와 이를 유지하던 시스템이 심각하게 약화된 반면 분권적 경향은 대폭 강화되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이 ‘복수의 중국’으로 분화하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중국제국을 강력한 하나의 중국으로 묶어둔 제민지배(齊民支配)의 원리가 심각하게 약화된 것이다. 둘째, 조공질서를 비롯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제도와 체제들이 급속히 무너져, 중국이 세계질서의 편성자이자 운영자의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화이(華夷)의 원리(原理)가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두 현상을 두고 우리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붕괴했다고 말한다.

대청제국은 중국 역사상 천하질서를 가장 전형적으로 완성한 천조(天朝)임을 자임했다. 이념적·영토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모두 천하일통(天下一統)의 국면을 완성했다고 자부했다. 이를 두고 대일통(大一統)의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말한다. 대일통은 중국이 자신과 주변 지역을 공간적으로 통일한 초대형 정치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념이다. 대일통은 중국이 지배하는 영역에 대한 영토적 통일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 그리고 세계가

〈표 2〉 천하질서/대일통 체제의 구조<sup>12</sup>

이념의 영역	규범의 영역	제도의 영역
천하주의/천하관 (유교적 보편주의)	제민(齊民)지배의 원리 천하질서	집권질서: 군현제도 관료제도 수전(授田)제도
	화이(華夷)의 원리	조공질서: 책봉조공제도 화친제도 기미(羈縻)제도 호시(互市)제도
보편주의+제국질서=대일통(문명과 패권이 결합한 이상적 제국질서)		

하나의 이념과 질서로 통합을 이루는 구조적 통일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 대일통은 중국 내외에 대해 압도적인 패권을 행사하는 데서 출발하여 문화적 보편성의 확보로 완결된다. 대일통의 중국은 단순히 압도적인 패권을 가진 제국이 아니라 문명과 패권(제국)이 결합한 문명제국이었다. 대일통의 구체적인 형상은 시대에 따라 변모하지만, 그것은 전통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하는 중국인의 세계관이며, 실현해야 할 중국제국(中國帝國)의 이상(理想)이다.<sup>13</sup>

근대에 와서 천하질서/대일통 체제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함의한다. 이 해체는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집권질서가 해체되는 반면 분권질서가 대폭 강화되어 중국제국의 내적 통합력이 크게 약화되는 국면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강력한 내적 역량-중국 자체에 대한 강력한 통합력-을 기초로 유지되던 보편이념의 제공자로서의 위상과 세계질서의 편성자이자 변경자로서의

12 전인갑, 2018a, 「비대칭적 국제질서」, 『서강인문논총』 51집, 136쪽.

13 대일통의 이상은 대청제국에 의해 가장 전형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는 한족의 중국(중화=한족=중국)을 ‘실체가 있는’ 보편의 중국, 문명의 중국으로 발전시킨 것이 대청제국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청제국은 한족의 세계를 포함하여 위구르, 몽골, 티베트 등 역사상 중화의 세계와 경쟁하던 유목의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다. 이 점에서 대청제국은 이념적으로 천하의 주인을 자처한 한족의 제국과는 달리 실체가 있는 천하의 주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천하를 아우르는 보편적 지배자로 한족, 위구르, 몽골, 티베트의 상위에 만주족이 위치했고, 만주족-대청제국의 지배자-은 皇帝이자 轉輪聖王, 이슬람의 수호자, 칭기즈칸의 계승자로 보편이념의 담지자였다.

권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문명제국과 보편제국의 자리에서 수많은 국민국가 중 하나의 국민국가로 전락했음을 뜻한다. 이 시기에 문명국 제국이 분리되는 국면, 즉 보편주의를 전제로 유지되던 문명제국이 붕괴하는, 중국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당위로 생각하던 문명 제국 패러다임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중국인들은 이러한 국면을 ‘천하(天下)의 와해(瓦解)’(문명의 붕괴)로 받아들였다.

국가건설 제1단계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국가(민족)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제3의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사실 이 시기부터 문명의 중국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재건할 것인지 혹은 국민국가인 중국으로 전환하여 강한 중국으로 귀환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명담론과 체제구상이 각축을 벌였다.<sup>14</sup> 그리고 대청제국의 집권 엘리트 역시 대일통와해의 위기, 즉 문명제국 질서(=천하질서)와 체제(=천하체제)의 붕괴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찾아 실천하는 데 매진하게 된다.

지식인 엘리트 사이에서는 청불전쟁을 전후한 1880년대 후반부터 양무운동의 방식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자성론이 제기되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제도개혁론이 분출했는데,<sup>15</sup> 그것이 바로 변법론이다. 변법론의 이론적 토대는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이었다.<sup>16</sup> 이 담론은 천하주의적 사

1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색은 현재까지도 지식인과 권력 엘리트 사이에서 초미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5 1880년대와 1990년대에 변법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들 변법론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불전쟁과 세 차례의 영국-미얀마 전쟁, 이리위기와 대만사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일본의 부상은 대청제국이 주도한 지역질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대외적 굴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식인들은 양무운동의 파탄을 심각히 자각하고 대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양무운동 대체이론-을 모색하게 된다. 이것이 西學(정치제도)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법론이다. 둘째, 부강을 이루기 위해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데, 당시 양무기업의 운영 이념과 경영방식[官辦, 官督商辦]은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16 중체서용론은 道(유교적 보편가치=제국의 질서, 체제, 제도의 기반이자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구 근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명담론이다. 이 담론은 중

유방식과 개념으로 서구의 가치와 개념을 수용하려 시도한 시기에 제기된 중화 본위 수호를 위한 변통적(變通的) 문화론(文化論)이자 변통적 질서구상(秩序構想)이었다. 이러한 변통론은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구의 근대성-가치, 질서, 제도-을 기존의 사유방식과 개념-말하자면 중국의 사유방식과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흡수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sup>17</sup> 여하튼 이 문명담론 등장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체서용의 방식으로 제반 질서와 규범, 제도를 재구성하여 중화 본위의 중국을 증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하나의 유력한 사조로 지속되고 있다.

청일전쟁 후 ‘과분(瓜分)의 위기’ 속에서 체제개혁론은 정치운동으로 전환하여 변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체제구상 중 주요한 흐름은 입헌군주제 구상, 공화제(共和制) 구상, 공교국가(孔敎國家) 구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량치차오가 주도한 입헌군주제 구상과 쑨원 등 혁명파(革命派)가 주도한 공화제 구상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따르는 구상이었고, Kangyuewei의 공교국가 구상은 문명제국 패러다임의 변종이었다. 이 세 흐름이 뒤섞이면서 청말민초의 격동적인 정치변동이 연출되었는데, 예컨대 신해혁명은 량치차오의 구상과 혁명파의 구상이 결합한 결과물이었다.

대청제국 집권 엘리트의 위기 타개 전략 모색은 지식인 엘리트의 고뇌보다

---

국의 개념과 용어로 중국과 세계를 인식하는 사유방식을 전제로 서구의 개념과 용어로 중국의 사유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점에서 ‘서구’는 수단에 불과했다.

- 17 이러한 경향은 청말 지식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법-萬國公法-을 받아들일 때, 천하주의가 국제법의 도덕적 가치를 긍정하는 이론적 토대였다. 또한 국제법을 국가 간 관계를 지키는 道, 理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해는 천하주의라는 사상적 토대가 청 말 국제법 이해의 기초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전도는 청 말 지식인의 이러한 사유는 중국의 전통사상의 체계 속에서 국제법을 해석하여 대동세계 질서, 즉 天下主義의 현대적 이론 근거로 삼으려 한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중국 문화의 道統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었다고 해석한다. 이 문제는 田壽, 2016, 『天下主義與民族國家-晚清國際法詮釋』,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總第249期)를 참조.

훨씬 현실적이고 전방위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추진한 국가전략을 신정(新政)이라 총칭한다. 태평천국운동 이후 중앙권력의 통합력이 크게 약화되고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화가 불가역의 시대적 흐름으로 확산하고 있었다. 결국 신정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다. 이들의 모색이 비록 짧은 기간의 실험에 그치면서 실패했지만, 이들이 만든 제국 재구성 전략은 그 후 20세기의 국가건설 전략과 정치, 사회, 경제 등 국가 전반의 제도 정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18</sup>

국가건설 제1단계에는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로서의 내셔널리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우선 이 단계에서 운위되는 민족은 량치차오의 민족 이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개념인 국족(國族), 혁명파의 슬로건인 ‘구제달로(驅除韃虜), 회복중화(恢復中華)’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족(種族, ethnic group)을 서구식 민족 개념으로 이해했다. 즉 종족=민족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민족주의는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논리가 아니라 한족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고 비한족을 배타의 대상,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배타적 종족주의

18 필자는 신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신정이 구상한 중국제국 회복 전략이 작금의 중국에서 부활하고 있는 듯하여 다소 장문으로 이를 소개한다. “근현대 전 시기에 걸친 제국체제의 근대적 전환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구조개혁은 청 말 신정(新政)에서 그 기본 틀이 제시되었다. 이 사실은 [...] 중국의 국민국가는 제국체제의 근대적 재구성 과정에서 건설된, 서구와는 다른 성격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신정의 최상위 목표는 근대화를 추진하여 집권적 국가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제국의 영역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치 전통 중국제국이 강력한 집권적 국가권력을 통해 광대한 영역을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제국의 안정과 변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제국운영 비결의 연장선 속에서 구상된 목표였다. 이것은 신정이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신정에는 근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진된 근본적 구조 변동을 위한 개혁이었다는 변화의 측면이 있다. 이와 동시에 신정은 역사상의 한 왕조(국가권력) 혹은 한 시대가 중국사의 정통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중국’ 유지를 위한 역사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했던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는 지속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추진된 정치, 사회적 구조개혁의 궁극적인 지향 역시 그러했다. 이 점에서 중국의 국민국가는 중국(및 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전인갑, 2016, 앞의 책, 116~117쪽(일부 문장은 수정).

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러한 민족/국가 개념 이해는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민족/국가 이해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초보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지식인들이 이해한 민족과 국가 개념은 서구식 국민국가 건설과 결합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국가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는 중화민국 성립 이후 ‘중화민족’ 개념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 Ⅲ.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국가건설

국가건설의 제2단계는 중화민국 성립(1912년)부터 남경국민정부 성립(1927년)까지이다. 20세기 중국사에서 격동적인 사건은 이 시기에 다수 발생했다. 공화제(共和制) 국가(國家) 출범, 송자오린[宋教仁]의 의회정치 실험과 좌절, 위안스카이[袁世凱] 정권의 등장과 홍헌제제(洪憲帝制), 군벌혼전, 오사운동(五四運動)과 국민혁명[國民革命, 대혁명(大革命)]이 그것이다. 이 단계는 그야말로 정치, 사회, 사상적으로 혼돈의 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오사는 혼돈의 시대가 낳은 새로운 활력이었다는 사실이다. 오사는 새롭게 만들 국가의 이념, 가치, 제도 그리고 국가 구성원의 사유방식, 생활방식 등 모든 부문에서 ‘표준’을 제시했다. 이 점에서 오사 시기의 다양한 문화 담론은 제국 시기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중국에 정립하고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2,000여 년 동안 상식으로 여긴 황제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공화국이 제국을 대체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해혁명 직후의 시대적 상황은 공화정치, 의회정치가 중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것이라는 분위기와 자신감이 팽배하고, 이상주의(理想主義)가 사회 전반을 압도하는 분위기였다. ‘강한 중국’ 회복[強國夢]을 향한 중화민국의 도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태생적으로 국가건설을 추진할 만한 강력

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었다. 신해혁명 그리고 중화민국 탄생 자체가 분권적 흐름이 만들어낸 대청제국 붕괴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대청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제국이 붕괴한 결과 중화민국이 탄생했고, 결과적으로 신해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신해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과 군벌 혼전의 근원이 여기에 있었다.

각 성(省)이 대청제국의 지배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독립을 선언한 각 성이 모여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이로 인해 신해혁명 이후의 지역[地域, 군벌(軍閥)] 할거(割據)는 불가피했다. 중앙집권적 국가건설을 도모했던 위안스카이의 실험이 끝나자 곧바로 군벌체제가 등장하고 중국은 ‘항상적(恒常的) 전시상태(戰時狀態)’로 빠져들었으며, 신중국 건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태평천국운동 이후 가속화된 분권 경향이 군벌 시기에 이르러 정점에 달한 것이다. 그리하여 “군벌로 상징되는 분권적 경향(의 강화로) 공화제에 의한 국가건설은 좌절의 위기에 봉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권적 경향의 강화, 다시 말해 영토적 분열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전제가 되었던 제국의 영토적 통합성의 계승과 유지라는 전제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므로民国 초 그 어떠한 권력도 국가건설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다.”<sup>19</sup>

이에 신해혁명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구질서, 구가치, 구관념의 철저한 청산과 ‘민주와 과학’을 원리(原理)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문화혁명이 오사신문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sup>20</sup> 적어도 국가건설 제2단계의 지식인 사회에서 전통의 청산과 단절은 새로운 중국을 디자인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절박한 문명사적 어젠다로 공유되었다. 오사의 주인공들은 청산/단절의 대안으로 근대 서구(modernity)의 수용, 즉 서구의 가치와 개념, 사유방식, 규범과 제도의 수용을 제시했다. 이것은 근대 서구가 창안(創案)하고 정립(定立)하여 오늘날 문명의 표준(서구의 보편주의)으로 진화한 패

19 전인갑, 2016, 앞의 책, 112쪽.

20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인갑, 2016, 위의 책, 308쪽을 참조.

러다임이다. 필자는 국가건설 제2단계의 문화담론과 국가건설 방식을 청말민초의 ‘변통형(變通型) 문화중건(文化重建)’과 구분하여 ‘수용형(受容型) 문화중건(文化重建)’이라 개념화한 바 있다.

이 변화가 갖는 결정적인 의미는 천하주의(天下主義, 유교보편주의(儒教普遍主義)=중국의 보편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정립(定立)·진화(進化)한 문명제국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쇠퇴하고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새롭게 당위적 권위를 확보하여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사가 남긴 역사적 공헌은 사유방식과 사유체계의 혁명,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말하자면 “중화를 문명의 표준으로 여긴 사유방식이 서구를 문명의 표준으로 삼는 사유방식으로 전환되는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유교적 보편가치(오상(五常): 인의 예지신(仁義禮智信))를 진리로 여기는 사유방식이 서구가 창안한 근대의 보편가치(자유, 평등, 민주, 공정, 휴머니즘 등)가 대원칙이 되는 사유방식으로 대체”된 것이다.<sup>21</sup>

전술한 바와 같이 오사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정립되었다. 그것은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근대적 보편가치’(내향성), ‘근대적 국민국가’, ‘민족주의·반제·반패권’(외향성)이라는 3대 명제(命題)를 해결해야 하는 패러다임이었다. 전인갑(2019)에서 3대 명제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다.<sup>22</sup> 오사는 서구가 만든 보편가치(이하 서구의 보편가치로 표현)가 중국이 수용해야 할 보편가치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를 열었다. 그리하여 이제 중국인들은 “서구의 보편가치를 전제로 서구의 개념과 용어로 사유하고, 그러한 사유방식에 따라 중국을 만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사유의 기준과 실천 방식이 ‘중화’에서 ‘서구’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21 전인갑, 2019, 앞의 글, 130쪽.

22 이하 오사에서 정립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3대 명제에 대한 설명은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담론의 반전」, 128~132쪽(전인갑, 2019)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이 경우 인용 표시로 구분) 혹은 수정하여 인용하고, 논의를 발전시켜 일부는 새로이 서술했다.

것은 서구의 스탠더드(the Western Standard)가 중국의 스탠더드(Chinese Standard)를 대체하는 인식체계상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근대의 보편가치’ 수용 문제는 수용의 폭과 방식을 둘러싸고 격렬한 문화논쟁을 초래했다. 중서문화논쟁, 동방문화열, 전반서화론, 중국문화본위론, 신유학 등이 그것이다. 20세기 내내 진행된 중국의 문화논쟁들은 오사에서 제기된 ‘근대의 보편가치’ 수용 문제가 단순히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과 사상체계 속으로 서구를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 고뇌의 산물이었다. 고뇌의 깊이만큼 논쟁은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문화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오랫동안 반복된 여러 문화논쟁이 남긴 하나의 성과를 꼽으라면 근대의 보편가치와 중화의 보편가치가 일방적으로 수용 혹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융합되어 문화담론-어떤 중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의 새로운 차원이 하나씩 개척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민족주의·반제·반패권’은 오사에서 정립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3대 명제 중에서 강국몽을 상상하던 중국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추구했던 명제였다.<sup>23</sup> 이 명제의 실천은 수많은 희생을 수반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중국(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중국(동아시아)을 짓누른 이 명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민족주의·반제·반패권을 위한 투쟁이 곧 국가건설을 위한 실천이고, 민족주의·반제·반패권의 실현이 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인식은 숭고한 가치를 지닌 신념이 되었다. 반패권을 향한 지난 150여 년 중국인의 외침과 그 실천 그리고 희생이 오늘날 중국 부상의 부인할 수 없는 토대였다. 오늘날의 중국은 근현대사에서 전개된 치열한 중국인들의 반패권 투쟁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하튼 오사를 계기로 민족주의·반제·반패권은 중국이 국가건설에 성공하

---

23 세 명제 중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담론의 반전」의 제3장(전인갑, 2019)을 참조하라.

여 강국몽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중의 핵심 명제로 뿌리내린다. 그런 만큼 20세기 내내, 그리고 21세기 초만 해도 반패권을 향한 중국인의 열정과 목소리는 드높기만 했다. 사실 오사를 계기로 국가건설 제1단계에서 발견되는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극복되었다. 예컨대 “오사를 분기로 민족주의가 종족주의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 한족민족주의(漢族民族主義),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로 진화”<sup>24</sup>했다.

물론 이러한 진화를 오사의 영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신해혁명 후 배만민족혁명(排滿民族革命, 한족민족주의)은 대청제국이 남긴 대일통 중국을 분열시켜 중국의 영역이 축소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중국은 오족공화(五族共和)의 가치를 내리고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새로운 통합 이념을 높이 들었다. 말하자면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를 폐기하고 국민국가의 다양하지만 통합된 구성원을 만드는 작업이 중화민국 성립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근대적 국민국가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중국 사회에 착근(着根)했다.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통합 이념의 생성과 확산, 이것은 분명 새로운 전통의 창조였다.<sup>25</sup>

오사가 확립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그 후 중국을 재조(再造)하는 이념이 되고, 국가건설을 위한 실치의 대원칙이 되었다. 소위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오사 전통 혹은 오사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불가침의 권위를 갖게 되고 국가건설을 위한 ‘신화’로 진화했다. 20세기 중국의 새로운 정치제도, 사회제도는 오사가 생산한 이 패러다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크게 받았음은 부정할 수 없다. ‘신

24 전인갑, 2019, 앞의 글, 130쪽.

25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패러다임의 동아시아적 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바, 동아시아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각기 지향하는 國家理想 등 각국에 맞는 길과 방식으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분화 발전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중국 고유의 방식으로 고유의 길을 모색하고 그에 따라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이 진행되었다.

화'가 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1930년대 이후 줄곧 그 내용이 확충되면서 국가 건설의 전범으로 뿌리내리게 된다.<sup>26</sup>

국가건설 제5단계는 이 패러다임이 전형적으로 실험된 단계이다. 이 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1954년)부터 문화대혁명으로 '폐기'된 헌정이 회복되는 1982년(신헌법 공포)까지이다. 이 단계에서는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길-신민주주의 방식을-을 '조급'하게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임시헌법' 격으로 하여 건국한 연합정부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중국공산당은 '신중국' 건국에 참여한 9개 정파 중의 하나였고, 이들 여러 정파의 연합으로 중앙인민정부가 구성되었다. 우리는 이를 신민주주의 연합정부라고 부른다. 마오쩌둥은 「논연합정부(論聯合政府)」에서 한 계급의 독재, 한 정당의 독점은 있을 수 없고, 신민주주의 국가와 정권 형태는 긴 기간 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건국 3년 남짓 만에 신민주주의 단계의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길과 연합정부를 폐기하고, 그 대신 1953년 8월 정식으로 과도 시기 총노선을 선언하고 중국공산당 일당체제로 전환했다. 그 기조는 사회주의적 국가건설 방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중국을 완전히 개조하여 현대화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과격한 실험이 이어졌다. 이 단계의 주선율은 단절과 청산을 통해 새롭고 '강한 중국'을 건설하는 과업[強國夢 實現]이었다.

청 말 이래 국가건설의 큰 흐름 속에서 신중국 등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국민당 정부가 복원하기 시

---

26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과 문명제국 패러다임의 근대적 재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1930년대와 1990~2000년대에 주류 국가건설 담론과 주류 문화담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극복하려 한 오사가 정립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중국의 부상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작한 중앙집권화를 한층 강화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배영역 전체를 중국공산당의 일원적 통치가 가능한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하는, 즉 영토적인 측면에서 천하일통(天下一統)의 국면(局面)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는 분권적 권력 구조를 집권적 권력 구조로 혁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 권력 구조와의 단절, 기존 지배 엘리트의 청산이 필요했다. 이와 동시에 국가통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 갈 엘리트의 충원 메커니즘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지난(至難)한 곡절과 희생을 대가로 치렀지만, 이 단계에 부과된 과제는 대체로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분권적 권력 구조가 집권적 권력 구조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4년에 정무원(政務院)을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기구인 국무원(國務院)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중앙 행정기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 개혁으로 지방과 사회 영역에서 중앙권력이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관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 ‘봉건 제후’처럼 독립적 권력을 행사하던 6개의 대행정구(大行政區)를 폐지하고 각 대행정구의 최고 권력자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였다. 이를 오마진경(五馬進京)이라 한다.<sup>27</sup>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성(省)-을 직접 통치하는 집권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였다. 오마진경으로 상징되는 지방통치체제 개편은 장제스의 국민정부 이래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집권체제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이 조치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국공산당은 지방, 특히 ‘비중화의 중국’<sup>28</sup> 지역, 사회 영역과 이념에 대한 지배력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문화대혁명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을 높이고, 광대한 영토 안에 존재하는 비중화의 세계-소수민족 지

27 대행정구는 5개 전후의 성을 통치했는데, 건국 직후에 중앙정부와 성 간에 설치되어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졌다. 6대 대행정구는 中南區, 東北區, 西北區, 華東區, 西南區, 華北區이다.

28 ‘비중화의 중국’은 비한족의 세계로 대청제국에 편입된 신강, 티베트, 몽골, 만주를 지칭한다.

구-를 중국으로 통합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통합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비록 그것이 폭압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문화대혁명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경제 장악력, 이념/문화 통합, 영토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sup>29</sup> 전 왕조가 남긴 영역을 온전히 보존한 것 자체로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공산당은 이 단계에 전 중국에 걸쳐 영토적 통일과 사회적 통일, 이념적 통일을 구현하여 천하일통의 국면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 말 이후 지속된 분권과 집권의 길항 관계가 이제는 집권의 흐름이 분권 경향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권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체제 정비가 이 단계에 와서 마무리되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체제하에서 30여 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건설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중국 건국 이후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는 신속히 회복되어 1950년대 중반에는 이미 중일전쟁 직전의 경제력 수준으로 회복했다. 또한 비록 ‘고난의 3년’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대약진운동은 중국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개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를 계기로 인민공사와 단위(單位)의 집체소유제가 확립되어 공유제(국유와 집체 소유)가 완성되면서 소유제 혁명이 일단락되었다. 소유권의 국유화와 집체화가 완성된 것이다. 이로써 사회주의 국가건설은 안착 단계에 확실히 진입했다.

마오쩌둥은 경제의 안정화, 사회와 이념 영역에서의 사회주의화 성공을 기반으로 국가통치 시스템과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기고자 했다.<sup>30</sup>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사회주의 강국

29 전인갑, 2006, 「근현대사 속의 문화대혁명」, 『역사비평』 77, 208쪽.

30 이하 문화대혁명에 대한 서술은 전인갑(2006)의 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했다.

을 영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 창안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문화대혁명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국가는 부단한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고 평균주의가 지배”하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이였다.<sup>31</sup> 그러한 사회주의 강국은 이상(理想)이었다. 마오쩌둥의 이상주의가 압도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이상과 현실의 긴장은 상실되었다. 그 결과는 ‘호겁(浩劫)의 10년’이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의 파행이 불가피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대혁명이 지향한 국가권력 기구 재편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가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의미까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 IV.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이란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융합하여 중국 특색의 패러다임과 중국 고유의 패러다임을 발신하려는 움직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명제국 패러다임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 두 움직임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였다.<sup>32</sup>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과 문명국가 패러다임의

---

전인갑, 2006, 위의 글.

31 전인갑, 2006, 위의 글, 207쪽.

32 필자는 오래전부터 근대중국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근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실험과 근대를 중국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실험이 지속되었음을 주장했다.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급진 혹은 보수를 불문하고 중국의 지식 엘리트와 권력 엘리트들은 ‘서구 혹은 근대성을 수단으로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중국 문화의 새로운 전개,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정에 적합한 국가건설을 모색해왔다. 필자는 이를 두고 전통의 근대적 재구성과 근대의 중국적 재구성이라 설명했고, 이것이야말로 중국 근현대 지성사의 큰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두 실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화’와 ‘근대(modernity)’가 융합되는 현상이 전개되는바, 필자는 이를 두고 ‘융합형 문화담론’이라 정의했다.

근대적 재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1930년대와 1990~2000년대에 주류 국가건설 담론과 주류 문화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오사에서 정립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중국의 부상’을 견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서구 근대가 생산한 보편가치, 서구의 개념과 사유방식으로 국가건설을 해야만 강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리’가 ‘오사정신’이고, 이러한 시대정신의 근저에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33</sup> 따라서 중화가 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천하주의를 대원칙으로 삼아 생생·진화·작동된 문명국가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범, 질서, 제도-역시 철저한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sup>34</sup>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중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1930년대와 1990~2000년대 ‘중국의 부상’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전통의 긍정과 중화의 발굴을 통해 문명제국 중국이 생산한 가치 그리고 중국의 개념과 사유방식을 근간으로 삼아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국가건설 담론과 문화담론이 지식인 엘리트뿐 아니라 권력 엘리트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고, ‘중국의 부상’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을 자극하여 ‘중국의 길’과 ‘중국의 방식’으로 중국(특색/고유)의 패러다임을 창안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된 것이다.

국가건설 제3단계는 장제스가 중국을 재통일(1928년)한 이후부터 중일전쟁 발발(1937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단계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따라 국가건설이 실제 진행된 최초의 단계였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주요 실천 과제는 국가 통합(국민국가의 영토, 집권체제), 국민통합(이념적 통합, 정치적 통합), 반제·민족

33 오사가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의 문화담론과 문화논쟁 그리고 중국을 再造의 방향에 미친 영향 등을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바 있는데(전인갑, 2019, 앞의 글), 이 글과 기본 논지는 동일하다. 다만 이 글은 국가건설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전인갑(2019)의 글은 100년간에 전개된 문화논쟁의 轉變에 중점을 두었다.

34 이를 논급하는 자는 반오사, 반계몽, 말하자면 복고, 수구, 보수일 뿐 아니라 반민족적·반혁명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문화 보수주의자들의 지적 도전이 내포한 ‘계몽’적 측면이 지나치게 흡수된 측면이 있다.

주의의 실현(국민국가의 주권 확립)이었다. 장제스의 국민정부는 이 세 측면 모두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통합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군벌체제가 극복됨으로써 1850년대부터 격류를 타고 있던 분권이라는 시대적 조류가 차단되어 분권적 정치체제가 집권적 정치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태평천국운동 이후 분권적 경향은 정치적으로 불가역의 흐름으로 정착했다. 태평천국운동 진압 이후 성역주의(省域主義)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성역주의란 하나의 성을 하나의 '독립'된 정치적 단위/정치공동체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것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에 종속되어 있던 지방이 독립적 정치역량을 보유하게 되어-성의 정치화<sup>35</sup>-성의 자치가 대폭 강화되는 국면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분권의 강화이다.

다소 이견은 있겠지만 대청제국의 붕괴는 이 흐름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위안스카이의 좌절-홍헌제제(洪憲帝制)의 실패-역시 그러했다. 군벌시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정점이라 하겠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상시적(常時的) 전시상태(戰時狀態)를 초래한 군벌 할거의 시대였음에도 집권과 분권의 긴장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시대를 이해하면 집권의 표상인 천하일통의 국면이 크게 약화되고, 분권화가 급진전하던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신해혁명 과정에서 성(省)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성역주의가 군벌체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때 성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독립하고 복수의 성이 연합하여 중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건설 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1920년대에 성헌법(省憲法) 제정 논의가 각 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호남성(湖南省)이 실제로 성헌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연성자치(聯省自治) 구상이다.

분권의 흐름은 대청제국의 동맹자와 정복지에 해당하는 '비중화의 중국' 영

35 省의 政治化는 정치의 지방화를 초래하고, 성역주의 노선에 기초한 정치와 대중 동원의 정치가 조직화·구조화되고 있었다.

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이들 지역의 원심적 경향이 대폭 강화되었다. 청 말 민국 시기 지역의 정치화는 ‘중화의 중국’ 영역[元中國, China proper]에서는 성역주의의 확산과 군벌 할거라는 형태로 전개된 반면, ‘비중화의 중국’ 영역에서는 오족공화의 구성원 혹은 중화민족의 일원 혹은 연방(聯邦)의 구성원이 아니라 각 민족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전환하려는 민족주의적 움직임으로 진행되었다. 티베트의 독립화(獨立化), 동투르키스탄의 독립운동-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그리고 몽골, 특히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이 그러한 동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국민당은 북벌에 성공하여 다소간 한계는 있으나 청 말 이후 지속된 영토적 할거 상황-1910~1920년대의 군벌시대-을 종식하고, 친하일통의 국면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재통일 달성이라는 업적을 배경으로 장제스의 남경국민정부는 비교적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국에 걸쳐 집권질서를 회복해갔다. 이 시기 국가건설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길이었다. 이 시기에 청 말 이래의 분권적 경향이 약화되는 반면 집권적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국을 중앙집권적으로 지배하는 남경국민정부의 권능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태평천국운동 이후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1928년부터 시작한 열강과의 관세자주권 회복 협상이 1930년에 완료되었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던 최대의 난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로써 남경국민정부의 경제적 기반이 내실을 갖추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황금 10년’이 가능했다. 사실 이 시기는 민국 시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번영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6</sup> 말하자면 국내적으로 영토 재통일과 집권질서 회복을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시스템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가능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 대공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상’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질서의 불안

36 전인갑, 2016, 앞의 책, 316쪽.

정성이 고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통합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 국민통합 이념은 삼민주의였다. 쑨원에 의해 재해석된 민족주의와 민권주의, 민생주의는 언뜻 보면 서구 근대가 창안한 개념인 듯 보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 민족주의는 쑨원이 서구의 민족주의를 중국적으로 재구성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민권주의 역시 민주 개념을 중국적으로 재구성했다. 민생주의는 전통적 민본론·균분론과 시장주의가 결합한 경제체제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정부가 추구했던 국가건설은 삼민주의가 전제이자 목표인 건설전략이었다. 이 전략의 본질은 엘리트 전위정당인 중국국민당이 당치(黨治)-훈정(訓政)-를 통해 집권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국에 걸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로부터의 국민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건설을 추진할 국가체제는 당정국가(黨政國家) 체제였다. 이 체제에서 삼민주의는 체제의 대전제였다. 당정국가 체제는 삼민주의를 대전제로, 삼민주의의 실현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수단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민주의가 겉으로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분석해보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주요 명제(민족, 반패권, 국가/국민통합)를 천하주의적 사유체계 속으로 끌어들이 재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삼민주의는 공맹으로부터 시작한 중화(中華) 도통(道統)의 계승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삼민주의는 중화의 도통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이념/가치였다.<sup>37</sup> 따라서 유교적 보편가치가 그러했던 것처럼 삼민주의는 모든 규범, 질서, 제도는 삼민주의가 가르치는 바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고, 삼민주의를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 종극의 목적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중국국민당이 주도한 이 단계의 국가건설

37 삼민주의를 국가 지도이념으로 격상시키고, 그 철학적 논거를 제시한 대계도는 장문의 분석을 통해 쑨원은 요순과 공자의 이론과 道統을 계승했으며, 삼민주의는 중국의 정통사상을 계승하여 부흥시킨 이론으로 정의했다. 戴季陶, 1927, 『孫文主義之哲學的基礎』, 民國叢書 第三編 6卷, 中山主義研究會, 40~46쪽.

전략에서 “전통문화가 강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는 단순한 전통문화가 아니라 향후 건설해야 하는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고 중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이다.<sup>38</sup>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정부의 전략은 ‘건국 10년’이라 말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으로 다음 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30년대 중국의 부상이다. 정치·영토적 통일의 실현, ‘건국 10년’으로 상징되는 안정적 경제발전, 삼민주의 이념 기반의 강력한 국민통합 그리고 중국국민당의 안정적 권력 장악력, 중화의 자신감 회복은 당시에 목격된 ‘중국의 부상’ 현상이었다. 중국의 부상은 청일전쟁 이후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조를 동요시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수 지식인 사이에 벌어진 논전이라 해도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벌어진 일본의 ‘중국통일화논전(中國統一化論戰)’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일본의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침략 강화는 장제스 정권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던 중국의 부상에 대한 반작용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내셔널리즘에 도전한 최대의 열강은 일본 제국주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신생 중국이 통일 국가가 되어 재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 환경을 파괴”하려 한 것이 일본의 대륙침략 강화였다.<sup>39</sup>

둘째, 강한 중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그리고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중국적 재구성이 운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화 보수주의의 급속한 확신이 그것이다. 중국의 재통일, 경제적 번영, 정치·사회적 안정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서 벗어나 ‘강국몽’을 실현할 새로운 국가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민족주의 강화로 이어지고 중화의 길, 중화의 역량, 중화의 사유방식으로 중국의

38 戴季陶, 1927, 위의 책, 318쪽.

39 横山宏章, 1997, 『中華民國-賢人支配の善政主義』, 中央公論社, 200쪽.

국가건설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신유학(新儒學)이 유행하고, 중국문화 본위논쟁을 필두로 하는 문화 보수주의 사조가 맹위를 떨치게 되는 이면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저류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4단계는 중일전쟁(1937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을 거쳐 신민주주의 혁명 정권(연합정부)이 종언을 고하는 1954년(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정)까지이다. 20세기 중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건설의 길은 자본주의적 방식, 비자본주의적 방식, 사회주의적 방식이 있었는데, 이 단계는 국가건설의 자본주의적 방식과 비자본주의적 방식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시대적 과제는 중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전후 어떠한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전후 국가건설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였다.<sup>40</sup>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로 대규모 경제건설과 국가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했던 ‘황금 10년’, ‘건설 10년’은 종언을 고했다. 일본의 전면적인 대륙침략은 ‘황금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데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했음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정치적·경제적 성취가 형해화(形骸化)되었을 뿐 아니라 ‘강한 중국’ 건설에 대한 기대감 [強國夢]이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이것은 삼민주의를 유일 이념으로 삼아 추진한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건설 10년’이라는 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의 성과가 이 시기 동안 무력화되었다.

반면 “전민족적 일치항일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통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급박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기의 고조”는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에 매진하던 중국공산당과 여러 민주당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강국몽’ 실현이라는 목표는 같았으나 방법이 다른 또 하나의 건설 구상이 항일전쟁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갖게 된 것이다. 자

40 이하 국가건설 제4단계에 대한 서술은 『현대중국의 제국몽』(전인갑, 2016), 113~114쪽과 322~323쪽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종합하고, 일부는 내용을 새로이 보완했다.

본주의적의 길과 비자본주의의 길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길은 중일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 전후부터 정치적으로 본격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가 장제스의 『중국의 명운[中國的命運]』과 마오쩌둥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의 충돌이라 하겠다. 전후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0년 전후에 조성된 이러한 상황은 전후에도 지속되어 결국 내전을 불러왔다. 내전의 결과는 비자본주의적 건설 구상의 승리였다.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얼마 후 건설의 방향이 사회주의적 국가 건설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그 승리는 지속되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파들이 동의했던 신민주주의 방식의 국가건설, 즉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이 마오쩌둥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 V. 맺음말: ‘국민국가’에서 ‘문명대국’ 패러다임으로

국가건설의 제6단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선도한 개혁개방의 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대로, 비자본주의·비사회주의 방식으로 국가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단계는 문화대혁명 때 사실상 사문화한 헌법을 ‘전면개정’<sup>41</sup>하여 공포한 1982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청 말 이래 입헌/헌정은 국가건설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였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정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헌정체제가 실현되었다.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은 그러한 헌정체제를 사실상 와해시켰다. 1982년 헌정 복구는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재확립하는 의미가 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방식을 가장 상징으로 표현하

4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1954년에 제정된 후 1975년, 1978년 그리고 1982년에 총 세 차례 制定에 준하는 ‘전면 개정[修憲]’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헌법은 1982년 헌법이며, 그 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과 2018년에 ‘부분수정[局部修正]’이 이루어졌다.

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계획경제의 타율성이 결합하여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이기도 하지만과 보다 핵심적인 특성은 다중 소유제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1999년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중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혼합경제체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경제체제로 정의했다. 그런데 이 체제는 국가건설의 제4단계에서 실험된 신민주주의 체제의 부활이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와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 모두 혼합경제체제를 전제로 국가건설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 차이는 없다.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은 주지하다시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칭 말 이래 ‘강한 중국’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민국가 건설의 노력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질서의 편성자로 나서려 할 정도의 결실을 맺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중화’에 대한 자부심을 복원하기에 충분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 성과는 칭 말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집권화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영토적·사회적·이념적 통합, 즉 천하일통의 구현 그리고 국가통치 시스템의 중국적 제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성공에는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혁명이 자양분으로 작용했다.<sup>42</sup>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新時代)’ 선언은 근대의 패러다임,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완성과 다음 시대로의 질적 전환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칭 말 이래 지난하게 모색했던 국가건설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총결한 바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 길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개방 30여 년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태동한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여 년의 계속된 탐

42 그 성공의 비결은 모순되는 이념과 제도 그리고 체제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채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점이다.

색 속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이 길은) 근대 이후 170여 년 동안 중화민족이 추구 해온 발전의 역정에 대한 본질적 총결산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중화민족 이 5,000여 년의 유구한 문명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길이다.”<sup>43</sup> 그리고 그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 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신시대에는 중국의 사유방식과 중국의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제도와 이념을 만들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 고, 신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업을 중국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sup>44</sup> 그리고 2018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서구와의 가치와 규범경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서구를 추종했던 20세기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대안적(代案的)’ 반전(反轉)이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중국이 벗어났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를 창조하 겠다는 의미를 함축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 목표는 분명하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몽이 어떻게 구현될지 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이제 국민 국가 패러다임의 완성을 선언했고,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방식을 중국만의 고유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화/보편화할 수 있는 국가건설 방식으로 진화시키려 한 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미래담론이다. 이 미래담론은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에서도 읽을 수 있듯 중화성(中華性)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사유방식이 자 질서이고, 이념일 것이다.

21세기 벽두부터 중국에서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43 習近平, 2013, 「在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35쪽.

44 習近平, 2017. 10. 27,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 10. 18.)」, 『新華網』, 30쪽.

모색하는 움직임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중국이 서구가 생산한 ‘근대’(=서구)적 사유방식 그리고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뒤쫓아가느라 급급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반성은 이제는 중국이 창안하는 새로운 사유방식과 개념, 이론으로 중국과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고 해결하며, 미래의 중국과 세계를 건설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자신감의 발로라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식체계를 중국의 역사적 경험/전통과 현실(비서구 세계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로 환치해도 무방하다)을 중심에 두고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문명사적 도전이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향한 중국 지식인의 문명담론이 최근 봇물 터지듯 분출되는 듯하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대안 모색 역시 그러한 현상의 일단이다.

필자는 그동안 중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신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담론<sup>45</sup>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어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생략한다.<sup>46</sup> 다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진화하는 경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우선 변화한 시대의 분위기를 스케치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인의 사유방식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반제·반식민, 자주와 독립은 20세기 내내 중국인들의 치열한 외침이었다. 이 외침은 널리 퍼져 근현대 중국인이자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당위였다. 한마디로 말해 반패권은 근현대 중국의 출발이고, 그 구현은 강국몽을 실현하려는 근현대 중국의 목표였다. 오늘날 ‘중국의 부

45 필자는 세계담론을 ‘천하주의, 천하관 등 중국 중심의 사유방식으로 중국과 인류,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고 새로운 보편주의를 발굴하려는 담론’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 담론의 스펙트럼은 넓어 신조공질서론, 신천하주의론, 천하체계론, 문명국가론, 문명형 대국론, 신유가문명국가론, 유가현정국가론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46 전인갑, 2016, 앞의 책; 전인갑, 2019, 앞의 글; 전인갑, 2018b, 「중화체제와 하나의 중국 그리고 규범경쟁」, 『성균차이나브리프』 제6권 제4호(통권 49호); 전인갑, 2015, 「지식 패러다임의 反轉과 ‘帝國夢’-‘中華’의 再普遍化로」, 『中國近現代史研究』 68.

상'은 반패권을 그토록 치열하게 추구해온 결실이라 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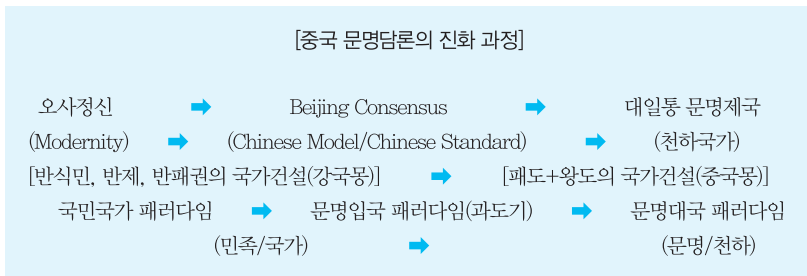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난다. 어느 비판적 지식인의 다음과 같은 우려는 기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나 권력 엘리트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그의 관찰을 정리하면, '몇 년 전 누군가가 중국이 패도국가(霸道國家)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면 쓸데없는 걱정이라 일축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왕도(王道)의 문화를 지닌 문명국가이고 반식민, 반제, 반패도를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부정하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중국 사회에는 패권적 언어들 넘치고' 있다는 논지이다.<sup>47</sup> 이러한 패권적 언설과 중국 문화(중화) 중심의 새로운 가치 모색은 중국몽, 일대일로, 인류운명공동체, 중국의 길과 방식, 중국 모델, 베이징 컨센서스, 아시아문명대화대회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실험(實驗)·개진(開陳)되고 있다. 시대의 대세가 반패권(反霸權)의 고조(高調)에서 패권(霸權)의 고조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중심적 사유의 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담론의 창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에 대한 친착은 이미 1990년대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고, 최근에 와서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냈을 뿐이다. 1990년대에 갑자기 '국학열' 풍조가 크게 유행하고 뒤이어 20세기 내내 급진주의 문화 담론에 압도되어 '냉대'받았던 문화 보수주의가 주류 문화 담론으로 급부상했다. 문화 보수주의의 부상은 현대 사상사에서 하나의 큰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사운동으로 본격 진행된 전통-중화- 부정과 청산을 명제로 삼은 '중화 부정의 실험'이 중화를 계승하고 인류의 미래-한계에 봉착한 서구문명을 대신하여-를 여는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중화 긍정의 실험'으로 전환하는 지성사적 대전환의 상징이기 때문이다.<sup>48</sup>

47 허자오펜 지음, 임우경 옮김, 2019, 『현대중국의 사상적 곤경』, 창비, 263쪽.

48 필자의 기존 작업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20세기는 중화문명을 부정하고 서구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개선되는 세계담론과 새로운 문명론은 '중국사상계가 세계와 문명을 사유의 단위로 국가 대전략과 세계질서를 구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젠다라 할 수 있다. 이들 어젠다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현존하는 보편가치인 아메리카니즘에 대신하여 중국이 발신하는 보편주의를 창안하려는 실험의 일환이다. 아메리카니즘은 근대 서구에서 뿌리가 다른 세 개의 이념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융합한 '이념적 돌파'의 산물인바, 중국의 실험이 과연 미국의 경우와 같은 이념적/문명론적 돌파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하고 발신할 수 있을 것인가는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 다만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는 문화론은 '중국 특색' 혹은 중국의 고유성을 회복, 확장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이 분명하다. 보편주의를 운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명을 수용하여 강국몽을 실현하려 한 시기로 '중화 부정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정신을 가능하게 한 인식체계는 곧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저, 조영일 역, 2016, 『제국의 구조』, 도서출판b.
- 김재철, 2017, 『중국과 세계: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한울.
- 전인갑, 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중화의 재보편화 100년의 실험』, 학고방.
- 허자오텐 지음, 임우경 옮김, 2019, 『현대중국의 사상적 근경』, 창비.
- 戴季陶, 1927, 『孫文主義之哲學的基礎』, 民國叢書 第三編 6卷, 中山主義研究會.
- 橫山宏章, 1997, 『中華民國-賢人支配の善政主義』, 中央公論社.
- Fairbank, John K., Reischauer, Edwin O., & Craig, Albert M., 1965, *East Asia: The Modern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논문

- 유용태, 2009, 「근대중국의 민족인식과 내면화된 제국성」, 『동북아역사논총』 23호.
- 전인갑, 2006, 「근현대사 속의 문화대혁명」, 『역사비평』 77.
- \_\_\_\_\_, 2015, 「지식 패러다임의 反轉과 ‘帝國夢’-‘中華’의 再普遍化로」, 『中國近現代史研究』 68.
- \_\_\_\_\_, 2018a, 「비대칭적 국제질서」, 『서강인문논총』 51집.
- \_\_\_\_\_, 2018b, 「중화체제와 하나의 중국 그리고 규범경쟁」, 『성균차이나브리프』 제6권 제4호(통권 49호).
- \_\_\_\_\_, 2019,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담론의 반전」, 『현대중국연구』 21-2.
- 甘陽, 2012, 「導論: 從民族-國家走向文明-國家」, 『文明·國家·大學』, 北京: 三聯書店.

習近平, 2013, 「在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_\_\_\_\_, 2017. 10. 27,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 10. 18.)」, 『新華網』.

李揚帆, 2015, 「“中華帝國”的概念及其世界秩序:被誤讀的天下秩序」, 『國際政治研究』 第5期.

田壽, 2016, 「天下主義與民族國家-晚清國際法詮釋」,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期(總第249期).

Callahan, William A., 2007. 5, “Tiaxia, Empire and the World: Soft Power and Chinas Foreign Policy Discourse in the 21th Century”, *BICC Working Paper Series*, No. 1.

##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

— ‘민족’과 ‘천하’의 길항(拮抗) —

전인갑

중국의 근현대사는 보편제국/문명제국의 붕괴로부터 시작한다. 이 붕괴를 천하 질서의 해체 또는 중화질서/중화체제의 해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보편제국/문명제국은 국민국가로 바뀌어야 했고, 천하체제는 ‘평등’한 국가들이 병립하는 국가 간 체제(interstate system)로, 천하질서는 대내적인 면에서는 집권질서가 분권질서로, 대외적인 면에서는 위계적 조공질서가 조약질서로 불리는 근대적 국제질서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리고 사유의 패러다임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는데, 천하주의적 사유방식이 민족주의적 사유방식, 말하자면 규범과 질서, 체제와 제도의 원천인 이념이 천하주의(천하/문명)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로 바뀌어야 했다. 그런데 20세기를 막 지난 최근 중국에서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지난 150여 년 동안 중국이 서구가 생산한 ‘근대’(=서구)적 사유방식 그리고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뒤쫓아가느라 급급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반성은 이제는 중국이 창안하는 새로운 사유방식과 개념, 이론으로 중국과 세계의 문제를 사유하고 해결하며, 미래의 중국과 세계

를 건설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자신감의 발로라 하겠다. 중국의 실험이 과연 미국의 경우와 같은 이념적/문명론적 돌파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하고 발신할 수 있을 것인가는 면밀히 지켜볼 일이다.

**주제어:** 민족주의, 국민국가, 천하, 문명대국, 패러다임의 전환, 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 Paradigm Shift in State Building and Nationalism

Jeon Ingap

Modern history of China begins with the collapse of the universal empire/civilization empire. This collaps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disintegration of the order of Heaven and the dissolut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system. To approach this more analytically, however, the universal empire/civilization empire had to be transformed into a nation state. Also, the Chinese world order had to be replaced by an interstate system. The centralized order had to be changed to the decentralized order and the hierarchical tributary order had to be replaced by the treaty system. Further, a change in the paradigm of thinking was inevitable. In other words, ideology, which is the source of norms and order, system and institution had to be changed from *tianxia* principles to nationalism.

However, recently, immediately after the twentieth century in China, there has been a great trend to move away from the “nationalist paradigm” and seek new alternatives. The move starts with a reflection

that over the past 150 years China has been bent on pursuing Western concepts and theories. This reflection is a result of the following beliefs: China must now think and solve the problems of the world and China with the concepts and theories that China creates. And China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building a future China and a future world.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China's experiments can develop to a point where new paradigm can be created.

**Keywords:** Nationalism, Nation State, *Tianxia*, the Great Civilization State, the Transition of Paradigm, state building based on China's characteristics

#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 근대 동아시아인 정치 개념의 범주

왕원주 |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국가와 민족
- III. 동양과 황인종
- IV. 천하와 세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인들의 생활은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사람들의 삶과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더 커지고 있다. 일부 사상가들은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한 사고 판단을 할 때 전 세계라는 거국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대다수의 평범한 민중들조차도 국가를 기초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국가 이외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많은 학자의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다.

몇 년 전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는 동아시아공동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중국 학자들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한국 학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백영서 교수는 중국 지식인들의 속내에는 ‘아시아’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시아적 전망’에 대한 인식 또한 미흡하고 특히 중국을 아시아의 범주 속에 넣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이제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변화를 보면, 중국인들은 동아시아의 정체성 수립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동아시아를 초월한 온 세계를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와 세계공동체에 대한 각국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국의 국력이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 각국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투고: 2020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18년 2월 12일, 재심사 완료: 2018년 2월 19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20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역사포럼(2018~2019)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작성된 논문임.

1 白永瑞, 2000, 8, 「在中國有亞洲嗎?-韓國人的視角」, 『東方文化』 4, 99쪽.

근대 동아시아 각국은 모두 화이지방(華夷之辨)과 중화 질서에서 탈피하여 근대민족주의와 민족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 중에서 개인, 국가, 지역 및 세계 정체성은 모두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관념과 질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직면한 것은 국가와 국가, 서양과 동양, 백인종과 황인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과 같은 더욱 복잡한 경쟁관계였다. 이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치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범위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역시 주요 과제가 되었다.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동양주의나 아시아주의를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대동주의나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 세 측면의 사상은 각국, 심지어 개인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범위나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대 동아시아의 많은 사상가는 다양한 면모를 보였는지도 모른다. 근대 동아시아인의 상호인식과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해 학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 전통의 천하주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출발하여 국가(민족)와 지역(동양, 동아), 그리고 세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근대 정치사상 전개와 변화의 내적 논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국가와 민족

서방 열강의 침략에 근대 동아시아 각국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보편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인들과 급진적 성향의 지식인들은 일반 국민의 애국심(愛國心)이 보편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 이

2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趙汀陽의 『天下體系：世界制度哲學導論』(江蘇教育出版社, 2005)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자오팅양 지음·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최근 대만 학자 장치승[張啓雄]도 중화세계질서에 관한 글을 다수 발표하였다.

러한 인식 역시 주로 서양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량치차오[梁啓超]는 「애국논일(愛國論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서양인들은 중국인에 대해 논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에게는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그 기세가 흠어지고, 그 마음은 나약하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중국 땅을 빼앗고 중국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인들은 세력을 좇아 복종하며, 작은 이익을 미끼로 던지면 서로 싸운다. 4억의 인구라고 하나, 마치 아무도 없는 것과 같다.”<sup>3</sup>

량치차오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나라가 재차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취생몽사(醉生夢死)하면서, 국가의 존망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현실에 깊이 절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국가의 앞날과 운명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은 이들에게 국가 관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심지어 중국은 고대부터 국가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량치차오는 「소년중국설(少年中國說)」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통시대의 중국은 국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고대 중국은 가족 국가이자 족장 국가이며, 제후봉건의 국가이자 왕 한 명이 다스리는 전제주의의 국가였을 따름이다.”<sup>4</sup> 여기에서 그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중국”이란 명칭을 간과하고, 왕조의 명칭만 강조하면서 왕조와 국가를 절대적 대립관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전의 중국을 통해 어찌 국가를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오직 조정(朝廷)만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황제(黃帝)의 자손으로서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모여 살면서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당우(唐虞), 하(夏), 상(商), 주(周), 진(秦), 한(漢), 위진(魏晉), 송(宋), 제(齊), 양(梁), 진(陳), 수(隋), 당(唐), 원(元), 명(明), 청(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왕조의 이름일 뿐이다. 왕조는 한 가문의 사유재산이지만, 국가는 인민들의 공공재산이다.”<sup>5</sup>

3 袁時客, 1899. 2. 20, 「愛國論一」, 『淸議報』第6冊, 本館論說, 1쪽.  
 4 任公, 1900. 2. 10, 「少年中國說」, 『淸議報』第35冊, 本館論說, 2쪽.  
 5 任公, 1900. 2. 10, 위의 글, 2쪽.

고대 국가와 근대적 개념의 국가 간에는 비록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대적 국가 개념을 기반으로 중국 고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청일전쟁 패배는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국가의 앞날을 우려하고 분노하도록 하였으며, 사람들이 직접 국가에 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타파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1949년 량수밍[梁漱溟] 역시 량치차오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은 가깝게는 자신과 가정이고, 멀게는 천하이며, 이 밖의 것들은 대부분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sup>6</sup> 따라서 국가를 강조하기 위해,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가정을 버릴 것”을 주장하였으며,<sup>7</sup> 다른 한편으로는 천하 관념을 배격하고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을 강조하였다.

량치차오는 국가란 반드시 타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천하 관념은 중국인들의 국가 관념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우역(禹域)이란 구역을 천하라고 부를 뿐, 국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국가가 없는데 어찌 애국심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sup>8</sup>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고대 중국과 주변 국가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고대 시기에는 국제적 충돌이 적어 대내적으로 느슨하고 대외적으로도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량치차오는 주변 국가의 위상을 폄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중국이 상고시대부터 통일한 이래, 주변은 모두 약소한 오랑개였으며, 문물과 정치체제가 없어서 그들은 국가가 될 수 없었다. 우리 인민들 또한 그들을 우리와 평등한 국가로 보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언제나 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6 梁漱溟, 1949, 『中國文化要義』, 路明書店, 182쪽.

7 趙研杰, 2018, 5, 「爲國破家：近代中國家庭革命的反思」, 『近代史研究』 3, 74~86쪽.

8 袁時客, 1899, 2, 20, 앞의 글, 1쪽.

9 袁時客, 1899, 2, 20, 위의 글, 1쪽.

만약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 주위 국가와 충돌이 없어 국가 관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위 소국들은 늘 중국의 압력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국가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채호(申采浩) 역시 량치차오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국가 관념은 극히 미미하고 국가정신은 유치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채호는 량치차오처럼 인민의 애국심 수립을 위해서는 가족 관념과 초(超)국가적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바로 가족임을 강조 하면서,<sup>10</sup>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동양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국가는 주인, 동양은 손님이라고 강조하고,<sup>11</sup> 동양의 운명은 일본인들의 수중에 있으며, 동양은 일본의 동양이지 조선의 동양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sup>12</sup>

전근대시대에는 중화체제의 중주국인 중국이나 번속국인 조선이 초국가적인 천하 관념만 있을 뿐 국가 관념은 없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아시아인의 관념 속에 가족, 국가, 천하는 원래부터 공존해왔는데, 중국학자 쉬지린(許紀霖) 교수는 이를 가리켜 “가국천하연속체(家國天下連續體)”라고 하였다.<sup>13</sup> 량치차오와 신채호 모두 국가를 이런 “가국천하연속체”에서 끌어내 지고지상(至高至上)의 지위에 올려놓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족, 국가, 천하 3자를 관통하는 유교가치 체계 역시 근본성(根本性)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하나의 문화체, 문명체가 중국의 근본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고염무(顧炎武)는 ‘망국(亡國)’과 ‘망천하(亡天下)’를 구분하여 “역성(易姓)하고 국호가 바뀌면 망국이라 부르고, 인의(仁義)가 막히고, 백성을 억압하고 학정

- 
- 10 신채호, 1984a, 「國家는 卽 一家族」,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148~149쪽.
  - 11 신채호, 1984b, 「東洋主義에 對한 批評」,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148~149쪽.
  - 12 신채호, 1984c, 「我란 觀念을 擴張할지이다」,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丹齋申采浩全集』 別集, 螢雪出版社, 158쪽.
  - 13 許紀霖, 2017, 『家國天下-現代中國의 個人, 國家與世界認同』, 北京世界文景文化傳播有限公司, 1쪽.

을 향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 먹는 것을 일컬어 망천하”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에서 천하를 지키는 것을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4</sup> 따라서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동아시아 전통 지식인들은 천하관념 배후의 근본적 가치체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보국(保國), 보종(保種), 보교(保敎)를 한데 섞어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역사상 변방 오랑캐가 중국을 괴롭히던 상황과는 달랐다. 서구 열강 역시 더욱 선진화된 문명을 대표하였으며, 부국강병을 위해 서학(西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은 중국, 조선, 일본을 모두 반개화국가[半開化國]로 직접 분류하고 기존의 화이의 구분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동아시아 각국 역시 “문명개화(文明開化)”를 재차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보교(保敎)는 점차 흡인력을 상실하였으며, 신지식인들은 반대로 더욱 강렬한 반(反)전통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화이의 구분 역시 의의를 잃었으며, 이에 중화질서는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조선에서는 개화파가 사대(事大)관계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중국의 종주국 지위는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문명 개화에서 일본의 성공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힘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근대 서구 세력의 충격이 동아시아 각국에 가져온 변화는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 문명전환과 권력이전 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복잡한 정세에 중국의 변법론자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오항위(吳恆煒)는 당시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의례(儀禮)를 고집하여 민중을 오도하는 재난이 발생한다. 중국의 전통을 버리고 서양만 따르면, 오랑캐가 화하(華夏)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sup>15</sup>

변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의회(議會)를 구성하고 민권을 신장시키는 것은 주요 개혁 조치이며, 그 목적은 주로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통합시

14 顧炎武, 1929, 「正始」, 『日知錄(五)』卷十三, 商務印書館, 41~42쪽.

15 吳恆煒, 1897. 3. 3, 「知新報緣起(續前稿)」, 『知新報』第3冊, 1쪽.

키고 국가 간의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 하수령(何樹齡)은 “과거 전국시대 정치는 군왕으로부터 나왔지만, 오늘날 유럽의 권력은 의회에서 나왔다. 군왕과 국민 간의 성향이 달라 옛날과 지금 사이의 변화도 매우 크다”고 말하였다.<sup>16</sup> 국가조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경쟁방식 역시 자연스럽게 다를 수 밖에 없다. 소진(蘇秦)과 장의(張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으며, 국가의 운명은 주로 국민이 결정한다고 믿었다. 심지어 량치차오는 근대국가의 경쟁은 곧 국민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국가 경쟁은 군왕이 국민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와 다투게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 경쟁이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다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7</sup> 따라서 그는 근대 국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를 일깨우고 민권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민권신장의 중요성에 대해 량치차오는 “민권이 흥하다는 것은 국권이 바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민권이 무너지는 것은 국권이 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정자를 위해 민중을 탄압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을 위해 민권을 신장시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애국은 반드시 민권의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8</sup> 백성의 지혜를 일깨우는 것에 대해, 맥맹화(麥孟華)는 “아! 오늘날의 경쟁의 세계는 힘의 경쟁이다. 야만적 세계는 유형의 힘이 서로 경쟁하고, 문명의 세계에서는 무형의 힘이 서로 경쟁한다”고 말하였다.<sup>19</sup> 이른바 ‘무형의 힘’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지혜가 집합되어 형성된 “공력(公力)”을 가리킨다.

량치차오 등은 이런 “공력”이 바로 민족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민권신장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가 제창되었다. 량치차오는 서구 근대 정치이론의 양대 기반은 루소(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

16 何樹齡, 1897. 4. 10, 「論今之時局與戰國大異」, 『知新報』第12冊, 3쪽.

17 袁時客, 1899. 10. 15, 「論近世國民競爭之大勢及中國之前途」, 『清議報』第30冊, 本館論說, 1~4쪽.

18 袁時客, 1899. 7. 28, 「愛國論三·論民權」, 『清議報』第22冊, 本館論說, 1쪽.

19 佩弦生, 1900. 4. 10, 「論中國救亡當自增內力」, 『清議報』第41期, 本館論說, 1쪽.

스펜서(Spencer)의 진화론이라고 보았으며, 이로부터 민족주의와 민족제국주의가 출현하였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족주의를 제창하여 제국주의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량치차오는 “오늘날 유럽과 미국은 민족주의와 민족제국주의가 서로 교대하는 시대이고, 아시아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교대하는 시대”라고 하였다.<sup>20</sup> 따라서 중국은 오직 민족주의로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타인이 제국주의를 통해 침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알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민족주의를 신속하게 고양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민의 절박한 임무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21</sup> 신채호 역시 량치차오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견해를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제국주의란 영토와 국권 확장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20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이며, 세계는 이미 제국주의의 무대가 되었으며,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족주의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야말로 민족을 보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였다.<sup>22</sup>

실제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인데, 약소국에서는 민족을 국가와 분리할 수 없다. 초기 량치차오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로 보면 더 맞을 것이다. 이런 전통은 그 후에 계속 유지되었다. 1920년대 쑨원[孫文]은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도 “민족주의는 곧 국족주의(國族主義)이며, 중국에 더 적합하다”라고 설명하였다.<sup>23</sup>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사상계가 국가주의를 비판하게 되면서 쑨원도 국가를 경시하고 민족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족은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역량이며 왕도(王道)에 의해 형성된 반면, 국가는 무력을 이용한, 즉 패도(霸道)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민족을 중시하

20 任公, 1901. 10. 22,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清議報』第95冊, 本館論說, 1쪽.

21 任公, 1901. 10. 22, 위의 글, 4쪽.

22 신채호, 1984d,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丹齋申采浩全集』別集, 螢雪出版社, 108쪽.

23 孫文, 1927, 『三民主義』, 民權書局, 2쪽.

24 孫文, 1927, 위의 책, 2~3쪽.

고 국가를 경시하였기 때문에, 쑨원은 민족자결권을 강조하였으며, 심지어 중국 국내의 몽골족을 비롯한 모든 소수민족은 마땅히 자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따라서 쑨원이 말한 민족주의는 주로 한족(漢族) 종족주의였다. 그래서 차오런위엔(曹任遠)은 쑨원이 한족을 곧 국족(國族)으로 보았다고 판단하였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결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쑨원은 몽골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중국에서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키나와, 고려(高麗), 미얀마, 베트남[安南] 등을 중국의 잃어버린 영토로 여겼으며, 중국이 강대해진 후에 이 지역들이 중국 중심의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었다.<sup>27</sup> 실제로 많은 중국인은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정세를 보면서 한족보다 국가나 영토를 더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배경한과 같은 한국 학자는 이 시기의 쑨원의 사상을 전통적 중화주의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종(變種)으로 보기도 한다.<sup>28</sup> 쑨원의 인식 속에서 엿보이는 이런 사상적 혼란은 국가정체성 수립에 대한 근대 중국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를 국가나 영토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에 오족공화(五族共和)를 제창하고, 이에 더 나아가 중화민족 개념도 성립시켰다.

국가와 영토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주의나 무정부주의의 더 강한 영향으로써 ‘5·4운동’ 시기 급진적 지식인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경향도 강하였다. 푸스넨(傅斯年)은 “나는 크게는 인류가 존재하고, 작게는 ‘나’가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인정한다. 나와 인류 중간의 모든 계급, 예를 들어 가족, 지방, 국가 등등은 모두 우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류 대의를

---

25 甘乃光, 1927, 「孫文主義研究」, 甘乃光 外, 『孫文主義研究集』, 大東書局, 8쪽.  
 26 曹任遠, 1927, 「中山先生的民族主義」, 甘乃光 外, 『孫文主義研究集』, 大東書局, 32쪽.  
 27 孫文, 1927, 앞의 책, 14쪽.  
 28 배경한, 2011. 12, 「신해혁명 전후시기 孫文의 아시아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2, 14쪽.

위해 ‘진정한 나[眞我]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리다자오[李大釗] 또한 “우리의 가정범위(家庭範圍)는 이미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진화 궤도상의 유적일 뿐이며, 모두 타파되어야 한다”고 믿었다.<sup>30</sup>

세계주의나 무정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은 단지 하나의 지역 명칭에 불과하였으며, 국가는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 윈다이잉[暉代英]은 어떻게 ‘소년중국(少年中國)’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논할 때는 “중국은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는 가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31</sup> 왕광치[王光祈] 역시 “나는 대동(大同)세계를 꿈꾸는 사람이며, 중국이라는 지역을 세계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대동세계를 만들려면 먼저 중국이라는 지역을 대동세계에 조화롭게 개조해야 한다. 내 머릿속에는 국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인류행복을 위한 활동을 도모할 경우 중국 국내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하였다.<sup>32</sup> 그는 침략적이든 평화적이든 상관 없이, 그 어떠한 국가주의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말하는 중국은 단지 지역 명칭에 불과하며, 국가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을 개조하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국가주의자도 국가주의의 침략성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는 사회조직의 궁극적인 이상이 아닌 단지 현 사회의 가장 강력한 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3</sup>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쑨원이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국가를 중시하지 않고 민족만 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할 때, 민족 간의 연합만 강조할 뿐 국가 간의 연합은 강조하지 않으며, 국가주의는 국가 간의 연합만 강조할 뿐 다른 민족과의 공동

29 傅斯年, 1919. 10, 「新潮之回顧與前瞻」, 『新潮』第2卷 第1期, 205쪽.

30 李大釗, 1919. 9, 「‘少年中國’의‘少年運動」, 『少年中國』第1卷 第3期, 3쪽.

31 暉代英, 1920. 7, 「怎樣創造少年中國?(上)」, 『少年中國』第2卷 第1期, 1쪽.

32 王光祈, 1919. 8, 「‘少年中國’之創造」, 『少年中國』第1卷 第2期, 1쪽.

33 陳啓天, 1924. 1, 「新國家主義與中國前途」, 『少年中國』第4卷 第9期, 11쪽.

투쟁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sup>34</sup> 사실 근대 이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합중연횡은 대부분 국가 간에 이루어졌으며, 국가를 탈피한 다른 민족과의 연합은 대체로 무정부주의자들의 연합과 같은 것이었다. 신채호가 무정부주의로 전향한 것도 대체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무정부주의가 쇠락한 이후,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면서 1935년부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고조되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국가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기를 원치 않았다. 왕샤오룬[汪少倫]은 1939년 출판된 『민족철학대강(民族哲學大綱)』에서 여전히 국가경쟁이 아닌 민족경쟁의 눈으로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중국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중화민족의 생존과 자유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sup>35</sup> 그렇지만 중화민족 역시 중국이란 국가와 공존해야 한다. 중화민족을 주장하면 다민족적 중국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뤼멍체[羅夢冊]는 중국을 근대 유럽 민중국가와 같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중국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천하국가(天下國家)”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민족국가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천하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천하국가”와 민족국가의 시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천하국가”는 제국이나 민족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류사회 발전의 세 가지 길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 혹은 ‘중국이라는 국가[中國之國]’은 과거나 지금까지도 ‘족국(族國)’(민족국가)도 ‘제국’도 아니며, ‘족국’을 초월하고 ‘제국’과도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하나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천하’이기도 하다. 또한 하나의 ‘천하체계’, ‘천하기구’ 혹은 ‘천하국가’”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34 甘乃光, 1927, 앞의 글, 8쪽.

35 汪少倫, 1946, 『中國之路』, 商務印書館, 4쪽.

36 羅夢冊, 1943, 『中國論』, 商務印書館, 11쪽.

### Ⅲ. 동양과 황인종

중국과 서양 간의 교류는 예로부터 있었지만, 근대 이전 동아시아 각국의 관심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체계’ 범위에만 주목하였으며, 이 범위 밖의 일에 대해서는 대개 무관심하였다. 근대 이래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충격은 동아시아 전체에 미쳤으며 동아시아인들의 일체감을 강화시켰다. 동아시아인들은 이 변화를 지역과 인종이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이해하려 하였다. 지역적 시각으로 볼 때는 동양과 서양의 경쟁이며, 인종적 시각에서 볼 때는 황인종과 백인종 간의 경쟁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은 이 같은 대립구조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의 시대 이후부터 막부 말기 전까지 일본인들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별로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전히 아시아일체 관념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시기의 동양(東洋)을 하나의 문화정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37</sup> 전통적 가족, 국가, 천하 정체성에 문화와 인종 측면의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이 더해졌다.

중국은 서구 열강 간 쟁탈의 초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속국(藩屬國)들 역시 속속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흥망쇠락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쳤다.<sup>38</sup> 세계 각국이 난립하는 가운데, 문을 닫고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불가능해졌지만 약소국이 강대국과 공존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 각국은 경쟁적으로 무력을 사용했으며, 약육강식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열강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강과 외교를 중시해야 하였다. 쉬친[徐勤]은 1900년 전후 중국의 존망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중국은 타국과 협력하지 않아 쇠망했고, 터키는 외교가 부재하여 몰락하였다. 열강의 세계에서 맹약(盟約)은

37 王屏, 2004, 『近代日本の亞細亞主義』, 商務印書館, 54쪽.

38 徐勤, 1897. 3. 8, 「中國盛衰關於地球全局」, 『知新報』第4冊, 2~4쪽.

매우 중요하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연맹을 통해 세력을 형성하였고, 남미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소국임에도 살아남았다.”<sup>39</sup> 이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여,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연대 희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특히 같은 문자와 같은 인종의 중국, 일본, 한국이 먼저 연합하는 삼국연대론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국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본은 중국의 동아시아 맹주 지위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동양주의(東洋主義) 제창은 동아시아 지역주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참패한 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대체하였으며, 러일전쟁 승리를 통해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대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철저하게 “동양의 터키”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마침내 “현재 동양에 있는 국가 중에 서구 열강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였다.<sup>40</sup> 후쿠자와 유키치 역시 “동아시아 맹주를 담당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 일본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sup>41</sup> 심지어 근대 시기 동아시아 맹주의 지위가 중화제국에서 일본제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문명사적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하였다. 나이토 고난[內藤湖南]은 “조선은 세력의 중심을 형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이며, 중국과 일본만이 동아시아의 세력 중심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몰락하였고, 세력의 중심은 이미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인은 동아시아 세력 중심이 이전된 현실을 받아들이지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히 하였다.<sup>42</sup>

39 徐勤, 1897. 4. 7, 「論俄國不能混一亞東」, 『知新報』 第10冊, 4쪽.

40 未詳, 1966, 「與中國志士書(東亞同文會報告)」, 橫濱新民社輯, 『清議報全編』 卷十七, 文海出版社影印, 11쪽.

41 福澤諭吉, 1960, 「朝鮮の交際を論ず」, 『福澤諭吉全集』 第8卷, 岩波書店, 30쪽.

42 內藤湖南著·林曉光譯, 2016, 『東洋文化史研究』, 復旦大學出版社, 154쪽.

일본은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었지만, 어떻게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는 『지나처분안(支那處分案)』에서 중국합병을 주장하였다. 또한 청일전쟁의 종전회담이 논의될 때, 다케코시 요사부로[竹越與三郎]는 『지나론(支那論)』에서 종전에 반대하면서 중국합병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 해외로 이민을 가고 있으며, 중국이 다시 부흥하면 일본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동양” 두 글자의 지리 명칭과 동양평화란 허문(虛文) 때문에 천 년백년의 큰 우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정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sup>43</sup>

합병론에 비해 동정심을 가진 사상은 아시아주의였다.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은 “아시아 일체론”을 제기하고, 일본의 지도하에 아시아 각 민족의 위대한 조직을 건립하여 서양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항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이후 일본 아시아주의에 대해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주었다. 중국과 한국 사람들 역시 일본의 아시아주의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이기(李沂)는 “동아시아를 연합하여 황인종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인의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이기는 삼국정립론(三國鼎立論)에 입각하여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후 만주를 삼등분하여 하나는 중국에 돌려주고, 하나는 일본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조선에게 분배하여, 조선이 너무 작아 중국, 일본, 조선 3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44</sup>

그러나 이런 이상주의적 아시아주의는 일본 정부의 실제 행동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오키나와를 병합하고, 중국과 조선을 침략하고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일련의 행위는 동아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도 아시아주의 주장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중국과 조선을 “나쁜 친구[惡友]”로 선언

43 竹越與三郎, 1900. 3. 31, 「中國人種侵略世界」, 『清議報』第40冊, 時論彙錄.

44 李沂, 1974, 「三滿論」, 『海鶴遺書』卷三, 國史編纂委員會, 64쪽.

하고, 동양의 “나쁜 친구”와 절교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5</sup> 이처럼 일본은 아시아에 있지만, 이와 반대로 “탈아시아[脫亞]”를 추구하였다. 아시아는 점차 낙후와 수구의 대명사가 되었다.

1902년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선언한 후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은 동양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인의 동양이 아니라 세계의 동양이라고 강조하였다.<sup>46</sup> 이후 일본이 말한 이른바 “동양의 위기”는 일본의 기타 아시아 국가의 권익에 대한 침략의 위기만을 의미하였다. 중국이 열강에 의해 분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 분할과 보전의 주장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분할이나 보전 두 가지 주장 모두 철저히 일본이 동아시아 패권을 어떻게 장악하는가로부터 출발하였다. 보전론 역시 중국이 일단 와해되면 서구 열강의 분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군사적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일본으로서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중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점령되고, 이는 일본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분할론자들 중 일부는 강대국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만국공회를 개최하여 중국 분할을 주도할 것을 주장하였다.<sup>47</sup>

보전론자들 중 일부는 일본의 주도 아래,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6개국이 중국의 간접보호자가 되어 중국을 보전하는 조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자고 주장하였다.<sup>48</sup>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는 당시 “지나보전론(支那保全論)”의 주요 주창자였다. 그가 중국 보전을 희망한 이유 역시 러시아

45 福澤諭吉, 1885. 3. 16, 「脫亞論」, 『時事新報』.

46 未詳, 1966b, 「與中國志士書(東亞同文會報告)」, 橫濱新民社輯, 『清議報全編』卷十七, 文海出版社影印, 15쪽.

47 未詳, 1899. 1. 22, 「擬立瓜分中國平和會」, 『清議報』第4冊, 西報譯編, 9~10쪽.

48 未詳, 1899. 9. 5, 「論保存中國之策(譯太陽報第拾六號)」, 『清議報』第26冊, 聞戒錄, 6~8쪽.

가 기회를 틈타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만주 일대를 자신의 것으로 하고, 그 주변 지역과 태평양 일대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일본의 이익을 빼앗아갈 것이 분명하므로 중국을 보전하지 않으면, 조선 역시 언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sup>49</sup> 일본이 분할과 보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당시 한 평론가는 이러한 양쪽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전론은 매우 훌륭하지만, 만일 이 길을 갈 경우 고개를 숙여야 한다. 분할론은 매우 웅대한 계획이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자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의 보전론은 현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고, 분할론은 폭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두 정책 모두 훌륭하고 웅대하지만, 외무 당국이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외무 당국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청국(淸國)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개발하여 우리의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청나라에 수입하여 그의 불시의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상업 발전에 힘써 무한한 이익을 차지하고, 보전과 분할 정책은 상황을 보아 시행해야 적절할 것이다.”<sup>50</sup>

이처럼 동양평화 옹호 의무와 책임 주장은 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위한 위장 전술이 되었다. 일부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우리나라(일본)는 세력범위 확장에 있어서 중국과 조선이 적합하다. 이 나라들의 철도권과 항만을 반드시 우리의 세력권 안에 두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은 서구 열강의 침략 목적과는 다르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원래 침략의 의도가 없다. 중국과 조선의 토지 및 이권이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은 중국과 조선의 손 안에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 분발하고 자강하여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때, 다시 그들의 수중으로 돌려줄 수 있다. 요컨대 중국과 조선은 이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대신 그

49 近衛篤磨, 1901. 7. 17, 「論列國宜妥商保護滿洲」, 『北京新聞彙報』, 2쪽.

50 未詳, 1899. 8. 6, 「對淸政策(譯商業世界報)」, 『淸議報』第23冊, 外論彙譯, 11~12쪽.

이권을 맡아주는 것이다.”<sup>51</sup>

다케코시 요사부로가 『지나론』에서 우려한 것처럼 중국은 일본에게 모순적 존재이며, 중국은 흥망을 불문하고 어떤 경우이든 모두 일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일본 민간에서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의 연대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중국과 조선에서도 일본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은 중국과 조선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량치차오 주도로 상하이 대동서국[上海大同書局]에서 번역 출판되었는데, 중국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출판되었다.<sup>52</sup> 무술변법 시기, kang유웨이[康有爲]는 일본인 야노 후미오[矢野文雄]와 양국 합병에 관해 구체적 방법을 토론하면서, 일단 총리아문이 비준하면 각 성별로 즉각 양국 합병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사실을 알고난 후, 야노 후미오는 러시아의 시기 질투를 우려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였다.<sup>53</sup> kang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중·일 양국의 합병을 찬성하였지만, 이는 순수하게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에서 우리나라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을 영국, 미국, 일본 3국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sup>54</sup>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이용구(李容九)가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의 영향을 받아 한일합방론을 받아들였다.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 살해한 후, 일진회(一進會)는 공개적으로 합방을 요구하여 일본이 합방의 명목으로 조선을 손쉽게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지역주의와 문명지상(文明至上)주의가 국가주의를 소멸시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관심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만 그치지 않았다. 1855년 요시다 쇼인

51 未詳, 1899. 10. 5, 「歐洲列國對中國用柔緩侵略論」, 『清議報』第29冊, 聞戒錄, 13쪽.

52 雷家聖, 2010. 6, 「『大東合邦論』與『大東合邦新義』互校記-兼論晚清「合邦」在中國的發展」, 『中國史研究』第66輯, 89~95쪽.

53 雷家聖, 2010. 6, 위의 글, 95~103쪽.

54 國家檔案局明清檔案館編, 1958, 『戊戌變法檔案史料』, 中華書局, 178쪽.

[吉田松陰]은 『유수록(幽囚錄)』에서 일본은 “조선, 만주, 중국을 손에 넣고”, 나아가 “남쪽의 루손(Luson)섬 제도를 점령하고 세력 확장의 기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일본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태평양에서 백인종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6</sup> 일본의 이러한 야심은 마지막에는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의 ‘최종전쟁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일본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세계의 중심인가를 두고 태평양을 끼고 미국과 인류 최후의 대결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약국으로서 연합 대상이 일본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청 말기에 미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중국의 연대 대상이었다. 쉬친은 “천하를 어지럽힐 자는 분명 러시아일 것이고, 천하를 안정케 할 자는 분명 미국일 것”이라고 믿었다.<sup>57</sup> 천지엔[陳繼儼] 역시 중국이 “오늘 자립하고자 한다면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면, 미국과 연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sup>58</sup>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황인종과 백인종 간의 경쟁을 자주 이야기하였지만, 확고한 생각은 아니었다.

강국 일본이든지 약국 중국과 조선이든지 모두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은 취약하였다. 영일동맹 체결 이후, 일본은 아시아주의를 국가이데올로기에서 배제하였으며, 그 후 흥기한 대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는 일본 대외확장 정책의 방패막이 되었다. 후한민[胡漢民]은 “천하의 수많은 악행은 대아시아주의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59</sup> 1917년 추인푸[丘引夫] 등은 고데라 겐기

55 嚴紹鑾, 1997. 1, 「幕末의 “宇內混同說”與明治時代의 “大東合邦論”-近代日本の “國家主義思潮研究」, 『日本學刊』 1, 86쪽.

56 未詳, 1899. 4. 30, 「論太平洋之未來與日本國策」, 『清議報』 第13冊, 外論彙譯, 12~13쪽.

57 徐勤, 1897. 4. 22, 「論俄國不能混一亞東(續第十二冊)」, 『知新報』 第13冊, 1쪽.

58 陳繼儼, 1897. 12. 24, 「論中國今日聯歐亞各國不如聯美國之善」, 『知新報』 第41冊, 2쪽.

59 胡漢民, 1934. 9, 「再論大亞細亞主義」, 『三民主義月刊』 第4卷 第3期, 13쪽.

치[小寺謙吉]의 『대아시아주의론[大亞細亞主義論]』을 번역 출판하면서 책 제목을 『병탄중국론(并呑中國論)』으로 바꾸어 출판하였다. 고데라 겐기치는 “오늘날 중국이 자신을 보존하고 통치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현 중국의 통치기관이 아닌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따라서 일본이 주장한 대아시아주의는 오히려 중국인들에게 경계심을 더욱 높여주었다. 리다자오는 “최근 일본에서는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매우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sup>61</sup> 리다자오는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강조하면서, “대아시아주의에서의 관건은 중화국가의 재건과 중화민족의 부활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부흥을 돕는 것이며, 대아시아주의를 가장하여 아시아 패권 강탈의 실체를 위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62</sup>

리다자오는 일본의 대아시아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신아시아주의를 제창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은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한 아시아는 단지 지역 명칭일 뿐 인종적 의의는 없었다. 그는 미주(美洲)는 반드시 미주연방을 결성할 것이고, 유럽 또한 유럽연방을 구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신아시아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아시아도 아시아연방을 결성하여 세계연방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3</sup> 1924년 11월, 쑨원 역시 일본에서 ‘대아주주의(大亞洲主義)’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면서, 아시아 민족들은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쑨원의 이 연설은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중국과 일본을 구심점으로 하는 아시아인의 연대를 기대하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65</sup> 그러나 쑨원 사상의 대동주의적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 후한

60 小寺謙吉 著·丘引夫等 譯, 1917, 「譯例」, 『併呑中國論』, 民鐸雜誌社, 1~2쪽.

61 李大釗, 1919. 2, 「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國民』 第1卷 第2號, 1쪽.

62 李大釗, 1917. 4. 18, 「大亞細亞主義」, 『甲寅』 日刊.

63 李大釗, 1919. 2, 앞의 글, 3쪽.

64 孫文, 1939. 10, 「大亞洲主義」, 『興建月刊』 第1卷 第1號, 22쪽.

65 배경한, 2011. 12, 앞의 글, 14쪽.

민은 쑨원의 대아시아주의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잇고, 민족주의가 세계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았다.<sup>66</sup> 따라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아시아주의는 인종을 구분의 근거로 삼지도 않고 지역정체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한 세계주의적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승원(高承元)은 리다자오가 발표한 「대아시아주의(大亞細亞主義)와 신아시아주의(新亞細亞主義)」를 읽었을 때, 세계 각 민족이 연합하여 세계연방 구성을 직접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sup>67</sup>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아시아주의는 큰 의미에서 일본이 세계 패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중·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일부의 생각에 불과하였다. 특히 “9·18사변” 이후, 중·일 양국 사이의 모든 연대 고리는 와해되었다. 양국이 전면적 적대관계로 전환된 후, 많은 일본인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도쿄 교외 지역에 살고 있던 나카야마 마사루(中山優)가 대표적인데, 그는 청빈한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일이 적극적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sup>68</sup>

이 시기에 비교적 영향력이 큰 사상은 ‘동아연맹론(東亞聯盟論)’과 ‘동아협동체론(東亞協同體論)’이었다. 이시와라 간지는 ‘최종전쟁론’에서 출발하여 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아연맹론”을 제창하고 동아연맹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연맹론”은 후에 왕징웨이[汪精衛] 정권의 투항 논리가 되었다. ‘동아협동체론’은 일부 일본 지식인들이 제기한 것으로, 대체로 동양문화 중에서 협동주의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한 것이며,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일본과 중국 관계를 재차 확립하자는 것이었다.<sup>69</sup>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여

66 胡漢民, 1934. 9, 앞의 글, 15쪽.

67 李大釗, 1919. 11, 「再論新亞細亞主義」, 『國民』第2卷 第1號, 1쪽.

68 中山優, 1944, 『關於大東亞宣言』, 南京: 中央電訊社, 저자소개 부분.

69 史桂芳, 2001, 『東亞聯盟論研究』,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35쪽.

중국에서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건립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을 차례로 외교 방침으로 확정하였다. 이 주장들은 비록 사기성이 매우 농후하였지만, 일본의 잔혹한 침략의 죄악을 감출 수 없었다. 장제스(蔣介石)는 이른바 ‘동아신질서’에 대한 평론에서, 이는 단지 일본이 중국을 합병하여 태평양을 제패하려는 야심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자백일 뿐이라고 평가하였다.<sup>70</sup>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도 이번 중·일 간의 전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다. 최남선(崔南善)은 북방이민족(北方異民族)의 증원 쟁탈 연장의 시각에서 일본의 전면적인 중국 침략으로 보았으며, 이는 북방이민족의 증원 정복의 제5단계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인, 조선인과 만주인이 대북방세력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한민족(漢民族)에 대항하여 증원을 정복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 경우, 만주인은 권토중래할 수 있고, 조선인은 고구려 이래 꿈에 그리던 증원입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일본인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豊秀吉)가 꿈꾸던 ‘대명국(大明國) 입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71</sup>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독립운동은 중국 안에서 진행되고, 중국인과 서로 협력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고 있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연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승국으로서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일부 중국인은 여전히 ‘중일합방론(中日合邦論)’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허용지(何永佳)는 전후 중국은 일본을 크게 압도할 수 없기 때문에, 중·일 모두 독립국으로서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을 수 없듯이 양국 간 경쟁이 또다시 생

70 蔣介石, 「駁斥所謂“建立東亞新秩序”謬說」, 『最高領袖駁斥所謂“建立東亞新秩序”謬說的重要演詞』, 江西省各界民衆第二期抗戰第一次宣傳周壽備委員會印, 3~4쪽.

71 崔南善, 1973, 「白頭山觀參記」, 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六堂崔南善全集』第10卷, 玄岩社, 286~287쪽.

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국이 합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가지 주목을 끄는 점은 허용지가 중일합방의 방식을 논할 때, 과거의 ‘조공책봉체제’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제도가 두 나라를 자동으로 결합시키는 ‘합병’의 방법이라고 보았다.<sup>72</sup> 물론 허용지 역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였다. 그는 각국이 참여하는 의회를 설립하고, 약소국들에게 일정 수준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사람들은 중화질서의 부활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당시 미국이나 영국 등의 여론은 중국을 4대 강국의 하나로 보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제스는 “중국은 아시아를 이끌 뜻이 없음”을 거듭 표명하였다.<sup>73</sup> 대다수 중국 지식인 또한 중국이 과거의 제국주의로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전후 중국의 주변국들이 중국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희망하였다. 이 경우, 중국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민족독립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의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대다수 중국인은 미국이 세계 영도의 책임을 맡아주기를 희망하였다.<sup>74</sup>

결론적으로, 천하의 관념이 해체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 지역, 세계의 세 차원에서 문제를 사고하였으며, 국가정체성, 지역정체성, 세계정체성 중 지역정체성은 가장 쉽게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하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주의의 주요 창시자이자 제창자였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 확장의 주요 목표이었다. 따라서 일본국가주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간의 충돌은 근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형성의 주요 장애가 되었다.

72 何永佶, 1948b, 「中日合邦論」, 『中國在靛盤上』, 觀察社, 179~186쪽.

73 羅夢冊, 1943, 『中國論』, 10쪽.

74 何永佶, 1948a, 「美國能領導世界嗎?」, 『中國在靛盤上』, 觀察社, 240쪽.

## IV. 천하와 세계

량치차오는 중국인들은 천하 관념으로 국가 관념을 대신하고 있어, 유럽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이토 고난 역시 중국인들은 세계주의 특성과 초국가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75</sup>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중화질서하에 번속국(藩屬國) 지위에 있던 조선의 사대부들 역시 강한 천하 관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천하라는 하나의 체계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다. 황경원(黃景源)은 “한 나라가 존재하면 천하가 오랫동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한다. 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천하가 망하는 위기가 온다. 작고 큰 나라가 서로 공존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sup>76</sup> 따라서 황경원은 번속국의 신하로서 종주국 천자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명(明)이 흥한 이래 속국의 선비는 천자의 나라에서 벼슬을 할 수 없다. 사신으로 황극전에서 천자를 알현할 때 그 예는 매우 소박하였다. 그러나 천자를 부모처럼 여기는 속국의 선비로서 스스로 그 예를 다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 천성이 충성을 다하는 자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다.<sup>77</sup>

근대 시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의 침략은 동아시아 각국의 천하 관념을 변화시켰다. 천하는 이미 열강의 소유물이 되었고, 중국은 더 이상 천하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천하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청과의 종반관계(宗藩關係)에서 벗어난 것이 복인지 확인지를 알 수 없었다. 조선의 개화파는 청초에 대한 사대(事大)를 노예적 근성이라고 비판하였지만, 개화파 역시 외세에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인석(柳麟錫)은 개화파가 더 강

75 內藤湖南 著·林曉光 譯, 2016, 『東洋文化史研究』, 復旦大學出版社, 154쪽.

76 黃景源, 1991a, 『江漢集』 卷二十七, 傳, 明陪臣傳一, 景仁文化社.

77 黃景源, 1991b, 『江漢集』 卷三十, 傳, 明陪臣傳四, 景仁文化社.

한 노예적 근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노예 근성을 없애려면 서양의 워싱턴의 통치와 예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미친 듯이 흠모하고 따르는데 어찌하랴?”라며 개화파를 비판하였다. 또한 청조에 대한 사대는 나라를 존속되게 하지만, 개화와 자강은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개화라고 하는 것은 망국의 단초”라고 주장하였다.<sup>78</sup>

사실상 근대 세계는 천하를 긴밀한 관계로 하나의 천하로 만들었으며, 각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웠으며, 중국은 이 천하의 밖에 단독으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 침략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은 중국 문제를 세계 범위에 놓고 사고하는 데 점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량치차오는 중국의 위기는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만국에도 모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sup>79</sup> “5·4 운동” 시기가 도래하면서, 세계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과 같은 각종 ‘주의’의 유행은 동아시아인의 세계정체성 문제에 일체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천두슈(陳獨秀)는 세계가 이미 하나가 되었으며, 작은 행동 하나도 세계 각국에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중국 청년들은 세계의 것이며, 쇠국의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다.<sup>80</sup> 그의 사유 방식은 당시의 신하는 천자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황경원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급진적 성향의 청년 지식인일수록 세계가 매우 빠르게 대동(大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다. 천두슈는 심지어 무교육, 무지식, 무단결력의 중국인은 대동세계의 일원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였다.<sup>81</sup>

세계주의 역시 지역주의와 마찬가지로 어렵게 불러일으킨 애국 열정에 충격

78 柳麟錫, 1973, 『毅菴集(上)』 卷二十五, 書, 通告一國縉紳士林書, 景仁文化社, 576쪽.

79 任公, 1900. 8. 5, 「論今日各國待中國之善法」, 『清議報』 第53冊, 本館論說, 3쪽.

80 陳獨秀, 1987a, 「敬告青年」,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7쪽.

81 陳獨秀, 1987f, 「我們究竟應當不應當愛國?」,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432쪽.

을 줄 수 있었다. 천두슈는 국가, 민족, 가족, 결혼 등의 관념은 모두 야만시대 편견의 유산으로 미래의 대동세계에서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sup>82</sup> 즉, 그가 이해하는 대동세계는 국가와 민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민족의 언어와 문자 역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세계어가 중국 청년들에게 유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 우즈후이[吳稚暉]와 첸셴통[錢玄同] 등과 같은 이들은 한자를 폐지하고 세계어로 중국의 언어문자를 대신할 것을 주장하였다. 타오멍허[陶孟和]는 비록 한자 폐지에는 반대하였지만 장래에 세계가 대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게 믿었다. 그는 “세계의 미래는 동일하지 않은 통일[不同之統一], 비일치의 통일일 것”이며, 국가와 민족은 여전히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up>83</sup>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하고, 문명진화에 장애물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대동의 실현 촉진을 위해 폭력을 동원하여 국가를 파괴할 것을 주장하였다.<sup>84</sup>

그러나 세계의 대동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반대로 현실세계는 야생의 법칙이 성행하고 근대 이전의 국제관계에 비해 더욱 신의가 없어졌다. 동아시아 각국 사람은 모두 당시의 세계 정세를 춘추전국시대에 비유하면서, “근래 세계 각국의 대치는 거시적으로 보면 춘추전국시대의 상황과 같다”고 하였다.<sup>85</sup>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합병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강유웨이는 “좌전(左傳)부터 전국책(戰國策)까지 보면, 200여 나라가 100년도 되지 않아 6~7개 나라로 합병되었다. 지금이 그 때와 같다”라고 주장하였다.<sup>86</sup> 그는

82 陳獨秀, 1987d, 「四答錢玄同(中國今後之文字問題)」,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738쪽.

83 陳獨秀, 1987b, 「答陶孟和(世界語)附陶孟和書」,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725쪽.

84 陳獨秀, 1987c, 「答鄭賢宗(國家·政治·法律)附鄭賢宗書」,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81쪽.

85 未詳, 1966a, 「論中國爲各國聯盟之中心點(上海商務日報)」, 橫濱新民社輯, 『清議報全編』卷二十五, 文海出版社影印, 75쪽.

86 康有爲, 1913. 2, 「中華救國論」, 『不忍』第1冊, 3쪽.

세계의 작은 나라들은 조만간 열강에 의해 합병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오늘날 강대국은 몇 나라에 불과하고, 생존 가능한 국가 역시 몇 나라일 뿐”이라고 보았다.<sup>87</sup> 일부에서는 태국을 예로 작은 나라 역시 외교적 수단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캉유웨이는 이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88</sup>

생존해야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를 지고무상의 지위로 격상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가족 및 천하 관념 속박의 타파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가족 관념과 천하 관념의 영향을 완전히 타파하기는 쉽지 않았다. 천하 관념의 영향에서 보면, 지역주의와 세계주의의 유행이 바로 그 영향의 명확한 증거였다. 이에 량치차오는 중국인들이 원래부터 국가주의에 익숙지 못하고, 오히려 ‘반국가주의’ 혹은 ‘초국가주의’ 정치이론에 깊이 빠져든 것을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근대국가 경쟁 과정에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sup>89</sup>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의 구속력 결여 때문이었다. 오히려 강대국은 만국공법을 미끼로 사용하였으며, 이 미끼에 우둔한 자는 걸려들었고 지혜로운 자는 벗어났다. 공법은 갈수록 강대국의 입맛대로 되었으며, 공법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날로 정교하게 이용되었다. 공법은 강대국의 자본일 뿐 만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sup>90</sup> 그러나 동아시아의 약소국들은 만국공법이 더욱 준수되기를 희망하였다. 정교(鄭喬)는 “동아시아는 공법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공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 이와 반대로 서유럽은 공법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공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자가 많다”고 평가하였다.<sup>91</sup>

87 康有爲, 1913, 2, 위의 글, 4쪽.

88 康有爲, 1913, 2, 위의 글, 3쪽.

89 梁啓超, 1926, 『先秦政治思想史』, 商務印書館, 4쪽.

90 韓文舉, 1897, 3, 18, 『萬國公政說(續前稿)』, 『知新報』第6冊, 1쪽.

91 鄭喬, 1906, 11, 『國際公法』, 『少年韓半島』第一號, 13쪽.

따라서 약소국은 공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정광잉[鄭觀應]은 “국가의 국력이 서로 같으면, 공법은 서로 간에 유지된다. 그러나 만일 국력의 차이가 너무 크면, 공법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보기에 공법은 단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구속하는 도구일 뿐이며, 강국은 공법을 집행하여 약소국을 억누르고 약소국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sup>92</sup> 따라서 약소국은 자강을 제1의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각종 ‘주의’를 도입하고 각종 제도를 시험하였다. 예를 들면, 천두슈는 처음에는 군국주의(軍國主義)와 금력주의(金力主義)를 제창하였다.<sup>93</sup> 그러나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에 영향을 받아, 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심지어 국가조차 포기하면서 세계 각 민족과 국가와 다른 새로운 결합체를 하루 빨리 건립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제국의 “3·1운동” 발발 이후, 천두슈는 조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민의를 이용하여 민족의 독립 자치를 실현하고, 독립 후에도 이 정신을 유지하여 영원히 한 명의 군인도 모집하지 않고, 한 발의 탄환도 만들지 않는, 세계 각 민족의 새로운 결합(국가라고 부르지 않음)의 전형이 되기를 희망하였다.<sup>94</sup>

만공공법을 믿을 수도 없고 자강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국제 정세를 춘추전국 시대와 비유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열강의 시대가 대일통(大一統)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Kang Yewei의 학설은 대동으로 천하를 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였으며, 중국을 구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이었다.<sup>95</sup> 반대로 조선의 소수 보수적 성향의 유학자들은 과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아끼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

92 鄭觀應 著·辛俊玲 評註, 2002, 『盛世危言』, 華夏出版社, 60~61쪽.

93 陳獨秀, 1987e, 「『新青年』宣言」,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244쪽.

94 陳獨秀, 1987g, 「朝鮮獨立運動之感想」,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404쪽.

95 康有爲, 1935, 『大同書』, 上海中華書局, 81~165쪽.

는[字小事大] 중화질서를 그리워하고 공론화하였다. 1913년 유인석은 『우주문답(宇宙問答)』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통일의 국면이 회복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 “세계는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답: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문: “어느 나라에 의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가?”

답: “중국에 의하여야 한다. 중국이 대일통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가 통일될 수 있다.”<sup>96</sup>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한 양국의 국민들은 진리가 강권을 이긴다고 믿었으며,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세계질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세계인들의 공통된 기대 속에서 탄생되었다. 미국이 파리평화회의의 개최를 제안한 이후, 중국의 한 민간 단체인 도덕학사(道德學社)도 파리평화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강자는 그 힘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강자와 약자가 동등하게 행복을 향유하고, 모든 나라가 예를 알고,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계가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파리평화회의 이후 애인(愛人), 제가(齊家), 치국(治國), 정성(正性), 태화(太和), 불계(不戒), 복명(復命)의 모든 일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다.<sup>97</sup> 비록 ‘평천하(平天下)’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 구조에 따라 세계질서를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광(曙光)은 사천(四川) 사람으로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세계의 흐름을 대략 파악한 후, 대동주의에 기울어 ‘인류 간의 경계의 벽을 허물고, 인류 분쟁을 소멸하여 가장 아름다운

96 柳麟錫, 1973, 『毅菴集(下)』卷五十一, 宇宙問答, 景仁文化社, 545쪽.

97 未詳, 1918. 11, 「和平會說三」, 『道德淺言』第7冊, 社員講編, 32쪽.

대동세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기하였다.<sup>98</sup>

쑨원은 민족주의를 설파할 때 세계대동을 가장 높은 목표로 삼았으며, 중국이 장래에 강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약한 자와 곤란한 자를 돕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중국 고유의 도덕과 평화를 세계통일의 기초로 삼아 대동의 다스림을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sup>99</sup> 쑨원의 민족주의에 관해 주첸즈[朱謙之]는 『국민혁명(國民革命)과 세계대동(世界大同)』에서 중국의 국민혁명은 자본가 계급을 뛰어넘어 즉각 대동의 세계로 전진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sup>100</sup>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베르사이유-워싱턴 체제는 일시적으로 중국이 서구 열강에 의해 분할되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였고, 국제연맹의 창설 역시 새로운 세계질서가 건립의 희망을 가져왔다. “9·18사변” 이후, 남경 국민정부는 국제연맹의 중재를 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역시 국제공법과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 및 9국공약을 인용하여 국제연맹에 제소할 것을 희망하고 국제연맹이 나서 정의를 수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국인들은 국제공법과 켈로그-브리앙 조약 등은 세계인들이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를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sup>101</sup>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진리가 강권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은 중국인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때문에 일부 중국인들은 “지금의 세상에는 강권만 있고 공리가 없으며, 평화나 부전(不戰) 등과 같은 듣기 좋은 말들은 모두 강자가 약자를 속이기 위한 일종의 위장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왕제칭[王潔卿]은 중국의 주요 위협은 제일 먼저 일본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은 소련, 그다음이 영국과 미국이라고 보았다.

98 曙光, 1934, 「自序」, 『大同世界』, 成都大中印務局, 2~3쪽.

99 孫文, 1927, 앞의 책, 63쪽.

100 朱謙之, 1929, 『國民革命與世界大同』, 泰東圖書局, 16쪽.

101 裴錫頤, 1931, 9, 「爲暴日入寇東北事警告日人并勉國人」, 學生抗日救國會宣傳股編, 『暴日侵占東省特刊』, 學生抗日救國會, 79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영웅이 일반인을 기만하는 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2</sup>

국제연맹의 무능함은 국제사회에 국제연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중국인들 역시 다른 출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국제정부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1936년 린시첸[林希謙]은 현재 각국은 세계정부를 수립할 포용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인류의 심리 상태로 볼 때는 국제연맹도 너무 일찍 만든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중국 외교는 국제연맹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두 개의 나아갈 길이 있는데, 하나는 반제국주의 전선에 가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 민족을 연합하여 동방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3</sup> 그러나 이 두 가지 길은 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정젠성[程劍聲]은 당시 중국인의 외교 사상은 세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았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과 연합하여 코민테른에 가입하여 세계혁명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으며, 급진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국제’ 또는 ‘삼민주의국제’를 조직하고 ‘동방삼민주의연방’을 건립하여 대동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 민족주의자들은 세계혁명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국가와 연합하여 침략에 저항하고, 심지어 강국과 연합할 것을 주장하면서 산만한 인민전선으로는 파시즘 침략에 대항할 수 없다고 믿었다.<sup>104</sup>

전면적 항일전쟁 시기에 이르러, 레이하이중[雷海宗]과 린통지[林同濟]를 대표로 하는 전국책파(戰國策派)는 여전히 서양문화가 열국 단계의 고조기, 즉 전국시대에 처해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세계 정세가 이미 열국의 시대를 벗어

102 王潔卿, 1931. 9, 「帝國主義侵略下之中國應有之覺悟」, 學生抗日救國會宣傳股編, 『暴日侵占東省特刊』, 學生抗日救國會, 68쪽.

103 林希謙, 1936. 4, 「非常時期之國聯認識與我國之路線」, 『中國新論』第2卷 第4期, 25~27쪽.

104 程劍聲, 1938. 10, 「對中國前途的觀察」, 『中華評論』第1卷 第1期, 8~9쪽.

나 대일통으로 진입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았다.<sup>105</sup> 그들은 대동세계의 실현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보다 더욱 강력한 국제조직이 건립되어 통일된 세계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질서를 새로 구축할 것인가? 역시 국제연맹의 비판에서 출발해야 한다. 위자취[余家菊]는 국제연맹의 무력함은 경제제재를 통해 침략을 저지하려 하였기 때문이고, 경제제재의 결과는 즉각 전쟁으로 나타났으며, 전쟁 실행의 준비가 없는 경제제재는 관철될 수 없고 침략을 제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각국은 군사력 외에 독립된 국제적 무장력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6</sup> 진티첸[金體乾]은 경제적 측면이 기초가 된 전후 세계평화 수립을 희망하였다. 그는 소련의 신경계정책은 국가자본주의이며, 제3차 세계대전은 국가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충돌이 될 것으로 보았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각국은 모두 국가자본제도를 수립하고, 국내에서는 계획경제와 통제경제를 실시하며, 국제적으로는 계약된 국가무역제도를 수립할 것과 각국의 식민지 개방 협정 체결과 각국의 이민 기준의 확정을 제안하였다. 국제조직 측면에서 세계경제위원회를 조직하여 세계경제를 관리하고, 점차로 세계경찰, 세계공동화폐, 공동 세금제도를 조직하고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07</sup> 그는 더 나아가 전후 세계질서가 더욱 도덕적 성격을 구비하기 위해 중국문화를 이용하여 세계를 구원할 것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샹오이산[蕭一山]은 인류의 평화 수립을 위해 중국의 중용(中庸)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여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롭고 관대하며 자족할 수 있는 도덕성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8</sup> 첸단성[錢端升] 역시 국제관계에서 동양 전통의 도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

105 林同濟·雷海宗, 1946, 『文化形態史觀』, 大東書局, 2쪽.

106 余家菊, 1943. 8, 「論國際武力」, 『當代論壇』第5期, 10쪽.

107 金體乾, 1944, 『建立世界和平的設計』, 正中書局, 26~112쪽.

108 蕭一山, 1943. 7, 「戰後和平與中國文化(續)」, 『當代論壇』第4期, 8쪽.

에는 충서의 도[忠恕之道]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9</sup>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세계연방 건립의 전망은 여전히 요원하며, 국가는 사라질 수 없고 국경 역시 폐지되지 않으며, 미래의 국제관계는 국가를 초월하지 못하고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일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sup>110</sup>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여전히 국가, 지역, 세계의 3개 측면에서 문제를 사고하게 되었다.

## V. 맺음말

근대 동아시아인들의 국가, 지역, 세계정체성의 전환, 동양과 서양, 중국과 일본의 힘의 전환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통적 유교정치 윤리 중 천하는 최고의 가치였으며, 국가는 중간 고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량치차오가 민족주의를 제창할 때 중국인의 천하 관념을 극력 타파해야만 하였다. 쉬지린[許紀霖]은 “근대중국이 ‘가국천하연속체(家國天下連續體)’를 타파한 이후 국가는 지고무상의 지위를 획득한 반면, 개인은 의지할 곳 없이 존재의 의의를 잃었다”고 설명하였다.<sup>111</sup> 사실 개인주의와 무정부주의가 한때 유행하였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개인은 여전히 가정과 국가, 동아시아, 세계에 의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국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구성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이런 새로운 구성체를 구성하면서 국가도 항상 지고무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국가는 가국천하연속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종주와 변속, 중화와 이적, 중심과 변방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109 錢端升, 1943. 7, 「中美英蘇友好合作爲和平基礎論」, 『當代論壇』 第4期, 3쪽.

110 胡秋原, 1943. 4, 「世界和平之心理基礎」, 『國民外交』 第1卷 第2期, 21쪽.

111 許紀霖, 2017, 『家國天下-現代中國的個人, 國家與世界認同』, 10쪽.

이러한 전통구조로부터 벗어나더라도 다시 동양과 서양, 동양문명과 서양문명,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립구조에 직면할 것이다. 서양 열강의 압력에 직면한 후 전통적 천하 관념은 온 세계로 확대되는 한편,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라는 하나의 지역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점차적으로 국가, 지역(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라는 3단계의 인식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민족(국가)주의를 제창하는 동시에, 지역주의(동양주의)와 세계주의(대동주의)에도 열중하는 것이다. 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사상은 모두 이와 같은 세 방향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삼국의 국력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큰 차이가 난다.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요 생산자이자 서술자이며, 그것을 동아시아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병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삼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침략당하는 과정에서야 지역주의의 허구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중·한 양국, 특히 중국은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하여 민족주의를 제창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은 량치차오가 기대하던 것과 달리 정치적 정체성을 국가에만 집중시키지 않았다. 대동주의, 세계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각종 초국가적 정치사상은 여전히 참 매력적이다. 동아시아인에게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란 유가의 천하사상으로부터 근대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누군가가 근대 일본의 지역주의로부터 새로운 동아시아 정체성을 개발해낸 것처럼, 대동주의나 세계주의도 특정한 정치적 조건 아래에서 다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계속 존재하고, 아시아연방이나 세계연방을 꿈꾸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며, 미래의 세계관계도 지금과 같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유지된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鄭喬, 1906. 11, 「國際公法」, 『少年韓半島』 第1號.
- 崔南善, 1973, 「白頭山觀參記」六堂全集編纂委員會 編, 1973, 『六堂 崔南善全集』 第10卷, 玄岩社.
- 袁時客, 1899. 2. 20, 「愛國論一」, 『清議報』 第6冊, 本館論說.
- \_\_\_\_\_, 1899. 7. 28, 「愛國論三·論民權」, 『清議報』 第22冊.
- \_\_\_\_\_, 1899. 10. 15, 「論近世國民競爭之大勢及中國之前途」, 『清議報』 第30冊, 本館論說.
- 陳繼巖, 1897. 12. 24, 「論中國今日聯歐亞各國不如聯美國之善」, 『知新報』 第41冊.
- 陳啟天, 1924. 1, 「新國家主義與中國前途」, 『少年中國』 第4卷 第9期.
- 程劍聲, 1938. 10, 「對中國前途的觀察」, 『中華評論』 第1卷 第1期.
- 傅斯年, 1919. 10, 「新潮之回顧與前瞻」, 『新潮』 第2卷 第1期.
- 韓文舉, 1897. 3. 18, 「萬國公政說(續前稿)」, 『知新報』 第6冊.
- 何樹齡, 1897. 4. 10, 「論今之時局與戰國大異」, 『知新報』 第12冊.
- 胡漢民, 1934. 9, 「再論大亞細亞主義」, 『三民主義月刊』 第4卷 第3期.
- 胡秋原, 1943. 4, 「世界和平之心理基礎」, 『國民外交』 第1卷第2期.
- 蔣介石, 「駁斥所謂“建立東亞新秩序”謬說」, 『最高領袖駁斥所謂“建立東亞新秩序”謬說的重要演詞』, 江西省各界民衆第二期抗戰第一次宣傳周籌備委員會印.
- 近衛篤麿, 1901. 7. 17, 「論列國宜妥商保護滿洲」, 『北京新聞彙報』.
- 康有爲, 1913. 2, 「中華救國論」, 『不忍』 第1冊.
- 李大釗, 1917. 4. 18, 「大亞細亞主義」, 『甲寅』 日刊.
- \_\_\_\_\_, 1919. 2, 「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國民』 第1卷 第2期.
- \_\_\_\_\_, 1919. 9, 「少年中國的‘少年運動」」, 『少年中國』 第1卷 第3期.
- \_\_\_\_\_, 1919. 11, 「再論新亞細亞主義」, 『國民』 第2卷 第1期.

- 林希謙, 1936. 4, 「非常時期之國聯認識與我國之路線」, 『中國新論』第2卷 第4期.
- 裴錫頤, 1931. 9, 「爲暴日入侵東北事警告日人并勉國人」, 學生抗日救國會宣傳股編, 『暴日侵占東省特刊』, 學生抗日救國會.
- 佩弦生, 1900. 4. 10, 「論中國救亡當自增內力」, 『清議報』第41冊, 本館論說.
- 錢端升, 1943. 7, 「中美英蘇友好合作爲和平基礎論」, 『當代論壇』第四期.
- 任公, 1900. 2. 10, 「少年中國說」, 『清議報』第35冊, 本館論說.
- \_\_\_\_, 1900. 8. 5, 「論今日各國待中國之善法」, 『清議報』第53冊, 本館論說.
- \_\_\_\_, 1901. 10. 22,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清議報』第95冊, 本館論說.
- 孫文, 1939. 10, 「大亞洲主義」, 『興建月刊』第1卷 第1號.
- 王光祈, 1919. 8, 「少年中國之創造」, 『少年中國』第1卷 第2期.
- 王潔卿, 1931. 9, 「帝國主義侵略下之中國應有之覺悟」, 學生抗日救國會宣傳股編, 『暴日侵占東省特刊』, 學生抗日救國會.
- 未詳, 1899. 1. 22, 「擬立瓜分中國平和會」, 『清議報』第4冊, 西報譯編.
- \_\_\_\_, 1899. 4. 30, 「論太平洋之未來與日本國策」, 『清議報』第13冊, 外論彙譯.
- \_\_\_\_, 1899. 8. 6, 「對清政策(譯商業世界報)」, 『清議報』第23冊.
- \_\_\_\_, 1899. 9. 5, 「論保存中國之策(譯太陽報第十六號)」, 『清議報』第26冊, 聞戒錄.
- \_\_\_\_, 1899. 10. 5, 「歐洲列國對中國用柔緩侵略論」, 『清議報』第29冊, 聞戒錄.
- \_\_\_\_, 1918. 11, 「和平會說三」, 『道德淺言』第7冊.
- \_\_\_\_, 1966a, 「論中國爲各國聯盟之中心點(上海商務日報)」, 橫濱新民社輯, 『清議報全編』卷二十五, 文海出版社影印.
- \_\_\_\_, 1966b, 「與中國國志士書(東亞同文會報告)」, 橫濱新民社輯, 『清議報全編』卷十七, 文海出版社影印.
- 吳恆煒, 1897. 3. 3, 「知新報緣起(續前稿)」, 『知新報』第3冊.
- 蕭一山, 1943. 7, 「戰後和平與中國文化(續)」, 『當代論壇』第四期.
- 徐勤, 1897. 3. 8, 「中國盛衰關於地球全局」, 『知新報』第4冊.
- \_\_\_\_, 1897. 4. 7, 「論俄國不能混一亞東」, 『知新報』第10冊.
- \_\_\_\_, 1897. 4. 22, 「論俄國不能混一亞東(續第十二冊)」, 『知新報』第13冊.
- 余家菊, 1943. 8, 「論國際武力」, 『當代論壇』第5期.
- 惲代英, 1920. 7, 「怎樣創造少年中國?(上)」, 『少年中國』第2卷 第1期.

竹越與三郎, 1900. 3. 31, 「中國人種侵略世界」, 『清議報』第40冊, 時論彙錄.

福澤諭吉, 1885. 3. 16, 「脫亞論」, 『時事新報』.

\_\_\_\_\_, 1960, 「朝鮮の交際を論ず」, 『福澤諭吉全集』第8卷, 岩波書店.

## 단행본

丹齋 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1984, 『丹齋 申采浩先生全集』別集, 螢雪出版社.

柳麟錫, 1973, 『毅菴集(上·下)』, 景仁文化社.

李沂, 1974, 『海鶴遺書』, 國史編纂委員會.

자오팅양 지음,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제: 21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길.

黃景源, 1991, 『江漢集』, 景仁文化社.

陳獨秀, 1987, 『獨秀文存』, 安徽人民出版社.

甘乃光 外, 1927, 『孫文主義研究集』, 大東書局.

顧炎武, 1929, 『日知錄』, 商務印書館.

國家檔案局明清檔案館 編, 1958, 『戊戌變法檔案史料』, 中華書局.

何永佶, 1948, 『中國在戡盤上』, 觀察社.

金體乾, 1944, 『建立世界和平的設計』, 正中書局.

康有爲, 1935, 『大同書』, 上海中華書局.

梁啟超, 1926, 『先秦政治思想史』, 商務印書館.

梁漱溟, 1949, 『中國文化要義』, 路明書店.

林同濟·雷海宗, 1946, 『文化形態史觀』, 大東書局.

羅夢冊, 1943, 『中國論』, 商務印書館.

內藤湖南 著, 林曉光 譯, 2016, 『東洋文化史研究』, 復旦大學出版社.

史桂芳, 2001, 『東亞聯盟論研究』, 首都師範大學出版社.

曙光, 1934, 『大同世界』, 成都大中印務局.

孫文, 1927, 『三民主義』, 民權書局.

王屏, 2004, 『近代日本的亞細亞主義』, 商務印書館.

汪少倫, 1946, 『中國之路』, 商務印書館.

小寺謙吉 著·丘引夫 等譯, 1917, 『併吞中國論』, 民鐸雜誌社.

- 許紀霖, 2017, 『家國天下-現代中國的個人, 國家與世界認同-』, 北京世界文景文化傳播有限公司.
- 趙汀陽, 2005,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 江蘇教育出版社.
- 鄭觀應 著·辛俊玲 譯註, 2002, 『盛世危言』, 華夏出版社.
- 中山優, 1944, 『關於大東亞宣言』, (南京)中央電訊社.
- 朱謙之, 1929, 『國民革命與世界大同』, 泰東圖書局.

## 논문

- 雷家聖, 2010. 6, 「“大東合邦論”與“大東合邦新義”互校記-兼論晚清“合邦”在中國的發展」, 『中國史研究』 66.
- 배경한, 2011. 12, 「신해혁명 전후시기 순문의 아시아 인식」, 『중국근현대사연구』 52.
- 白永瑞, 2000. 8, 「在中國有亞洲嗎?-韓國人的視覺」, 『東方文化』 4.
- 嚴紹璽, 1997. 1, 「幕末의 “宇內混同說”與明治時代의 “大東合邦論”-近代日本의 “國家主義思潮研究”」, 『日本學刊』 1.
- 趙妍傑, 2018. 5, 「爲國破家: 近代中國家庭革命的反思」, 『近代史研究』 3.

##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 근대 동아시아인 정치 개념의 범주 -

왕원주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는 유교문화의 영향 아래 전통 시기 동아시아인들이 가졌던 정치에 대한 순차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시기 서방 세력의 영향과 기존 관념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 전통적 천하 구조와 정치 관념은 점차 해체되었으며 국가의 개념은 더욱 두드러졌다. ‘천하’는 ‘세계’로 대체되었지만, ‘천하’주의의 영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은 세계주의에 심취해 있었다. 전통적 개념에서의 천하의 범위는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로 대체되었으며, 국가정체성과 세계정체성 사이에서 지역정체성이 출현하였다. 동양주의, 아시아주의 등과 같은 지역주의가 잇달아 제기되고 고양되었다. 일본인들이 주도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침략확장 정책이 결합되어,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동아시아 신질서’와 ‘대동아공영권’ 등과 같은 침략적 외교정책을 가리는 위장막이 되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 더 나아가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에 현실적 필요와 천하주의 전통은 수많은 동아시아인을 국가, 지역, 세계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에 관한

사고에 익숙하도록 만들었으며, 지역주의와 세계주의는 민족주의만큼이나 큰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확장 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수립을 어렵게 만들었고, 지역주의는 중국 등과 같은 피침략 국가 사람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일본 재건, 국제 냉전 및 동아시아 열전(熱戰)으로 인해 지속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지역정체성 건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제어:** 민족주의, 지역주의, 동양주의, 천하주의, 세계주의

## ABSTRACT

# Political Dynamics in East Asian Countries: Attempts to Establish a Modern International Order within the Region

Wang Yuanzhou

Confucianism endeavored to construct a political ideology founded upon the hierarchy of values of personal virtues, family harmony, and well-ordered concord in and around the empire (*Tian Xia*, i.e., the Land under Heaven). This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regional order in East Asia disintegrated in modern times because of the impact from the Western powers and the new ideas thereof. The old notion of *Tian Xia* lingered and was being substituted by idioms such as East Asia, Asia, Asianism and Orientalism, indicative of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upon the importance of East Asia as an integral region, especially by Japanese politicians and scholars. This particularism of East Asia was once employed by Japanese imperialists to pursue their ambitious plan of expansion and domination, the so-called “new order of East Asia.” In China and Korea, however, there were also politicians and scholars

who believed in nationalism and tried to work out a particularism of East Asia that, for some of them, even provided the basis for a new world order. The political reality and the tradition of *Tian Xia* often forced peoples in the region to look 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through this particularism of East Asia, while retaining their global vision and their respective nationalism. The development of aforementioned particularism of East Asia has been greatly hampered by the history of Japanese expansionism, and its importance has been downplayed by both Chinese and Korean peoples. The strong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in As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rucial support it rendered to Japan, and international tensions in the region arising from the Cold War, local military skirmishes and other factors all have led to a continual weakening of particularism of East Asia. One is bound to ponder if a reverse process is in sight in the near future or in the long run.

**Keywords:** nationalism, Orientalism, Tian-Xia Doctrine, cosmopolitanism

# 량치차오[梁啟超]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新秩序) 모색(摸索)

정지호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국성(國性)’의 제기(提起)와 ‘중국불망론(中國不亡論)’
- III. 공자(孔子)의 재해석(再解析)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 모색
- IV. 맺음말



## I. 머리말

주지하듯이 신해혁명(辛亥革命)은 왕조체제에서 근대적 공화국가(共和國)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일대 사건이지만, 불안정하면서도 중국의 일통을 유지해온 청조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한 중화민국의 체제는 안정된 기반을 확립해나가지 못하였다. 중화민국은 민주적 통일국가로서 국가권력을 확립하고 국민적 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직면했지만, 국민적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혼란의 아노미적 상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이 두아라(Duara)<sup>1</sup>가 지적하듯이 20세기 초기 중국의 근대국가건설 프로젝트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변법운동 실패 이후 오랜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량치차오[梁啓超]는 귀국 후 1년여의 소감을 술회하는 글에서 “지난 1년간 중국의 변화는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라 전체가 혼돈 속에서 누구 하나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사회의 불안정한 양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sup>2</sup>라고 언급

---

\* 투고: 2020년 1월 11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역사포럼(2018~2019)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작성된 논문임.

1 Prasenjit Duara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原題: Rescuing History from the Nation-Questioning Narratives of Modern China), 243쪽. 두아라(Duara)는 20세기 초 중국의 상황을 “취약한 국가와 강력한 국가주의 담론”이 지배한 시대라고 하고, “국가주의 담론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자신의 역할과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효율적이지도 성공적이지도 않았다. 질서 유지는 실패하고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시민사회를 불구로 만들거나 해체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언급하였다.

2 梁啓超, 1913a, 「述歸國後一年來所感」, 『飲冰室文集』(이하 『文集』으로 약칭) 31卷(『飲冰室合集』, 中華書局, 2003, 所收, 이하 동일), 24쪽.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취약한 국가기반 위에 과잉된 ‘국가주의(國家主義)’ 담론이 오히려 중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량치차오의 ‘국성(國性)’론은 이러한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것으로,民国 초기 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사상적 혼란을 통합하기 위한 담론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성’이란 무엇인가? 량치차오는 이 ‘국성’ 담론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한 것인가? 이 ‘국성’론은民国 초기 량치차오가 처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당시에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지만,<sup>3</sup> 지금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다.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가운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지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종래 ‘국성’론에 대한 연구<sup>4</sup>는 대체로 ‘국성’ 문제를 애국주의적 견지에서 해석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이 대체로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해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가 없지만, ‘국성’론은 공자의 재해석과 연

3 ‘國性’에 대해서는 1913년 옌푸[嚴復]가 『讀經當積極提倡』에서 “무릇 일국이 존립하려면 반드시 그 國性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국성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며, 모두 특별한 교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천 년간 서서히 감화된 이후에 비로소 크게 두드러진다(大凡一國存立, 必以其國性爲之基. 國性國各不同, 而皆成于特別之教化, 往往經數千年之漸摩浸漬, 而后大著.)”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劉夢溪主編, 1996, 『中國現代學術經典 嚴復卷』, 河北教育出版社), 1924년 장빙린[章炳麟]도 『救學弊論』에서 “무릇 국가의 문명과 야만을 막론하고 그 國性을 지킬 수 있다면 위태롭지 않다”(姜義華 編, 2015, 『中國近代思想家文庫 張太炎卷』, 中國人民出版社)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다지 대중적인 개념은 아니었다.

4 량치차오의 ‘國性’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高柳信夫, 2007, 『梁啓超の『孔子』像とその意味』, 『中國における「近代知」の生成』, 東方書店; 賈旭東, 2011, 『梁啓超文化思想研究』,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張冠夫, 2012, 『作爲嗣續光大‘國民性’與‘國性’的文學—梁啓超1915年前後文學觀的轉變』,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52-6; 陳澤環, 2015, 『“中國文明實可謂以孔子爲之代表”—梁啓超國性論中的儒學觀』, 『船山學刊』 6期; 于海英, 2018, 『梁啓超의 晩年の 民權思想について—民本への自覺』, 『山口大學文學會志』 68 등이 있으나 ‘國性’ 문제에 대한 專論은 아직 없으며, 또한 ‘국성’ 문제를 국가주의 내에서 제한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다.

동되어 그의 정치사상이 국가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로의 모색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국 초기 량치차오가 제기한 ‘국성’론을 분석하고 그가 ‘국성’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성’의 상징으로서 공자를 어떻게 재해석해나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가 모색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는 어떠한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근래 경제대국에서 문명대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작금 중국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국성(國性)’의 제기(提起)와 ‘중국불망론(中國不亡論)’

1912년 오랜 망명생활을 뒤로하고 귀국한 량치차오는 당시 국가 정세가 혼란한 이유에 대해 한편으로는 “국외로부터 물질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극을 받아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유하게 전해져온 규범이 점차 사회를 지탱해갈 힘을 상실하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귀의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sup>5</sup>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잡지 『용언(庸言)』 창간호에 「국성편(國性篇)」을 발표하였다.<sup>6</sup> ‘국성’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세상에는 반드시 국가가 존재하는데, 국가가 존재하는 연유는 무엇인가?”라고 자문한 뒤 이를 ‘국성’ 때문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국성이란 “사람에게 인성이 있는 것과 같이 국가의 고유한 본성

5 梁啓超, 1916b, 「五年來之教訓」, 『飲氷室專集』(이하 『專集』으로 약칭) 33卷 (『飲氷室合集』, 中華書局, 2003, 所收), 148쪽.

6 梁啓超, 1912a, 「國性篇」, 『文集』 29卷. 참고로 『庸言』은 天津에서 출판된 잡지로 1912년 12월에 창간되어 1914년 6월까지 간행되었으며, 량치차오가 주판을 담당하였다. 량치차오는 발간사에서 ‘民智’를 교화하고 ‘民德’을 함양하며 ‘民力’을 발휘해서 공화 법치국가의 자격을 양성하기 위해 이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으로, 사람이 인성을 상실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국가 역시 그러하며, 이 국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sup>7</sup>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1902년에 발표한 「논중국학술사상변천지대세(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에서 “무릇 한 나라가 천지에 바로 서려면 반드시 자립할 수 있는 특질을 지녀야 하며,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특질을 갈고 닦아 성장시켜야 한다”<sup>8</sup>(강조점-필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같은 해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신민설(新民說)」에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무릇 한 국가가 세계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정신을 구비해야 한다. 위로는 도덕·법률에서 아래로는 풍속·습관·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종의 독립정신을 지니고 있다. [...]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우리 동포는 수천 년에 걸쳐 아시아대륙에 국가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구비하고 있는 특질에는 반드시 다른 민족과 명확히 다른 광대하고 고상하며 완미한 것을 지녔을 터이다.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존해야 하며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9</sup> (강조점-필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국가가 자립할 수 있는 특질과 독립적인 정신은 바로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인 ‘국성’에 대한 초보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인 정신을 민족주의의 원천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국성’은 다른 민족과의 차이를 내세울 수 있는 ‘민족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국성’은 국가의 특질을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다.

량치차오는 세계사적 시야에서 각국 흥망성쇠의 명운을 밝히는 열쇠를 ‘국성’을 통해 찾고 있다. 즉 “진실로 국성이 없는 국가는 스스로 국가를 세울 능력

7 梁啓超, 1912a, 「國性篇」, 『文集』 29卷, 82~83쪽.

8 梁啓超, 1902a,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 『文集』 7卷, 3쪽.

9 梁啓超, 1902c, 「新民說」 第3節 釋新民之義, 『專集』 4卷, 5~6쪽.

이 없는 것이다. 국성이 성숙되지 않은 국가는 비록 국가를 세웠더라도 견고하지 못하다. 국가를 세운 이후 국성을 상실하면 곧 그 국가는 망하게 된다”<sup>10</sup>라는 것으로 ‘국성’의 여하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국성이 서로 비슷한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한 용광로에 넣어 주조해 하나의 큰 국성을 이루게 되면 여러 소국을 합해서 대국을 이룰 수 있다. 자기 나라의 국성을 타국에 부가해서 자신에 동화시키면 타국을 멸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성이 분열되면 나라 역시 이에 따라 분열된다. 하나의 지역 혹은 일부 분 사람이 그 국성을 상실하면 국가는 그 한 지역 혹은 일부분 사람을 상실하게 되어 나라는 약해진다.<sup>11</sup>

즉 한 국가는 그 나라 ‘국성’의 유무 또는 건전 여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일부 지역 및 국민이 국성을 상실하면 그 국가는 해당 지역 및 일부 국민을 상실하게 되어 약해진다고 하는 논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량치차오는 무창기의(武昌起義) 이후 ‘신중국’의 국체를 연방제(聯邦制)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제(共和制)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에서 “몽(蒙), 회(回), 장(藏), 강(疆)은 모두 연방을 구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방제를 채택하면 사실상 이들 지역을 방기하게 될 것이다”<sup>12</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 몽, 회, 장, 강 등 변경 지역은 내륙의 중심부와 국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 지역을 아우르기 위한 새로운 국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고

10 梁啓超, 1912a, 앞의 글, 83쪽.

11 梁啓超, 1912a, 위의 글, 83쪽.

12 梁啓超, 1911, 「新中國建設問題」, 『文集』 27卷, 29쪽. 량치차오의 연방제론에 대해서는 鄭址鎬, 2016, 「清末民初 梁啓超의 聯邦制論과 ‘新中國’ 建設」, 『中國近現代史研究』 72 참조.

파괴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흥성하고 쇠퇴해지는가? 사실 량치차오는 ‘국성’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없으며,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인류가 한 지역에 모여 거주하면서 혈연이 화합하고 무리들의 교류가 점차 빈번해진다. 공동의 이해가 밀접해지고 언어와 사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각종 무형의 신조가 형성되어 인심에 깊게 자리하게 된다. 이 무형의 신조는 커다란 위력을 갖추고 있어 물리적 작용을 일으키듯이 전 국민을 널리 어루만져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듯이 전 국민을 용광로에 녹여 일체가 되어 타자와 구별되게 한다. 축적되는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무리는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는데 [...] 이것이 바로 국성의 효용이다.<sup>13</sup>

즉 ‘국성’이란 한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공동 사회생활을 하며 점차 형성되어온 무형의 신조를 가리키며, 이 무형의 신조는 바로 해당 민족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특질로서 전 국민을 일체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 ‘국성’의 구체적 표상으로 ‘국어(國語)’, ‘국교(國教)’, ‘국속(國俗)’을 들고 있는데, 이 삼자가 합해져야 비로소 ‘국성’을 체현할 수 있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논의는 1915년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발간한 잡지 『대중화(大中華)』<sup>15</sup> 창간지에 실린 「『대중화(大中華)』 발간사(發刊辭)」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국민의 의지와 기상의 쇠퇴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한탄한 후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성이 있어야 한다. 국성이 소실되면 저절로 망하게 된다. 타국의 국성을 식탈하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된다”<sup>16</sup>라고 하였다. 나아

13 梁啓超, 1912a, 앞의 글, 83~84쪽.

14 梁啓超, 1912a, 위의 글, 84쪽.

15 량치차오는 『大中華』 잡지와 3년 계약을 체결해서 주필을 맡았다. 丁文江·趙豐田編, 島田虔次譯, 2004, 『梁啓超年譜長編』 第4卷, 岩波書店, 3쪽.

16 梁啓超, 1915b, 「『大中華』發刊辭」, 『文集』 33卷, 83쪽.

가 ‘국성’이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구체적인 형상으로 대략 가리킬 수 있는 것은 언어(言語)·문자(文字)·사상(思想)·종교(宗教)·습속(習俗)이고, 그다음에 예문 범률로서 전 국민이 덕과 지혜, 재주와 지모를 교류하면서 서로 깨우쳐주고 계발하여 상친상부(相親相扶)하는 것이다”<sup>17</sup>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국성이란 언어와 종교, 풍속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 오랜 세월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폐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성’이 단지 묵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성에 부패한 요소와 시세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개량하는 것이 마땅하다”<sup>18</sup>라고 하듯이 량치차오에게 국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의 인간이 ‘창조’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묵수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량치차오가 말하는 ‘국성’이란 단지 과거의 전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변화에 대응해나가는 현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성이 쇠락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전장(典章)·문물(文物)·기강(紀綱)·법도(法度) 등 역사적으로 전수받은 유산에 대해 모두 의심을 품고 경멸하며, 나아가 심한 경우에는 모두 이를 멸시해서 방기하게 된다”라고 하고, “공공의 신조가 추락하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행위에서 모두 표준이 없어져서 [...] 공동생활의 기초는 날로 박약해져 소멸하게 된다”<sup>19</sup>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심점을 잃게 되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자 해도 구심점을 상실해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무너져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의 신조는 앞에서 언급한 무형의 신조인 것이다. 이 공공의 신조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하는 논의는 역으로 생각하면 공공의

17 梁啓超, 1915b, 위의 글, 83쪽.  
 18 梁啓超, 1912a, 앞의 글, 84쪽.  
 19 梁啓超, 1912a, 위의 글, 84쪽.

신조가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중국이 열강에 의해 분할될 수 있다는 과분(瓜分)의 공포를 통해 중국이라는 영역이 불가분의 일체라는 관념을 선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sup>20</sup> 량치차 오는 공공의 신조가民国 초기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성’은 곧 ‘국민성’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무릇 나라의 존망은 종묘와 사직의 흥성과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색과 복색의 보존과 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국민성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성을 상실하게 되면 비록 종묘와 사직, 정색과 복색이 엄연하더라도 군자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한다.<sup>21</sup>

즉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성의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량치차오에 따르면 이 글은 구한말 조선의 유민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이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선조들의 글에서 모범적인 것을 모아 기록해 『여한구가문(麗韓九家文)』이라 명명하고 지인 왕성순(王性淳)에게 주었는데, 왕성순이 다시 김택영의 글을 더하여 『여한십가문(麗韓十家文)』으로 만들어서 장건(張鎔)의 소개로 자신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이라고 한다. 김택영은 구한말 문장과 학문으로 저명한 학자로 을사조약 체결 이후 나라의 운명을 개탄해서 1908년 중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이 서문에서 량치차오는 국민성이란 “한 나라의 사람들이 천 수백 년간 내려오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아 그 탁월함을 자각해서 하나로 합치를 이루고 집단으로 동화되어 다른 국민과 차이를 보이는 것”<sup>22</sup>

20 청 말 과분의 공포에 대해서는 요시자와 세이치로 지음, 정지호 옮김, 2006, 『애국주의의 형성-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논형, 118~123쪽 참조.

21 梁啓超, 1914, 『麗韓十家文抄』序, 『文集』 32卷, 35쪽.

22 梁啓超, 1914, 위의 글, 35쪽.

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비록 망하게 되었지만, 조상의 문화를 받들어 숭상하는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오래전에 멸망했다가 다시 부활한 세르비아처럼 조선의 운명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곧 ‘국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국성은 국가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국성이 없다면 국가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세계 역사상 다양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국성’의 여하에 따라 4개 부류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sup>23</sup>

첫째, 본래 ‘국성’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경우로 인도 등을 들고 있다. “인도는 광활한 대륙 위에서 일찍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룬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언어와 문자는 80여 종이며 부락의 군장 역시 수십 명이다”<sup>24</sup>라고 하여 유사 이래 통일 국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언어 역시 다양한 인도를 가리켜 본래부터 국성이 없어서 망한 전형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둘째, 국성이 아직 성속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강적을 만나 멸망한 사례로 베트남과 조선을 들고 있다. “베트남과 조선은 천여 년 동안 중국의 속국[附庸國]으로 완전히 독립된 언어와 문자 예교 풍속을 지니지 못했으며, 중국에서 벗어나 독립하고자 했으나 국성이 성속되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무도한 세력의 먹이가 되어 멸망하였다”<sup>25</sup>라는 것이다. 다만, 지금 프랑스와 일본은 비록 미완이기는 하지만 베트남과 조선의 국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전히 골몰하고 있는 것에서 ‘국성’이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성’이 성속되어 있었지만 스스로 훼손해서 멸망한 사례로 로마, 신성로마제국, 투르크제국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로마는 “본래 매우 뛰어난 국성

23 梁啓超, 1915b, 앞의 글, 83쪽.

24 梁啓超, 1915b, 위의 글, 84쪽.

25 梁啓超, 1915b, 위의 글, 84쪽.

을 겸비해서 전성기에는 전 유럽을 로마인들이 지배했지만,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피지배자를 동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오히려 소수의 로마인이 현지에 동화됨에 따라 로마 고유의 국성 또한 점차 상실하여 멸망하게 되었다”<sup>26</sup>라는 것이다. 몽골이나 만주(청조)도 국성을 훼손해서 멸망하게 된 경우이지만 로마의 경우 이탈리아가 국성을 계승해 세계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몽골이나 만주는 국성이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만주는 차치하더라도 몽골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량치차오의 분석대로라면 ‘국성’을 잘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매우 특수한 경우로 국성이 이미 성숙되고 스스로 훼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멸망한 사례로 카르타고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량치차오는 국성을 상실해서 멸망한 나라들을 소개하면서도 그리스와 같이 국성이 심후해서 전 국민이 깊이 자각할 경우에는 타국에 의해 멸망되지 않으며, 유대나 폴란드, 이집트 등과 같이 이미 망한 나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들 후자의 사례는 서구 열강의 압박하에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

량치차오는 「국성편」과 같은 시기에 발표한 「중국도덕지대원(中國道德之大原)」에서 인성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듯이 국성도 그러하며, 이 국성은 단시간에 소수인의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파괴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sup>27</sup> 이러한 시각은 ‘국성’의 자각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에 팽배하던 망국(亡國) 심리를 떨쳐버리려는 것이기도 하다. 량치차오는 일본의 21개조 요구,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제제복벽운동 등으로 인해 “오늘날 중국인들은 중국의 전도를 논함에 십중팔구는 말하길 아! 나라가 거의 망했구나, 나라가 거의 망했구나 한다”<sup>28</sup>

26 梁啓超, 1915b, 위의 글, 84쪽.

27 梁啓超, 1912b, 「中國道德之大原」, 『文集』 28卷, 13쪽.

28 梁啓超, 1916a, 「國民淺訓」, 『專集』 32卷, 20쪽.

라고 하면서 당시 중국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망국 심리를 개탄하였다. 그는 중국인의 망국 심리를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혈기가 있어 만일 망한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망하게 하겠다며 날로 반란을 도모하고 재화(災禍)를 선동해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는 혈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치우쳐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우리의 적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중사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매우 탐욕스러우면서 간교한 경우이다. 셋째, 겉으로는 선하고 부드럽지만 간교한 경우로서 나라의 존망이 조석에 달려 있는데도 그 틈을 타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이득을 취한 후에는 바람처럼 사라지려고 하는 경우이다. 넷째, 의지와 행동이 순결한 인사로 평시에는 포부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노력하지만 한번 좌절하고 나면 스스로 질책해서 다시는 국가를 위해 진력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섯째, 근면하고 신중한 자로 직무를 수행할 때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공을 추구하지 않고 단 허물이 없기만을 추구하니 이는 평시에는 공민(公民)으로서 마땅하나 무기력함을 사회에 전파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언동이 지나치게 궤변적이고 격한 자의 경우로 중국인은 이미 이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으니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를 기다리자는 것이다.<sup>29</sup>

량치차오는 이러한 중국인의 망국적 심리에 대항하기 위해 우선 망국(亡國)의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진(秦)·한(漢)·위(魏)·진(晉)·수(隋)·당(唐)·송(宋)·명(明)·청(淸)이 일찍이 망했어도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다”<sup>30</sup>라는 것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개별적 왕조를 초월해서 중국 전체의 역사를 포괄하는 국가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왕조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국가로서 ‘중국’은 선조가 물려준 뛰어난 기량과 위대한 유산이라는 ‘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국을 망하게 할 수 없다<sup>31</sup>는 신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러한

29 梁啓超, 1915b, 앞의 글, 81~82쪽.

30 梁啓超, 1915b, 위의 글, 82쪽.

‘국성’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나아가 객관적인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국불망론(中國不亡論)’을 주창하고 있다.

첫째, 지금 세계 열강은 중국을 망하게 할 힘이 있지만, 새로운 영토를 취해서 경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국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다. 둘째, 지금 세계는 경제를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제상의 특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주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셋째, 열강이 중국을 멸망시키려면 과분(瓜分)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 넷째, 열강이 독립으로 중국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책략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과 특수한 협약을 체결해 통치권의 일부를 장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각 지방의 반란을 조장해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후에 이를 평정해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총량한 중국 국민 중에는 일찍이 청에게 투항한 오삼계나 한국사에서 친일파의 대명사인 이완용 같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공고히만 하면 외국 열강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sup>32</sup>

이러한 평가가 그의 주장처럼 당연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불망론’을 강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당시 시대상의 분열과 쇠락의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었음을 말해준다. 『『대중화』발간사』의 서두에서 “우리 국민의 지기(志氣)의 쇠락함이 오늘에 이르러 지극해졌구나. 마치 온 나라가 장송곡을 부르는 황폐한 묘지가 되었으며 우리 국민의 오랫동안 바라던 몽상은 이제 사라져버렸다”<sup>33</sup>라고 한탄한 것은 바로 시대적 위기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중국 국민이 오랫동안 희망하던 것, 몽상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유에 대해 “국민이 오랫동안 희망해온 것, 몽상해온 것이 오로

31 梁啓超, 1915b, 위의 글, 85쪽.

32 梁啓超, 1915b, 위의 글, 86~87쪽.

33 梁啓超, 1915b, 위의 글, 79쪽.

지 근저(根底)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정치생활에 속해 있었기 때문”<sup>34</sup>이라고 한다. 즉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해진 국민들의 실망감은 정치상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량치차오는 정치적 실망감에서 벗어나 팽배해진 시대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성’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등장한다. 량치차오는 이 ‘국성’을 견고하게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일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오늘날의 국가는 예전과 달리 “단일민족이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방침하에서 국민을 일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이다.<sup>35</sup> 그렇다면 국민을 일체화하는 데에는 어떠한 정신이 필요한 것인가?

량치차오는 “중국에는 실로 견고하고 강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국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늘날은 바로 그것을 갈고 닦아 발휘할 필요가 있다”<sup>36</sup>라고 한다. 나아가 “한 사회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공인된 도덕적(道德的) 신조(信條)가 있는데,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감화에 의해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들어가 내면화된다. 이리하여 분자와 분자 간의 관계가 강고해져서 사회의 생명도 영속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sup>37</sup>라는 것이다. 즉, ‘국성’은 한 사회 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인된 도덕적 신조로서 이것이 선천적·후천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깊이 작용하여 사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도덕적 신조는 ‘삼종(三種)의 관념(觀念)’으로 구체

34 丁文江·趙豐田編, 島田虔次譯, 2004, 앞의 책, 6쪽.

35 근대 중국의 정치적·사회적 사고 속에서 중국의 단결과 일체성을 추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중국의 일체성 문제는 크게 (1) 국토의 일체성, (2) 국민의 일체성, (3) 통시적인 역사의 일체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국성’론에서는 (2) 국민의 일체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 (3)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중국의 일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요시자와 세이치로 지음, 정지호 옮김, 2006, 앞의 책, 118~123쪽 참조.

36 梁啓超, 1912b, 앞의 글, 13쪽.

37 梁啓超, 1912b, 위의 글, 14쪽

회된다. 량치차오는 대다수 중국인의 심리 중에는 ‘삼종의 관념’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천 년의 유전과 감화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모든 도덕이 거기에서 나왔다, 사회는 그것에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어왔다”<sup>38</sup>라고 한다. 량치차오에 따르면 이 ‘삼종의 관념’은 바로 ‘보은(報恩)’, ‘명분(明分)’, ‘여후(慮後)’를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국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보은’에 대해 량치차오는 “중국의 모든 도덕은 보은을 동기(動機)로 하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윤리 강상, 명교는 모두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 무릇 사람이 태어나서 총명 여하를 막론하고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전 사람과 지금 사람은 모두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며, 국가와 사회는 무형의 깊은 은혜이다”<sup>39</sup>라고 언급하였다. 둘째, ‘명분’에 대해서는 “중국 윤리강상(倫理綱常)의 가르침은 무릇 명분을 정하고 규범을 바르게 하는데, 사회조직이 강고하고 치밀하게 어우러져 흩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sup>40</sup>이라는 것이다. 셋째, ‘여후’에 대해 “구미의 이른바 문명국은 ‘현재의 쾌락주의’에 함몰되어 후사(後嗣)를 원하지 않는 자가 10의 8~9나 된다. 이로 인해 인구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여 정치상·경제상 모두 커다란 문제”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주의를 주창하는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수천 년간 이 가족주의가 전 국민의 심중에 자리하고 있다”<sup>41</sup>라는 것이다.

이처럼 ‘삼종의 관념’은 중국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량치차오에 따르면 ‘보은’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켜주고, ‘여후’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며, ‘명분’은 현재를 심오하게 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이 세 가지 관념은 맹자가 말하는 양지(良知), 양능(良

38 梁啓超, 1912b, 위의 글, 14쪽.

39 梁啓超, 1912b, 위의 글, 16쪽.

40 梁啓超, 1912b, 위의 글, 19쪽.

41 梁啓超, 1912b, 위의 글, 19쪽.

能)과 같이 “배우지 않아도 알고 고려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不學而知, 不慮而能)”으로 “중국이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혼란 속에서도 국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sup>42</sup>이라고 한다. 이 ‘삼종의 관념’을 통해 중국 국민의 일체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서양의 학술, 사상, 정치 제도 등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서 중국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량치차오의 입장에서 볼 때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량치차오는 1915년 숭시링[熊希齡] 내각의 폐제국 총재를 사임한 이후 그동안 자신의 생애는 곧 정치생애(政治生涯)였으나, 현재 중국의 정치사회는 정치단체 활동을 포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단체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정치의 기초는 항상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후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장차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법을 강구해서 나와 더불어 논의하고자 한다. 나는 진실로 중국의 국민으로서 장차 국민이 국민다워지는 법을 강구해서 우리 국민과 더불어 논의하고자 한다.<sup>43</sup>

여기에서 량치차오는 향후 자신의 천직을 사람 교육과 국민 교육 두 방면의 교육을 통해 중국 사회에 대한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sup>44</sup> 이를 위해 중국 ‘국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공자(孔子)를 제시하였다. 그는 공자야말로 2,000여 년간 중국의 일체성을 유지해온 ‘무형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중국 국민의 ‘국성’에 대한 자각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국민을 일체화하는 데에는 막연한 도덕적 신념보다는 공자라는 역사적인 인물로 상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유용한 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교를 봉건적 유폐로서 타도

42 梁啓超, 1912b, 위의 글, 20쪽.

43 梁啓超, 1915c, 「吾今后所以報國者」, 『文集』 33卷, 54쪽.

44 張冠夫, 2012, 앞의 글, 88쪽.

의 대상으로 삼던 오사신문화운동 시기에 공자를 국성의 표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 Ⅲ. 공자(孔子)의 재해석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 모색

량치차오는 ‘국성’의 상징으로 공자의 도덕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는 「중국지무사도(中國之武士道)」 범례(凡例)에서 “오직 공자만이 2,000년 동안 전국 사상의 중심점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믿고 따르는 대상이 되었다”<sup>45</sup>라고 언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그는 「논지나종교개혁(論支那宗教改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한 나라의 강약 흥폐는 국민의 지식과 능력에 달려 있다. 지식과 능력의 진보와 퇴보, 증진과 감소는 오로지 國民思想에 달려 있다. 사상의 높고 낮음, 통합과 막힘은 모두 국민의 습관과 신앙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識力을 증진시켜야 하며, 국민의 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 대체로 종교는 국민의 정신[腦質]을 주조하는 좋은 약재이다. 우리 支那는 周秦 시기 思想이 발흥하고 才智가 구름처럼 일어나 서방의 그리스에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한대 이래 2,000여 년간 점차로 쇠퇴해졌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퇴락함이 더욱 심해졌다. 이리하여 천박한 儒者들은 六經의 정수를 오해하고 공자 가르침의 본질을 상실하고 곱학아세해서 [...] 마침내 2,000여 년간 공자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으며, [...] 공자 가르침의 참된 종지를 밝힐 수 없었다.<sup>46</sup>

45 梁啓超, 1904, 「中國之武士道」凡例, 『專集』 24卷, 2쪽.

이 글에서 그는 천박한 유자들의 곡학아세로 인해 공자 가르침의 진면목과 참된 중지가 가려졌다고 비판한다. 즉 한대 무제(武帝) 이래 육예(六藝)를 현창하고 백가를 물리침에 따라 육예 과목은 진보가 사라지고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는 공자의 가르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사복을 채우려고 하는 천박한 유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7</sup> 이리하여 한대 훈고학에서 청대 고증학에 이르기까지 공자의 무리를 자명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자의 도(道)는 더욱 암울해졌다고 한다.<sup>48</sup>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학문이 공자의 가르침을 그 자체로 탐구하기보다는 단지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자의 바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공자를 공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상의 자유로움 때문이다. 그런데 스스로 공자의 무리를 자처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정신에 반해 공자를 이용하니 이것이 어찌 공자의 잘못이겠는가!”<sup>49</sup>라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kang유웨이[康有爲]의 신학(新學)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량치차오와 kang유웨이의 사이에는 확연하게 균열이 드러난 것이다.<sup>50</sup>

량치차오는 공자의 교지(教旨)를 “진화(進化)주의로서 보수(保守)주의가 아니다. 평등(平等)주의로서 전제(專制)주의가 아니다. 겸선(兼善)주의로서 독선(獨善)주의가 아니다. 강립(強立)주의로서 문약(文弱)주의가 아니다. 박포(博包)

46 梁啓超, 1899, 「論支那宗教改革」, 『文集』 3卷, 55쪽.

47 梁啓超, 1903a, 「新民說」 第11節 論進步, 『專集』 4卷, 59쪽.

48 梁啓超, 1915a, 「孔子教義實際裨益于今日國民者何在欲昌明之其道何由」, 『文集』 33卷, 61쪽.

49 梁啓超, 1902b, 「保教非所以尊孔論」, 『文集』 5卷, 55~56쪽.

50 량치차오는 일생 동안 스승인 kang유웨이를 존경했지만, 정치적 입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1902년 일본 망명 초기에는 혁명파와 어울리면서 ‘革命排滿共和’의 논리를 제창하면서 kang유웨이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민족주의를 제창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타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丁文江·趙豐田 編, 島田虔次 譯, 2004, 앞의 책, 151쪽.

주의로서 단협(單狹)주의가 아니다. 중혼(重魂)주의로서 애신(愛身)주의가 아니다”<sup>51</sup>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진화·평등·겸손·강립·박포·중혼 등은 량치차오가 중국의 계몽을 설파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를 공자의 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이러한 “공자의 교지(教旨)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공자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52</sup>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는 데 다른 학설을 섞음으로써 그 참됨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자의 학설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첫째, ‘성(性)’, ‘천도(天道)’ 등에 관한 철학적 범주, 둘째, ‘치국평천하의 대법(大法)’에 관한 ‘정치학·사회학’적 범주, 셋째, ‘입신처세의 길’에 관한 ‘윤리학·도덕학·교육학’적 범주이다.<sup>53</sup> 여기에서 철학적 범주는 전문적 연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정치학·사회학’적 범주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를 위해 설파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 공자를 가리켜 만세사표(萬世師表)라고 하는 것은 그의 철학론이나 정치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 번째 거론한 입신처세의 길을 가르치는 ‘인격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교비소이존공론(保教非所以尊孔論)」에서 공자의 교지는 “사람이 사람다운 법을, 사회가 사회다운 법을, 나라가 나라다운 법을 가르치는 데 있다”<sup>54</sup>라고 하며, 특히 인격 교육 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동서고금의 성철 중에서 人格에 대해 말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으로 공자만 한 인물이 없다. 이 점에서 공자는 장래 세계 德育의 숲에

51 梁啓超, 1899, 앞의 글, 55~56쪽.

52 梁啓超, 1915a, 앞의 글, 63쪽.

53 梁啓超, 1915a, 위의 글, 63쪽.

54 梁啓超, 1902b, 앞의 글, 57쪽.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나는 감히 예언한다.<sup>55</sup>

량치차오는 중국에서 공자를 대성(大聖), 지성(至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신민설(新民說)」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한 나라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의 길에서만 나오게 하는 것은 진화(進化)하는 데 미치는 해가 매우 크다”<sup>56</sup> 라고 비판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러던 그가 공자를 인격 양성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국성’의 표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성에서 단일성으로의 회귀인 것인가?

당시 량치차오는 영국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인격 양성을 주요 정신으로 삼은 영국의 교육을 꼽았다. 그는 영국의 젠틀맨(Gentleman)과 중국의 군자(君子)를 비교하면서 이상적 인격에 대한 관념을 비교 설명하였다. 즉 영국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젠틀맨’은 중국어로 표현하면 ‘군자’에 해당하며 모두 인격 양성을 중지로 여겼기 때문에 영국과 중국의 교육정신은 추구하는 세계가 같았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젠틀맨’은 그 자체로 일종의 ‘무형의 모범’으로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반면, 중국의 경우 군자에 대한 의식은 “몽롱하고 막연하며 그 힘이 매우 미약해서 사회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군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sup>57</sup>라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 중국의 이상적 인격인 ‘군자’의 모범은 공자 혼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공자가 집대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가르치고, 몸소 행동으로 가르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무형의 모범을 명확히 해서 사회적 실효성을 지니게 단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대에서도 공자를 만세사표로서 칭송하고 받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역설하고 있다.<sup>58</sup>

55 梁啓超, 1902b, 위의 글, 57쪽

56 梁啓超, 1903a, 앞의 글, 59쪽.

57 梁啓超, 1915a, 앞의 글, 65~66쪽.

58 梁啓超, 1915a, 위의 글, 66쪽.

그런데 인격양성은 개인적 측면에서 심신을 수양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일생을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 투신한 량치차오의 국가주의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량치차오는 “세계 고급의 교조가 국가주의를 교육한 것이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국가주의의 등장은 100년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국가의 기초는 개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서양의 국가주의 교육은 이 개인주의 교육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9</sup> 량치차오가 숭시링 내각에서 기초한 「정부대정방침선언서(政府大政方針宣言書)」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2,000년간 공자의 교의(敎義)를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정부는 “인민의 신교(信敎)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한편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교화의 근본으로 삼는다”<sup>60</sup>라고 명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자의 가르침은 종교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문교화의 가르침인 것이다.

한편, 량치차오는 1920년 파리강화회의의 중국대표단 고문으로 유럽을 방문하고 귀국한 후 “상층에서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방기하고 국민의 실질적 기초를 육성하는 교육사업(敎育事業)에 전력으로 종사하게 되었다”<sup>61</sup>라고 하듯이 그의 말년의 활동은 교육과 저술이 중심이 되어 중국학술사상사에 대해 대량의 저술을 집필하였다. 당시 중국의 사상계는 ‘민주’와 ‘과학’을 슬로건으로 하는 오사신문화운동이 한창이었으며, 특히 ‘타도공가점(打倒孔家店)’이라고 해서 유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량치차오는 오사신문화운동에 대해 1922년 발표한 「심마시신문화(甚麼是新文化)」에서 “근래 이른바 신문화운동은 거국적으로 선각(先覺)이 잇달아 제창하고 일반 청년이 용맹하게 전진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sup>62</sup>라고 하듯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59 梁啓超, 1915a, 위의 글, 67쪽

60 梁啓超, 1913b, 「政府大政方針宣言書」, 『文集』 29권, 122쪽.

61 丁文江·趙豐田 編, 島田虔次 譯, 2004, 앞의 책, 292쪽.

62 梁啓超, 1922b, 「甚麼是新文化」, 『飲冰室合集』集外文 上冊, 北京出版社(2005), 906쪽.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구두선(口頭禪)인 경우가 매우 많아 가령 그들에게 신문화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답하지 못할 것이며 답하더라도 그 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sup>63</sup>라고 해서 ‘신문화’가 실제 중국 사회에 뿌리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신문화를 논할 경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식에서 ‘과학적 이해’를 가져야만 하고, 다른 하나는 품격에서 ‘자율적 정조(情操)’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sup>64</sup>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율적 정조(情操)’라는 측면에서 신문화 정신은 오히려 유가의 정신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법령으로써 인도하고 형벌으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백성이 [형벌을] 면해도 부끄러움이 없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라고 하는 법가의 엄격주의와 달리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하게 하면 부끄러움을 가져 역시 바르게 될 것이다(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sup>65</sup>라고 하는 유가의 자율주의가 바로 신문화운동의 정신과 합치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문화의 구성 요소 중 특히 후자의 ‘신인격(新人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교와 신문화에는 공통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유교주의는 바로 신문화와 합치”<sup>66</sup>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신문화운동을 추구하려면 지식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이해가 없으면 불가하고, 도덕·품격적인 측면에서 자율적 정조가 없으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서양 일변도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이러한 그의 논의는 오사신문화운동의 격렬함 속에서 중국 전통문화의 역사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문화보수주의’<sup>67</sup>의 흐름과도

63 梁啓超, 1922b, 위의 글, 906쪽.

64 梁啓超, 1922b, 위의 글, 906쪽.

65 이 글은 『論語』 「爲政」편에 보인다.

66 梁啓超, 1922b, 앞의 글, 907~908쪽.

67 ‘문화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전인갑, 2016, 『현대 중국의 제국몽-중화의 재보편화와 100년의 실험』, 學古房, 123~169쪽 참조.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말년 동남대학(東南大學)에서의 고별강연에서 공자의 인격적 이상에 대해 논하면서 “우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영구히 인간의 노력 여하에 의한 창조적 과정이며”, “세계에는 참된 의미에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sup>68</sup>는 두 가지 세계인식에 의거해서 ‘성패득실’을 고려하지 말고 타자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참된 나를 지향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로도 들린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인격양성의 지향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앞에서 거론한 바 있듯이 그는 1915년 「오금후소이보국자(吾今后所以報國者)」에서 정치의 기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후 다시는 정당가(政治家)가 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장차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법을 강구하며, 나는 중국의 국민으로서 장차 국민이 국민다워지는 법을 강구하려고 한다”<sup>69</sup>라고 해서 사람에 대한 교육과 국민교육이라는 두 방면의 교육을 다짐하고 있다. 그가 ‘국성’의 개량과 조장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세계 역사상 국민은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도 중화국민(中華國民)은 인류 역사상 하나의 기적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이 웅대한 민족은 광활한 국토 위에서 형성되어 수천 년 동안 문명이 중단되지 않고 나날이 정진해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70</sup> 또한 이렇게 형성된 중화민족(中華民族, 화하민족(華夏民族))은 “수천 년에 걸쳐 연마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전복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일체가 되었다”<sup>71</sup>라고 강조한다. 1922년에 저술한 「중국역사상민족지연구(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에서 량치차오는 혈연·언어·신앙은 모두 민족이

68 梁啓超, 1923, 「東南大學課畢告別辭」, 『文集』 40卷, 13~14쪽.

69 梁啓超, 1915c, 앞의 글, 54쪽.

70 梁啓超, 1921, 「歷史上中華國民事業之成敗及今後革進之機運」, 『文集』 36卷, 25쪽.

71 梁啓超, 1926, 「太古及三代載記」, 『專集』 43卷, 4쪽.

성립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족의식’의 발현과 확립을 들고 있다.<sup>72</sup> 그렇다면 ‘민족의식’의 발현과 확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는 일찍이 ‘멸만흥한(滅滿興漢)’의 기치하에 청조 타도를 외쳤던 혁명파의 주장을 편협한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 ‘민족복구주의(民族復仇主義)’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구와 같은 민족제국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족을 포함한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73</sup> 이 ‘대민족주의’는 혈통이나 언어, 풍속을 초월해서 “나는 중국인이다”,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민족의식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역사는 바로 ‘중화민족’의 관념,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4</sup>

滿洲人は 처음 청을 건국했을 때 우리들을 漢人이라 하고 자신들은 旗人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의식이 사라져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몽골인은 나라가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몽골인이라고 자각하고 우리들을 한인이라고 해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인은 여전히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다.<sup>75</sup>

72 梁啓超, 1922c,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 『專集』 42卷, 1쪽.

73 梁啓超, 1903b,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文集』 13卷, 75~76쪽.

74 梁啓超, 1922c, 앞의 글, 1~2쪽. 량치차오는 중국의 지리를 本部(18개 省)와 屬部(滿洲, 蒙古, 回部, 西藏)로 구분하고, “아시아는 전 세계의 宗主이며, 중국은 아시아의 宗主이고, 본부는 중국의 宗主이다”(梁啓超, 1902d, 「中國地理之大勢」, 『文集』 卷10, 78쪽)라고 주장한다. 김승욱은 량치차오가 ‘본부’와 ‘속부’를 하나의 중국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확정된 역사공간을 ‘대민족주의’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승욱, 2019, 「중국 근대 역사학에서 國家개념의 재구성」, 『역사와 담론』 제89집, 178~179쪽).

75 梁啓超, 1922c, 위의 글, 2쪽.

여기에서 그가 생각하는 ‘민족의식’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민족의식은 “몇몇 혈연관계의 사람들이 공통의 자연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서로 협력하며 공유하는 가운데 언어와 문자 및 기타 도구를 발명하고 공통의 신앙, 학문과 기예 및 관습을 양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종의 독특한 ‘문화체계(文化體系)’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문화체계와 접촉하면서 타자에 대한 자아를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식이 성립하는 중요한 요소”<sup>76</sup>라고 한다. 이 ‘민족의식’이야말로 바로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인 ‘국성’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화민족은 동일한 조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원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인가? 량치차오는 이 물음에 대해 역사서에서는 황제(黃帝)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는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제하(諸夏)’라고 하듯이 여러 부락이 결합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중화민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매우 복잡하면서도 지극히 견고한 민족이다.
2. 이 복잡하고 견고한 민족은 매우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형성되었다.
3. 이 민족은 장래 결코 쇠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sup>77</sup>

이 ‘중화민족’론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강조하는 ‘중화민족’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sup>78</sup> 여하튼 현재 창조 영역 내

76 梁啓超, 1922c, 위의 글, 2쪽.

77 梁啓超, 1922c, 위의 글, 2쪽

78 1988년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은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에서 “중화민족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지만, 다원일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민족 실체로서 대일통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족을 중심으로 다원일체적 대일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 ‘중화민족’론은 기

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이 한족을 중심으로 ‘중화민족’이라는 기치하에 대동단결해서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중화민족’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국가야말로 량치차오가 ‘국성’의 조장과 개량을 통해 지향하고자 한 새로운 질서인 셈이다. 그 새로운 질서는 문화적·인종적 차이에 따른 구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천하사상(天下思想)’에 입각한 ‘대일통(大一統)’의 관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하늘 아래 ‘중화(中華)’와 ‘사이(四夷)’를 불문하고 지상의 모든 만물을 일률적으로 포섭해나간다고 하는 ‘천하사상’은 량치차오가 구상하는 ‘중화민족’의 신질서 내에 온전히 융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모색한 ‘중화민족’의 신질서는 전통적(傳統的) 덕치(德治)와 교화(教化)가 전례 없이 강하게 확대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량치차오의 실천 운동은 그가 처한 시대적 제약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에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역사적 합의의 현재적 과제’라고 하겠다.

#### IV. 맺음말

본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량치차오에 따르면 중국인의 심리 중에는 ‘삼종(三種)의 관념(觀念)’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수천 년의 유전과 감화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모든 도덕의 원천이며 사회는 그것에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 것”<sup>79</sup>이라고 한다. 이 ‘삼종의 관념’이란 ‘보은(報恩)’, ‘명분(明分)’, ‘여후(慮後)’를 가리키는데, 보은은 현재사회와 과거사회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여후는 현재사회와 미래사회를 서로 연결시켜주며, 명분은 현재사회를 심오하게 해서 혼

---

본적으로 량치차오의 ‘중화민족’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鄭址鎬, 2007, 「근대중국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민국가」, 『인문학연구』 1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90~291쪽.

79 이 글 주석 38번 참조.

란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중국 ‘국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 특히 ‘보은’은 중국이 수천 년에 걸쳐 ‘국성’을 깊이 내면화하고 굳건하게 양성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으로 이러한 사상이 점차 동요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향후 이를 어떻게 계승 발휘해나갈 것인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고 까지 역설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논민족경쟁지대세(論民族競爭之大勢)」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오늘날 중국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우선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할 뿐이다. 지구상 최대의 민족으로서 능히 天演(進化論)에 걸맞은 국가를 건설한다면, 天下第一帝國의 칭호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sup>80</sup>

즉 “동방 대륙의 가장 큰 나라로서 가장 기름진 토양을 갖고 있지만, 가장 부패한 정부와 뿔뿔이 흩어져서 가장 악한 국민이 있는”<sup>81</sup>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진화론에 입각해 명실상부하게 ‘천하제일의 제국(帝國)’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뚜렷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82</sup> 이 ‘천하제일의 제국’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로부터의 해방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역사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량치차오는 종래의 왕조사를 초월해 ‘중국어’의 변화·발전 양상을 크게 ‘중국의 중국’[고대-황제(黃帝)에서 진(秦)의 통일], ‘아시아의 중국’(중세-진의 통일에서 건륭말년), ‘세계 속의 중국’(근세-건륭 말년에서 현재)으로 구분하고 있다.<sup>83</sup> ‘중국의 중국’에서 ‘아시아

80 梁啓超, 1902a, 앞의 글, 13~14쪽.

81 梁啓超, 1902c, 앞의 글, 4쪽.

82 鄭址鎬, 2015, 「梁啓超의 ‘帝國’論과 ‘大清帝國’의 國體」, 『東洋史學研究』 132輯, 279쪽.

83 鄭址鎬, 2005, 「梁啓超의 近代의 歷史敘述과 國民國家」, 『梨花史學研究』 32,

의 중국'을 거쳐 '세계 속의 중국'으로 변화·발전해나갔다는 역사관을 통해 본원적인 중국적 질서가 세계질서로 전환되어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84</sup> 그는 나아가 세계사의 변화를 가장주의시대(家長主義時代)-추장주의시대(酋長主義時代)-제국주의시대(帝國主義時代)(과거), 민족주의시대(民族主義時代)-민족제국주의시대(民族帝國主義時代)(현재), 만국대동주의시대(萬國大同主義時代)(미래)<sup>85</sup>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주의에서 세계주의로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량치차오는 만년에 집필한 『先秦政治思想史』의 서론에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중국 정치사상의 특징을 천하주의(天下主義), 평민주의(平民主義) 또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사회주의(社會主義)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 후 “중국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일찍이 국가를 인류 최고의 조직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치사상은 항상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평천하(平天下)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국가(國家)는 단지 가족과 같이 조직에 불과해서 ‘천하’의 한 단계로 여겨졌다. 즉 정치란 전 인류 중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중국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항상 증가했으며 이른바 ‘천하’의 내용 역시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었다. 서구에는 오늘날 크고 작은 나라 수십 개국이 있지만, 우리나라(중국)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체를 이루어왔다”라고 언급하였다.<sup>86</sup>

량치차오는 중국의 정치사상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평천하주의(平天下主義)’(세계주의)하에서 배양된 중국의 국민의식이 전 인류문화에 커다란 기여를

---

梨花史學研究所, 9~10쪽.

- 84 이러한 측면에서 량치차오의 세계관을 국가주의에서 천하주의로 해석한 가오리커 [高力克]의 연구는 유의함을 주고 있다. 高力克, 2015, 「世界國家與普世文明-梁啓超的新天下主義」, 『天津社會科學』, 2015-6.
- 85 梁啓超, 1901,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文集』 6卷, 18쪽.
- 86 梁啓超, 1922a, 「先秦政治思想史」, 『專集』 50卷, 2쪽.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87</sup> 중국 국민들을 망국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국성’론은 결국 중국의 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세계주의로의 모색을 통해 활로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량치차오는 일찍이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정치상의 국가는 비록 망하지 않더라도 경제상의 국가는 실제로 서서히 망하고 있다”<sup>88</sup>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비추어서 개혁개방 이후 막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상황은 량치차오가 추구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주의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87 梁啓超, 1922a, 위의 글, 5~6쪽. 근래 중국의 왕후이[汪暉]를 비롯한 신좌파학자나 서양의 마틴 자크(Martin Jacques) 등은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대안으로 왕도에 기반한 조공질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전인갑, 2016, 앞의 책, 6~7쪽), 이러한 주장은 량치차오의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88 梁啓超, 1916a, 앞의 글, 20쪽.

## 참고문헌

### 단행본

요시자와 세이치로 지음, 정치호 옮김, 2006, 『애국주의의 형성-내셔널리즘으로 본 근대 중국』, 논형.

전인갑, 2016, 『현대 중국의 제국몽-중화의 재보편화와 100년의 실험』, 學古房.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 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姜義華 編, 2015, 『中國近代思想家文庫 張太炎卷』, 中國人民出版社.

梁啓超, 1902, 『新民叢報』 第5號, 新民叢報社.

\_\_\_\_\_, 2003, 『飲冰室合集』, 中華書局.

\_\_\_\_\_, 2005, 『飲冰室合集』 集外文, 北京出版社.

劉夢溪 主編, 1996, 『中國現代學術經典 嚴復卷』, 河北教育出版社.

丁文江·趙豐田 編, 島田虔次 譯, 2001, 『梁啓超年譜長編』 第4卷, 岩波書店.

### 논문

김승욱, 2019, 「중국 근대 역사학에서 國家개념의 재구성」, 『역사와 담론』 제89집.

鄭址鎬, 2005, 「梁啓超의 近代的 歷史敘述과 國民國家」, 『梨花史學研究』 32, 梨花史學研究所.

\_\_\_\_\_, 2007, 「근대중국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민국가」, 『인문학연구』 12,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_\_\_\_\_, 2015, 「梁啓超의 ‘帝國’論과 ‘大清帝國’의 國體」, 『東洋史學研究』 132輯.

\_\_\_\_\_, 2016, 「清末民初 梁啓超의 聯邦制論과 ‘新中國’ 建設」, 『中國近現代史研究』 72.

賈旭東, 2011, 「梁啓超文化思想研究」,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 高力克, 2015, 「世界國家與普世文明－梁啓超的新天下主義」, 『天津社會科學』 6.
- 張冠夫, 2012, 「作爲嗣續光大‘國民性’與‘國性’的文學—梁啓超1915年前後文學觀的轉變」,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52-6.
- 陳澤環, 2015, 「“中國文明實可謂以孔子爲之代表”—梁啓超國性論中的儒學觀」, 『船山學刊』 6期.
- 高柳信夫, 2007, 「梁啓超の『孔子』像とその意味」, 『中國における「近代知」の生成』, 東方書店.
- 于海英, 2018, 「梁啓超の晩年の民權思想について－民本への自覺」, 『山口大學文學會志』 68.

## 량치차오[梁啓超]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新秩序) 모색(摸索)

정지호

이 연구는 량치차오의 ‘국성(國性)’론을 분석하고 아울러 ‘국성’의 표상(表象)으로 공자(孔子)의 사상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그가 모색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신질서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민국 초기 중국 사회의 불안정한 양상을 지적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성’론을 제기한다. 그는 1912년에 발표한 「국성편(國性篇)」에서 인간 각자가 독자적인 성질, 즉 개성을 지니고 있듯이 국가 역시 독자적인 성질, 즉 국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제기한 것은 국성의 흥망 성쇠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국성’을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언어와 사상을 공유하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무형의 신조’라고 한다. 그는 이 ‘국성’을 견고하게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일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오늘날의 국가는 예전과 달리 “단일민족이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방침하에서 국민을 일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인의 심리 중에는 ‘삼종(三種)의 관념(觀念)’, 즉 보은(報恩),

명분(明分), 여후(慮後)가 존재하는데, 중국이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혼란 속에서도 국성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삼종의 관념 때문이며, 향후 중국의 미래 역시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은 민족주의 국가를 중시했지만, 단지 국가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이상은 세계주의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량치차오는 중국의 정치사상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평천하주의(平天下主義)’(세계주의)하에서 배양된 중국의 국민의식이 전 인류문화에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을 망국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국성’론은 결국 중국의 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도 그 저변에는 세계주의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량치차오[梁啓超], 국성(國性), 중화민족(中華民族), 민족주의(民族主義), 세계주의(世界主義)

## ABSTRACT

# Liang Qichao's “Guoxing (國性)” Theory and the Search for a New Order of “Zhonghuaminzu (中華民族)”

Jeong Jiho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guoxing* (國性)” theory first proposed by Liang Qichao (梁啟超) and how it reinterprets Confucius’ theory which he proposed as a symbol of the *guoxing* theory. Through this theory, Liang Qichao analyzed the new order that “Zhonghuaminzu (中華民族)” sought.

Liang Qichao pointed out the unstable aspects of Chinese society in the early days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suggested the *guoxing* theory as a way to address them. He said in the *guoxing* theory, published in 1912, that each human being has his or her own personality, thus a nation also has personality. In other words, the fate of a nation is determined by the rise and fall of the *guoxing*.

Liang Qichao insisted that this *guoxing* is not formed or extinguished in a short time, but is intangible symbol formed by people of the same

bloodline sharing language and ideas for a long time. He emphasized that the unity of the citizens who are members of the nation is necessary to solidify *guoxing*. In other words, it is imperative for today's nation to unite its people under the policy of "single people make up a single nation," unlike before. by the way Most of Chinese people have "three ideas" ("*baoen* 報恩," "*mingfen* 名分" and "*lifu* 慮後") in their minds, which are "made by thousands of years of inheritance and influence, and all of China's morality has come from it, and society has been maintained by it."

Liang Qichao's political ideas valued the nationalist state, but they did not simply stay in nationalism. His ideals were directed toward cosmopolitanism. In other words, Liang Qichao predicted that Chinese people's consciousness cultivated under "cosmopolitanism," which is deeply entrenched in China's political history,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culture of all mankind. The *guoxing* theory, which was proposed to overcome China's chaotic situation by freeing the Chinese people from the sense of ruin, was seeking China's nationalism but underneath it was pursuit of path towards globalism.

**Keywords:** Liang Qichao, Guoxing, Zhonghuaminzu, nationalism, globalism



#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 량치차오[梁啟超]의 경우

김승욱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민족 개념 수용상의 특성
- III. 진화론과 지리결정론
- IV. 과학에서 의지력으로
- V. 맺음말

## I. 머리말

근대 국가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민족(주의)의 형성은 크게 두 유형의 방향을 따라왔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한 근대 국가의 국경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소속된 모든 개체, 집단을 하나의 민족 범주로 묶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왕의 문화, 언어, 혈연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적 범주를 국가와 중첩되는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다. 흔히 전자를 국가민족주의(state nationalism), 후자를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로 지칭한다.<sup>1</sup> 이때 이 민족의 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학계에는 대비적인 논쟁 구도가 존재한다. 전형적으로는, 그것이 근대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근대 이전부터 본래 존재했던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른바 “도구론(instrumentalism)”과 “원초론(primordialism)”으로 대비되는 논의가 있다. 또한 그것이 객관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주관적으로 조성된 것인지에 따라 이른바 “객관론”과 “주관론”으로 대비되는 쟁론도 있다. 그런데 실제 근대 민족(주의)의 전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배열, 대비되는 논의로 ‘간명히’ 분류하기에는 실제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사실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은 많은 경우 위의 두 방향으로의 진행이 병행되는 것이 보이며, 또한 개별 지역의 사례들에서 상이한 변수들과 연관되어 각자적 맥락으로 진행된 변형은 다양한 방향으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근대 민족(주의)의 전체 상을 선형적 시각을 넘어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

\* 투고: 2020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역사포럼(2018~2019)의 지원을 2년간 받아 작성된 논문임.

1 전자는 공민적 권리와 자유 원리를 기반으로 국가 이념에 대한 합의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공민민족주의(civic nationalism) 또는 자유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후자는 종종 종족주의(ethnism)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민족에 관한 기왕의 이해 틀은 특정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단 구성된 것으로, 향후 비서구 지역, 국가의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계속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민족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도 민족(주의)에 관한 일반 논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비되는 논쟁 구도가 펼쳐놓은 스펙트럼 속에 배열되어 있다. 우선 이 구도의 한편에는, 중국의 민족이 근대에 접어들어 새롭게 형성되었던 점을 부각하는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주지하듯이 오랫동안 중국 근현대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 논법은, 아편 전쟁으로 표상되는 외부적 위협에 직면해 기존 체제가 와해, 해체되고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 요컨대 민족국가(또는 국민국가, nation-state)가 구축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식이었다.<sup>2</sup> 이때 민족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국가체제 아래 혹은 그 구축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그 준거의 외래적 수용의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 구도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민족이 근대 이전에 존재했던 모종의 공동체로부터 이어진 측면을 부각하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는 기존 체제 또는 그 체제 원리가 근대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지난 십수 년 동안 “천하체제” 등 기존 체제의 연속성을 주목하는 논의들이 확대되는 가운데<sup>3</sup> 중국 민족의 형성 시점을 근대 이전 시기로 소급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sup>4</sup> 앞

- 2 황제지배체제로부터의 ‘共和’ 정체로의 전환 이후 민족(국민)국가 수립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중국 근현대사의 오랜 서술 방식이었으며, 그 속에서 중국 민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치체제로 수렴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 3 “천하체제” 논의는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 논의의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오팅양 지음,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제: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 4 거자오광[葛兆光] 등은 송대의 ‘민족주의’를 중국 국민국가의 원형으로 지목한다. 葛兆光, 2011, 『宅兹中國: 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 中華書局; 葛兆光, 2010, 『重建關於“中國”的歷史論述 - 從民族國家中拯救歷史, 還是在歷史中理解民族國家?』, 劉鳳雲·劉文鵬 編, 『清朝的國家認同 - “新清史”研究與爭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45~266쪽.

서 지적했듯이 이런 대비적 논의의 구도를 여기서 반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근대 중국이 청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그 민족 개념을 구성하는 데 어떤 지역적 변수들이 개입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특성이 있는 파생의 흐름을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대 중국 민족(주의)에 관해서는 국내 학계에서도 다양한 시각, 차원에서 이미 폭넓은 논의가 전개되어왔다.<sup>5</sup> 그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려는 민족 개념의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목되는 연구가 적지 않다.<sup>6</sup> 이 글에서는 기왕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덧붙여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주의)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량치차오[梁啓超]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그 개념 수용과 변용의 과정에서 과학관이 작용한 역할에 주목하려고 한다. 과학은 이 시기 서구 학문과 개념에 대한 수용을 자극한 중요한 요소였음에도<sup>7</sup> 민족 개념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았다. 이에 량치차오의 민족 개념 형성 과정에서 과학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이하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우선

- 
- 5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패권적(제국적) 민족 개념이 공존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면서 동아시아사론 등을 통해 그 극복을 모색하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유용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6 서구 개념을 수입하는 가운데 서구와는 다른 개념적 변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는 논의들이 있다. 박상수, 2005,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이춘복, 2009, 6, 「청말 중국 근대 ‘民族’ 개념 담론 연구-문화적 ‘民族’ 개념과 정치적 ‘國民’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29. 그런데 이에 대해 민족 개념의 수용에서 서구적 ‘원본’이 갖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7 량치차오의 과학관은 일본 학계가 그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하면서 다른 경향이 있었다. 하사마 나오키[挾間直樹]는 량치차오의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鷺藏] 등 일본 학계에 대한 중시 태도를 강조한다. 挾間直樹 主講, 清華大學國學研究院 主編, 2016, 『東亞近代文明史上的梁啓超』, 文景, 129~150쪽.

Ⅱ장에서 중국 민족 개념의 수용상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때 수용된 서구의 민족 개념 자체를 가능한 한 상대적인 척도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용한 중국의 맥락에서 어떤 주동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려고 한다. Ⅲ장에서는 민족 개념의 변용 과정에서 영향을 준 지식계의 풍조로서, 특히 과학(科學)으로 대변되는 서구 지식의 방법론 수용이 그 개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 Ⅳ장에서는 위의 민족 개념의 변용을 거치면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떤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것이 중국 역사학계에 어떤 과제를 남겨두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 Ⅱ. 민족 개념 수용상의 특성

중국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서구 개념의 외래적 수용과 변용 과정을 통해 자리 잡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 서구 개념의 번역을 거쳐 정착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19세기 일본에서 nation의 대역어로 등장한 여러 번역어(민종(民種), 족민(族民), 민족(民族), 국민(國民) 등)의 하나로 등장했으며,<sup>8</sup> 당시 서구 사회와 지식, 개념에 관심을 키워가던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중국에 도입되었다. 량치차오는 바로 그 핵심 인물의 하나였다. 그는 주로 국가학을 펼쳤던 독일 정치학자 블룬칠리(Bluntschli)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블룬칠리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근대 민족 개념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법학자였다.<sup>9</sup> 그는 『교양인을 위한 도이치 국가학』(Deutche

8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people, nation 등에 대해서 다양한 대역어가 시도되었다. nation의 번역어로는 國民, 民族, 族民 등이 병용되었다.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집, 238~244쪽, 1880년 몇몇 사진의 예를 들어 보면, 井上哲次郎編, 1882, 『哲學字彙』, 東京大學三學部에는 “國, 國民”으로 번역했으며, 柴田昌吉·子安峻, 1873, 『英和字彙』, 輿論社에는 “國民, 人民, 國” 등으로 번역했다.

9 블룬칠리의 저서 가운데 *Allgemeines Staatsrecht*(1868)는 1876~1879년에 걸

*Staatslebre für Gebildete*)에서 민족과 국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때 민족, 국민은 각기 nation, volk의 번역어로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한역본 등을 참조해 해당 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nation)과 국민(volk)은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하고 상통하는 것 같지만 본래 전혀 다른 것이다. 독일어로 이른바 민족은 동종(同種)의 민중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은 같은 나라에 함께 사는 민중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민족은 여러 나라에 나누어 사는 경우가 있으며, 하나의 나라에 여러 민족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반드시 나라의 경계를 보아야 하며, 즉 한 나라 안에 거주하며 참정권을 갖는 자로, 그를 총칭해 국민이라고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프랑스인, 영국인은 민족(nation)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나라(독일)가 말하는 volk에 해당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또 people 혹은 people을 우리가 말하는 nation에 해당하는 말로 쓴다. 따라서 정치학자는 종종 의혹을 갖는다.(밑줄은 역자) [...] 나는 우선 독자들에게 국민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게 [...] 하려고 하며, 먼저 그 대체를 말한다. 첫째, 국민이란 하나의 개체이다. 왜냐하면 국민은 하나의 큰 유기체, 즉 국가(stat)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그 의지를 발하고 그 권리를 정함으로써 자신을 지켜낸다. 둘째, 국민이란 나라 안에 생식하

---

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에 의해 『國法汎論』이라는 제명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그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Deutsche Staatslebre für Gebildete*(1974, Nördlingen)는 히라타 도스케[平田東助], 히라쓰카 데이지로[平塚定二郎]가 『國家論』(1889, 東京: 春陽堂)으로 일역한 것과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가 『國家學』(1899, 東京: 善隣譯書館)으로 증역한 번역본이 있었다. 량치차오는 1899년 4월 10일 제11기 『청의보』에 블룬칠리의 『국가론』을 번역, 게재하기 시작했다. 1902년 廣智書局은 량치차오가 번역한 블룬칠리의 저서를 모아 『國家學綱領』이란 제명으로 출판했다. 또한 1903년 5월 25일 『신민총보』 32기에는 力人을 필명으로 한 소개 글이 실렸고, 1903년 10월 4일 『신민총보』 38, 39 합기에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이란 제목의 글에 블룬칠리 두상을 포함해 그 학설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1907년 安鍾和가 廣智書局의 『國家學綱領』을 동명의 제목으로 번역 소개했다(伯倫知理 著, 安鍾和 譯, 1907, 『國家學綱領』, 廣學書舖). 박근갑, 2017, 「한국에 건너온 블룬칠리(Bluntschli) 국가학」, 『개념과 소통』 제20호 참조.

는 하나의 법률체다. 무릇 국가라고 말하고,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합일된 활동을 하는 공동의 단체로 그 의미가 진정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국민이란 나라를 세우는 인민의 공동의 마음이고 국가란 헌법으로 만든 국민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의 정신은 바로 활동하는 국민이다. 이 정신이 있는 다음에 이 체(體)가 갖춰진다. 따라서 국민이 있는 뒤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 두 단어는 필경 이름이 다르지만 실이 같을 따름이다.<sup>10</sup>

위에서 불분칠리는 근대 국가를 국민이 만든 공동체라고 보고 국민 개념과의 대비 속에서 민족 개념을 설명한다. 이때 민족이란 그가 종족적·문화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nation의 번역어로, 국가와 등치되는 정치적 개념으로 해석한 volk=국민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당시 서양사의 맥락에서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었다.<sup>11</sup> 왜냐하면 volk는 어원상 ethnic과 가까운 의미이며 nation은 이미 영국, 프랑스에서 본래 혈통을 함께하는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것에서 정치적 공동체를 내포한 개념으로 재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당시 nation과 volk라

10 J. K. Bluntchli, 1874, *Deutsche Staatslehre für Gebildete*, Nördlingen, pp. 39~43(박상수, 2005, 앞의 글, 96쪽에서 재인용); 吾妻兵治, 1899, 『國家學』, 東京: 善隣譯書館, 위 인용문은 아즈마 헤이지[吾妻兵治]의 『國家學』에서 族民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民族으로 바꾸었다.

11 최갑수, 2003,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31; 최갑수, 1995, 「서구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12 서구에서 오늘날 민족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nation, ethnic 등이 있다. nation은 라틴어 nātiōnem(주격은 nātiō), 고대 프랑스어 nation, nacion, nasion 등을 어원으로 하며, 중세 영어에 nacioun, nacion 등의 형태로 진입했다. 그 의미는 주로 혈통의 함께하는 혈연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ethnic은 이교도, 이방인을 뜻하던 라틴어 ethnicus, 고대 그리스어 ethnīkós(ἔθνικός), éthnos(ἔθνος) 등으로부터 영어권에 진입했으며 점차 특정한 인종, 종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세 영어에서 이 개념을 계승한 용어는 folk이다. 그런데

는 단어는 각 국가, 지역마다 그 의미가 나름대로 재규정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조금씩 벗어나 있었다. 그가 앞의 글(밑줄)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 가운데 프랑스인, 영국인은 민족(nation)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나라(독일)가 말하는 volk에 해당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독일)가 말하는 volk는 당시 프랑스, 영국에서 말하는 nation과 가까운 함의를 갖는 용어였다. 이 점에서 그가 전자를 정치적 공동체로서, 후자를 종족 집단으로 이해한 것은 법학자로서의 자기 해석이었다.<sup>13</sup>

블룬칠리가 nation과 volk(대역어로는 민족과 국가)를 구별한 것은 그가 지향한 이상적인 국민 ‘국가론’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취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다. 이때 그의 국가론이 갖는 특징은, 국가를 자기 의지를 갖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고 그것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는 데 있었다. 그는 개인의 사회적 계약의 산물로서 국가를 이해하려는 영국에서 기원한 학설을 비판하면서 대신 국가 의지에 주목했다. 그는 국가 관념을 결핍하거나 그것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연인민(naturvolk)과 구별하여 국가체제 안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총체적 인격으로서 국가국민(Statsvolk, 영어식으로는 state n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상정한다. 그는 주로 언어적 공동성에 기반한 민족공동체는 법률적 의미의 인격체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초월하는 법인격체로서 유기적 존재들을 구성하는 통일체를 상정했다. 그것이 곧 volk였다. 이때 그는 nation과 volk를 분리하면서도 양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일종의 진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도덕적 능력을 지니지 못

---

이 개념들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며, 그것이 처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그 함의도 바뀌어왔다고 할 수 있다.

13 개념 정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서구 상황에서 이런 다른 해석이 나타난 것은 납득되는 일이며, 그 자체를 별도로 논의할 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통합된 흐름으로 보고 그 민족국가로의 이행을 이상 모델로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또한 비서구 지역의 민족국가 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갑수, 2003, 앞의 글; 최갑수 1995, 앞의 글 참조.

한 민족은 volk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민이 본성적으로 국가국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모든 nation이 volk로 구성될 자격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고유한 국가 관념과 그것을 실행할 욕구를 지닌 민족은 하나의 국민국가(민족국가)를 세울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했다.<sup>14</sup>

그런데 이러한 블룬칠리의 민족, 국민 개념은 당시 유럽 지역의 맥락에서 진행된 다양한 변형 또는 그 논리의 개별적 진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리아 그린펠드(Liah Greenfeld)의 분석을 인용하자면 유럽의 민족주의 간에는 다양한 변형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이 공민적 원리 위에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민족주의를 지향했다면,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공민적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도 집단주의-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갔다. 또한 러시아, 독일은 집단주의-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특정 종족 집단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족주의 경향으로 변화해갔다(〈표 1〉 참조).<sup>15</sup> 이 I→II→III 유형으로의 진행은 국가민족(state nation)의 초기 이상으로부터의 ‘퇴화’로 이해될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형성이 그것을 주도하는 특정 민족(또는 종족)

〈표 1〉 유럽 민족주의의 역사적 유형

유형	I	II	III
기반 원리	공민적	공민적	종족적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적	권위주의적
	개인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적
초기 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전형 예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출처: Liah Greenfeld, 1993,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11.  
해당 내용을 참조해 재정리함

14 J. K. Bluntchli, 1874, 앞의 책.

15 Liah Greenfeld, 1993,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3~11.

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진화이기도 했다.<sup>16</sup>

이 가운데 블룬칠리는 영국, 프랑스의 선행 사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위에 인용한 글에서 “그 학설은 오늘날도 아직 많은 옹호자를 거느린다. 그렇지만 도이치 국가학은 그것이 잘못되고 믿을 수 없다고 내몰아 세워 물리쳤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한 “그 학설”이란 ‘국가 계약의 산물’이라는 루소류의 주장이었다. 국가 유기체(organismus) 이론은 바로 그에 맞서 제기된 것이다. 그는 개별적 개인들의 사회적 계약을 거쳐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의지의 단순한 총합을 초월하는 공공의지(국가의 지)를 주목한다.<sup>17</sup>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원했던 국가 범주 내의 자유로운 개인에 의해 합의된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민족주의의 초기 원리와 구별해서 집단주의, 권위주의적인 원리를 부각한 민족(국민) 개념이었다. 이러한 블룬칠리의 민족, 국민 개념의 특성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중국의 엘리트 지식인들도 주목한 점이였다.

이 점에서 그를 수용한 량치차오의 경우도 유사한 입장의 진행을 거치고 있었다. 량치차오는 초기에 서학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때, 루소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회계약설을 국가 원리로 주목했다.<sup>18</sup> 당시 그는 “루소가 18세기의 인물이지만 19세기 서구의 ‘민족주의’를 잉태한 어머니이자 프랑스혁명의 원동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루소의 학설이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의 전환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그는 곧 루소 학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블룬칠리 학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sup>19</sup> 이는 그가 민족국가

16 姚大力, 2013, 「談民族與民族主義」, 『誰來決定我們是誰』, 譯林出版社.

17 박근갑, 2017. 12, 「한국에 건너온 블룬칠리(Bluntschli) 국가학」, 『개념과 소통』 제20호, 355쪽.

18 梁啓超, 1901. 11~12, 「盧梭學案」, 『清議報』第98~100冊; 中國之新民, 1902. 7, 「民約論巨子盧梭之學說」, 『新民叢報』第11~12號.

19 梁啓超, 1903. 10. 4,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新民叢報』38, 39 합기, 4쪽.

(국민국가)의 구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국가민족을 지탱하는 원리를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점차 집단주의-권위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적어도 그 전환의 방향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설명해준다.<sup>20</sup>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구 민족 개념 가운데 불분칠리류의 민족 개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 개념의 선택적 수용에는 개혁파에 속했던 량치차오가 처했던 중국 사회와 국가체제의 관성(慣性)이 반영, 작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새로운 국가체제로의 이행은 도모하는 엘리트 지식인의 관점에서, 황제권력과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전통은 그로부터의 급격한 이탈보다 가까운 유형의 근대국가 체제로의 이행 모색을 선행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럽다. 둘째, 민족 의식의 원초적 존재로, 이들 지역에서 근대민족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형태의 개념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족류(族類)” 개념이 화이론의 구조하에서 민족의 초기 형태를 형성하여, 청 제국 시기까지 기본적으로 이어졌다. ‘족류’는 화이적 세계관하에서 다른 종족과의 대비가 부각되면서 근대 이후의 민족의 의미와 연결되는 맥락을 갖게 되었다.<sup>21</sup> 이 점에서 불분칠리의 민족 개념은 중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번역되어 하나의 실체로서 이해될 수 있

20 하사마 나오키[狹間直樹]는 량치차오가 “국가”의 관점에서는 國權主義의 입장에서, “국민”(新民)의 관점에서는 民權主義의 입장에서, 마치 타원의 두 축처럼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狹間直樹, 1999, 「〈新民說〉略論」, 狹間直樹編, 『共同研究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みすず書房, 92~93쪽.

21 “族類”라는 단어는 본래 “族類辨物”(『周易·同人·象』)처럼 동류의 무리를 가리킨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동일한 성씨의 후예로 구성된 혈족을 지칭했다. 그것은 “史佚之志有之曰, 非我族類, 其心必異”(『左傳·成公·4年』)에서 혈족 범위에 주로 국한해 사용되었지만, 화이적 세계관하에서 다른 종족과의 대비가 부각되면서 근대 이후의 민족의 의미와 연결되는 맥락을 갖게 되었다. 강통(江統)은 「徙戎論」에서 “非我族類, 其心必異, 戎狄志態, 不與華同”(『晉書·卷56·江統傳』)이라고 했는데, 근대 이전의 “족류” 개념은 근대 이후 “민족” 개념과 구별되는 함의를 갖지만, 오늘날 민족과 유사한 맥락의 개념으로 주목된다.

는 측면이 있었다. 중국 지식인들은 유럽의 민족(주의) 개념 가운데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내포한 근대 국가론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개념의 수용에서 유럽 민족(주의) 개념 자체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며, 또한 그것이 주도적인 선택 과정이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량치차오의 민족, 국민 개념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사상계의 사상적 분화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된다. 이때 적지 않은 논자들은 그 가운데 민족 개념이 정치 중심에서 문화 중심으로의 전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sup>22</sup> 또한 ‘문화주의’적인 변용의 결과 논리적으로 모순된 경향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된다.<sup>23</sup> 그런데 이러한 분화 이전에 위와 같이 그 수용 과정에서 그것이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내포한 근대 국가론에 경도된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 민족주의의 진행 과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종족·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변형의 일종으로, ‘문화주의’적 변용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 개념이 정치 중심이나 문화 중심이나 하는 문제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집단주의·권위주의적 국가건설을 지향한다는 점에 대해서 부차적이다. 이때 정치 혹은 문화 어느 쪽이 부각된 민족(주의) 흐름이든 그 속에 중국의 기존 국가, 사회에서 이어진 관성의 측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예를 들어 쉬지린[許紀霖]은 량치차오가 1912년 「國性論」을 발표할 때 國語, 國教, 國俗으로 표현되는 ‘국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민족주의가 문화민족주의로 전환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후 현대 중국에서 공화애국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민족국가 인식으로의 분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許紀霖, 2005, 「政治美德與國民共同體：梁啓超自由民族主義思想研究」, 『天津社會科學』, 2005年 第17期; 許紀霖, 2011, 「共和愛國主義與文化民族主義－現代中國兩種民族國家認同」,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人民出版社, 283~287쪽.

23 박상수는 량치차오의 민족, 국민관 속의 문화주의를 “몰락의 도정에 있는 문화주의(decaying culturalism)”라고 비판한 레벤슨의 지적에 대해, 그의 전통적 문화주의에 대한 변용의 논리가 근대민족주의와 조화할 가능성이 모색되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좌절의 측면을 주로 탐색한다. 박상수, 2005, 앞의 글 참조.

### Ⅲ. 진화론과 지리결정론

근대 중국이 민족(국민)국가의 체제로 이행하는 데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구별되는 지역적 맥락의 독특한 변수들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많은 논자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바로 청 제국이 구조적으로 ‘균질한’ 통합성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운 매우 다원적인 구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청은 명의 직할 16성 지역에 만주, 몽골, 위구르(서역), 티베트를 아우른 광역의 제국으로, 지리·인구·문화적으로 분절적 구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국가-민족(국민)’ 또는 ‘종족-민족(국민)’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청 제국은 그것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 그대로 묶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속에서 당시 근대 국가로의 이행을 지향했던 중국의 엘리트 지식인들은, 새로운 국가와 등치되는 민족, 국민 등 개념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학은 그러한 과제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학문 분야였으며 량치차오는 그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sup>24</sup>

량치차오는 20세기로 접어들어 근대 민족국가에 대한 지향을 투사한 새로운 역사학, ‘신사학(新史學)’을 제창했다. 그는 1900년 『신민총보(新民叢報)』의 간행을 시작할 무렵 『중국통사(中國通史)』 저술을 기획하는 등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중국 역사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1901년 「중국사서론(中國史敍論)」, 1902년 「신사학(新史學)」 등을 발표해 기존의 역사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치사(治史) 방식으로서 ‘신사학’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 주장의 요지는 군주의 역사인 군사(君史)에서 국민(국가)의 역사인 국사(國史)로의 전환이었다.<sup>25</sup> 이는 중국 역사학에서 근대 국가를 서술단위로 한 역사 서술의 방식을 처음으로 정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근대 역사학의 한 시작으로 간주

24 조병한, 2007, 「梁啓超의 啓蒙主義 역사관과 國學」, 『한국사학사학보』 16; 정지호, 2011, 「근대 중국 사학의 형성과 변용」, 『중국지식네트워크』 1.

25 오병수, 2006, 「중국 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강역문제: 양계초, 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

된다.<sup>26</sup> 이 과정을 통해 그가 제시한 관련 논리들은 중국 민족(주의) 개념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량치차오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역사 방법론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식체계는, 무엇보다 진화론이 필두하는 과학 정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진화론혁명자혈덕지학설(進化論革命者頡德之學說)」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윈의 종의 기원설이 세상에 나온 뒤에, 전 지구의 사상계에는 갑자기 새로운 천지(天地)가 열렸다. 단지 유형과학(有形科學)(역자: 즉 자연과학)이 일변한 것뿐이 아니라, 사학(史學), 정치학, 생태학, 인군학(人群學), 종교학, 윤리도덕학 모두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 위대하구나, 근 40년래의 천하는 진화론의 천하다. 유물주의가 창성하고 유심주의는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과학이 흥성하고 종교는 거의 남은 숨을 지키지 못한다. 진화론은 실로 수천 년 동안 구학문의 뿌리를 걷어내 버리고 새롭게 바꾸어주었다.<sup>27</sup>

여기서 그는 진화론 이후 사상계에 미친 ‘과학’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역사학 역시 그 흐름을 받아들여 새롭게 쓰여져야 한다고 보았다.<sup>28</sup> 그는 역사학을 자연과학과 곧바로 등치되는 과학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과학으로서 역사학의 의의를 중시했다.

---

26 첸무[錢穆]는 근세사학을 전통파, 혁신파, 과학파 3파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량치차오는 혁신파의 첫 번째 단계인 정치혁명의 주요 인물로 정리한다. 錢穆, 2010, 『國史大綱』(上, 下), 商務印書館, 3~6쪽.

27 梁啓超, 1902, 「進化論革命者頡德之學說」, 『飲冰室文集』 12, 79쪽.

28 당시 그는 서학(西學)에 매우 강렬한 관심을 보였고, 서학을 관통하는 정신으로 과학에 주목했다. 또한 단어도 기술적 측면으로 의미가 축소된 기존의 격치(格致)를 버리고 과학이라는 새로운 함의의 개념으로 고쳐 사용했다. 金觀濤·劉青峰, 2004, 12, 「從〈格物致知〉到〈科學〉, 〈生產力〉- 智識體系和文化關係的思想史研究」, 『近代史研究所集刊』 第46期.

그가 과학으로서 역사학을 주목하면서 그 기본 논리, 방법론으로 특히 주목한 것은 ‘인과율(因果律)’이었다. 그는 『중국어사연구법(中國歷史研究法)』의 제1장 「사지의의급기범위(史之意義及其範圍)」에서 “역사란 무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류 사회가 계승해 활동해온 체상(體相)을 기록하고, 그 전체 성적을 계산해내고, 그 인과관계를 구함으로써 현대 일반인의 활동에 귀감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그는 역사가 단순한 사실을 서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실 간의 상호관계, 즉 ‘인과율’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29</sup> 또 제6장 「사적지론차(史迹之論次)」에서는 “사실의 원인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역사가의 여러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과율을 논하지 않는다면 사학의 목적이 소멸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는 민족도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여기서 과학 개념은 물론 오늘날의 세분화된 과학 개념과 거리가 있지만, 당시 모종의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방식의 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진화론의 인과율에 따라 민족(국민)국가의 형성을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민족(국민)국가가 인류 진화의 결과이며 그 진화의 성패는 인과율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참조한 블룬칠리의 국가 유기체론의 중심 개념인 국민(volk) 역시 그것이 공공의지를 갖는 존재로 제시된 근거는 바로 인과율에 따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데 있었다.<sup>31</sup> 그는 중국의 민족국가로의 진화 가능성을 인과율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9 梁啓超, 1922, 『中國歷史研究法』, 上海商務印書館.

30 梁啓超, 1922, 위의 책. 그는 후에 원래 인과율은 자연과학의 命脈으로 종래는 자연과학만 과학으로 부를 수 있었고 史學은 여태까지 과학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역사학을 애호하는 입장에서 역사학이 과학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因果를 발명하려고 노력했다고 자술하고 있다. 梁啓超, 1922a, 「研究文化史的幾個重要問題-對於舊著中國歷史研究法之修補及修正」, 『飲冰室文集』 40, 2~4쪽.

31 梁啓超, 1903. 10. 4, 앞의 글.

량치차오가 중국의 민족을 과학 정신 아래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근대 서구의 경로와도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다. 당시까지 서구의 민족 역시 ‘과학’으로 포장되며 논리적으로 진화되어왔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18세기에 스웨덴 자연학자 카롤루스 린나이우스(Carolus Linnæus)의 체질인류학이 종족의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강화했으며, 19세기에는 찰스 다윈(Chales Darwin)의 자연진화론은 사회진화론으로 확대 해석되어 인류의 각 종족을 문명론적인 진화 단계 속에 위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서구 민족주의에 논리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종족의 위계 구조는 서구 제국주의(또는 일본)가 동아시아에 대한 압박의 실체를 잘 드러내주는 지점이기도 했다.<sup>32</sup> 또한 이는 그를 수용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도 내재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었다. 옌푸[嚴復]는 토머스 헉슬리(Thomas Huxley)의 사회진화론을 『천연론(天演論)』으로 편역, 소개했는데, 그 과정에서 “물경천택(物競天擇),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논리는 중국의 “구망도존(救亡圖存), 부국강병(富國強兵)” 요구와 결합해서 엘리트 지식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sup>33</sup> 량치차오가 신사학으로의 지적 전환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옌푸와의 교류가 결정적인 계기였다.

‘과학’으로 포장된 유럽 민족주의가 종족적 위계를 내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량치차오에서 보이는 한족 지식인들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민족 인식은 청 국가의 종족 구성과 연결되어서 내부적으로 여타 종족에 대한 위계적 인식으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량치차오의 스승인 캉유웨이[康有爲]는 『대동서(大同書)』에서 흑인을 멸절(滅絶)하고 황인종이 백인종과 통혼하여

32 예컨대 오사카 권업박람회(1903)의 ‘학술인류관’, 세인트루이스 세계박람회(1904)의 ‘인류학관’, 도쿄 칙식박람회(1912)의 원주민 부락 전시 등 여러 박람회에서 유행했던 인종 전시는 진화론에 기반한 인류 사회의 위계 구조를 드러내 보여준 단적인 예였다.

33 黃克武, 2014, 「何謂天演? 嚴復“天演之學”的內涵與意義」,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014年 第85期.

“종족의 구분을 없애고 인류를 갖게”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화론에 기반한 종족 인식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국 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종족적 구분과 위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34</sup> 이 점에서 장태염(章太炎), 추용(鄒容) 등으로 대표되는 “배만(排滿)” 주장도 종족의 ‘진화’와 위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청 말 한인 지식인들 속에서 그와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량치차오가 과학 정신의 연장에서 진화론과 함께 주목한 것은 “지리”였다. 량치차오는 지리적 통합성을 근거로 중국의 국가, 민족으로서의 통합의 당위성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는 중국사의 공간 범위를 설명하면서 역사의 진화는 지리(地理)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중국의 판도를 마치 자연과학의 실험실과 같이 지리적 요인에 의해 역사적 인과율이 적용되는 단일 공간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그는 1902년 『신사학』과 같은 시기에 저술된 『중국지리대세론(中國地理大勢論)』에서 “중국은 천연(天然)의 대일통(大一統)의 나라이다. 인종이 일통하고, 언어가 일통하고, 문화가 일통하고, 교의가 일통하고, 풍속이 일통하니, 그 근원은 지세(地勢)에 연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35</sup> 이어 그는 중국의 지리적 판도를 본부(本部)와 속부(屬部) 두 부분으로 나누면서도[전자는 18행정, 후자는 만주(滿洲), 몽골(蒙古), 회부(回部), 서장(西藏)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본부를 중국의 종주(宗主)라고 함], 그 판도에 인종, 언어, 문화, 교의, 풍속이 일통(一統)한 “천연의 대일통의 나라”가 존재하며 그 근원은 지세, 즉 지리적 요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청 국가를 계승한 국가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인구는 “천연”적으로 지리적 요인에 의해 “일통”의, 즉 균질한 속성의 민족(국민)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지리결정론적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sup>36</sup>

34 康有爲, 2009, 『大同書』, 上海古籍出版社.

35 梁啓超, 1902, 「中國地理大勢論」, 『飲冰室文集』 10, 77~78쪽.

36 曲洪波, 2008, 「近代“地理環境論”對梁啓超學術著述的影響」, 『甘肅社會科

이어서 그는 중국의 대일통 판도 내에서는 역사적으로 한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통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족의 동화력과 그것이 주도한 민족 형성의 기제에 주목하고, 1905년 「역사상중국민족지관찰(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에서 중국의 “변강(邊疆)”은 중원의 족(族)이 중원 주변의 여러 족과 부단히 상호교류, 융합하는 동태적 공간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대 중원에서 형성된 화하족(華夏族)이 묘만족(苗蠻族), 촉족(蜀族), 파저족(巴氏族), 서회족(徐淮族), 오월족(吳越族), 민족(閩族), 백월족(百粵族), 백복족(百濮族) 등 주변의 제 족과 지리적으로 변강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변강을 형성해왔으며, 그러한 변강의 구조가 청 말까지 지속되었다고 파악했다.<sup>37</sup> 그는 1922년 「중국역사상민족지연구(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에서도, 하상주 삼대에 제 부락이 연방식(聯邦式)으로 결합해 “군후(群后)” 가운데 하나인 “원후(元后)”(군후, 원후라는 단어는 상서에서 따옴)를 받들어 점차 중화민족의 골간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제하(諸夏)”와 “이적(夷狄)”이 수시로 변천하면서 “이적”이 “제하”의 변강에 분포하고 “군후”에서 “원후”로 상호연동하면서 변강 기제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합되어왔다고 설명했다.<sup>38</sup> 그의 진화론적 사고와 연관해서 부연하자면, 그가 중국 역사에 중원과 주변 간에 “중화민족”을 형성해온 상호연동의 기제가 있었다고 하는 설명은, 중국 민족(국민)의 형성을 한족의 종족적 진화 결과로 파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가 한족 중심의 종족성을 초월한 통합적 민족의 “실체”

學』, 2008年 第3期; 武軍, 2007. 3, 「地理環境論與梁啓超“新史學”理論」, 『北京科技大學學報』第23卷 第1期.

37 梁啓超, 1905,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 『飲冰室全集』41, 4, 5~12쪽.

38 그는 춘추 증업을 기준으로 고대 중국의 민족 분포를 18성 지역만 정리하면 諸夏組, 荊吳組, 東夷組, 苗蠻組, 百越組, 氐羌組, 群狄組, 群貊組 등 8조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고, 이후 3,000여 년의 경과를 통해 현재 중국 내지와 변강에 거주하는 종족은 中華族(漢族), 蒙古族, 突厥族, 東胡族, 氐羌族, 蠻越族 등 6대 族系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한다. 梁啓超, 1923, 「中國歷史上民族之研究」, 『飲冰室專集』42, 1~34쪽.

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고까지는 물론 말할 수 없다. 민족(주의) 의식이 발흥할 때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강세를 접하는 주류 집단이 그 흐름을 주도하며 그들의 민족주의가 해당 국가에서 이념적으로 동일시하는 인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변 집단을 포함해 전체 민족(국민)의 이익과 의지를 대변한다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경우는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 이념을 둘러싼 주변 집단과의 정치적·사회적 합의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되고, 주류 집단을 중심으로 정리 또는 ‘발명’된 문화 전통이 구축되고 그들이 주도하는 정치·문화적인 동원이 진행되는 경우가 나타난다.<sup>39</sup> 량치차오와 같은 근대 전환 시기의 중국 지식인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량치차오의 논리는 중국 국가, 민족(국민)의 통합적 형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 ‘포장’은 그리 효과적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민족국가를 지향하면서 제국 시기로부터 유래하는 분절적 구도는 대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인종, 언어, 문화 등의 면에서 현실적 차이가 분명한 본부와 속부를 포괄하는 일통의 공동체를 상정할 때, 그는 본부와 속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민족-국가의 범주를 공동으로 구성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과제를 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국민(민족)이 국가와 등치되는 국민국가(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이상 그 국가체제의 이행 과정에서 청 제국 국가체제의 각 이질적 영역 간에 새로운 국가체제의 구성 원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가 ‘과학’의 포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했던 현실의 장애였다.

39 정지호는 이 과정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정치적 개념인 “중화민족”과 문화적 개념인 “민족”을 혼동해서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에 주목한다(정지호, 2007, 12, 「근대 중국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민국가」, 『인문학연구』 12). 그런데 국가민족의 ‘이상’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드러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은 여러 지역에서 폭넓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 IV. 과학에서 의지력으로

한족 중심의 종족성을 충분히 초월하지 못한 민족 인식은, 량치차오의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논리 구조에 반영되었다. 그는 1903년 「정치학대가백륜지리지학설(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에서 혁명파의 “배만방능건국(排滿方能建國)”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중국이 민족을 말하는 것은 마땅히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 외에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를 제창해야 한다. 소민족주의는 무엇인가? 한족이 국내의 다른 족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대민족주의는 무엇인가? 국내 본부, 속부의 제 족이 합쳐서 국외의 제 족을 대하는 것이 이것이다. 중국이 동화력이 강한 것은 동서 역사가 공인하는 것이다.<sup>40</sup>

여기서 량치차오는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와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를 구별하는 주장을 통해서 한족의 동화력을 축으로 한 통합된 민족의 구성을 주장한다. 그는 한족의 소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본부, 속부의 제 족이 합쳐서 대민족주의를 구성하여 국외의 제 족을 상대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여기서 한족, 비한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더 이상 모호하게 두지 않고 그것을 한족의 동화력을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한족의 문화적 핵심 역할과 그것이 강역 내 모든 민족의 이익과 이념을 대표한다는 자기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의 대민족주의는 공화 정체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견지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이 발생했을 때, 량치차오는 대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만주, 몽골, 회족, 서장 변강을 포함하는 건국방략을 견지했다. 이후 “오족공화(五族共和)”의 국가건설 방략이 실현되자 량치차오는 신설 공화국의 적극적인 지지자

40 梁啓超, 1903,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飲冰室文集』 13, 75~76쪽.

가 되었다. 혁명파들을 중심으로 “배만” 정서와 한족 중심의 국가 건설 논의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었지만, 량치차오는 변강 분리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후 한편으로 한족의 동화력이 축이 된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점차 더 분명히 인식해갔다. 그는 대민족주의 아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지역을 민족국가라는 유기적 단위로 묶는 데에는 현실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1922년 「지리급년대(地理及年代)」에서 중국의 영토는 지세(地勢)로 볼 때 ① 18행성, ② 동북성 및 특별구역, ③ 신강, ④ 외몽골, ⑤ 청해 및 천변(川邊), ⑥ 서장(西藏) 등 6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6부 사이에 문화적 개발, 역사적 관계, 통치권 행사 등에 각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① 18행성은 “협의를 중화민족”의 오랜 근거지이고, ② 동북성 및 특별 구역은 동호(東胡), 북호(北胡)를 포함한 “광의의 중화민족”의 완전한 지배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③, ④, ⑤, ⑥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 주권하에 있지만 인종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국 주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전보다 더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sup>41</sup>

이 무렵 그가 역사학에서 인과율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기존의 언급을 수정한 것이 주목된다. 전술한 『중국역사연구법』에서 인과율을 강조하는 언급을 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역사의 인과율에 대한 기존 언급을 수정한다. 그는 처음에 역사학이 과학의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역사에서 자연과학과 ‘같은’ 인과율을 발견하기 위해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노력했지만, 곧 “자연계(自然系)는 인과율의 영토이고 문화계(文化系)는 자유의지의 영토이다”라고 하면서 역사학과 자연과학의 학문 방식을 명확히 구별하고, 역사학이 “인과를 논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고 했던 기존 언급을 철회하면서 “호연(互緣)”, 즉 상호연관성을 설명하는 정도로 후퇴한 것이다.<sup>42</sup> 이에 따라 역사학은 인과율보다는 자

41 梁啓超, 1922b, 「地理及年代」, 『飲水室專集』 47, 1~5쪽.

42 그는 남경 금릉대학 제일중학에서 ‘研究文化史的幾個重要問題-對於舊著中國

유지지 또는 “의지력[心力]”이 작동하는 학문 영역으로 재설정되었다.

이제 그의 민족 인식은 ‘과학’의 대상에서 ‘의지력’의 영역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블룬칠리에게 민족은 유기체로서 의지를 갖는 존재로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과학(진화론)과 의지는 연결되는 맥락에 있었으며 본래 대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량치차오는 양자를 대비하면서 그 사이의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 그에게 민족은 공동체로서의 실체라기보다 민족으로서의 각성(覺醒)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었다. 아울러 국민 동원의 정신 역량으로서 “중화 민족”을 강조하는 측면이 더 두드러졌다. 특히 구국의 위기의식하에서 변강, 민족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과학’적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점차 정신적 또는 의지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은 그가 진화론에 근거해 과학적(학문적)으로 민족의 진화 결과로서 국민, 그리고 국민=국가의 등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 중첩된 범주로서 국민으로 진화하는 민족의 실존은 이제 역사적 실체라고 하기보다는 이후 의지력으로 형성해야 할 과제로 다뤄졌던 것이다.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경과하는 가운데 다민족을 전제로 한, 제국 국가의 구조를 반영하는 민족국가 설계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합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민족(주의)을 주도한 한족 주류 세력의 자기 확신의 배후에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여러

---

歷史研究法之修補及修正’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작년에 쓴 중국역사연구법 안의 역사 정의에는 ‘그 인과관계를 찾는다’는 구절이 있다. 나는 근래 [...] 이 말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했다. [...] 내가 역사연구법을 쓸 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복잡했다. 나는 역사의 인과에 대해 매우 회의했지만, 그것을 감히 버릴 수 없었다. [...] 나는 지금 이 구절을 돌아보면 조금 우습다. ‘인과율로 역사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해하다’고 이미 말했는데 왜 또 ‘인과를 논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는지. 그때 내 병의 뿌리는, 인과율은 절대 과학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속성이라고 인식하여 감히 부딪치지 못한 것이다. [...] 역사 현상은 최대로 단지 ‘互緣’으로 말할 수 있을 뿐이며 인과를 말할 수 없다.” 梁啓超, 1922a, 앞의 글, 2~4쪽.

집단 간의 합의 과정이 가려진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민족 구성을 전제로 한 국가 정체(이념)에 대한 내부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주의) 개념의 형성 과정을 량치차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당시 서구로부터 민족(주의) 개념과 함께 과학의 영향도 동시에 수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이 그 개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Ⅱ장에서는 중국 민족 개념의 수용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서구 민족 개념의 ‘원본’으로서의 의미를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수용한 중국 측의 주체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량치차오 등이 수용해 이 지역에 확산된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원리가 부각된 민족(국민) 개념으로 서구 민족주의의 다양한 진화, 변형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한 것이었다. 량치차오가 이러한 민족 개념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은, 그것이 정치체제와 종족 공동체 등 중국의 기존 국가, 사회체제로부터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민족 개념은 기본적으로 외래적 수용, 변용 과정을 거쳤지만, 그 수용 과정에서부터 기존 국가, 사회로부터 이어진 관성이 작용한 측면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다.

Ⅲ장에서는 민족 개념의 수용, 변용 과정에서 영향을 준 지적 요소로서 특히 과학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량치차오는 근대국가를 서술 단위로 한 역사 서술 방식으로서 신사학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그가 구체화한 민족

---

43 이러한 잠복된 문제에 대한 학계의 반성적 논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姚大力, 2013, 앞의 글.

개념과 논리들은 중국 민족(주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때 그가 새로운 역사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학문적 방법론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식체계는 바로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과학이었다. 그는 과학으로서 역사학의 의의를 중시하면서 중국 민족을 과학의 범주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때 그는 과학 정신의 연장에서 역사학의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인과율(因果律)과 지리(地理)를 특히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중국에서 대일통(大一統)의 판도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판도 내에서 역사적으로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한 민족 통합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합적 판도, 민족에 대한 그의 ‘과학적’ 설명은 그리 실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근대 민족(주의) 형성 과정에서 종종 보이는 것과 같이 그 종류 집단으로서 한족의 자기 확신의 면모가 강했다. 청 제국 시기로부터 계승된 분절적 구조를 넘어 하나의 근대국가로서 그 다양한 요소들 간에 정치적·사회적 통합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이어 IV장에서는 이러한 민족 개념의 변용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민족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떤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어떤 과제를 남겨놓았는지 생각해보았다. 량치차오의 한족 중심의 종족성에 기반한 민족적 통합에 대한 자기 확신은 그의 민족주의 주장을 통해 강하게 표명되었다. 그는 한족이 국내의 다른 족에 대해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를 취하는 것 외에 한족의 동화력을 중심으로 제 족을 통합해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를 형성해 함께 국외의 제 족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는 한족의 동화력을 축으로 한 통합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역사학이 인과율이 작동하는 과학의 범주가 아니라 의지력[心力]이 작동하는 다른 학문 영역에 속한다고 재설정했다. 그리고 민족은 국가 공동체로서의 역사적 실체라기보다 민족으로서의 각성 대상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량치차오가 거쳐서 도달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음미해볼 지점이 많다. 살펴본 바와 같이 량치차오는 한편으로 서구로부터 민족 개념을 수용, 변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가, 지역의 관성을 내포하면서 한족을 중

심으로 한 청 제국 시기의 종족, 국가 구조를 통합적인 근대민족과 민족(국민)국가로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민족(주의)의 논리적 구조 속에, 청 제국 내부의 구조적 특성이 근대 국민국가의 그것과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이때 ‘과학’은 이러한 결합에 대한 설명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시도를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와 등치되는 민족의 존재를 과학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적 논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량치차오가 민족 개념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의 시도가 좌절되어가는 과정은, 근대민족의 형성과 관련해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논리적 과제를 분명히 드러내주었다는 점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중국 민족주의의 원형이 출현하는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관련 학계에는 제국 국가 구조와 근대 국가 구조의 연결성을 지적하는 논의가 매우 많다(許紀霖, 2017, 『家國天下-現代中國的 個人, 國家與世界認同』, 文景). 田寅甲은 “제국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의 이행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처럼 제국과 국민국가의 두 요소가 결합한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 민족 개념이 외래적 수용에서 시작했음에도 자기 해석 과정에서 체제의 관성이 작용하고 또 그것이 국가 기획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田寅甲, 2012a,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Ⅰ)-제국의 구조와 이념-」, 『中國學報』 65; 田寅甲, 2012b,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Ⅱ)-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 『中國學報』 66.

## 참고문헌

### 사료

- 『新民叢報』  
『飲氷室文集』  
『飲氷室專集』  
『左傳』  
『周易』  
『晉書』  
『清議報』

### 단행본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安鍾和, 1907, 『國家學綱領』, 廣智書局.  
  
葛兆光, 2011, 『宅兹中國: 重建有關“中國”的歷史論述』, 中華書局.  
康有爲, 2009, 『大同書』, 上海古籍出版社.  
梁啓超, 1902, 『國家學綱領』, 廣智書局.  
\_\_\_\_\_, 1922, 『中國歷史研究法』, 上海商務印書館.  
王柯 지음, 김정희 옮김, 2005,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자오팅양 지음, 노승현 옮김, 2010, 『천하체계: 21세기 중국의 세계 인식』, 길.  
錢穆, 2010, 『國史大綱』(上, 下), 商務印書館.  
許紀霖, 2017, 『家國天下: 現代中國的 個人, 國家與世界認同』, 文景.  
  
柴田昌吉·子安峻, 1873, 『英和字彙』, 輿論社.  
吾妻兵治, 1899, 『國家學』, 東京: 善隣譯書館.

- 井上哲次郎 編, 1882, 『哲學字彙』, 東京大學三學部.
- 平田東助·平塚定二郎, 1889, 『國家論』, 東京: 春陽堂.
- 挾間直樹 主講, 清華大學國學研究院 主編, 2016, 『東亞近代文明史上的梁啓超』, 文景.
- Bluntschli, Johann Kaspar, 1874, *Deutsche Staatslehre für Gebildete*, Nördlingen.
- \_\_\_\_\_, 1895, *The Theory of the State*, Oxford: Clarendon Press.
- Dikotter, Frank, 1992, *The Discourse of Race in Moder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feld, Liah, 1993,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rison, James, 1969, *Modern Chinese Nationalism*, Hunter College of New York, Research Institute of Modern China.
- Levenson, Joseph R., 1953, *Liang Ch'i-ch'ao and the Mind of Modern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Zheng, Yongnian,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논문

- 박근갑, 2017, 「한국에 건너온 블룬칠리(Bluntschli) 국가학」, 『개념과 소통』 제20호.
- 박상수, 2005, 「중국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고구려연구재단.
- 박양신, 2008, 「근대 일본에서의 ‘국민’ ‘민족’ 개념의 형성과 전개: nation 개념의 수용사」, 『동양사학연구』 104.
- 백영서, 2000,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형」,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2000.
- 오병수, 2006, 「중국 국민사학의 형성과 인종·강역문제: 량치차오, 장병린의 만주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14.

- 유용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 이춘복, 2009, 6, 「청말 중국 근대 ‘民族’ 개념 담론 연구-문화적 ‘民族’ 개념과 정치적 ‘國民’ 개념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29.
- 田寅甲, 2012a,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I)-제국의 구조와 이념-」, 『中國學報』 65.
- \_\_\_\_\_, 2012b, 「帝國에서 帝國性 國民國家로(II)-제국의 지배전략과 근대적 재구성-」, 『中國學報』 66.
- 정지호, 2005, 「梁啓超의 近代의 歷史敘述과 國民國家」, 『이화사학연구』 32.
- \_\_\_\_\_, 2007, 「근대 중국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민국가」, 『인문학연구』 12.
- \_\_\_\_\_, 2011, 「근대 중국 사학의 형성과 변용」, 『중국지식네트워크』 1.
- 조병한, 2007, 「梁啓超의 啓蒙主義 역사관과 國學」, 『한국사학사학보』 16.
- 최갑수, 1995, 「서구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 \_\_\_\_\_, 2003, 「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 『서양사연구』 31.
- 葛兆光, 2010, 「重建關於“中國”的歷史論述-從民族國家中拯救歷史, 還是在歷史中理解民族國家?」, 劉鳳雲·劉文鵬 編, 『清朝的國家認同-“新清史”研究與爭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曲洪波, 2008, 「近代“地理環境論”對梁啓超學術著述的影響」, 『甘肅社會科學』 2008年 第3期.
- 金觀濤·劉青峰, 2004, 12, 「從〈格物致知〉到〈科學〉,〈生產力〉-智識體系和文化關係的思想史研究」, 『近代史研究所集刊』 第46期.
- 單世聯, 2016, 「對進化論的反思-梁啓超晚年的文化觀念」, 『中原文化研究』, 2016年 第4期.
- 武軍, 2007, 3, 「地理環境論與梁啓超“新史學”理論」, 『北京科技大學學報』 第23卷 第1期.
- 王昆, 2013, 「梁啓超與伯倫知理國家學說」,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3年 第11期 (總第124期).
- 姚大力, 2013, 「談民族與民族主義」, 『誰來決定我們是誰』, 譯林出版社.
- 李孝遷, 2016, 「進化論與中國史家的思維方式」, 『華東師範大學學報』, 2016年 第2期.

- 朱晶, 2019, 2, 「地理, 文明與民族自尊-梁啓超對地理環境論與文明等級論的吸收與修改」, 『浙江社會科學』, 2019年 第2期.
- 許紀霖, 2005, 「政治美德與國民共同體: 梁啓超自由民族主義思想研究」, 『天津社會科學』, 2005年 第1期.
- \_\_\_\_\_, 2011, 「共和愛國主義與文化民族主義-現代中國兩種民族國家認同論」, 許紀霖·宋宏 編, 『現代中國思想的核心觀念』, 上海人民出版社.
- 黃克武, 2014, 「何謂天演? 嚴復“天演之學”的內涵與意義」,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014年 第85期.
- 狹間直樹, 1999, 「〈新民說〉略論」, 狹間直樹 編, 『共同研究梁啓超-西洋近代思想受容と明治日本』, みすず書房.
- Duara, Prasenjit, 1996, “Deconstructing the Chinese Nation”, Jonathan Unger ed., *Chinese Nationalism*, Armonk, N.Y., M.E. Sharp.

##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 량치차오(梁啟超)의 경우 —

김승욱

이 글은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民族, nation) 개념이 수용, 변용되는 과정을 량치차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에서는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과학 정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주목해보았다.

중국에서 민족(民族)이라는 단어는 서구 개념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았다. 량치차오의 경우 독일 정치학자 블룬츨리(Bluntschli)의 국가론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때의 민족 개념은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민족 개념이 외래 개념의 피동적 수용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사회의 기존 질서(정치 체제와 종족 구성)를 기반으로 한 주동적 선택의 측면도 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량치차오는 청 제국을 구성했던 여러 요소, 특히 제 종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합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공동체인 국민(volk)으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량치차오의 이러한 기대는 곧 그의 새로운 역사학 서술의 시도로 이어졌다. 그는 “신사학”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역사학

의 범주에서 중국의 민족국가로서의 진화를 학문적으로 실증해내려고 했다. 이때 그가 주로 역사학의 학문적 기반으로 삼은 것은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과학 정신이었다.

그러나 중국 민족(주의)의 통합성을 과학으로 ‘포장’하려는 그의 시도는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청 제국의 분절적 구도 자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청 제국은 인구, 문화, 지리의 제 측면에서 중국성(chineseness)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러한 핵심적 요소가 중심성(centrality)을 형성한 누층적 구조를 균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민족국가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과제였다. 그렇지만 과학 정신을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제국을 구성했던 제 종족 간의 정치적·사회적 합의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고 중국 민족(주의)의 형성을 이끄는 주류 세력으로서 한족(漢族)의 자기 확신이 일방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 제국 시기의 국가 구조는 그 분절적 구도를 해체하지 않은 채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 속에 그대로 내장되었다. 또한 이는 다민족 구성을 전제로 한 국가 이념에 대한 내부적 합의의 필요성을 오늘날까지 과제로 남기고 있다.

**주제어:** 중국, 근대 역사학, 민족, 국민, 국가, 량치차오, 과학

## ABSTRACT

# Acceptance of Nation Concepts and Science in Early Modern Chinese History: The Case of Liang Qichao (梁啓超)

Kim Seongwook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in the concept of nation (民族) in early Chinese modern history, focusing on the case of Liang Qichao. In the concrete analysis process, it was no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scientific spirit imported from the west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a nation.

In China, the word “nation”(民族) was positioned through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Western concepts. In the case of Liang Qichao, it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national theory of the German political scientist Bluntchli. At this time, the concept of “nation” basically had collectivist and authoritarian characteristics. Such characteristics also showed that the concept of “nation” was strong not only in the passive acceptance of foreign concepts, but also in terms of

the primary choice based on the existing order (political system and ethnic composition) of the Chinese state and society. Meanwhile, Liang Qichao anticipated that the various elements that constituted the Qing Dynasty, especially the people, could secure unity as a national and eventually transform into a folk, a community that constitutes a nation. This anticipation of Liang Qichao soon led to the attempt of at a new historical narrative. He suggested “theology” as a slogan and attempted to academically demonstrate China’s evolution as a nation-state in the category of history. It was at this time that the scientific spirit represented by the theory of evolution was mainly the academic foundation of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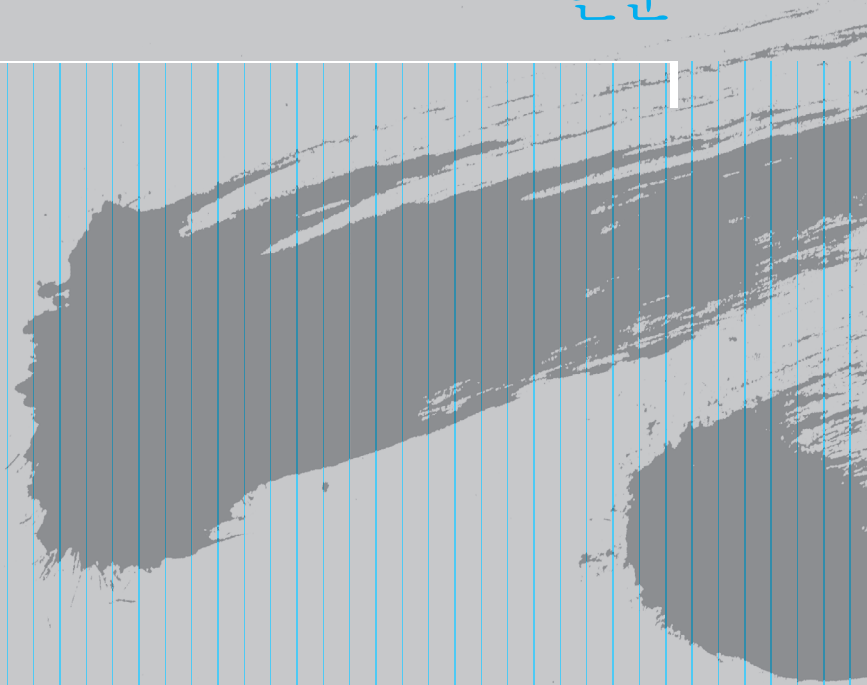
However, his attempts to “package” the unity of the Chinese nation (or nationalism) with science did not overcome the fragmentary composition of the Qing Dynasty, which was made up of various races. The Qing Dynasty maintained its national system around the key elements of “Chineseness” in terms of population, culture, and geography, and made them homogeneous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that formed the centrality, which was an important task in the transition into that nation-state. However, in an attempt to explain nation (or nationalism) on the basis of the scientific spiri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sensus process between the tribes that made up the empire was treated relatively poorly, and the Han nationality as the mainstream force that led to the formation of Chinese nationalism was strongly emphasized. As a result, the state structure of the empire period was embedded in the modern nation-state without dismantling its segmented composition. To this day, the need for internal consensus on national ideology presupposed by a multi-ethnic composition remains

a task to be resolved.

**Keywords:** China, Modern history, Ethnicity, People, Nation, Liang Qichao, Science



# 논문





# 4,800~4,100년 전 신석기시대 「압록강문화권」의 고찰

–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김재윤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고고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 III. 소하연문화의 「통요유형」 설정
- IV. 4,800~4,100년 전 「압록강문화권」 3기와 4기
- V. 맺음말

## I. 머리말

압록강문화권은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미송리 유적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과 비교하여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한 범주로 묶은 것이다. 새롭게 조사된 소주산 유적의 특징을 근거로 미송문화 1기와 미송문화 2기로 구분하고, 전자는 요동남부의 소주산(小珠山)하층문화 및 요동북부의 후와(後窪)하층문화, 후자는 소주산중층문화 및 후와상층문화와 같은 단계로 파악했다. 그리고 미송문화 1기, 미송문화 2기와 같은 성격의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압록강문화권으로 정리했다<sup>1</sup>(표 4 참조).

‘문화권’은 ‘문화’의 복합체 개념<sup>2</sup>으로 국경별로 명명된 각 지역의 문화를 묶어서 전체 신석기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다. 이미 한국고고학계에서 환동해문화권,<sup>3</sup> 압록강문화권,<sup>4</sup> 두만강문화권<sup>5</sup> 등을 연구했다.

두만강문화권은 기존의 ‘동북한문화권’<sup>6</sup>으로 북한, 러시아연해주, 중국 목단강 유역을 포함해서 구체화되었다. 이를 압록강문화권과 대비하고, 국경을 배제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다.<sup>7</sup> 두만강문화권은 5,000~3,800년 전 서포

---

\* 투고: 2020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1 김재운, 2019, 「6700~5300년 전 『압록강문화권』의 서쪽범위에 대한 검토」, 『嶺南考古學』 第85號, 89~118쪽.

2 김재운, 2017,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서경출판사, 255쪽.

3 강인욱, 2007, 「청동기시대 연해주와 한국의 문화교류」, 『환동해지역선사시대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제35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회.

4 김재운, 2019, 앞의 글, 89~118쪽.

5 김재운, 2012, 「신석기 후기 동북한문화권의 시간과 공간범위」, 『韓國上古史學報』 第77號, 5~35쪽; 김재운, 2017, 앞의 책, 255쪽; 김재운, 2019, 앞의 글, 89~118쪽.

6 김재운, 2012, 위의 글, 5~35쪽; 김재운, 2017, 앞의 책, 255쪽.

항 유적의 2~4기 서포항상층문화<sup>8</sup>와 러시아 자이사노프카(Зайсановка, Zaisanovka)문화 및 중국 앵가령(鶯歌嶺)하층문화를 비교한 것이다.<sup>9</sup>

그런데 이 시점의 압록강문화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해서<sup>10</sup> 미송리 유적 이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해당되는 유적은 쌍학리와 신암리 등의 유적이 있으며,<sup>11</sup> 이중구연세퇴문[細堆文]토기와 뇌문토기가 부각되었다.<sup>12</sup> 압록강 유역과 청천강 유역, 요동북부와 남부, 하요하 유역까지 분포해서 두 토기를 매개로 압록강문화권을 검토할 수 있다.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토기의 구연부는 이중으로 동체부에 세로로 점토피를 부착하는 토기를 일컫는데, 요하 유역보다 북서쪽에 위치한 통요(通遼)시 부근(그림 1 참조)의 남보력고토(南寶力皋吐)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이 유적에서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세퇴문토기 외에도 소하연문화 석봉산 유형의 요소, 시베리아의 세로보문화와 글라스코보문화<sup>13</sup>도 확인되기 때문에 두 토기를 포함한 전체적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찰한 후에 통요 지역과 압록강 유역~하요하 유역의 자료를 비교해서 압록강문화권을 추출하고자 한다.

7 김재운, 2019, 앞의 글, 89~118쪽.

8 김재운, 2009, 「서포항 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한국고고학보』 제62호, 4~45쪽.

9 김재운, 2012, 앞의 글, 5~35쪽; 김재운, 2017, 앞의 책, 255쪽.

10 김재운, 2019, 위의 글, 89~118쪽.

11 김재운, 2017, 「신암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유역의 신석기유적 편년」, 『북한지역 신석기문화의 연구』, 2017년 정기학술대회발표자료집, 19~37쪽.

12 김재운, 2013, 「평저토기문화권의 신석기후기 이중구연토기 지역성과 병행관계」, 『韓國考古學報』 제88호, 4~41쪽; 임상택, 2018, 「토기 양식의 성립과 변화-동북아 평저토기 서부지역 이중구연 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4~47쪽; 천선행, 2019, 「청동기시대 초기문화 성립과 지역 간 관계변화」,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집』, 51~60쪽.

13 김재운, 2018a,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제99호, 5~40쪽.

## II. 연구성과 및 문제제기

북한에서는 압록강 유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근거로 ‘미송문화’가 설정되었다. 미송문화는 4기로 구분되는데, 미송리 유적은 ‘미송문화 1기’에만 해당되며, ‘미송문화 2기’에는 요동남부의 광가촌 1기층, 오가촌, 소주산 유적 2기층 및 제2 송화강 유역의 문화가 포함되었다.<sup>14</sup>

그런데 최근 소주산 유적을 다시 발굴한 결과,<sup>15</sup> 그동안 소주산하층문화의 특징으로 알려진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고 단사선이 시문된 토기는 소주산중층문화에 속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는 요동북부의 후와상층문화에서도 확인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미송리 유적도 이에 따라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미송문화 1기는 소주산하층문화의 연대와 상응해서 6,700~6,300년 전, 미송문화 2기는 소주산중층문화 및 후와상층문화의 토기와 성격이 유사해서 5,500~5,300년 전에 해당되며, 이 지역을 압록강문화권으로 설정했다.<sup>16</sup>

서국태의 ‘미송문화’는 압록강 유적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의 문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필자와 방향성은 유사하지만,<sup>17</sup> 현재의 자료와는 맞지 않는다. 압록강문화권 1기와 2기에는 제2 송화강 유역과 하요하 유역의 문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사구기 토기와 같은 기형은 한반도에서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서국태의 미송문화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압록강문화권으로 설정했다.<sup>18</sup>

그렇다면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서국태, 1999, 『조선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 사회과학출판사, 176쪽.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9, 「遼寧長海縣小珠山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第5期, 16~25쪽.

16 김재운, 2019, 앞의 글, 89~118쪽.

17 김재운, 2019, 위의 글, 89~118쪽.

18 김재운, 2019, 위의 글, 89~118쪽.

이미 서국태는 ‘미송문화 3기’에 뇌문토기와 함께 후와유적의 2층에서 출토 되는 사선삼각형무늬, 평행선띠무늬 등을 근거로, 비슷한 유물이 출토되는 압록강 유역의 용연리, 도봉리, 쌍학리 유적을 포함시켰다. ‘미송문화 4기’는 무문토기를 지표로 하고, 압록강 유역의 신암리 유적 2기층과 소주산 2기층, 쌍타자 유적 1기 등이다.<sup>19</sup>

그러나 ‘미송문화 3기’에 포함된 뇌문토기는 현재의 자료로는 편보문화와 소주산상층문화 단계의 자료이지만, 후와 유적 2층은 소주산중층문화에 해당되며, 앞선 압록강문화권 2기에 포함되었다.<sup>20</sup> 그래서 뇌문토기는 소주산중층문화의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뇌문토기가 출토된 용연리 유적에는 경부에 돌대가 붙은 호형토기도 출토되어 신암리 1지점과 같은 단계로 도봉리, 쌍학리 유적과는 다르다<sup>21</sup>(표 3 참조). 또한 ‘미송문화 4기’에는 현재의 자료로는 소주산중층문화의 유적에 속하는 소주산 유적의 2기<sup>22</sup>와 쌍타자하층문화에 해당하는 쌍타자 유적의 1기가 같이 분류되었다.

따라서 서국태의 ‘미송문화 3기’와 ‘미송문화 4기’는 현재의 자료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은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쌍학리 유적에는 뇌문토기와 함께 이중구연세퇴문토기가 확인되는데, 압록강 유역뿐만 아니라 요동북부, 하요하 유역과 청천강 유역까지 출토된다.<sup>23</sup> 그래서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은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의 분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요서지역의 북쪽인 과이필(科爾泌) 초원의 통요(通遼)에 위치한 소하연문화의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이중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가 출토되었다.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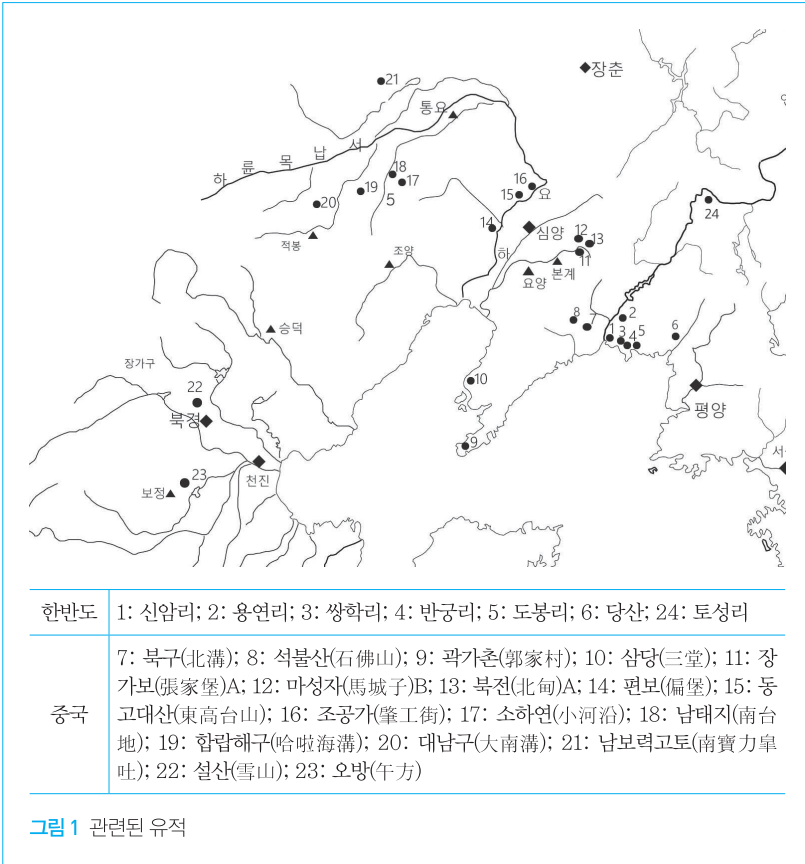
19 서국태, 1999, 앞의 책, 28~33쪽.

20 김재운, 2019, 앞의 글, 89~118쪽

21 김재운, 2017, 앞의 글, 19~37쪽.

2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850쪽.

23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자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압록강 유역 및 하요하 유역의 토기와 비교한 바 있다.<sup>24</sup> 그러나 이 유적에서는 이중구연세퇴문토기도 출토되지만 구체화되지 못했고 뇌문토기의 편년과 기원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졌다.<sup>25</sup> 요서지역 신석기

24 김재운, 2015, 「평저토기문화권 신석기후기 서부지역의 뇌문토기 고찰」, 『韓國上古史學報』第89號, 5~24쪽.

25 김재운, 2015, 위의 글, 5~24쪽.

문화에서는 과이펄 초원지역과 요하강 유역의 문화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압록강 유역부터 남보령고토 유적까지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를 통해서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한 연구<sup>26</sup>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출토된 두 토기뿐만 아니라 전체 양상을 고찰하여 통요지역과 압록강 유역~청천강 유역의 자료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 글과는 연구방향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남보령고토 유적이 속한 소하연문화에는 석봉산(石棚山) 유형 및 설산(雪山) 1기유형 및 오방(午方)유형 등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있는데,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의 존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또한 소하연문화에서 남보령고토 유적의 성격을 규정한 후, 압록강 유역과 청천강 유역부터 하요하 유역까지 출토되는 토기 양상과 비교하여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 Ⅲ. 소하연문화의 「통요유형」 설정

#### 1. 소하연문화의 지역유형

소하연문화는 대능하(大凌河)와 서남목륜하(西拉木倫河) 부근 및 연산이남까지 확인되어, 석봉산유형, 설산 1기유형, 오방유형으로 구분된다.<sup>27</sup> 북쪽 내몽골에

26 임상택, 2018, 앞의 글, 4~47쪽.

27 韓嘉谷, 1997, 「環渤海古文化譜系和區系類型」, 『中國古學第9次年論文集』, 北京文物出版社, 20~34쪽; 韓建業, 2003, 「論雪山1期文化」, 『華夏考古』 4期, 45~54쪽; 索秀芬·李兵, 2007, 「小河沿文化類型」, 『邊疆考古研究』 第6集, 吉林大學校邊疆古研究所, 88~102쪽.

위치한 과이펄 초원에는 남보령고토유형(그림 3-44~72)이 설정되었다.<sup>28</sup>

석봉산 유형은 적봉시 부근의 대남구 유적,<sup>29</sup> 합랍해구(哈啦海溝)<sup>30</sup> 유적 등이 중심이다. 최초로 소하연문화로 규정된 석호산(石虎山) 유적과 남태지(南台地) 유적<sup>31</sup>도 이 유형에 속한다.<sup>32</sup> 석호산 유적에서 확인된 침선이 시문된 발형 토기, 구연부가 두 개인 호형토기, ‘回’형 문양이 시문된 토기와 석환 및 남태지 유적에서 확인된 존(尊)형토기, 채색된 고배형토기와 기대형토기를 이 유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자세한 점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연산산맥 이남에서 소하연문화 특징이 보이는 유적을 중심으로 설산 1기유형과 오방유형이 설정되었다.<sup>33</sup> 그런데 소하연문화의 지역범위를 연산산맥 이남까지 확대한다는 견해는 같지만, 소하연문화 자체를 북경 중심의 설산 1기문화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sup>34</sup>도 있다. 그러나 최초의 소하연문화는 서남목련하 주변의 유적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남태지 유적 이후에 발굴된 합랍해구 유적은 소하연문화 중에서도 이른 유적(표 2 참조)이기 때문에 소하연문화의 중심은 서남목련하 주변이라는 견해<sup>35</sup>가 타당하다.

설산 1기유형은 강가량(姜家梁) 유적<sup>36</sup>의 일부 무덤(그림 2-1, 2)과 설산 유

28 索秀芬·李兵, 2014,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序列和格局」, 『考古學報』第3期, 293~326쪽.

29 대남구 유적은 1지점과 2지점의 명칭이 각각 석봉산 유적과 노요와량(老鶴窩梁) 유적으로 불린다. 석봉산유형이라는 명칭은 1지점의 유적명을 따른 것이다.

30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0, 「內蒙古赤峯市哈啦海溝新石器時代墓地發掘簡報」, 『考古』第10期, 19~35쪽.

31 遼寧省博物館·昭烏達盟文物工作站·敖漢旗文化館,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 『文物』12期, 1~22쪽.

32 索秀芬·李兵, 2007, 앞의 글, 88~102쪽.

33 韓嘉谷, 1997, 앞의 글, 20~34쪽.

34 韓建業, 2003, 앞의 글, 45~54쪽.

35 索秀芬·李兵, 2007, 앞의 글, 88~102쪽.

36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河北陽原縣姜家梁新石器時代誘址的發掘」, 『考古』第2期, 13~27쪽.

적의 1층, 진강영자(鎭江營子)의 3층 등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강가량 유적의 무덤은 토광 내부를 단을 파거나 단순한 수혈식토광묘(그림 2-2)와 바닥을 둥글 처럼 파서 들어간 토광반동실묘(土壙半洞室墓)(그림 2-1)가 있다. 시신은 무릎 아래를 구부린 굴신장으로 처리되었다. 무덤의 형식 가운데 단순한 수혈식토광 묘와 토광반동실묘 및 굴신장의 특징은 석봉산유형(그림 3-1~4)에서도 확인된다. 토기는 침선문이 시문된 발형토기(그림 2-3), 구연부가 내만한 잔발(그림 2-4), 고배형토기(그림 2-5, 6), 분형토기, 파수가 달린 호형토기(그림 2-10), 채색토기(그림 2-5, 13) 등은 석봉산유형과 공통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 외에 표주박형토기(그림 2-7) 등도 확인된다. 석기 중에는 C자형 동물형 석기(그림 2-12)가 출토되었는데, 소하연문화 이전의 홍산문화에서 확인되는 동물형옥기와 비슷해서 그 문화의 요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37</sup>

오방유형은 설산 1기유형보다 남쪽의 하남 중부지역에 위치했는데(그림 1), 지역유형으로 설정된 것은 석봉산 유적과 비슷한 유물이 출토되기 때문이다.<sup>38</sup> 오방 유적<sup>39</sup>의 2층에서 출토된 잔발형토기(그림 2-17, 21)는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직립하거나 약간 내만하는데, 집선 삼각형 문양은 석봉산 유적의 출토품(그림 3-15)과 유사하다. 이 외에 오방 유적의 3층에서는 채색호형토기와 분형토기(그림 2-20, 21), 잔발형토기, 발형토기가 확인되지만, 설산 1기유형(그림 2-8, 9)과 석봉산유형(그림 3-13, 14) 등에서 출토되는 절복분(折伏盆)이 없다. 이 유형의 무덤 유적은 보고된 바가 없는데 소하연문화의 유적이 대부분 무덤 유적임을 감안한다면, 기타 지역의 양상과는 다르다.

남보령고토 유적은 석봉산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중구연세퇴문토기(그림 4-37~42)와 뇌문토기(그림 4-43~46)가 출토되면서, 서남목련하보다 북

37 文啓明 1987, 「午方新石器時代遺存的發現和認識」, 『考古學集刊』, 第5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85~292쪽.

38 文啓明 1987, 위의 글, 285~292쪽; 韓嘉谷, 1997, 앞의 글, 20~34쪽.

39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河北容城縣午方新石器時代遺址試掘」, 『考古學集刊』 第5集.



그림 2 소하연문화의 설산유형(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韓建業, 2003 재편집)과 오방유형(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재편집)

쪽 과이필 초원에 위치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석봉산유형과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발형토기(그림 3-51, 53), 존형토기(그림 3-54), 호형토기 등은 이 유형에도 존재한다.<sup>40</sup> 그러나 남보려고토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특징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소하연문화의 지역유형을 살핀 결과 남보려고토 유적에서 확인되는 뇌문토기와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다른 지역유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소하연문화는 4기로 구분되고 5,300년 전부터 4,400년 전까지이다. 1기는 오방 유적의 3층에서 출토된 삼각형과 격자문이 그려진 채색토기(그림 2-17)가

40 索秀芬·李兵, 2014, 앞의 글, 293~326쪽.

〈표 1〉 소하연문화의 지역유형과 그 상대편년

索秀芬·李兵, 2006 <sup>41</sup>		索秀芬·李兵, 2007 <sup>42</sup>		
소하연문화		소하연문화		
		석봉산유형	설산 1기유형	오방유형
1기	5,300~5,000년 전	1기		
2기	5,000~4,800년 전	2기	1~4기	1, 2기
3기	4,800~4,600년 전	3기		
4기	4,600~4,400년 전	4기		

홍산문화의 만기에서 출토된 토기 특징과 같다고 보아서 5,250~5,000년 전으로 판단했다. 2기는 석봉산 유적의 제2지점인 노요량산 무덤M4호에서 출토된 절북분토기가 묘자구(廟子溝) 2기문화의 벽곡고성동관(壁壘古城東關) 유적<sup>43</sup>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유사해서 이 문화의 연대와 연동된다. 뿐만 아니라 소하연문화의 3기, 4기도 묘자구 2기문화와 같이 변화한다고 보았다<sup>44</sup>(표 1).

이 연대는 소하연문화의 각 유형에도 적용되었는데, 설산 1기유형은 4단계, 오방유형은 층위에 따라서 2단계로 구분되었다. 각각 석봉산 2~3단계,<sup>45</sup> 석봉산 3단계에 해당한다<sup>46</sup>(표 1).

다만 남보려고토유적의 연대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고 소하연문화가 기원전 3,600~2,000년까지 존재한 것으로 설명되었다.<sup>47</sup> 남보려고토유적의 측정

41 索秀芬·李兵, 2006, 「小河沿文化分期初探」, 『考古與文物』第1期, 32~43쪽.

42 索秀芬·李兵, 2007, 앞의 글, 88~102쪽.

43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3, 『廟子溝與大壩溝~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44 索秀芬·李兵, 2006, 앞의 글, 32~43쪽.

45 석봉산 2~3단계에 설산 1기의 1~4유형이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병행관계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46 索秀芬·李兵, 2007, 「小河沿文化類型」, 『邊疆考古研究』第6集, 吉林大學校邊疆古研究所, 88~102쪽.

연대(표 2)는 석봉산유형의 가장 마지막 시기보다 늦으며, 남보령고토 유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 소하연문화의 절대연대

유형	유적	위치	실험실 번호	시료	測定年代		보정연대	참고문헌
					半衰期 (5730年) <sub>1σ</sub>	半衰期 (5568年) <sub>1σ</sub>		
설산 1기 유형	설산	T225H11	WB82-58	목탄	4880±90	4740±90	BC3640~3374	
우방 유형	우방	T3②	ZK-1234	목탄	4435±105	4310±105	BC3040~278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1 <sup>48</sup>
석봉산 유형	석봉산	M76	WB82-08	나무껍질	4345±80	4220±80	BC2915~2667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0 <sup>49</sup>
		M35	ZK-0542	불탄뼈	3640±120	3540±120	BC2040~1740	
		M54	ZK-0740	인골	3785±100	3680±100	BC2200~1940	
	합랍 해구	M36:1	-	인골	4920±40	-	BC2500~2280	
		M36:2	-	-	4850±35	-	BC2460~2200	
남보령고토	AM119	AM119	-	인골	3700±35	-	BC2200~2010	鄭鈞夫 2012 <sup>50</sup>
		AM125	-	인골	3985±40	-	BC2620~2400	
		AM205	-	소탄	3405±35	-	BC1780~1610	
	토기 그을음	-	烟灰	3990±35	-	BC2620~2450		

47 이 연구는 소하연문화에 대해 집중되기보다는 연산남북지역의 여러 신석기문화에 대해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소하연문화를 집중분석한 논문과는 다른 관점이지만, 남보령고토유형에 대한 연대 개념은 포함되었다. 索秀芬·李兵, 2014,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序列和格局, 『考古學報』第3期, 293~326쪽.

4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1, 『中國考古學中碳十四年代數據集(1965—

## 2. 「통요유형」의 설정

통요의 남보령고토 유적에는 서남목륵하의 석봉산유형과 유사한 발형토기, 존형토기, 호형토기가 있다. 구연부 아래에 돌대가 부착되고 그 하단에 침선이 시문된 발형토기(그림 3-51)는 석봉산유형(그림 3-5~7)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양 지역의 출토품은 차이가 있다. 석봉산 유적의 존형토기(그림 3-9, 11~14, 23, 27)는 토기의 바닥에서부터 비스듬하게 토기의 동체부가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기형이다. 무문양(그림 3-12~14)부터 채색문양(그림 3-9, 11, 23, 27)까지 다양하며 개체수가 많다. 반면에 남보령고토 유적의 존형토기는 기형은 유사하지만 소형의 파수가 부착되고(그림 3-54), 채색되지 않는다.

석봉산 유적의 호형토기(그림 3-17~20)는 소하연문화의 설산 1기유형(그림 2-10)과 오방유형에서도 확인된다. 호형토기는 구연부가 외반된 장경호로 동체부가 둥글고 파수가 동최대경에 부착된 것이다. 시기에 따라서 동체부와 경부, 파수의 개수 등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 무문양이지만 채색되기도 한다. 그런데 남보령고토 유적의 호형토기(그림 3-49, 50, 55, 56)는 경부가 긴 장경호식으로 토기의 기고에 비해서는 짧다. 구연부가 직립한 토기에 뇌문(그림 3-49, 50)이 있는데 이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석봉산유형의 채색토기는 존형토기(그림 3-9, 11, 23, 27), 기대(그림 3-10) 외에도 잔발형토기(그림 3-15), 고배형토기(그림 3-16, 22) 등이 알려져 있다. 존형토기에는 저부를 제외하고 그 상부(그림 3-9, 11) 혹은 동체부만 채색되기도 한다(그림 3-23, 27). 잔발형토기(그림 3-15)는 동체부 상단에 삼각형, 반원

---

1991)』, 文物出版社.

49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0, 앞의 글, 19~35쪽.

50 鄭鈞夫 2012,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晚期遺存研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7쪽.

형과 세로선이 복합되어 그려져 있고, 고배형토기도 배신에만 삼각형과 세로로 채색되었다. 색깔은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채색토기는 호형토기(그림 3-56)에만 한정된다.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바닥이 둥근 원저(그림 3-57)인 토기가 확인되는데 소하연문화의 다른 유형에서는 찾을 수 없다. 시베리아의 세로보(Серово, Serovo)문화와 글라스코보(Глазково, Glazkovo)문화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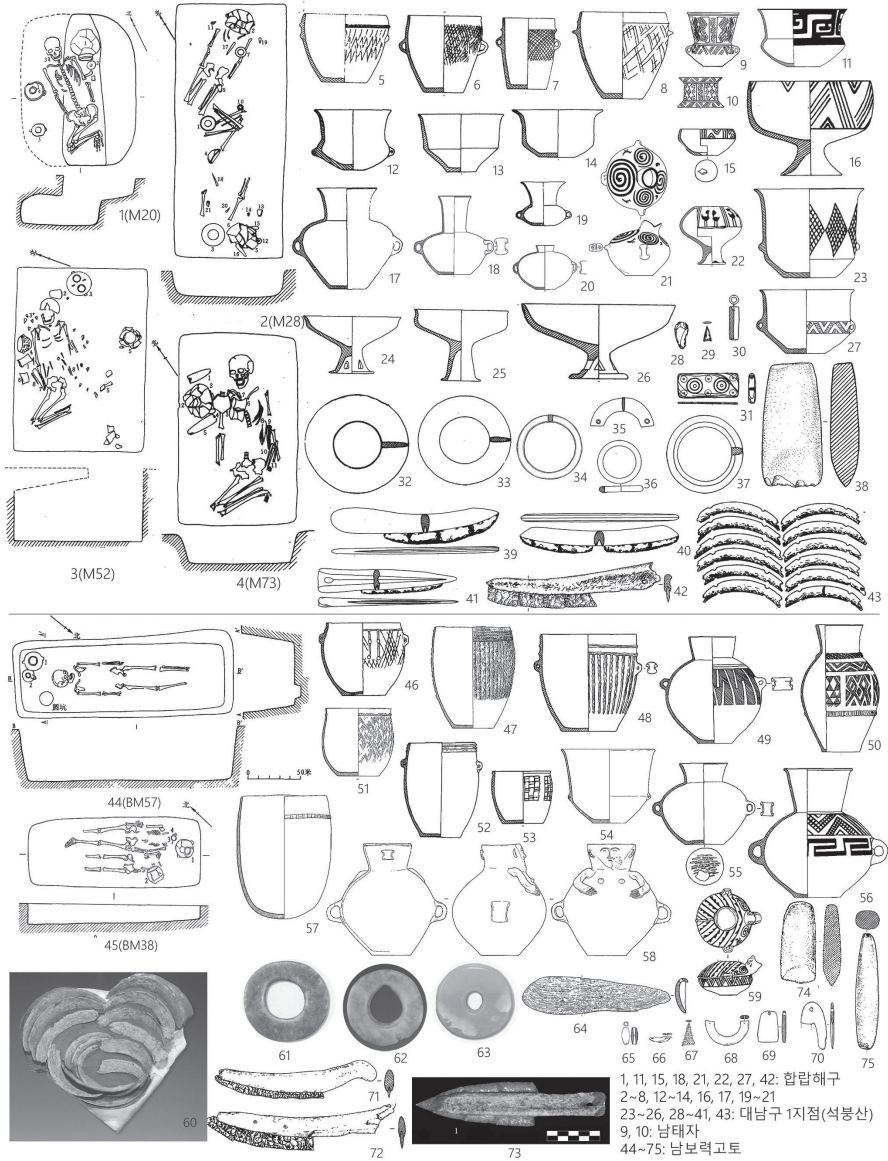
남보령고토 유적과 석봉산유형의 차이점은 장신구의 재질과 제작방법에서도 관찰된다. 벽(碧)과 팔찌 등이 석봉산 유적에서는 석제로 내환이 아주 깨끗하게 잘려 있지만(그림 3-32, 33), 남보령고토유형에서는 옥제로 내환(그림 3-61~63)이 율통불통하다.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확인된 옥벽의 제작방법은 바이칼 유역 글라스코보문화와 유사하다.<sup>52</sup>

또한 남보령고토 유적에서는 녹송석제 치레걸이 등이 다수 출토되지만, 석봉산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석부는 대체로 양인으로 단면이 타원형이고 신부의 길이 비가 1 : 2.5~1 : 3 정도이며, 양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남보령고토유형에서는 신부의 길이 비가 1 : 5이고(그림 3-75), 단면이 말각방형에 가까운 석부(그림 3-74)도 출토된다.

석봉산유형의 석봉산 유적 및 합랍해구 유적의 무덤은 토광묘(그림 3-2, 4)와 토광반동실묘(그림 3-1, 3)가 알려져 있다. 토광묘는 주로 굴신장으로 시신을 안치해서 토광묘의 장단비가 크지 않다. 석봉산 유적의 M28호(그림 3-2)는 2인장으로서 굴신장인 두 사람을 일렬로 배치했기 때문에 단인장에 비해 무덤 장단비가 길다. 토광반동실묘는 바닥에서 수평으로 파 들어간 무덤인데, 석봉산 유적(그림 3-3)과 합랍해구 유적(그림 3-1) 및 연산이남의 강가량 유적(그림 2-1)에서 확인되었다. 반면에 남보령고토 유적의 무덤은 단순한 토광묘(그림

51 김재윤, 2018a, 앞의 글, 5~40쪽.

52 김재윤, 2018a, 위의 글, 5~40쪽.



**그림 3** 소하연문화의 석봉산유형 및 통요유형의 비교(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0; 文物出版社, 2010;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외, 2008, 재편집)

3-44, 45)인데, 인골이 남아 있는 경우 양신직지가 많다. 머리가 없는 인골, 화장묘 등은 바이칼 유역의 세로보문화, 글라스코보문화에서 확인된다.<sup>53</sup>

따라서 남보려고토 유적의 무덤 및 출토유물은 석봉산유형에서 확인되는 요소와 다르다. 이 유적에서는 석봉산유형의 채색 존형토기와 기대, 고배형토기 등이 출토되지 않는다. 인물부착토기(그림 3-58), 원저형토기(그림 3-57), 발형의 세퇴문토기(그림 3-46~48), 호형의 뇌문토기(그림 3-49, 50)는 통요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 등은 하요하 유역의 편보문화의 요소이지만, 원저토기, 옥제품, 조합식석인도, 두부장신구, 무덤의 장법은 시베리아 세로보문화와 글라스코보문화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남보려고토 유적에서 확인되는 요소를 ‘통요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남보려고토유형<sup>54</sup>은 석봉산 유적의 특징과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편보문화 요소를 강조하면서 분리된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통요지역의 남보려고토 유적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문화의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신석기시대에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통요지역은 청동기시대 이후로 초원과 교류했던 정황이 많이 남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압록강 유역의 토기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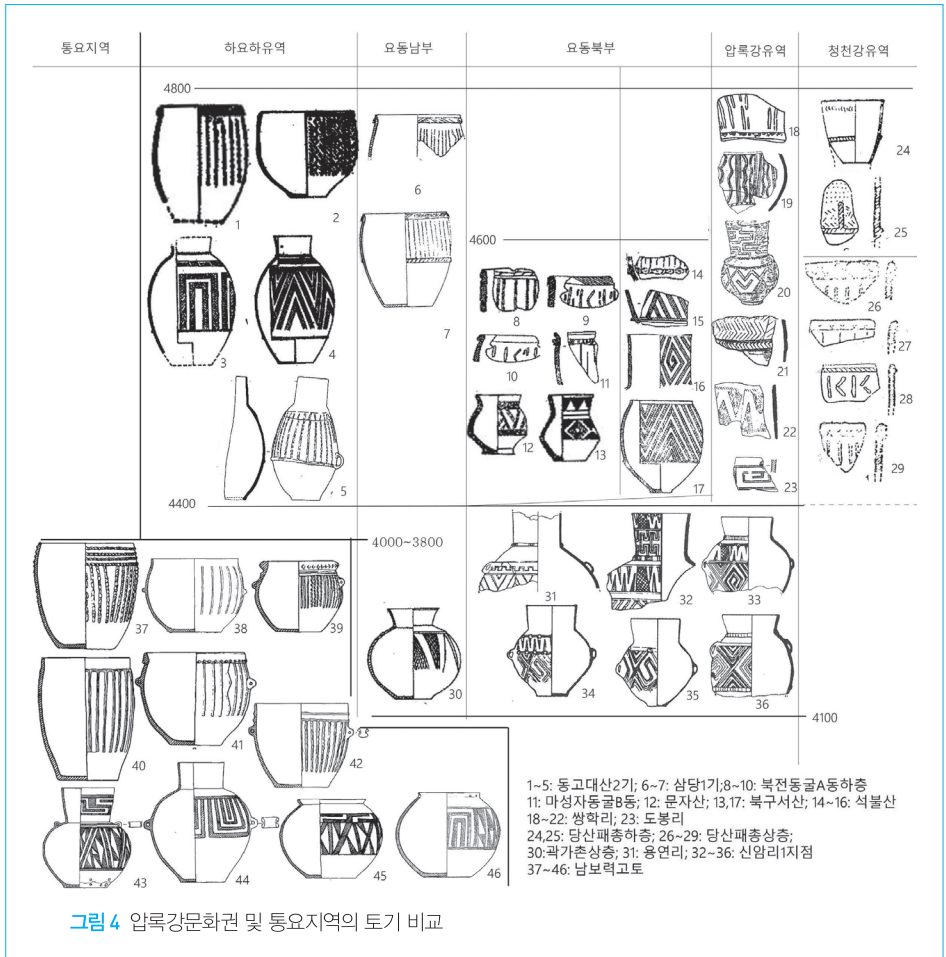
## IV. 4,800~4,100년 전 「압록강문화권」 3기와 4기

### 1. 압록강 유역~하요하 유역과 통요유형의 토기 비교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압록강 및 청천강~하요하 유역까지 분포하

53 김재운, 2018a, 위의 글, 5~40쪽.

54 索秀芬·李兵, 2014,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序列和格局, 『考古學報』第3期, 293~326쪽.



며, 앞서 고찰한 통요유형에도 존재하는데, 양 지역의 토기는 차이가 있다.<sup>55</sup>

압록강 유역 쌍학리 유적(그림 4-18~23)에서는 세로로 점토띠가 부착된 토기와 뇌문토기가 출토된다. 또한 경부가 직립한 장경호식 뇌문토기가 출토되는데, 경부 및 동체부 전체가 문양이 시문된 토기이다. 신암리 1지점 및 용연리는

55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같은 단계 유적으로<sup>56</sup> 호형의 뇌문토기가 확인된다(그림 4-31~36). 경부까지 시문되며, 동체부에 삼각문, ‘ㄷ’ 문양이 복합되고, 토기의 경우에는 가로 방향의 점토띠, 그 아래에는 단추문양점토띠가 부착되는 등 인접한 지역보다 복잡한 문양을 넣었다.

청천강 유역 당산패총의 하층에서는 동체부에 세로방향과 가로방향의 점토띠가 부착된 토기가 출토된다(그림 4-25). 이중구연으로 동체부에 가로방향의 점토띠가 부착된 토기가 보고되었다(그림 4-24).<sup>57</sup> 상층에서는 구연부에 점토띠를 붙이고 그 상단에 침선을 긋고 그 아래에 세로로 점토띠가 부착된 토기가 확인된다(그림 4-26~29).

하요하 유역의 토기는 구연단은 이중으로 처리되고, 그 아래로 세로방향의 점토띠가 부착된다(그림 4-1, 2). 대부분 발형토기이지만, 조공가(肇工街) 유적에서는 같은 문양인데 호형토기(그림 4-5)로 확인된다. 뇌문토기는 호형으로 동체부에만 삼각문과 ‘ㄷ’자형으로 기하학적인 문양(그림 4-3, 4)이 시문되었다.<sup>58</sup>

요동남부의 삼당(三堂) 유적에서는 구연부가 내만하는 발형토기로 구연부와 동최대경의 위치에 가로방향의 점토띠가 붙고, 그 사이를 세로방향의 점토띠를 붙인 토기(그림 4-6, 7)가 출토되었다. 구연단 점토띠 상단과 동체부 세로 방향의 점토띠 사이에 문양이 시문되는데,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단치구와 다치구가 사용되었다.<sup>59</sup>

요동북부의 태자하(太子河) 유역의 마성자(馬城子)B 동굴 하층, 북전(北甸)A, 장가보(張家堡)A 등의 동굴 하층에서는 후와상층문화보다 늦은 시기의 토기(그

56 김재운, 2018b, 「신석기시대 말기 남해안 고배형토기의 편년과 재지성 검토」, 『韓國新石器研究』 第32號, 47~74쪽.

57 이 토기는 세로방향의 점토띠는 없지만, 다른 토기편(그림 4-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58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59 김재운, 2013, 위의 글, 4~41쪽.

림 4-8~13)가 출토된다.<sup>60</sup> 김재운(2013)<sup>61</sup>에서는 이 지역의 토기를 모두 편보 문화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sup>62</sup>(김재운, 2013: 34 표 6)으로 보았으나, 후와상층문화의 토기와 같다는 점<sup>63</sup>에 동의하고, 이를 분리했다.<sup>64</sup> 편보문화와 같은 토기가 출토되는 시점은 북전A, 장가보A, 마성자B 동굴 하층의 2기이다(표 3).

요동북부의 산지<sup>65</sup> 석불산신석기 1기에서도 이중구연세퇴문은 호형토기(그림 4-5)에 부착되었다. 뇌문토기는 경부가 높고 직립하는 기형과 경부가 짧고 구연부에서 바로 벌어지는 기형이 있다.

종합하면 압록강 유역~하요하 유역까지 출토되는 세퇴문토기는 발형토기 위주로 구연단에 점토띠를 덧대고, 구연부와 동체부 사이를 세로방향으로 용기대를 부착하며, 그 사이에 선을 그었다. 일부 유적에서는 호형토기에서도 관찰된다(그림 4-5, 14). 함께 출토되는 뇌문토기는 문양의 범위, 문양형태뿐만 아니라 문양이 그려진 호형의 기형에도 차이가 있다. 동체부와 경부 높이와 형태, 구연부 외반 정도 등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 신암리 1지점의 토기는 여러 형태의 뇌문과 단추 모양 원형점토판(그림 4-33~35)이 부착되어 다른 지역과 다르다.<sup>66</sup>

반면에 통요유형의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구연부가 약간 내만하며, 구연단에서 약간 떨어져서 한 줄(그림 4-40) 혹은 여러 줄의 점토띠(그림 4-37)가 부착되었다. 동체부의 점토띠는 대부분 세로로 직선(그림 4-37~40, 41)이지만 드물

60 김재운, 2019, 위의 글, 89~118쪽

61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62 김재운, 2013, 위의 글, 108쪽, 표 9.

63 趙賓福·杜戰偉, 2011, 「太子河上游三種新石器文化的辨識」,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0.

64 김재운, 2019, 앞의 글, 108쪽.

65 필자는 석불산 유적은 같은 요동북부라고 해도 압록강 유역과 인접하고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한다(표 3).

66 김재운, 2015, 앞의 글, 5~24쪽.

게 곡선(그림 4-41)도 있다. 남보령고토 유적 호형의 뇌문토기는 ‘ㄷ’자형과 삼각문이 복합되었고, 파수 모양은 반원통형이며, 동체부가 구형에 가깝게 둥글다(그림 4-43~46).

따라서 압록강~하요하 유역과 통유 유형의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구연부와 동체부 표현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부분 이중구연토기에 세로로 점토띠가 부착된다. 후자는 구연부에 여러 줄의 점토띠가 부착되고, 동체부에 가로방향의 점토띠가 없고 세로방향의 점토띠만 있으며, 파수가 있는 점 등이 차이가 있다. 또한 통유 유형의 뇌문토기는 파수가 부착되고, 동체부가 구형에 가까운 점 등도 다르다(그림 4).

## 2. 각 지역의 토기편년

압록강 및 청천강~하요하 유역과 통유 유형은 시간상 차이가 있다(그림 3, 표 3). 편보문화에 해당하는 유적은 동고대산 유적의 연대는 5,000년 전 정도로 파악된다.<sup>67</sup> 삼당유적과도 비슷한 시기로 5,000~4,500년 전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며<sup>68</sup> 필자도 이에 따랐다.<sup>69</sup>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측정된 소주산상층문화의 절대연대는 4,800년 전부터 시작되며,<sup>70</sup> 편보문화 상한연대도 이와 상응한다. 이 문화의 하한은 석불산 유적과 비교해볼 수 있다. 석불산신석기 1기의 절대연대는 북구서산의  $4390 \pm 150$ B.P.와  $4680 \pm 100$ B.P를 참고로 한다.<sup>71</sup> 그래서 편보문화의 하한은

67 瀋陽市文物管理辦公實, 1986, 「新民東高台山第2次發掘」, 『遼海文物學刊』, 創刊號.

68 귀다순·장상더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436쪽.

69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70 張雪蓮·金英熙·賈笑冰, 2016, 「遼寧長海小珠山遺址考古學文化的年代序列」, 『考古』第5期, 110~120쪽.

71 귀다순·장상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436쪽.

4,400년 전 정도로 볼 수 있다<sup>72</sup>(표 3).

그런데 삼당 유적의 토기는 산동의 북신(北辛)문화에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고,<sup>73</sup> 필자도 김재운(2013)에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삼당 유적이 편보문화보다 이르다고 보았다.<sup>74</sup> 하지만 삼당 유적에서는 토기 동체부에 세로방향의 띠를 붙이는 것 외에는 북신문화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하요하 유역의 편보문화 동고대산(東高台山) 유적에서는 압인지(之)자문이 출토되기 때문에<sup>75</sup> 삼당 유적의 토기가 편보문화보다 반드시 이르다고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삼당 유적은 소주산상층문화의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편보문화와 같은 시기로 판단코자 한다(그림 4, 표 3).

한편, 임상택<sup>76</sup>은 하요하 유역의 범위에 태자하 유역을 포함했는데, 하요하 유역에서 이보다 앞선 단계인 신락하층문화와 같은 성격을 태자하 유역에서 찾을 수 없어서, 두 지역을 같은 문화공간으로 보기는 힘들다. 태자하 유역의 북전A, 장가보A, 마성자B 동굴 등은 분리하고자 한다(표 3).

압록강 유역의 쌍학리<sup>77</sup> 및 반궁리, 도봉리 유적의 유물은 요동북부의 석불산 신석기 1기, 태자하 유역의 북전A, 장가보A, 마성자B 동굴 2기 유적의 출토품보다 삼당 유적 및 편보문화의 토기 양상(그림 3)과 유사하다.<sup>78</sup> 삼당 1기와 지

72 김재운, 2013, 앞의 글, 31쪽, 표 6.

73 朱永剛, 1993, 「遼東地區新石器時代含條形堆文陶器有存研究」, 『青果集』 146~153쪽; 권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437쪽.

74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75 김재운, 2013, 위의 글, 11쪽, 도면 2.

76 임상택, 2018, 앞의 글, 4~47쪽.

77 압록강 유역의 쌍학리 유적을 당산패총보다 늦은 단계로 보았는데, 제시된 도면의 쌍학리 유물 중 임상택(2018)의 도면 3-17은 이중구연세퇴문토기가 아닌 이중구연토기 및 동체부에 침선이 시문된 토기이고, 도면 3-18은 동체부에 세로로 문양이 시문된 이중구연세퇴문토기(그림 4-19)로 보여 늦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쌍학리 유적에서는 뇌문토기도 출토되기 때문에(그림 4-20) 당산패총보다 늦다고 볼 수 없다.

78 김재운, 2018b, 앞의 글, 47~74쪽.

리적으로도 멀지 않기 때문에(그림 5)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표 3).<sup>79</sup>

쌍학리 유적 이후는 신암리 1지점과 용연리 유적이 같은 단계이다.<sup>80</sup> 편보문화 및 석불산유형 1기에 해당하는 북구서산의 연대를 참고할 때 4,400년 전후에 끝나며, 이는 신암리 1지점과 연동되기 때문이다<sup>81</sup>(표 3). 신암리 1지점의 하한은 뒤따르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신암리 3지점 1문화층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 유적은 소주산상층 유적인 광가촌상층의 채색토기로 보아서 소주산상층문화와 쌍타자문화의 1기의 중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주산상층문화가 4,100년 전경에 끝나고 쌍타자 1기가 대체적으로 4,000~3,800년 전<sup>82</sup>에 해당되므로 신암리 3지점 1문화층은 4100~4,000년 전에 시작된다<sup>83</sup>(표 3).

청천강 유역 당산패총의 하층과 상층은 하요하 유역과 토기 특징은 비슷하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고대산 2기보다 늦다고 보았다.<sup>84</sup> 그러나 압록강 유역 쌍학리 유적의 유물이 하요하 유역과 비슷한 시점이라면, 당산패총 출토품도 같은 기간<sup>85</sup>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삼당 유적의 세퇴문토기의 기원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산패총 하층과 상층 간의 시간 차이는 크지 않다. 상층에서는 뇌문토기가 확인된 바 없고, 침저가 있는 하층과는 달리 토기의 바닥이 모두 평저이기 때문이다.<sup>86</sup> 또한 당산패총 하층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설명한 유물 외에도 쌍학리, 도봉리, 반궁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어 이들 유

79 김재윤(2019)에는 석불산 신석기 1기와 쌍학리 유적의 연대가 같은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표의 단위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김재윤, 2019, 앞의 글.

80 김재윤, 2017, 앞의 글, 28쪽.

81 김재윤, 2018b, 앞의 글, 47~74쪽.

8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앞의 책.

83 김재윤, 2018b, 앞의 글, 55쪽.

84 김재윤, 2013, 앞의 글, 32쪽.

85 임상택, 2018, 앞의 글, 4~47쪽.

86 김재윤, 2013, 앞의 글, 18쪽, 도면 7.

〈표 3〉 각 지역의 문화편년

		압록강문화권							
지역명	요서지역		하요하	요동남부	요동북부		압록강	청천강	
자연환경	서남 목류하	과이필 조원	요하하류	해안가	태자하	산지			
B.P.	본고		김재운, 2013	김재운, 2019		김재운, 2018b			
5000	소하연문화 석봉산유형		동고대산 (2기)	삼당 1기 소주산상층문화 곽가촌 (상층)	북전A, 장가보A, 마성자B 동굴 하층 (2기)	4600 석불산 신석기 1	쌍학리 도봉리, 반궁리	당산패총 하층	
			편보문화			조공개(1기)		4400 석불산 신석기 2	당산패총 상층
			?			?		4100 신암리 1지점, 용연리	?
			?			?		신암리 3지점 1문화층	?
4000	하가점하층문화	통요 유형	고대산문화	쌍타자문화 (1기)	마성자문화	석불산 청동기	신암리 3지점 2문화층	3,800	
3800									

적과 동 시기일 수 있다(표 3).

남보려고토 유적에서는 4개의 절대연대가 알려져 있으며(표 2), 가장 늦은 연대를 제외하더라도 4,000~3,700년 전이다.<sup>87</sup> 요서지역, 하요하 유역, 요동 북부와 남부 등지에서는 3,800년 전에 각 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시작되어서,<sup>88</sup> 이 시점은 통요유형도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요유형은 요동지역의

87 김재운, 2018a, 앞의 글, 5~40쪽.

88 김재운, 2018b, 앞의 글, 47~74쪽.

소주산상층문화 연대 4,800~4,100년 전보다 늦는데,<sup>89</sup> 하요하 유역의 토기가 통요지역까지 퍼지면서 생긴 시간 차이로 볼 수 있다. 압록강 유역에서 가장 늦은 신석기 유적인 신암리 1지점보다 더 늦게까지 출토된다(표 3).

따라서 통요유형의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압록강 및 청천강 유역~하요하 유역에서 출토되는 토기 형식이 차이가 있고, 절대연대도 늦다(표 2).

### 3. 「압록강문화권」 3기와 4기

필자는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미송리 유적을 중심으로 압록강문화권을 설정한 바 있다. 미송문화 2기 이후에는 쌍학리 유적이 있으며,<sup>90</sup> 이 유적에서는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가 주요한데, 압록강 유역과 청천강 유역부터 요동 북부, 요동남부, 하요하 유역 및 요서지역의 통요지역까지 확인된다. 그렇다면 미송리 유적 이후에는 이 토기를 중심으로 압록강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통요유형에서 출토되는 이중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압록강문화권과는 연대, 토기 형식이 차이가 있다. 통요유형은 소하연문화의 석봉산유형의 요소와 시베리아문화 요소 등 다원적인 문화요소가 확인되어, 현재의 자료로는 압록강문화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편보문화의 토기로 먼저 알려졌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원이 뚜렷하지 못하며, 압록강 유역의 쌍학리 유적, 당산패총 하층 자료가 하요하 유역보다 형식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늦다고 볼 수 없다. 압록강문화권 2기인 5,500~5,300년 전 이후와 쌍학리 유적이 시작되는 4,800년 전 사이에 현재에 알려지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어서(표 3), 앞으로 이보다 빠른 유적이 확인된다면 그 양상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송리 유적으로 압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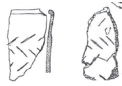


89 김재운, 2018b, 위의 글, 47~74쪽.

90 김재운, 2017, 위의 글, 29~30쪽.

강문화권을 설정<sup>91</sup>했기 때문에 압록강 유역의 입장에서 살피고자 한다.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은 크게 두 단계로,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가 모두 존재하는 시기와 뇌문토기만 확인되는 시기(그림 4, 표 4)로 구분된다. 전자는 편보문화 및 소주산상층문화가 시작되는 4,800~4,400년 전 전쯤으로 각 지역에서 두 토기가 모두 존재하며, 압록강문화권 3기로 볼 수 있다. 후자는 4,400~4,100년 전쯤으로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보이지 않고, 뇌문토기만 압록강 유역과 요동남부에서 확인되며, 압록강문화권 4기로 볼 수 있다(그림 4). 앞선 시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요하 유역에서는 청동기 시대 고대산문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요동북부에서도 석불산 신석기 2기 이후는 석불산 청동기 1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알려진 유적이 없기 때문이다(표 3).

〈표 4〉 압록강문화권 1~4기의 분포범위와 토기

		연대	범위					근거	
			청천강	압록강	요동 북부	요동 남부	하요하		
압 록 강 문 화 권	1	김재윤 2019	6,700~ 6,300년 전	-	●	●	●	-	 압인지자문 토기
	2	2019	5,500~ 5,300년 전	-	●	●	△	-	 단산선문토 기, 구연부 외반토기
	3	본고	4,800~ 4,400년 전	●	●	●	●	●	 이중구연세 퇴문토기, 뇌문토기
	4	본고	4,400~ 4,100년 전	-	●	●	-	-	 뇌문토기

●: 오른쪽의 토기가 있는 지역, △: 오른쪽의 토기가 있지만 모호한 지역

91 김재윤, 2017, 앞의 책.

종합하면 압록강문화권은 6,700~6,300년 전에 형성되는데, 압록강문화권 1기로 압록강 유역 및, 하요하 유역, 요동남부와 요동북부가 해당된다. 5,500~5,300년 전 압록강문화권 2기는 하요하 유역은 포함되지 않고, 압록강 유역과 요동북부지역까지 아우른다. 4,800~4,400년 전 압록강문화권 3기는 하요하 유역, 요동 남부와 북부, 압록강 유역뿐만 아니라 청천강 유역까지 넓어졌다. 그리고 4,400~4,100년 전 압록강문화권 4기는 압록강 유역 및 요동남부까지 확인된다(표 4).

## V. 맺음말

한반도 북부에서 평저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은 압록강~두만강 유역이고, 시간에 따라서 청천강 유역까지 확인된다<sup>92</sup> 두 지역은 평저토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만 문양이 달라서 다른 문화권으로 구분된다.<sup>93</sup> 선사시대 문화는 현재의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권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94</sup>

미송리 유적 이후의 압록강문화권은 압록강 유역과 청천강 유역부터 하요하 유역까지 분포를 보이는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 토기는 하요하 유역의 편보문화의 토기로 알려졌지만, 하요하 유역과 압록강 유역의 자료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토되고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평저토기문화권의 광역자료<sup>95</sup>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편보문화보다 압록강 유역과 청천강 유역의 자료가 늦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92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93 韓永熙, 1983, 「地域的 비교」,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470쪽.

94 김재운, 2017, 앞의 책, 255쪽.

95 김재운, 2013, 앞의 글, 4~41쪽; 임상택, 2018, 앞의 글, 4~47쪽.

미송리 유적 이후로 압록강문화권은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로 가  
능할 수 있는데 크게 3기와 4기로 구분된다. 3기는 하요하 유역, 요동북부, 요  
동남부, 청천강 유역까지 4,800년 전부터 관찰된다. 4기는 4,400~4,100년  
전으로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없어지고, 뇌문토기만 압록강 유역, 요동북부와  
요동남부에서 확인된다. 압록강문화권 1기와 2기가 압록강 유역 및 요동북부와  
요동남부로 한정되었는데, 압록강문화권 3기에는 좀 더 넓어졌다.

한편, 압록강문화권의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과이펄 초원지역  
소하연문화의 통요유형에 해당하는 남보령고토 유적에서 확인되지만, 연대가  
늦고 소하연문화의 석봉산 유형 특징 및 시베리아 바이칼 유역의 세로보문화와  
글라스코보문화의 요소 등이 확인되어 현재의 자료로는 압록강문화권으로 보  
기 힘들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귀다순·장성더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 동북아역사재단.
- 김용간, 1995, 『조선고고학전서: 원시편』, 과학출판사.
- 김재운, 2017,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서경출판사.
- 서국태, 1999, 『조선신석기시대문화의 단일성과 고유성』, 사회과학출판사.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3, 『廟子溝與大壩溝~新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文物出版社, 2010, 『科爾沁文明-南寶力皋吐墓地』, 北京: 文物出版社, 2010.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赤峰市博物館, 1998, 『大南溝-紅山文化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王策·王清林, 2004, 「雪山1期文化」, 『內蒙古文物古研究所成立50周年暨內蒙古長』, 地帶古學文化國際研討學議資料, 浩和浩特.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1, 『中國考古學中碳十四年代數據集(1965-1991)』, 文物出版社.
- \_\_\_\_\_,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9, 「遼寧長海縣小珠山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 『考古』第5期.

### 논문

- 강인욱, 2007, 「청동기시대 연해주와 한국의 문화교류」, 『환동해지역선사시대사회집단의 형성과 문화교류』, 제35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회.
- 김재운, 2007,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변천과정」, 『文化財』40號.
- \_\_\_\_\_, 2009, 「서포항 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한국고고학보』第62號.
- \_\_\_\_\_, 2012, 「신석기 후기 동북한문화권의 시간과 공간범위」, 『韓國上古史學報』第

77號.

\_\_\_\_\_, 2013, 「평저토기문화권의 신석기후기 이중구연토기 지역성과 병행관계」, 『韓國考古學報』 제88호.

\_\_\_\_\_, 2015, 「평저토기문화권 신석기후기 서부지역의 뇌문토기 고찰」, 『韓國上古史學報』 第89號.

\_\_\_\_\_, 2017, 「신암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유역의 신석기유적 편년」, 『북한지역 신석기문화의 연구』, 2017년 정기학술대회발표자료집.

\_\_\_\_\_, 2018a,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第99號.

\_\_\_\_\_, 2018b, 「신석기시대 말기 남해안 고배형토기의 편년과 재지성 검토」, 『韓國新石器研究』 第32號.

\_\_\_\_\_, 2019, 「6700~5300년 전 『압록강문화권』의 서쪽범위에 대한 검토」, 『嶺南考古學』 第85號.

임상택, 2018, 「토기 양식의 성립과 변화-동북아 평저토기 서부지역 이중구연 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41.

천선형, 2019, 「청동기시대 초기문화 성립과 지역 간 관계변화」, 『제4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집』.

韓永熙, 1983, 「地域的 비교」,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0, 「內蒙古赤峯市哈啦海溝新石器時代墓地發掘簡報」, 『考古』 第10期.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科爾沁博物館·扎魯特旗文物管理所, 2008, 「內蒙古南寶力阜吐新石器時代墓地」, 『考古』 第7期.

文啓明, 1987, 「午方新石器時代遺存的發現和認識」, 『考古學集刊』 第5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索秀芬·李兵, 2006, 「小河沿文化分期初探」, 『考古與文物』 第1期.

\_\_\_\_\_, 2007, 「小河沿文化類型」, 『邊疆考古研究』 第6集, 吉林大學校邊疆古研究所.

\_\_\_\_\_, 2014,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考古學文化序列和格局」, 『考古學報』 第3期.

瀋陽市文物管理辦公實, 1986, 「新民東高台山第2次發掘」, 『遼海文物學刊』 創刊號.

- 遼寧省博物館·昭烏達盟文物工作站·敖漢旗文化館, 1977, 「遼寧敖漢旗小河沿三種原始文化的發現」, 『文物』12期.
- 張雪蓮·金英熙·賈笑冰, 2016, 「遼寧長海小珠山遺址考古學文化的年代序列」, 『考古』第5期.
- 張星德·馬海玉, 2010, 「小河沿文化的時空骨組」, 『北方文物』第3期.
- 鄭鈞夫, 2012,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晚期遺存研究」, 吉林大學校博士學位論文.
- 趙賓福·杜戰偉, 2011, 「太子河上游三種新石器文化的辨識」, 『中國國家博物館館刊』10.
- 朱永剛, 1993, 「遼東地區新石器時代含條形堆文陶器有存研究」, 『青果集』.
- 陳全家·陳國慶, 1992, 「三堂新石器時代遺址分期及相關問題」, 『考古』第3期.
- 河北省文物考古研究所, 1987, 「河北容城縣午方新石器時代遺址試掘」, 『考古學集刊』第5集.
- 河北省文物研究所, 2001, 「河北陽原縣姜家梁新石器時代遺址的發掘」, 『考古』第2期.
- 韓嘉谷, 1997, 「環渤海古文化譜系和區系類型」, 『中國古學第9次年論文集』, 北京文物出版社.
- 韓建業, 2003, 「論雪山1期文化」, 『華夏考古』4期.

## 4,800~4,100년 전 신석기시대 「압록강문화권」의 고찰 -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를 중심으로 -

김재윤

압록강문화권은 미송리 유적을 근거로 설정되었는데, 그 이후는 압록강 유역의 쌍학리 유적 및 인접한 지역에서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가 확인되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중구연세퇴문토기는 하요하 유역의 편보문화 토기로 알려졌지만 압록강 유역의 토기와 형식상 유사하고, 이 지역의 토기가 시간상 이르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압록강을 중심으로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이 토기는 압록강 유역과 가까운 청천강 및 요동 북부와 남부, 하요하유역 및 요서 통요 부근의 소하연문화 남보려고토 유적에서도 출토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소하연문화의 토기 중에 대표적인 채색된 존형토기와 기대, 고배형토기 등이 출토되지 않고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다. 원저토기와 옥제품, 조합식식인도, 두부장신구, 무덤의 장법은 시베리아의 세로보문화와 글라스코보문화의 특징이다.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도 알려진 소하연문화의 다른 지역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남보려고토 유적은 4,000~3,800년 전 소하연문화의 통요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통요유형에서 확인되는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는 압록강 유역 주변의 유적과 기형의 형태, 문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형식상 구분되고, 측정연대도 늦으며, 압록강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시베리아문화의 요소가 있어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미송리 유적 이후에 압록강문화권은 이중구연세퇴문토기와 뇌문토기가 모두 확인되는 압록강 및 청천강 유역에서 하요하 유역, 요동남부와 요동북부를 포함하며, 그 기간은 4,800~4,400년 전쯤으로 압록강문화권 3기로 볼 수 있다. 압록강문화권 4기는 4,400~4,100년 전쯤으로 압록강 유역과 요동남부에서만 뇌문토기가 확인된다. 다른 지역은 청동기시대까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다.

**주제어:** 압록강문화권 3기, 압록강문화권 4기, 4,800~4,400년 전, 4,400~4,100년 전, 통요유형, 압록강, 청천강 유역, 하요하 유역, 요동북부와 요동남부

## ABSTRACT

# A Review of the Amnok River Cultural Sphere during the Neolithic Period between 4,800 and 4,100 Years Ago

Kim Jaeyoun

*Yijunggu yeonse toemun* earthenware (double-mouthed earthenware) and *noemun* earthenware (lightning-patterned earthenware) from 4,800 years ago have been found in the Amnok River basin, northern and southern Liaodong, the lower Liao River basin and the west Liao River. 4,400 years ago, there was a change in the earthenware of the cultural sphere surrounding the Amnok River. For the period between 4,400 and 4,100 years ago, only *noemun* earthenware have been identified in the Amnok River basin, and northern and Southern Liaodong.

**Keywords:** cultural sphere of the Amnok River, 4,800-4,400 years ago, 4,400-4,100 years ago, Amnok River, southern Liaodong, northern Liaodong, the third stage, the fourth stage



#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國境 邊緣地帶)에서의 항일투쟁과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조선의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윤휘탁 | 한경대학교 브라이트 칼리지 교수

- I. 머리말
- II.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투쟁과 추이
- III.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IV. 맺음말

## I. 머리말

압록강과 두만강은 1962년 체결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에 근거해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소유·관리·이용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북·중 국경선으로서의 중간선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강 자체가 북·중의 국경[중국에서는 이를 ‘계하(界河)’라 지칭함]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북·중의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게 된 배경을 보면, 일본이 괴뢰 만주국을 수립한 초·중기 ‘일본제국’의 범주에 속하게 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이하에서는 선(鮮)·만(滿)이라 약칭함]에서는 확고한 경계(국경)의식이 없고 양국 사이의 긴장감도 거의 없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에서 경계(국경) 관념이 희박하다보니 양국 사이의 국경선 획정의 절박성도 크지 않았다. 게다가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변연지대(邊緣地帶)’에서는 교류·교역·통관 등에 관한 법률·제도나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경찰·세관·치안 등의 통치기구 등이 완비되지 못했고 경계 양쪽 국민국가(즉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관할권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국민국가로서의 주권이 확고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국경 획정과 교류·교역에 대한 절차·통제·단속 등의 문제가 애매모호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선(鮮)·만(滿)의 국경변연지대에는 강을 마주한 채 ‘경계가 모호한 초경계(국경)적인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 투고: 2020년 1월 6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6).

1 이에 관해서는 윤희탁, 2017, 10, 「중국과 북한의 국경관리실태: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110집 참조.

게다가 만주국 수립 초기에는 소련과의 접경지역인 흑룡강(黑龍江, 아무르강) 유역과 우수리강[烏蘇里江] 유역을 비롯해서 몽골과 접경을 이룬 서북부의 내몽골 지역에서는 국경분쟁이 속출하고 있었다. 만리장성과 산해관(山海關) 쪽의 중화민국 접경지역에서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동과 항일무장투쟁에 따른 치안·경제 문제가 빈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계(국경) 관념이나 국가적 귀속의식이 희박하고 긴장감이 떨어졌던 선·만의 국경변연지대는 만주국 당국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선·만의 국경변연지대에는 치안력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고 치안 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괴뢰 만주국 건국에 반대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반만항일세력(反滿抗日勢力)에게 선·만의 국경변연지대는 항일투쟁을 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선·만의 국경변연지대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근대 국민국가적 영향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자 역시 일국사적(一國史的)인 ‘국민국가 관점’에서 단일한 국경선 내부의 특정 지역이나 일국(一國)만 다루다보니, 복수의 국가들이 국경을 맞대고 상호 유동하거나 영향을 미치던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의 선·만 국경변연지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선·만의 국경변연지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다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한반도 북부의 국경선 설정에 관한 조(朝)·청(淸) 감계(勘界)협상, 러일전쟁 전후의 변경문제, ‘간도협약’ 체결 과정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연구성과들이 있다.<sup>2</sup> 다만 압록강-두만강 변연지대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1962년 체결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이나 북·중 국경관리 실

2 대표적인 것으로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 제43집; 이은자, 2008,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조운경, 2008,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학』 제31집 등이 있다.

태를 다룬 글<sup>3</sup>과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동해출해(東海出海) 문제와 전략을 다룬 글<sup>4</sup>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선·만 국경변연지대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압록강에 위치한 특정 도시, 즉 안동[安東, 지금의 단동(丹東)]이나 신의주(新義州)의 개항과 도시형성 사이의 상관성, 도시계획과 건설, 교통망 구축과 도시발전의 상관성, 조선인의 이주, 목재업(木材業)·잠사업(蠶絲業) 등의 산업실태, 화공(華工)문제, 일본 자본의 성격, 일본 영사관경찰서의 설치·운영, 압록강-백두산 변연지대 거주민들의 아편재배와 마적(馬賊)<sup>5</sup>(혹은 항일무장세력)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그리고 두만강 변연지대와 관련해서는 1910~1930년대 초 회령(會寧)지방의 월경(越境)과 생활실태를 다룬 글이 있다.<sup>6</sup>

- 3 이장희, 2011,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白山學報』 제91집; 송병진, 2014,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계계획협정의 승계 문제」,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윤휘탁, 2017. 10, 앞의 글.
- 4 윤휘탁, 2018. 4, 「中國의 吉林省 東部邊疆 및 두만강 出海認識과 戰略」, 『中國史研究』 제113집, 304쪽.
- 5 민간사회에서는 약탈자들을 ‘마적’이라고 지칭했지만, 만주국의 일본 식민당국에서는 그들을 ‘匪賊’이라고 지칭하면서 크게 ‘土匪’와 ‘政治匪’로 구분했다. 이때 토비는 재물의 약탈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세력을 의미했고, 정치비는 중국국민당 張學良軍 계통의 反吉林軍, 馬占山軍 계통을 주축으로 한 ‘反滿抗日匪’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던 ‘共匪’로 세분되었다[滿洲國治安部軍事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 新京: 滿洲國治安部軍事顧問部, 2쪽]. 그리고 일본 식민당국에서는 항일무장세력을 모두 ‘마적’ 혹은 ‘비적’이라고 지칭하고 노략질을 일삼는 도둑 집단과 동일시하면서 비하하고 있었다.
- 6 손승희, 2011, 「근대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만철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이은자, 2014. 6, 「중일전쟁 이전 시기 중국의 국경도시 安東의 이주민-교류와 갈등의 이중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2집; 김지환, 2013,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中國史研究』 제87집; 김주용, 2009, 「만주지역 도시화와 한인이주 실태-봉천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5집; 김태현, 2017, 「신의주·安東'간 密輸出 성격과 조선총독부 團東의 양면성(1929~1932)」,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은자·오미일, 2013,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史叢』 제79집,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권경선, 2017. 4, 「근대 해항도시 안동의 산업구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16집; 오병한, 2019. 9, 「滿洲事變 이전 중국 安東에서 일본의 領事館警察署 설치와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간행된 신문<sup>7</sup>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을 가르게 된 압록강-백두

구』 제100집; 오미일, 2017, 6, 「간도의 통로, 근대 會寧지방의 월경과 생활세계」, 『역사와 세계』 제51집; 魏琳娜, 2007, 「自開商埠與丹東城市近代化研究(1903~1931)」,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李蕾萌, 2010, 「近代丹東城市規劃的歷史研究與啓示」, 大連理工大學 석사학위논문; 賈小壯, 2015, 「開埠通商與安東小商埠城市社會變遷研究(1906~1931)」,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江沛·程斯宇, 2014, 「安奉鐵路與近代安東城市興起(1904~1931)」, 『社會科學輯刊』 第5期; 姜麗, 2007, 「鴨綠江流域森林資源與安東縣木材中心市場的形成(1876~1928)」,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玉清, 2010, 「論丹東絲綢在東方絲路交往中的歷史地位和作用」,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羅越, 2011, 「近代安東地區蠶絲產業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張志勇, 2014, 「安東港的興盛及其原因探析」,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綦鋒, 2014, 「近代安東海關研究(1907~1932)」,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葉宗恩, 2017, 「安東鐵路附屬地發展概述」, 『檔案春秋』 第3期; 塚瀨進, 1990, 10, 「日中合弁鴨綠江採木公司の分析-中國東北地域における日本資本による林業支配の特質」, 『アジア經濟』 第31卷 第10號; 菅野直樹, 2000, 8, 「鴨綠江採木公司与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關係の變遷」, 『國史學』 第172號; 永井リサ, 1999,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邊境開發: 安東の柞蠶製絲業を例として」, 『史學雜誌』 第108卷 第12號; 박강, 2017, 9,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2집.

7 자료활용 문제와 관련해 만주국의 언론보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만주국에서 발행된 신문들에서는 自國內의 치안상황에 관한 언론기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주국의 언론기관에서는 당시에 가장 민감한 관심사였던 소련이나 몽골 접경지대에서의 滿·蘇·蒙 간 갈등·대립·무력충돌 상황을 비롯해 鮮·滿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무장투쟁 소식(치안상황)이나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도할 수 없었다. 반면에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항일투쟁활동이 대부분 만주국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관계로 치안관계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는 각종 신문이 鮮·滿 국경변연지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對岸의 만주국 영내에서 벌어지던 치안상황이나 그에 수반된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상세하게 치안 관련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만주국 시기 鮮·滿 국경변연지대에서 일어난 다양한 치안상황이나 정치사회적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된 『每日申報』, 『朝鮮中央日報』, 『朝鮮新聞』, 『東亞日報』 등의 보도내용을 주로 분석했다.

참고로 『每日申報』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되던 한국어 신문이고, 『朝鮮中央日報』는 呂運亨이 『中央日報』의 제호를 바꾸어 1933년 3월에 발행하다가

산-두만강 변연지대에서의 항일투쟁의 추이와 실패, 이에 대응한 선·만 식민 당국의 국경단속과 치안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실태 등을 밝히려고 한다.

## II.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투쟁과 추이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1932년 3월 괴뢰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의 국가 수립 과정이 내부 구성원과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주국 내 구성원들, 특히 중국인들의 저항이 격심했고 국제사회의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이제 갓 출범한 만주국의 최대현안은 저항세력을 제압하고 신생 국가의 질서와 치안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주국의 출현을 계기로 일본 세력이 소련의 연해주 국경변연지대까지 뻗치게 되자, 소련의 각 신문에서는 우수리강 국경변연지대에 대한 안보태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만주사변 이전까지 소련의 기득권 지역이었던 북만주(北滿洲)에 대한 일본의 침략적 태도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소련 정부에서도 연해주 국경변연지대에 군대를 집결시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었다.<sup>8</sup>

---

1937년 11월에 조선총독부의 탄압 속에 폐간되었다. 『朝鮮新聞』은 1908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으로서 당시 『京城日報』, 『釜山日報』와 더불어 조선에서 발행되던 3대 일본어 신문이었다.

- 8 「滿洲國境へ軍隊の集結, ロシア當局認む」, 『朝鮮新聞』, 1932년 4월 20일, 1면. “소련 군사 당국의 만주국을 포위한 군사 시설은 다가올 결빙기를 목전에 두고 국경 赤衛軍은 거의 총동원의 감이 있는 바, 소련 측이 가장 방비에 주력하는 부라코예스첸스크를 중심으로 黑龍江岸 20리의 武裝地帶는 철조망을 친 모양이다.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同지대에는 벌써 보루 2개 이상, 엄폐호 70개 이상이 만들어진 것 이외에, 1마일당 3개소 정도의 機關銃坐가 설치되어 있다. 소련 군사 당국의 極東戰備는 날로 충실해지고 있다.” 『蘇聯軍事當局에서 極東戰備益擴充: 滿洲國境包圍의 施設急進行 赤衛軍總動員狀態』, 『朝鮮中央日報』, 1933년 10월 24일, 1면.

것 출범한 만주국에서도 국경경비 차원에서 국경감시경찰대를 조직하고 보병 수백 명과 수분하(綏芬河)파견대 소속 기병(騎兵) 수백 명을 동부 국경지역으로 파견했다.<sup>9</sup> 이로 인해 만(滿)·소(蘇) 국경변연지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제국’의 식민통치 권역에 속했던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지대 상황은 어떠했을까? 당시 일본제국 내에서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관계는 ‘선만일여(鮮滿一如)’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만 국경변연지대는 별개 국가 간의 국경이라기보다는 일본제국 내 양 지역 식민당국의 관할권역을 가르는 경계지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선·만 사이에는 명확한 국경선조차 획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소 국경변연지대처럼 심각한 긴장감도 감돌지 않았고 만주국 당국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게다가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에는 선·만 당사국들의 관할범위나 단속·책임소재도 모호했고 만주국 식민당국의 통제나 토벌활동도 느슨했다. 따라서 선·만 국경변연지대에 대한 만주국의 치안활동은 내륙지방에 비해 엄격하지가 않았다.<sup>10</sup> 게다가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지대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항일유격대들의 은신처나 항일근거지로 적합한 자연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는 아래의 통계가 보여주듯이 항일세력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즉 만주국 수립 직후인 1932년 일본 정보계통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항일유격대원의 수는 약 9만 1,500여 명에 달했고, 만주국의 압록강 변연지대에서는 습격 횟수가 3,802회, 항일유격대 연인원수가 48만 3,467명이었고, 피살자가 347명, 인질납치가 875명, 방화가 489건, 총기탈취가 1,440정, 탄약탈취가 1만 3,313발, 전신줄 절단 길이가 45간(間), 열차방해가 8건, 금품강탈 액수가

9 「滿洲國境警備充實完備 派遣部隊各히 出發」, 『每日申報』, 1932년 5월 10일, 1면.

10 「平安北道, 結氷を前に國境各署の緊張 滿洲國中央文化に追はれ馬賊は江岸東邊道に集中, 今年の警備は困難」, 『朝鮮新聞』, 1933년 10월 26일, 4면.

37만 2,214원에 달했다. 만주국의 두만강 변연지대에서는 내습(來襲) 횡수가 1,953회, 항일유격대원 연인원수가 10만 7,203명, 피살자가 379명, 부상자가 200여 명, 인질납치가 2,774명, 방화가 75건, 총기탈취가 604정, 탄약탈취가 1만 3,874발, 전선줄 절단 길이가 14간(間), 금품강탈 액수가 18만여 원에 달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간도(間島)지방보다도 경계망이 더욱 엄중한 압록강 대안(對岸)의 만주국 지역에서 내습 인원이 더 많았고 그 피해도 더욱 심했다.<sup>11</sup>

또한 1933년 조사통계에서는 만주국 쪽의 압록강-두만강 변연지대에서 습격활동을 벌인 항일유격대원 연인원수가 59만 670명이고 그 횡수는 3,754회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주민 등 326명이 살해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649명이 인질로 납치되었다. 방화건수는 564회였고 금품강탈 액수는 55만 2,214원에 달했다. 그리고 총기 2,044정과 탄약 2만 6,187발이 강탈당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식민당국의 언론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일만(日滿) 관헌(官憲)이 각처에서 항일세력에 대한 토벌과 치안유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치안확보 문제는 요원한 것 같다”며 당시의 치안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도했다.<sup>12</sup>

게다가 항일세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만주국 쪽의 압록강-두만강 변연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선 북부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에 위치한 지방에도 해당되었다. 즉 조선의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국경변연지대에서 대정(大正) 9년(1920)부터 1935년 8월 말까지 16년간 항일세력으로부터 입은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평안북도 367건, 함경남도 370건, 함경북도가 684건이었고, 여기에 관여한 항일유격대원의 총 인원수는 1만 9,122명에 달했다. 그리고 이 3개 도(道)에서 살해된 조선인 수는 251명, 방화

11 「鴨綠江對岸地方에 反滿軍 出沒頻頻 出沒한 回數 實로 四千八百回 그 延人員 四十八萬三千六百餘名 豆滿江對岸보다 尤甚」, 『朝鮮中央日報』, 1933년 9월 11일, 2면.

12 「三千七百餘회에 五十九萬名襲來 殺傷九百人, 質拉去三千餘 國境對岸의 情勢」, 『朝鮮中央日報』, 1933년 9월 11일, 2면.

는 331건이었으며, 습격당한 경찰서와 주재소가 58개소였다. 또한 검거된 항일 유격대원 수는 6,657명, 항일유격대와의 충돌건수는 983건이었으며, 사살된 비적 수는 1,069명에 달했다.<sup>13</sup> 즉 압록강과 두만강 변연지대에서는 만주국 쪽 이든 조선 쪽이든 모두 항일투쟁활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셈이다.

〈사료 1〉 “1934년 8월 9일 오전 8시 寬甸縣 石柱子村 夾皮溝 江岸 부락에 匪首 天龍이 이끄는 10여 명이 출현하여 滿人 崔康淳의 高瀨船 9척을 습격하여 현금 10원, 밀가루 8부대, 의류, 잡화품 다수를 약탈하고 船夫 方恒生 외 2명을 납치해 도주했다. 동일 오후 3시 15분 輯安縣 三道溝 輯私分卡에 10여 명이來襲하여 護岸工事を 監督 중인 滿人 李長高를 납치해갔다.”<sup>14</sup>

〈사료 2〉 “압록강 對岸(만주국 쪽)의 匪賊은 작년(1932년) 겨울부터 진행된 討伐工作에 의해 현저하게 약화되었는데, 지금도 3만여 명이 분산해서 여전히 살육과 약탈을 감행해서 이주한 조선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sup>15</sup>

〈사료 3〉 “咸南 對岸 八道溝 新房子에 있던 만주국 경찰 중대장 楊海亭씨는 정보에 따라 21일 적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신방자 西方 高地로 부대를 이동시켰는데, 오후 2시 반경 우세한 兵匪와 충돌하여 약 2시간에 걸쳐 격전을 치렀는데, 병비는 시체 30여 구와 기타를 버리고 七道溝 奧地로 도주하였다.”<sup>16</sup>

13 「國境線一帶匪賊被害 一年平均近三百件 滿洲事變以後에 再次로 激增: 過去十六年間統計」, 『每日申報』, 1935년 11월 21일, 7면.

14 「國境第一線に馬匪賊蠢き 鴨綠江で航行を威脅」, 『朝鮮新聞』, 1934년 8월 13일, 7면.

15 「結氷後の國境警備方針 滿洲國側と共同作戰 徹底的に封鎖する」, 『朝鮮新聞』, 1932년 9월 14일, 4면.

16 「滿洲國警察隊勇敢地活躍」, 『朝鮮新聞』, 1932년 12월 23일.

〈사료 4〉 “警務局 着電에 의하면 平北 慈城郡 상구배駐在所 對岸 輯安縣 三道溝에는 지난 11일 反滿軍이 冬服 5백여 벌과 기타 식량 다수를 청구하는 협박장을 同地 총무회장에게도 보내어 왔으므로 [...] 87명이 상구배주재소에 몰려와서 피난을 하고 잇서 慈城署에서는 警戒員을 파견하여 경계 중에 잇다 한다.”<sup>17</sup>

당시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 활약하던 항일세력의 구체적인 항일투쟁 양상을 비롯해 그로 인한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치안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일본 정보당국의 통계수치를 비롯해 〈사료 1〉~〈사료 4〉의 사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치안이 확립되지 못한 만주국 건국 초기에 항일무장세력은 토벌(討伐)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선·만 국경변연지대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유동(流動)하면서 활발하게 항일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수목(樹木)과 고량(高粱, 수수), 옥수수 등이 무성한 녹음기(錄陰期)가 되면 은신이 용이했기 때문에 만주국 쪽 압록강 변연지대에서는 항일유격대들이 더욱더 암약하고 있었다. 가령 1934년 6월 요녕구국군(遼寧救國軍, 후에 요녕민중자위군(遼寧民衆自衛軍)으로 개칭)의 지도자 왕평거(王鳳閣)<sup>18</sup>가 이끈 500여 명의 항일유격대는 압록강의 선박들을 습격하고 조선 내로 침입하기 위해 강안(江岸)을 따라 남하하면서<sup>19</sup> 압록강 변연지대의 치안질서를 교란하고 이

17 「國境慈城對岸에 五百反滿軍襲來: 住民에게 冬服과 食糧其他強要 滿洲人避難者多數」, 『朝鮮中央日報』, 1934년 11월 15일, 2면.

18 상세한 내용은 윤취탁,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서울: 일조각, 24쪽, 59쪽, 80쪽, 94쪽, 105쪽, 128쪽, 136쪽, 138쪽 참조. 만주국의 압록강 변연지대를 일컬었던 東邊道에는 大刀會가 산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마적이나 군벌의 착취로부터 자신들의 농촌을 방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쉐량[張學良]은 이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하여 대도회의 總法師 왕평거[王鳳閣]를 당귀우[唐聚五]가 이끌던 ‘遼寧民衆自衛軍’의 副司令에 임명했다. 왕평거는 체포된 1937년 3월까지 ‘東邊道の 王者’로 군림하면서 反滿抗日鬪爭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이들 대도회는 장쉐량 군대의 영향하에 있었다. 滿洲國軍刊行委員會編, 1970, 『滿洲國軍』, 東京: 蘭星會, 261쪽.

19 「靑葉をくぐる反滿匪 暗躍物凄い對岸國境 滿洲國は大討伐を敢行」, 『朝鮮新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때로는 만주국의 일부 경찰들이 항일유격대에 가담하거나 그들을 돕는 일도 빈번했다.<sup>20</sup>

〈사료 5〉 “長白縣에는 이주 동포들이 서로 아편을 경작하려고 3일 동안에 백여 명이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해마다 국경일대에는 아편 때문에 쟁탈이 많다고 하며, 아편을 빼아스려고 마적이 횡행하면 동포의 인위가 자못 염려된다 한다.”<sup>21</sup>

〈사료 6〉 “백두산 밑 깊은 숲속에 소굴을 정하고 수백 수천 명이 웅거하여 인간을 인질로 잡아다 돈을 털어먹는 악착한 직업을 가진 마적단! 그들은 여름이면 산중으로부터 들로 나와 살인, 방화를 마음대로 하거나 지난 23일에는 長白縣 일대 各道溝 각 촌락에는 牌頭區長에게 격문이 왔는데 그 내용인즉 “이동리에서 阿片 2천량을 바치라. 만일 바치지 않는 데는 너의들 동리는 불을 노코 전부 총살할 터이다.” 이리케 무서운 격문이 오고 보니 동포들이 심은 아편도 그 3분의 1은 마적의 손으로 들어가야 말 것이라 한다. 동포들은 아편 豫賣한 것을 주어야 하고 마적단에 주어야 하니 과연 무엇으로 살어갈 것인가고, 一半은 우수에 싸혔다고 한다더구나, 장백 全縣을 통하여 수만 원 어치의 아편이 마적단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라 하니 실로 피해는 막대하다고 한다. 官房子 崔區長談: 이 마적단 사건에 관방자 최구장을 만나무르니 “우리 동리에는 2천량을 바치라는 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공서(縣公署)에다 사정을 말하고 관병을 파견해 달라고 했더니 보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안 주자니 그곳에서 살 수 없고—우리 동리에서는 “이회”를 열고 매호에 얼마씩 배당하여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운운”<sup>22</sup>

聞』, 1934년 6월 21일, 7면.

20 「現職滿洲國警官이 匪賊襲來를 援助 負傷한 警士는 楚山醫院에 內通者는 匪賊과 合勢逃走」, 『每日申報』, 1935년 9월 10일, 5면.

21 「長白縣阿片許可 耕作志願數百名」, 『東亞日報』, 1933년 4월 9일.

22 「阿片二千兩不納하면 放火後全部銃殺 마적단들의 가혹한 착취법 長白同胞村

〈사료 7〉 “咸南 警察部 着電에 의하면 長白縣과 臨江縣 내의 밀림지대에 근거를 둔 文明軍馬順연합 마적 등은 현지 각처를 유동하며 만주인 부락은 물론 이주 조선인 촌락도 시시로 습격하여 식량 금품 아편 등을 강탈하는 동시에 拉去 사건도 종종 잇었고, 더욱이 방금 아편취채기를 당하여 在住 조선농민들은 전전공공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sup>23</sup>

〈사료 8〉 “20일 오후11시 함남 경찰부 착전에 의하면, 연합마적단 백 수십 명은 19일 밤 十三道溝 오지에 파견하여 금품의 강탈과 인질의 拉去를 감행 중으로 현재 동 마적단에 拉去同行하고 있는 만주인과 이주 조선동포가 20여 명에 달한다 하며 [...] 그리고 十五道溝 오지에 잠거하고 있는 占山好의 일당 15명은 20일 오전 9시경 십사도구 동덕리에 이동하여 동지 조선인 가옥을 모조리 수색하고 생아편 3백 문메를 강탈한 후 이주 조선인 李光益(53)을 납치하여 가지고 오지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하며, 이 외에도 아편 수확기를 이용하여 마적들의 등살에 주민은 이중의 괴롭을 받고 있다 한다.”<sup>24</sup>

〈사료 9〉 “마적단은 아편 채취기를 당하여 횡포무쌍한 행동을 하며 각지로 출몰하여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 한다. 長白縣 十八道溝 牌頭 姜錫禹씨에게 마적단으로부터 아편 3천량을 가져오라고 글발이 온 것은 벌써 한 달 전이고, 그 후 무장한 마적단들이 때때로 와서 수십양 혹은 수백양씩 약탈해가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전기 3천량을 안 가져오면 가옥에다 방화하고 전부 총살한다고 위협함으로 동포들은 이제 겨우 아편액을 채취하는 중인데 마적의 성화에 견대기도 어렵고 생명이 위협함으로 전기 十八道溝 일대 永華洞 得英洞 徐哥洞에 거주하는 2백 30여 호 2천 4백여 동포들은 집과 농사지는 것 전부를 내어버리고 男負女戴하고

마다 脅迫狀, 『東亞日報』, 1935년 7월 28일.

23 「馬賊들이 등쌀」, 『東亞日報』, 1935년 8월 16일.

24 「馬賊團大跋扈二十餘名拉去 十三道溝市街地襲擊도劃策 阿片收穫期の咸南對岸」, 『東亞日報』, 1935년 8월 23일.

지난 8월 23,4일 정치 없이 떠났다고 한다. 長白市 內와 新興街에는 집집이 피란민으로 대만원을 일으켰다. 요사이의 압록강두에는 피란민으로 인하여 눈물과 서름에 석겨 때때로 비극이 연출되고 있다.”<sup>25</sup>

만주국 초기에는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던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 특히 압록강 대안의 장백현(長白縣)과 임강현(臨江縣), 두만강 대안의 간도 지역 일대에는 만주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아편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하던 다수의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이 있었다. 그런데 선·만 국경변연지대에 거주한 조선인과 중국인, 그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한 조선인은 마적(혹은 항일세력)들로부터 아편을 비롯해 식량과 금품을 강탈당하거나 인질로 납치되는 등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아편 수확기인 7~8월 녹음기를 맞이할 때면 마적(혹은 항일세력)들의 아편 강탈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였다.<sup>26</sup> 그렇다고 일본 식민당국의 주장처럼 마적(혹은 항일세력)이 일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강탈한 것만은 아니었다. 즉 이들 주민 중에는 아편의 판로(販路)를 보호받는 대가로 혹은 마적(혹은 항일세력)의 항일활동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아편과 식량을 제공하기도 했다.<sup>27</sup> 당시 ‘마적’이라 불리던 세력은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백두산 밀림지역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있던 변연지대 거주민에게서 아편을 강탈하거나 제공받아 팔아서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해나가면서 때로는 일제의 토벌에 맞서기도 했던 것이다. 즉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의 주민들과 마적(혹은 항일세력) 사이의 아편·식량 등의 수수(授受)형태는 다양했지만, 양자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백두산 밀림지대에는 항일세력(특히 공산유격대)의 근거지나 유격구(遊

25 「阿片採取期에 馬賊星火로 千與同胞避難中 재배한 아편을 안주면 죽인다고 不安한 長白縣一帶」, 『東亞日報』, 1935년 8월 28일.

26 박강, 2017. 9.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2집, 193쪽.

27 박강, 2017. 9. 위의 글.

擊區)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일제의 치안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항일세력은 주로 이곳에 은거하면서 비교적 손쉽게 아편재배 농민들과 접촉해 아편이나 각종 물자를 획득할 수 있었다.<sup>28</sup> 그런데 일제의 치안숙정공작(治安肅正工作), 특히 이른바 ‘비민분리공작(匪民分離工作)’이 강화되면서 항일세력은 농민들과의 접촉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립되면서 물자획득이 곤란해지자, 아편재배 농민들로부터 아편을 약탈하거나 반강제로 제공받아 자신들의 생존과 항일투쟁을 지속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만주국에서는 1935년 12월 발표한 ‘앵속밀작(罌粟密作)에 관한 포고(布告)’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건국 초기 집단부락 건설에 따른 차입금 변제의 재원(財源)으로 아편재배를 권장해왔지만, 아편이 항일세력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항일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항일세력과 아편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포고문 발표를 계기로 아편이 항일세력의 재원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두만강 변연지대의 혼춘·왕청·연길·화룡·안도현, 안동성의 장백현에 대해 아편재배 허가지역 지정을 취소했다.<sup>29</sup> 그리고 만주국에서는 집단부락 건설과 함께 1936년부터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를 아편재배 허가지역에서 금지지역으로 변경시켰다.<sup>30</sup>

한편 일본의 치안숙정공작의 강화로 만주국 내에서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자, 1939년 전후로 항일세력의 일부는 동부 국경 쪽의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으로 피신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강을 건너 만주국으로 돌아와 항일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만주국 외교부에서는 만·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무력충돌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얼빈 주재 소련총영사에게 경고성 항의를 하곤

28 윤휘탁, 1996, 앞의 책, 90~91쪽.

29 山田豪一, 2003, 『滿洲國の阿片專賣』, 東京: 汲古書院, 818쪽, 849쪽, 856~857쪽.

30 박강, 2017, 9, 앞의 글, 200쪽.

했다. 소련 측에서도 그 사건이 소련영토 내에서의 경비활동이라 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소련과는 무관한 비적단(匪賊團)(반만항일세력)의 소행이라고 강변했다.<sup>31</sup>

〈사료 10〉 “금번 羅子溝를 습격한 反滿軍은 약 1천 3백여 명으로 편성된 군단이었는데 이 군단의 총지휘는 소비에트 장교 6명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각 방면에서는 자못 중대시하고 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최근에 중국공산당과 반만군을 선동하여 적극적으로 만주국의 치안교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저하다.”<sup>32</sup>

〈사료 11〉 “스탈린 일파의 소련공산당 간부들은 동방의 위기를 절규하고 극동 군비의 충실에 광분하며 만주국을 포위하는 방대한 국경선에 공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과 병기를 이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제2차 5개년 계획의 시행에 피로를 느낀 대중의 목표 전환으로 최근 왕성하게 日·蘇 開戰을 외치고 국경에서의 전쟁준비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만주국 내에서 교란공작을 하고 있다. 우선 소련은 反滿匪賊團을 적극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회유된 중국공산당 군대에는 소련공산당 고문을 파견하여 그 조직행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 두드러진 예가 금년 해빙기부터 北鐵(동청철도, 중동로) 東部線에서의 열차습격이나 지방 주요 도시의 습격 등의 테러행동이다. 또한 소련은 만주국의 토벌에 의해 소련 영내로 도망한 공산군을 훈련 共產軍化하여 국제혁명군을 조직하고 遊動부대도 활약시

- 
- 31 “간도지방 일대의 共匪는 이번 대토벌에 의해 집단적인 비적은 거의 궤멸되었고 殘黨은 산림지대로 도주했는데, 三道威의 奧地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했다. [...] 이들은 일본군의 토벌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간도지방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시적으로 소련 영내로 들어가 내년 봄에 귀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주인 2인, 조선인 3인을 대표로 뽑아 蘇聯極東高麗共產政府를 거쳐 소련으로의 입국방안을 교섭하기로 결의했다.” 『滿洲, 討伐隊に逐はれて間島方面の共匪等蘇聯遁入を協議し, 代表者を以て交渉』, 『朝鮮新聞』, 1933년 12월 2일, 3면.
- 32 「反滿軍千餘名을 蘇聯將校가 指揮: 滿洲治安攪亂에 積極進出 注目되는 昨今事態」, 『朝鮮中央日報』, 1934년 7월 8일, 2면.

키고 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만주성위원회와 같은 코민테른 직계의 조직으로부터 東北人民革命軍, 救國義勇軍, 조선○○○○軍과 같은 혁명적 민족운동단체를 원조하고 지방농민에 대한 각종 선전을 실시하고 있다.”<sup>33</sup>

〈사료 12〉 “하바로프스크로부터 전해진 일본 측 첩보에 의하면, 소련공산당은 본국으로 귀환한 舊北鐵從業員 신분으로 만주에 있는 동안 赤化運動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요원 등을 하바로프스크로 소집하여 만주국 내의 黨기관 상황, 동북 항일의용군 警備團과 중국공산당 세력의 항일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를 토대로 소련공산당에서는 ㉠ 만주국 내 농민·노동자의 친일경향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공산주의 실력을 보여주고 공작을 용이케 하도록 만주국 내로 便衣隊를 잠입시켜 要人암살 등의 테러수단을 행하게 할 것, ㉡ 당원을 불법 율경자로 위장시켜 만주국 각 기관 및 도시 요지에 배치하고 종래의 첩보망을 확대·강화할 것, ㉢ 만주국 군경에 대한 赤化공작을 위하여 赤화된 병사를 귀순한 것처럼 위장하여 만주국 군경 내에 잠입시켜 내부파괴를 유도할 것 등의 對滿모략을 결정하였다.”<sup>34</sup>

그렇지만 〈사료 10〉~〈사료 12〉에 제시된 일본(만주국) 정보당국의 첩보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일본제국(만주국)에서는 만·소 국경변연지대에서 소련 측이 은밀히 반만분자(反滿分子)들을 비호하고 이들을 사주해 항일투쟁을 돕는다고 믿고 있었다.<sup>35</sup> 게다가 일본 식민당국에서는 소련군이 장교를 파

33 「蘇聯의 極東武備와 滿洲國攪亂工作: 最近日蘇開戰說을 盛히 宣傳」, 『朝鮮中央日報』, 1934년 7월 13일, 1면.

34 「滿洲國領事館新設에 蘇聯嘲笑의 拒絕 時機尙早라고 前言을 顛覆 滿洲國政府大憤激」, 『每日申報』, 1935년 7월 14일, 2면.

35 「反滿分子を 庇護 使喚, 蘇聯警備艦事件に 滿洲國警告的抗議」, 『朝鮮新聞』, 1933년 7월 12일, 1면; 「滿洲國攪亂は 蘇聯共產黨의 策動, 我が外務當局近く 道義的警告を發せん」, 『朝鮮新聞』, 1934년 8월 24일.

견해 항일군대를 지휘하거나 중국공산당 및 항일유격대를 선동하여 만주국의 치안교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확신했다(〈사료 5〉). 더욱이 소련 측에서 만·소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병력과 무기를 국경선에 집결시켜 전쟁준비를 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 군대에 소련군 고문을 파견해 이들의 조직행동을 지도하거나 만주국의 토벌에 의해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 영내로 도망한 공산군[주로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을 훈련시켜 공산군화(共產軍化)하여 국제혁명군을 조직하고 만주국 영내로 들어가 유동부대(遊動部隊)로서 활약하게 하며, 심지어 코민테른 직계조직을 통해 항일유격대와 혁명적인 민족운동단체를 원조하고 지방농민에 대한 각종 선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사료 11〉). 또한 일본 식민당국에서는 소련공산당이 만주국 정부기관이나 군경 등에 다양한 첩자들을 침투시켜 적화공작(赤化工作)을 펼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경계하고 있었다(〈사료 12〉).

### Ⅲ.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의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지대의 치안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다. 가령 1932년 4월 압록강 연안의 통화현(通化縣) 일대에서는 만주국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반기를 든 반란세력에 의해 치안이 유린(蹂躪)되면서 경찰이 완전히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sup>36</sup> 동년 5월에는 비밀결사조직인 대도회(大刀會)<sup>37</sup>가 만주국 집안현(輯安縣) 통구

36 「滿洲，鴨綠江沿岸通化城は全くの無警察状態，叛徒跳梁の情報に除文海討伐に向ふ」, 『朝鮮新聞』, 1932년 4월 29일.

37 郷村の自衛團體인大刀會는紅槍會와 마찬가지로 관헌의 苛斂誅求에 반항하거나 패잔병 약탈무리(이른바 兵匪)에 대항하게 되었다(末光高義, 1939, 『支那の秘密結社と慈善結社』, 大連: 滿洲評論社, 147~149쪽). 상세한 내용은 角張繁, 「東邊道に於ける匪賊の動向」, 大亞細亞日本青年聯盟 編, 1935, 『第一回滿洲研究團報告』, 東京: 同聯盟, 208쪽 참조.

(通溝)를 습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전해지면서 집안현성(輯安縣城) 안은 대 혼란에 빠졌고, 이것 때문에 조선의 만포진경찰서(滿浦鎭警察署)와 만포진수비대(滿浦鎭守備隊), 만포진분견대(滿浦鎭分遣隊)에서 수십 명의 병력이 조선 측 경비를 위해 급파되기도 했다. 게다가 집안현에 주둔한 만주군군 제삼영(第三營)이 대도회의 습격활동에 동조해 반란을 일으켜 합세하기도 했다.<sup>38</sup> 당시 일본 정보당국에서는 대도회 등의 비밀결사조직들을 ‘토비(土匪)’로 지칭하고 있었는데, 토비는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자들을 약탈하기도 했지만 일제 식민당국이 이들을 탄압할 경우 저항하면서 항일무장군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초목이 무성해지거나 옥수수·수수 등의 농작물이 자라나 항일 세력이 은둔하기 용이한 녹음기(綠陰期, 5월부터 9월까지)가 되면, 조선의 국경 대안지역인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반만항일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 때문에 유동량이 많은 압록강에서의 항행(航行)은 이들 항일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sup>39</sup> 녹음기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다니기 용이한 결빙기(結氷期)에도 국경 일대에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항일세력이 빈번하게 출몰하면서 국경 경비선은 아연 긴장하고 있었고, 국경 일대의 인심(人心)도 흉흉해지고 있었다.<sup>40</sup>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이 변연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불안한 치안상황을 피해 일부 주민들이 강을 건너 조선으로 피난을 간 일이다. 가령 1932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에서 조선으로 피난 온 사람 수는 창성(昌城)에 111명, 벽동(碧潼)에 13명, 초산(楚山)에 4,586명, 위원(渭原)에

38 「對岸輯安縣通溝 大刀會が襲撃の噂 滿浦鎭署と守備隊が 朝鮮側の警備に急行」, 『朝鮮新聞』, 1932년 5월 9일, 3면.

39 「國境第一線に馬匪賊蠢き 鴨綠江で航行を威脅」, 『朝鮮新聞』, 1934년 8월 13일, 7면.

40 「白砂城에 共匪出現 滿洲國稅關襲撃 현금 20원과 물품 강탈도주 國境一帶 人心洶洶」, 『每日申報』, 1932년 10월 8일, 8면.

512명, 강계(江界)에 794명, 자성(慈城)에 147명, 후창(厚昌)에 32명 등 총 6,195명에 달했다. 이때 만주국 측 일본군의 토벌활동으로 항일세력이 위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서 조선 대안 지역이 평온을 회복하면 이들 지역의 피난민 수도 점차 감소했다. 다시 말해 조선으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는 만주국 국경변연지대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월강(越江)해 원(原)거주지로 귀환(歸還)하는 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sup>41</sup>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활동은 압록강 유역의 주요 산업인 목재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sup>42</sup> 1933년 초까지만 해도 만주국의 관문(關門)인 안동(安東)과 조선 신의주(新義州)의 목재계(木材界)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만주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안동에서 조선으로 목재가 반출되었지만, 만주국이 건국된 후에는 거꾸로 신의주 쪽에서 만주국으로 왕성하게 목재가 반출되는데, 그 분량은 매일 평균 25대 차량분에 달했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동변도(東邊道) 일대에 걸친 항일활동이 빈번해지면서 벌목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지의 목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만주목재동업조합연합회(滿洲木材同業組合聯合會)에서는 ‘비적(匪賊)’의 토벌을 청원한 상태였다.<sup>43</sup> 특히 해빙기(解氷期)가 도래(到來)하면 만주국 각지에서는 항일무장세력의 출몰이 잦았다. 목재를 뗏목으로 묶어서 강으로 운반하는[流筏] 시기가 되면, 만주국 측의 벌목계(伐木界) 및 채목공사(採木公司) 등의 목재 벌채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항일무장세력의 항일활동은 목재계(木材界)와 직접 관계된 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에게도 많은 손해

41 「平安南道, 戰傷病兵, 滿洲國境の兩事變に活動の勇士, 平壤衛戍病院への收容者けふ迄に五十三名」, 『朝鮮新聞』, 1932년 7월 23일, 3면.

42 압록강 상류지방에서의 삼림벌채나 목재산업 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경미, 2016, 8, 「일제하 新義州 木材業界의 변동과 木材商組合의 활동(1910~1936)」, 서울대학교 대학원 社會敎育科 歷史專攻 석사학위논문; 배재수, 2005,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 제38집 등이 있다.

43 「木材にも豊年風 滿洲指してヒタ押し 毎日平均二十五車も搬出 國境漸く活氣づく」, 『京城日報』, 1933년 7월 14일.

를 입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록강 유역의 목재업계에서도 지구책으로 1933년부터 반관반민(半官半民)이라고 할 수 있는 영리회사(營利會社)의 용병(傭兵)을 조직했는데, 이것은 세인(世人)의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항일무장세력의 빈번한 활동과 그에 따른 목재 벌채업의 쇠락으로 대표적인 목재회사인 압록강채목공사(鴨綠江採木公司)의 용병(傭兵) 수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 결과 압록강채목공사에서는 만주국 경무청에 용병의 증원을 요청<sup>44</sup>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한편 시국(時局)의 중대성에 비추어 만주국 정부에서는 점차 국경경비체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가령 1932년에 만주리(滿洲里), 수차하(綏岔河), 산해관(山海關) 등의 각지에 국경감시경찰대(國境監視警察隊)를 신설하고 경찰대원들의 훈련을 개시했다.<sup>45</sup> 또한 만주국 국경감시경찰대에서는 구동북군벌(舊東北軍閥)로부터 압수한 해방함(海防艦) 수척을 송화강(松花江), 발해만(渤海灣)을 비롯해 압록강(鴨綠江)에도 배치해 수상경비를 강화했다.<sup>46</sup> 이와 아울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조선에서도 점차 경비기관(警備機關)을 정비해가던<sup>47</sup> 만주국과의 공동경비계획 수립과 공동토벌작전을 도모했다.<sup>48</sup>

특히 주목되는 점은 만주국이 건국 초기에 조선 식민당국의 협조를 얻어 경찰경비체계를 갖추어나갔다는 점이다. 즉 경찰경비 경험이 풍부한 경찰자원이 없던 만주국에서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1932년 11월 경무지도관(警務指導

44 「いかだの時期に入り心配なのは沿岸警戒陳まづ採木公司是傭兵を増加 八木理事長奉天へ」, 『國境毎日新聞』, 1934년 4월 21일.

45 「滿洲國の警察隊 國境監視の爲め」, 『朝鮮新聞』, 1932년 4월 15일, 2면.

46 「海防艦も配置 滿洲國國境の警備 愈愈充實」, 『朝鮮新聞』, 1932년 5월 9일, 2면.

47 「滿洲國警察隊勇敢に活躍」, 『朝鮮新聞』, 1932년 12월 23일.

48 「結氷後の國境警備方針 滿洲國側と共同作戰 徹底的に封鎖する」, 『朝鮮新聞』, 1932년 9월 14일, 4면.

官)을 대대적으로 증원(增員)하기로 한 뒤, 수차례 조선총독부에 우량한 경찰관의 추천을 의뢰하여 고위급 경찰병력의 일부를 조선으로부터 충원하면서 경비기관을 확립해나가려고 했다.<sup>49</sup> 건국 초기 만주국에서는 치안공작의 진척에 따라 경비기관을 정비(整備)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경찰관을 증원하는 동시에 주로 고위 경찰관들을 조선 식민당국의 협조와 추천을 통해 충당해나갔다. 이와 관련해 1934년 12월 만주국의 경무사장(警務司長)은 조선총독부에 조선의 우수한 경관 50명의 추천을 의뢰했다. 조선총독부에서도 만주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조선의 각 도시사에게 희망자의 추천을 통달했다. 조선에서 경찰관이 만주국으로 들어간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로 순사부장급(巡査部長級) 이상의 고위경찰관을 추천하곤 했다.<sup>50</sup> 경무(警務)관계 방면에서도 만주국과 조선 사이에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만주국에서는 경찰경비체계 이외에 수상경비체계(水上警備體系)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33년 당시 만주국과 조선에서는 압록강과 혼강(渾江)<sup>51</sup>의 수상경비(水上警備)를 담당하기 위해 수상경찰국(水上警察局)과 수상경찰대(水上警察隊)를 조직해서 운영했다. 그런데 갓 태동한 만주국 측과 식민통치 기간이 오래되어 경비체계가 갖추어진 조선 측의 수상경비력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동년 3월 당시 압록강과 혼강의 경비를 담당한 만주국의 수상경찰국은 분국(分局) 6개소, 분소(分所) 13개소였고, 경비원 총수는 240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조선 측 압록강안(鴨綠江岸)에는 경찰서 15개소, 주재소(駐

49 「滿洲國警察制度, 朝鮮派遣の人選を急ぐ」, 『朝鮮新聞』, 1932년 11월 3일, 1면. 1933년 12월의 사례를 보면, 만주국에서 필요한 인원은 사무관 1명, 警正 1명, 警佐 17명, 屬官 3명, 기사 1명, 巡官 17명 등 합계 40명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滿洲國警務指導官으로 朝鮮警官을 招請 성적이 우수한 경관 四十명을 追薦하여 달나 委囑」, 『每日申報』, 1933년 12월 17일, 2면 참조.

50 「朝鮮警察官五十名推薦, 滿洲國警務司長から總督府に依頼」, 『朝鮮新聞』, 1934년 12월 9일, 2면.

51 압록강의 지류로서 압록강을 통해 만주국 내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강이어서 당시 水上警備隊의 관할범위에 있었고, 密輸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

在所) 52개소, 출장소(出張所) 50개소가 있었고, 직원 총수도 1,41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시설내용도 조선 측이 만주국 측에 비해 우월했다. 따라서 만주국 측에서는 국경의 수상경비 확충이 긴급하다는 의견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었다.<sup>52</sup> 식민통치체제가 갖추어진 조선과 달리, 신생국 만주국으로서는 국경경비 체제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붙어 강을 건너다니기 쉬운 결빙기나 반만항일세력이 은둔하기 용이한 녹음기에는 항일활동이 활발해졌다. 만주국에서는 국경변연지대에서 경제개발을 하려면 항일세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봉천경비군사령부(奉天警備軍司令部)에 동변도(東邊道)의 비적(匪賊)에 대한 대토벌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sup>53</sup>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 결빙기와 녹음기에 항일활동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는 193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국경 방면의 관헌(官憲)과 민간인들이 항일세력으로부터 입은 피해규모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건수는 예년에 비해 약 3배의 격증을 보이고 있었다.<sup>54</sup> 결빙기나 녹음기에는 만주국과 조선 식민당국에서 특별경계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치안당국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이 시기는 국경 경비상의 ‘번망기(繁忙期)’에 해당했던 것이다.

결빙기가 되면 압록강과 접해 있던 조선의 평안북도 경찰부(警察部)에서는 국경의 제일선(第一線)에 경찰관들을 증원해서 항일유격대가 침입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했다.<sup>55</sup> 이 기간에는 특히 강폭이 좁아 쉽게 건널 수 있는 국경 상류지역 조선의 각 경찰서에서 더욱 긴장된 상태로 경비를 하면서 서원(署員)의 보충,

52 「國境水上警備の擴張問題積極化す朝鮮側の警備と雲泥の差あり 滿洲國側で考究中」, 『滿洲日報』, 1933년 3월 17일.

53 「靑葉をくぐる反滿匪 暗躍物凄い對岸國境 滿洲國は大討伐を敢行」, 『朝鮮新聞』, 1934년 6월 21일, 7면.

54 「土兵團 出現激増으로 國境警備策講究 結氷期는 絶박 豫산은 부족」, 『朝鮮中央日報』, 1935년 11월 8일, 2면.

55 「結氷後の國境警備方針 滿洲國側と共同作戰 徹底的に封鎖する」, 『朝鮮新聞』, 1932년 9월 14일, 4면.

경비배치(警備配置) 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sup>56</sup> 결빙기 못지않게 반만항일 활동이 왕성해지는 녹음기에도 압록강 유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조선의 평북 경찰부에서는 수상교통(水上交通)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선의 경비도 엄격히 했다.<sup>57</sup>

1935년 말 압록강의 결빙기가 닥치면서 국경경비문제가 절박해지자, 평안북도 경찰부(警察部)에서는 관하(管下) 경찰서장회의까지 중지하고 각 서장(署長)이 친히 제일선 경비현장을 일일이 시찰·지휘했다. 평안북도 경찰부의 각 과장들도 직접 경비현장을 순시하면서 기만한 연락(連絡)을 취하고 있었다. 게다가 평북 경찰부의 고등과장(高等課長)은 제일선 경비의 특별시찰뿐만 아니라 대안의 만주국 경비당국과의 연락체계에 관하여서도 상세한 조사를 벌였다.<sup>58</sup> 또한 함경남북도 경찰부장과 평안북도 고등과장들은 동년 11월 잇달아 조선총독부 관계당국과 대책을 협의하면서 경비활동에 필요한 13만 원의 경비를 요청하기도 했다.<sup>59</sup>

만주국에서는 결빙기 및 녹음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조선 식민당국에 국경 경비강화 및 협조를 요청하곤 했다. 가령 1934년 3월 1일 만주국에서는 ‘만주국’을 ‘만주제국(滿洲帝國)’으로 국격(國格)을 바꾸면서 황제 즉위식과 건국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조선에 경비강화에 따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동년 1월 말 만주국 경무사장(警務司長)이 조선총독부를 방문해 선·만 국경의 경비문제와 관련된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 만주국 군주(君主)의 즉위식(即位式)에 즈음한 국경 중심의 특별경비를 할

56 「平安北道，結氷を前に國境各署の緊張 滿洲國中央文化に追はれ馬賊は江岸東邊道に集中，今年の警備は困難」, 『朝鮮新聞』, 1933년 10월 26일, 4면.

57 「靑葉をぐる反滿匪 暗躍物凄い對岸國境 滿洲國は大討伐を敢行」, 『朝鮮新聞』, 1934년 6월 21일, 7면.

58 「安田平北高等課長 國境第一線 視察 滿洲國과도 連絡調査를 實行」, 『毎日申報』, 1935년 10월 25일, 4면.

59 「土兵團 出現激增으로 國境警備策 講究 結氷期는 絶박 豫산은 부족」, 『朝鮮中央日報』, 1935년 11월 8일, 2면.

것, ㉔ 만주국과 조선의 군부(軍部)와 경찰(警察)이 협력하여 국경경비를 더욱 공고히 할 것, ㉕ 국경밀수(密輸)를 철저히 단속할 것, ㉖ 만주국에서의 조선 경관(警官)의 채용(採用), ㉗ 만주이민(滿洲移民)의 보호(保護) 등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추후에 선·만 국경경비 및 기타 국경문제에 관해서 선·만 당국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sup>60</sup>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만주국 제정(帝政)확립을 위한 국경일을 앞두고 1934년 2월 중순부터 3월 1일까지 모든 고등경찰 관계자를 비롯하여 비번순사(非番巡査)까지 총동원해 국경을 넘나드는 선박과 철도를 중심으로 내외국인(內外國人)의 정찰을 엄밀히 하는 동시에 국경 일대에 대한 특별 경계를 실시했다.<sup>61</sup> 1934년 3월 1일에도 만주국 건국 기념일과 관련해 1월부터 3기로 나누어 삼엄한 경계망을 펼쳤다. 조선총독부에서도 만주국의 간청에 따라 평안북도 및 함경남북도 삼도(三道)의 이동경찰(移動警察)과 기타 조직을 독려하여 만주국 입국자(入國者)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사찰경계(査察警戒)를 확고히 하도록 지시하고<sup>62</sup> 선·만 국경변연지대에 대한 경비활동을 강화시켰다.

건국 초기 만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치안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던 연길현(延吉縣)과 안동현(安東縣), 장백현(長白縣) 등 조선과의 접경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비력이 부족해서 치안을 완전히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간도(間島)지방 역시 치안확립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었다. 그 때문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만주국 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했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경비력 확충문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sup>63</sup>

당시 만주국에 있던 경찰관은 조선총독부 소속이 아닌 일본외무성 소속이어서

60 「國境警備의 強化 滿洲國側과 協力하야 警務司長 入城 總督府側과 協議」, 『每日申報』, 1934년 2월 3일, 7면.

61 「滿洲國慶日 앞두고 朝鮮內特別警戒 선박과 철도를 중심으로 하야 內外國人을 嚴密偵察」, 『每日申報』, 1934년 2월 7일, 7면.

62 「滿洲國의 盛典을 控へて 警戒至嚴 總督府でも 國境警戒」, 『朝鮮新聞』, 1934년 2월 13일, 7면.

63 「在滿同胞保護코자 集團地에 警備擴充 동시에 國境警察力도 強化 滿洲國과 折衷中」, 『每日申報』, 1934년 6월 14일, 1면.

서 만주국의 경찰 경비력을 확충하는 문제 역시 일본외무성의 소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34년 6월 일본외무성 동아시아국(東亞局) 제2과 소속 이사관이 경성에 들어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과 협의를 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당시 간도(間島)에 있던 외무성 소속 경찰관 약 700명으로는 ‘비적(匪賊)’(항일세력) 출몰(出沒)에 대해 경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간도지방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무장경찰대(武裝警察隊)를 배치하려고 계획했다. 그래서 해당 이사관은 이 문제를 만주국과 절충하기 위해 도만(渡滿)하기에 앞서 조선에 들러 간도지방의 경비력 확충에 부응해 조선에서도 국경 경비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외무성의 해당 이사관은 조선의 국경 경비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조사한 뒤, 일본외무성 소속 경비력의 확충과 동시에 조선의 국경 경비력도 강화하겠다는 일본외무성의 계획도 조선총독부에 전달했다.<sup>64</sup> 신·만 국경 경비문제는 양 당사국인 만주국과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외무성도 얽혀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5년 7월 만주국 군정부(軍政部)에서는 국경감시대(國境監視隊)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8월 말까지 그 편제를 마쳤다. 그중 조선인으로 편성된 군대 1개 중대를 혼춘현(琿春縣) 국경선에 배치하려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sup>65</sup>

그런데 만주국에서는 ‘1935년도(年度) 추동계(秋冬季) 치안숙정공작’ 이전까지 군사토벌 위주의 치안공작을 전개해왔다. 그렇지만 <사료 13>에 제시한 일본 정보당국의 치안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사토벌 위주의 치안활동은 광범한 농민대중을 인적·물적 원천으로 삼고 산림지대(山林地帶)를 중심으로 유격전술을 구사하는 항일유격대, 특히 공산유격대를 소멸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항일유격대(특히 공산유격대)의 모체

64 「在滿同胞保護코자 集團地에 警備擴充 동시에 國境警察力도 強化 滿洲國과 折衷中」, 『每日申報』, 1934년 6월 14일, 1면.

65 「琿春縣 國境地帶에 朝鮮人 兵隊 配置 이십세 이상 보고 졸업생을 모집 滿洲國 軍政부의 첫 試驗」, 『每日申報』, 1935년 7월 25일, 2면.

역할을 하던 농민 혹은 외곽지원단체들을 항일유격대와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항일유격대에게만 충갈을 겨누는 것은 병산의 일각만 쳐부수는 단세포적인 대증요법(對症療法)에 불과했기 때문이다.<sup>66</sup>

〈사료 13〉 東邊道 匪賊의 주류는 思想匪·政治匪인 共產匪와 反滿抗日匪인데, 그들은 결코 단순한 비적이 아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정강을 가지고 민중의 해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치적·군사적·사상적 단체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武力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政治戰·思想戰을 전개해야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별 지구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은 비적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우군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난 비적 수만을 비적 세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비적 수에다 通匪者와 半農半匪者를 합친다면 실제의 비적 수는 수배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적의 정신적 우군과 싸우려면, 강력한 사상전과 정치전을 채용해서 철저한 匪民分離工作을 추진한 뒤, 그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宣撫工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sup>67</sup>

따라서 그러한 만주항일무장투쟁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한 일제 치안 당국자들은, 군사토벌 중심 공작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여러 가지 치안방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관동군(關東軍)에서는 1936년 4월부터 1939년 3월까지에 이르는 ‘만주국치안숙청계획대강(滿洲國治安肅清計劃大綱)’을 정하였고, 만주국에서는 이 대강에 기초하여 ‘삼개년치안

66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1996, 앞의 책 참조.

67 「對東邊道抗日軍民進行思想戰和政治戰」,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1991, 『東北大討伐』, 北京: 中華書局, 311~312쪽; 滿洲國國務院治安部軍事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 第2輯, 新京: 同顧問部, 243~244쪽.

숙청계획요강(三個年治安肅清計劃要綱)’을 책정했다.<sup>68</sup> 이러한 숙정(肅正) 계획이 수립되자, 1936년 9월 관동군의 지령에 따라 제일 먼저 1936년 10월부터 1938년 3월까지 ‘북부동변도(北部東邊道) 치안숙정공작(治安肅正工作)’이 실시되었다. 당시 만주국 정보당국이 분석한 것처럼,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압록강 쪽 동변도(東邊道)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공산유격대는 다른 어떤 항일유격대보다 우세했고 민심(民心)을 장악할 우려가 있었으며, 장비(裝備) 및 훈련 방면에서도 뛰어나 오히려 만주국 측의 경찰대(警察隊)를 능가하고 있었다.”<sup>69</sup> 그래서 동변도 일대는 만주국 건국 초기 ‘만주국 유일의 비단근거지(匪團根據地)’라고도 불렸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동변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북부동변도(北部東邊道) 치안숙정공작’에서는 만주국군(滿洲國軍)이 주력(主力)이 되어 북부동변도 9개 현(縣)[통화(通化)·집안(輯安)·임강(臨江)·장백(長白)·몽강(蒙江)·휘남(輝南)·금천(金川)·유하현(柳河縣) 등에 근거지를 두고 항일투쟁을 하고 있던 항일유격대에 게 총구(銃口)를 겨누었다.<sup>70</sup>

한편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는 치안활동과 관련해 강을 사이에 두고 선·만 두 지역 간에 다양한 협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령 1934년 5월 만주국의 안동현(安東縣)과 조선의 신의주(新義州)에서는 만일의 공습에 대비해 양 지역이 연합해서 방공대연습(防空大演習)을 행하기도 했다.<sup>71</sup> 또한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만주국 경내(境內)에서 토벌작전이나 항일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부

68 岡部善修 編著, 1944, 『滿洲國治安小史』, 新京: 滿洲國警察協會, 62쪽; 高樹橋, 1993, 『東北抗日聯軍後期鬪爭史』, 瀋陽: 白山出版社, 5쪽. 이 大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岡部善修 編著, 1944, 위의 책, 62~63쪽 참조.

69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編, 1935, 『省政彙覽』(第1輯 吉林省篇), 新京: 同情報處, 317쪽.

70 滿洲國治安部軍事顧問部 編, 1937, 앞의 책, 2쪽; 滿洲國軍刊行委員會 編, 1970, 『滿洲國軍』, 東京: 蘭星會, 342~404쪽 참조.

71 「安東, 新義州聯合防空大演習 好成績裡終了」, 『每日申報』, 1934년 5월 26일, 7면.

상을 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갓 출범해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만주국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조선의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sup>72</sup> 만주국과 조선 사이에는 전투 중 부상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만주국의 항일유격대에서는 요원을 조선으로 보내 필요한 군수물자를 구하기도 했는데, 이때 조선의 경비관서(警備官署)에서는 체포한 항일요원을 만주국 경비당국에 인도하기도 했다.<sup>73</sup>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어느 일방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 여부에 상관없이 항일요원에 대한 단속·체포·취조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을 자연스럽게 상대국에게 인도하고 있었다.

1936년에 접어들어 만주국과 조선 식민당국에서는 선·만의 국경경비에 대한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과 공동경비작전의 전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경경비를 둘러싼 선·만 간의 협의와 공동작전도 계속 이어졌다. 실제로 1936년 11월 결빙기를 맞이해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비망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자 약 8만 원의 임시지출을 통해 국경 제1선의 수비대를 보충·강화하는 동시에 무기와 탄약을 전면적으로 확충·강화했다. 또한 선·만 경비기관 사이의 긴밀한 연락을 지원하고 선·만 당국의 공동토벌공작을 벌이기 위해 제2선, 제3선의 경찰관 수를 증강 배치했다. 또한 제1선에는 10명 내지 20명씩으로 구성된 특별 경비대를 조직하여 종래 조선 안에 잠입한 항일유격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토벌에 임하도록 했다.<sup>74</sup> 이 밖에 조선총독부의 경무국장(警務局長)과 만주국의 헌병사령관이 회합하여 선·만의 공동토벌공작(共同討匪工作)에

72 「平安南道, 戰傷病兵, 滿洲國境の兩事變に活動の勇士, 平壤衛戍病院への收容者けふ迄に五十三名」, 『朝鮮新聞』, 1932년 7월 23일, 3면; 「現職滿洲國警官이 匪賊襲來를 援助 負傷한 警士는 楚山醫院에 內通者는 匪賊과 合勢逃走」, 『每日申報』, 1935년 9월 10일, 5면.

73 「反滿軍 密使 二名 碧潼署에서 捕縛 취조 후 만주국경찰서로 인도」, 『每日申報』, 1936년 5월 21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우선 강안(江岸) 일대에서 상호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일본계(日本系) 경관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제일보로서 평안북도 의주(義州)경찰서 청성주재소(淸城駐在所) 대안인 장전하구서(長甸河口署)에 동년 11월부터 일본계 경사 1명을 배치했다. 이를 계기로 점차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의 만주국 각 경찰서에도 일본계 경찰관 수를 늘려 배치하기 시작했다.<sup>75</sup> 1936년 12월에는 만주국의 토벌(討伐)로 인해 반만병(反滿兵)이나 공산계(共產系) 유격대들이 조선 국경의 대안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이 불안해지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국경변연지대에 경관을 증파하기도 했다.<sup>76</sup>

만주국 중·후반기에 접어들어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선·만 양국의 협조체계는 점점 긴밀해졌다. 1936년 12월 조선총독부의 오노[大野] 정무총감(政務總監)은 ‘선만일어’ 정책의 일환으로 선·만의 치안문제 이외에 경제문제 등도 긴밀히 협의하고자 만주국의 수도 신경(新京)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만주국 당국자들과 압록강 수력발전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 무산(茂山)의 철광(鐵鑛)개발문제 등을 협의했다.<sup>77</sup> 1939년 4월 만주국 정부는 지방행정(地方行政)의 운용실적(運用實績)에 의하여 성(省)의 신설폐합(新設廢合)을 단행(斷行)하고, 동시에 국경 방면의 성공서(省公署) 수뇌부(首腦部)의 인사쇄신(人事刷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국경변연지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성공서의 수뇌부에는 일류인재(一流人才)를 충당하여 2, 3년간은 이동

74 「武器彈藥等擴充으로 國境警備一層強化 朝鮮과 滿洲間의 連絡緊密로 討伐隊도 大量增員」, 『每日申報』 1936년 11월 19일, 7면.

75 「國境對岸警備에 日系警官을 配置: 조선과 만주간의 의견일치로 共同討匪 第一步」, 『每日申報』, 1936년 11월 23일, 2면.

76 「反滿共匪集中으로 國境警備強化: 經費는 滿洲事件費로」, 『每日申報』, 1936년 12월 8일, 2면.

77 「經濟와 警備上 鮮滿一如促進 國際橋架設調印次 渡滿前 大野總監時事談」, 『每日申報』, 1936년 12월 8일, 2면.

하지 않고 성행정(省行政)에 전임(專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sup>78</sup> 이것은 국경경비에 유능한 인재들을 국경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경경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이에 더해 만주국에서는 제3기 치안숙정공작의 일환으로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길림(吉林)·간도(間島)·통화(通化) 삼성연합(三省聯合) 치안숙정공작’[혹은 동남부연합(東南部聯合) 치안숙정공작]을 전개했다.<sup>79</sup> 이 공작으로 인해 항일유격대, 주로 중국공산당의 지휘하에 있던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의 잔여부대는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 영내로 도피해 훗날의 투쟁상황을 모색하게 되었고, 1942년 이후 만주에서의 항일유격대는 사실상 항일무장투쟁의 무대에서 사라졌다.<sup>80</sup> 이처럼 치안숙정공작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가운데 1941년에는 만주국과 조선 사이에 ‘선만일여’, ‘일덕일심(一德一心)’이라는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논리가 강화되면서 조선 측 경무(警務)관계자들이 만주국 수도新京(新京)에서 개최된 만주국의 ‘각성(各省) 경무처장회의(警務處長會議)’에 참석할 정도로,<sup>81</sup> 선·만 양국에는 국경경비나 치안 방면에서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

78 「省의 新設廢合 斷行 國境方面公署엔 一流人才充當 滿洲國에서 懸案實施」, 『每日申報』, 1939년 2월 26일, 1면.

79 滿洲國軍刊行委員會 編, 1970, 『滿洲國軍』, 東京: 蘭星會, 292~421쪽;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譯, 1990, 『滿洲國史』(各論) 上卷, 長春: 同編寫組, 500~519쪽; 윤휘탁, 1996, 앞의 책, 119~120쪽.

80 윤휘탁, 1996, 위의 책, 121쪽.

81 「滿洲國警務處長會議의 朝鮮側出席者」, 『每日申報』, 1941년 2월 26일, 1면.

## IV. 맺음말

만주국에서는 무력충돌사건이 빈발하던 만주국·소련·몽골 국경변연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국경을 마주한 압록강-백두산-두만강 변연지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제국의 일원인 조선과 만주국의 관계는 이른바 ‘선만일여(鮮滿一如)’라는 불가분의 관계로 선전되어 선(鮮)·만(滿) 국경변연지대는 두 개의 식민지를 가르는 경계지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과 만주국 사이에는 명확한 국경선 개념이 없고 이 지대에 대한 단속이나 책임 소재도 모호했다. 더욱이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중앙부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산림지대가 분포하고 있었다.

상술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항일무장세력은 백두산 산악지역에 은거할 수 있었고 산간 주민들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치안력이 약하거나 경비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 활발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강을 건너다니기 용이한 결빙기(結氷期)나 수목(樹木)·농작물 등이 무성해 은닉하기 쉬운 녹음기(綠陰期)에는 항일투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선·만 국경변연지대에는 아편재배 농민이 많았는데, 일부 항일세력은 이들로부터 획득한 아편을 주요 재원(財源)으로 삼아 자신들의 존속과 항일투쟁을 지속해나가기도 했다. 더욱이 항일세력은 만주국의 군사토벌이나 치안숙정공작의 여파에 따라 동부국경인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으로 도피해 있다가 만주국의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강을 건너와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소련 측에서도 암묵적으로 항일세력을 지원·이용하거나 선동하는 동시에 만주국의 정부기관, 군대, 경찰조직 내에 다양한 스파이를 침투시켜 적화(赤化)공작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만주국의 치안을 교란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치안이나 주민생활, 산업활동 등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즉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 항일유격대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치안이 불안하다보니, 국경변연지대의 민심은 흉흉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만주국에 거주하던 수많은 조선 사람이 두만강을 넘어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조선의

함경남북도 지역이나 경비력이 미치는 곳으로 일시 피난했다가 귀환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당시 만주가 가난한 조선인 이주자들의 새로운 터전 기능을 했듯이, 조선 역시 위기에 직면한 만주 거주 조선인들의 일시적인 도피처로 기능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상술한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항일투쟁은 자연히 선·만 식민당국들의 주목을 끌었고 자연스럽게 선·만 두 식민당국의 대응태세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건국 초기 치안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신생국 만주국에서는 우선 조선총독부의 협조하에 조선으로부터 고위 경찰관들을 추천받아 경찰경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압록강·혼강(渾江)·두만강에서의 수상(水上)경비체계도 구축해나갔다. 반만항일투쟁이 활발했던 결빙기나 녹음기 그리고 만주국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때에는 국경경비를 둘러싸고 만주국과 조선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협력활동도 긴밀해졌다. 이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맞대고 있던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경찰기관에서는 경비병력을 증강시켜 만주국과 더불어 남북 방면에서 항일세력을 단속하거나 토벌활동을 벌였다. 또한 항일세력의 아편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을 종래의 아편재배 허가지역에서 금지지역으로 바꾸기도 했다.

더 나아가 만주국 건국 초기 ‘만주국 유일의 비단근거지(匪團根據地)’라고도 불렸던 압록강 변연지대인 동변도(東邊道)지역에 대해서는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지휘하에 만주국군(滿洲國軍)이 주력이 되어 ‘북부동변도(北部東邊道)치안숙정공작’을 전개했다. 만주국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만주국에서 개최된 각성(各省) 경무처장회의(警務處長會議)에 조선 측 경무(警務)관계자들도 참석해 선·만 국경변연지대의 경비나 치안확립문제를 협의할 정도로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의 선·만 양국의 협조체계가 점점 긴밀해졌다. 결국 이러한 협조체계하에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항일투쟁이 점차 소멸되었고, 일부 세력은 우수리강을 건너 소련으로 도피해 훗날을 모색하게 되었다.

결국 선·만 국경변연지대에서는 만주국 초기 식민당국의 상대적인 국경경비시설의 소홀, 경비체계의 미비, 광범위한 산림지대의 분포, 일본과 적대적인

소련과의 접경에 따른 일시적인 도피 가능성 및 소련의 암묵적인 지원활동 등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항일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선만일여’, ‘일덕일심(一德一心)’ 등의 식민통치이념이 강화되는 가운데 만주국의 치안경비 체계가 갖추어지고 ‘비민분리(匪民分離)’를 특징으로 한 이른바 ‘치안숙정공작’이 실시되는 동시에, 만주국과 조선 식민당국 사이의 긴밀한 치안협력체제가 구축되면서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소멸되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 岡部善修 編著, 1944, 『滿洲國治安小史』, 新京: 滿洲國警察協會.
- 「結氷後の國境警備方針 滿洲國側と共同作戰 徹底的に封鎖する」, 『朝鮮新聞』, 1932년 9월 14일, 4면.
- 「經濟와 警備上 鮮滿一如促進 國際橋架設調印次 渡滿前 大野總監時事談」, 『每日申報』, 1936년 12월 8일, 2면.
- 「國境警備의 強化 滿洲國側과 協力하야 警務司長 入城 總督府側과 協議」, 『每日申報』, 1934년 2월 3일, 7면.
- 「國境對岸警備에 日系警官을 配置 : 조선과 만주간의 의견일치로 共同討匪 第一歩」, 『每日申報』, 1936년 11월 23일, 2면.
- 「國境線一帶匪賊被害 一年平均近三百件 滿洲事變以後에 再次로 激增: 過去十六年間統計」, 『每日申報』, 1935년 11월 21일, 7면.
- 「國境水上警備의 擴張問題積極化す朝鮮側의 警備と雲泥の差あり 滿洲國側で考究中」, 『滿洲日報』, 1933년 3월 17일.
- 「國境慈城對岸에 五百反滿軍襲來: 住民에게 冬服과 食糧其他強要 滿洲人避難者多數」, 『朝鮮中央日報』, 1934년 11월 15일, 2면.
- 「國境第一線に馬匪賊蠢き 鴨綠江で航行を威脅」, 『朝鮮新聞』, 1934년 8월 13일, 7면.
- 「對東邊道抗日軍民進行思想戰和政治戰」,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1991, 『東北大討伐』, 北京: 中華書局.
- 「對岸輯安縣通溝 大刀會가 襲擊의 嚮 滿浦鎮署と守備隊가 朝鮮側의 警備に 急行」, 『朝鮮新聞』, 1932년 5월 9일, 3면.
- 「馬賊團大跋扈二十餘名拉去 十三道溝市街地 襲擊도 割策 阿片收穫期의 威南對岸」, 『東亞日報』, 1935년 8월 23일.
- 「馬賊들이 등쌀」, 『東亞日報』, 1935년 8월 16일.
- 「滿洲國境警備充實完備 派遣部隊各히 出發」, 『每日申報』, 1932년 5월 10일, 1면.

- 「滿洲國警務指導官으로 朝鮮警官을 招請 成績이 우수한 警官 四十명을 追薦하여 달나 委囑」, 『每日申報』, 1933년 12월 17일, 2면.
- 「滿洲國警務處長會議의 朝鮮側出席者」, 『每日申報』, 1941년 2월 26일, 1면.
- 「滿洲國慶日 앞두고 朝鮮內特別警戒 선박과 철도를 중심으로 하여 内外國人을 嚴密 偵察」, 『每日申報』, 1934년 2월 7일, 7면.
- 「滿洲國警察隊勇敢に活躍」, 『朝鮮新聞』, 1932년 12월 23일.
- 「滿洲國警察制度, 朝鮮派遣の人選を急ぐ」, 『朝鮮新聞』, 1932년 11월 3일, 1면.
- 「滿洲國攪亂は蘇聯共產黨の策動, 我が外務當局近く道義의警告を發せん」, 『朝鮮新聞』, 1934년 8월 24일.
- 「滿洲國境へ軍隊の集結, ロシア當局認む」, 『朝鮮新聞』, 1932년 4월 20일, 1면.
- 「滿洲國의警察隊 國境監視の爲め」, 『朝鮮新聞』, 1932년 4월 15일, 2면.
- 「滿洲國의盛典을控へて警戒至嚴 總督府でも國境警戒」, 『朝鮮新聞』, 1934년 2월 13일, 7면.
- 「滿洲國領事館新設에 蘇聯嘲笑的의拒絕 時機尙早라고 前言을 翻覆 滿洲國政府大 憤激」, 『每日申報』, 1935년 7월 14일, 2면.
- 「滿洲國領에 侵入하야 蘇聯이 軍事施設 頻頻한 不法侵犯에 滿洲國이 嚴重抗議」, 『每日申報』, 1934년 9월 21일.
- 「滿洲, 鴨綠江沿岸通化城は全くの無警察狀態, 叛徒跳梁의情報に除文海討伐に向ふ」, 『朝鮮新聞』, 1932년 4월 29일.
- 「滿洲, 討伐隊に逐はれて間島方面의共匪等蘇聯遁入을協議し, 代表者를以て交渉」, 『朝鮮新聞』, 1933년 12월 2일, 3면.
-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編, 1935, 『省政彙覽』(第1輯 吉林省篇), 新京: 同情報處.
- 滿洲國國務院治安部軍事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第2輯, 新京: 顧問部.
- 「木材にも豊年風 滿洲指してヒタ押し 毎日平均二十五車も搬出 國境漸く活氣づく」, 『京城日報』, 1933년 7월 14일.
- 「武器彈藥等擴充으로 國境警備一層強化 朝鮮과 滿洲間의 連絡緊密로 討伐隊도 大量増員」, 『每日申報』, 1936년 11월 19일, 7면.
- 「反滿共匪集中으로 國境警備強化: 經費는 滿洲事件費로」, 『每日申報』, 1936년 12월

8일, 2면.

「反滿軍 密使 二名 碧潼署에서 捕縛 취조 후 만주국경찰서로 인도」, 『每日申報』, 1936년 5월 21일.

「反滿軍千餘名을 蘇聯將校가 指揮: 滿洲治安攪亂에 積極進出 注目되는 昨今事態」, 『朝鮮中央日報』, 1934년 7월 8일, 2면.

「反滿分子를 庇護使嗾, 蘇聯警備艦事件에 滿洲國警告의 抗議」, 『朝鮮新聞』, 1933년 7월 12일, 1면.

「白砂城에 共匪出現 滿洲國稅關襲擊 현금 20원과 물품 강탈도주 國境一帶 人心洶洶」, 『每日申報』, 1932년 10월 8일, 8면.

「三角洲(黑龍江烏蘇里江合流點)에서 蘇聯撤退를 要求: 滿洲國訓令에 基하여 文書로 蘇聯領事에 抗議」, 『朝鮮中央日報』, 1934년 9월 22일, 1면.

「三千七百餘回에 五十九萬名襲來 殺傷九百人, 質拉去三千餘 國境對岸의 情勢」, 『朝鮮中央日報』, 1933년 9월 11일, 2면.

「省의 新設廢合 斷行 國境方面公署엔 一流人才充當 滿洲國에서 懸案實施」, 『每日申報』, 1939년 2월 26일, 1면.

「蘇聯軍事當局에서 極東戰備益擴充: 滿洲國境包圍의 施設急進行 赤衛軍總動員 狀態」, 『朝鮮中央日報』, 1933년 10월 24일, 1면.

「蘇聯軍用機越境問題에 關し 滿洲國峻烈なる 通達」, 『朝鮮新聞』, 1934년 10월 5일.

「蘇聯의 極東武備와 滿洲國攪亂工作: 最近日蘇開戰說을 盛히 宣傳」, 『朝鮮中央日報』, 1934년 7월 13일, 1면.

「蘇聯側 要塞로부터 滿洲國軍艦을 射擊 陳參謀, 蘇領事에 抗議」, 『每日申報』, 1934년 9월 9일, 2면.

「蘇聯側不法行爲를 滿洲國外交部發表」, 『朝鮮中央日報』, 1935년 10월 24일, 1면.

「蘇聯側에 對하여 滿洲側 抗議 提出: 國境 侵犯 等 不法行爲 指摘코 適切한 解決策을 要求」, 『朝鮮中央日報』, 1933년 8월 29일, 1면.

「蘇政府, 國境一帶에 赤衛隊秘密配置: 滿洲國實力行使豫想코 一日有事時의 準備라고」, 『中央日報』, 1933년 4월 22일, 1면.

「阿片二千兩不納하면 放火後全部銃殺 마적단들의 가혹한 착취법 長白同胞村마다 脅迫狀」, 『東亞日報』, 1935년 7월 28일.

「阿片採取期에 馬賊星火로 千與同胞避難中 재배한 아편을 안주면 죽인다고 不安한

- 長白縣一帶」, 『東亞日報』, 1935년 8월 28일.
- 「安東, 新義州聯合防空大演習 好成績裡終了」, 『每日申報』, 1934년 5월 26일, 7면.
- 「安田平北高等課長 國境第一線 視察 滿洲國과도 連絡調査를 實行」, 『每日申報』, 1935년 10월 25일, 4면.
- 「鴨綠江對岸地方에 反滿軍 出沒頻頻 出沒한 回數 實로 四千八百回 그 延人員 四十八萬三千六百餘名 豆滿江對岸보다 尤甚」, 『朝鮮中央日報』, 1933년 9월 11일, 2면.
- 「いかなの時期に入り心配なのは沿岸警戒陳まづ採木公司是傭兵を増加 八木理事 長奉天へ」, 『國境毎日新聞』, 1934년 4월 21일.
- 「長白縣阿片許可 耕作志願數百名」, 『東亞日報』, 1933년 4월 9일.
- 「在滿同胞保護코자 集團地에 警備擴充 동시에 國境警察力도 強化 滿洲國과 折衷中」, 『每日申報』, 1934년 6월 14일, 1면.
- 「朝鮮警察官五十名推薦, 滿洲國警務司長から總督府に依頼」, 『朝鮮新聞』, 1934년 12월 9일, 2면.
- 「靑葉をくぐる反滿匪 暗躍物凄い對岸國境 滿洲國は大討伐を敢行」, 『朝鮮新聞』, 1934년 6월 21일, 7면.
- 「土兵團 出現激増으로 國境警備策 講究 結氷期는 絶박 豫산은 부족」, 『朝鮮中央日報』, 1935년 11월 8일, 2면.
- 「平安南道, 戰傷病兵, 滿洲國境の兩事變に活動の勇士, 平壤衛戍病院への收容者 けふ迄に五十三名」, 『朝鮮新聞』, 1932년 7월 23일, 3면.
- 「平安北道, 結氷を前に國境各署の緊張 滿洲國中央文化に迫はれ馬賊は江岸東邊道に集中, 今年の警備は困難」, 『朝鮮新聞』, 1933년 10월 26일, 4면.
- 「海防艦も配置 滿洲國國境の警備 愈愈充實」, 『朝鮮新聞』, 1932년 5월 9일, 2면.
- 「現職滿洲國警官이 匪賊襲來를 援助 負傷한 警士는 楚山醫院에 內通者는 匪賊과 合勢逃走」, 『每日申報』, 1935년 9월 10일, 5면.
- 「琿春縣 國境地帶에 朝鮮人 兵隊 配置 이십세 이상 보고 졸업생을 모집 滿洲國 軍政部の 첫 試驗」, 『每日申報』, 1935년 7월 25일, 2면.
- 「黑龍江遡航中の 滿洲國汽船被擊 蘇聯軍隊의 不法行爲 外交部에서嚴重抗議」, 『每日申報』, 1934년 5월 16일, 2면.

## 단행본

-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尹輝鐸,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일조각.
- 高樹橋, 1993, 『東北抗日聯軍後期鬪爭史』, 瀋陽: 白山出版社.
- 滿洲國軍刊行委員會 編, 1970, 『滿洲國軍』, 東京: 蘭星會.
- 滿洲國史刊行會 編, 1970, 『滿洲國史』(各論) 上卷,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譯, 1990, 『滿洲國史』(各論) 上卷, 長春: 同編寫組.
- 滿洲國治安部軍事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 新京: 滿洲國治安部軍事顧問部.
- 末光高義, 1939, 『支那の秘密結社と慈善結社』, 大連: 滿洲評論社.
- 山田豪一, 2003, 『滿洲國の阿片專賣』, 東京: 汲古書院.

## 논문

- 권경선, 2017. 4, 「근대 해항도시 안동의 산업구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16집.
- 김주용, 2009, 「만주지역 도시화와 한인이주 실태-봉천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5집.
- 김지환, 2013, 「安奉鐵道 부설과 중국동북지역 신유통망의 형성」, 『中國史研究』 제87집.
- 김태현, 2017, 「신의주·安東'간 密輸出 성격과 조선총독부 團東의 양면성(1929~1932)」,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강, 2017. 9, 「1930년대 만주지역의 아편재배와 한인, 그리고 匪賊」,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2집.
-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 제43집.
- 배재수, 2005, 「식민지기 조선의 목재수급 추이 및 특성」, 『경제사학』 제38집.
- 손승희, 2011, 「근대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만철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 송병진, 2014, 「북중국경조약과 해양경제계획협정의 승계 문제」,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 오미일, 2017, 6, 「간도의 통로, 근대 會寧지방의 일경과 생활세계」, 『역사와 세계』 제51집.
- 오병한, 2019, 9, 「滿洲事變 이전 중국 安東에서 일본의 領事館警察署 설치와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0집.
- 윤휘탁, 2017, 10, 「중국어 북한의 국경관리실태: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110집.
- \_\_\_\_\_, 2018, 4, 「中國의 吉林省 東部邊疆 및 두만강 出海認識과 戰略」, 『中國史研究』 제113집.
- 이경미, 2016, 8, 「일제하 新義州 木材業界의 변동과 木材商組合의 활동(1910~1936)」, 서울대학교 대학원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석사학위논문.
- 이은자, 2008, 「한중간 영토 분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아시아문화연구』 제14집.
- \_\_\_\_\_, 2014, 6, 「중일전쟁 이전 시기 중국의 국경도시 安東의 이주민-교류와 갈등의 이중주」,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2집.
- 이은자·오미일, 2013, 「1920~1930년대 국경도시 신의주의 華工과 사회적 공간」, 『史叢』 제79집,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 이장희, 2011, 「통일후 조중국경조약의 국가승계문제」, 『白山學報』 제91집.
- 조운경, 2008,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학』 제31집.
- 賈小壯, 2015, 「開埠通商與安東小商埠城市社會變遷研究(1906~1931)」,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角張繁, 1935, 「東邊道に於ける匪賊の動向」, 大亞細亞日本青年聯盟 編, 『第一回滿洲研究團報告』, 東京: 同聯盟.
- 姜麗, 2007, 「鴨綠江流域森林資源與安東縣木材中心市場的形(1876~1928)」,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江沛·程斯宇, 2014, 「安奉鐵路與近代安東城市興起(1904~1931)」, 『社會科學輯刊』 第5期.
- 綦鋒, 2014, 「近代安東海關研究(1907~1932)」,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 羅越, 2011, 「近代安東地區蠶絲產業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蕾萌, 2010, 「近代丹東城市規劃的歷史研究與啓示」, 大連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 葉宗恩, 2017, 「安東鐵路附屬地發展概述」, 『檔案春秋』第3期.
- 魏琳娜, 2007, 「自開商埠與丹東城市近代化研究(1903~1931)」,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玉清, 2010, 「論丹東絲綢在東方絲路交往中的歷史地位和作用」,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張志勇, 2014, 「安東港的興盛及其原因探析」,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 
- 菅野直樹, 2000. 8, 「鴨綠江採木公司与日本の滿州進出-森林資源をめぐる對外關係の變遷」, 『國史學』第172號.
- 永井リサ, 1999,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邊境開發: 安東の柞蠶製絲業を例として」, 『史學雜誌』第108卷 第12號.
- 塚瀨進, 1990. 10, 「日中合弁鴨綠江採木公司の分析-中國東北地域における日本資本による林業支配の特質」, 『アジア經濟』第31卷 第10號.

## 조선과 만주국 국경변연지대(國境邊緣地帶)에서의 항일투쟁과 일제 식민당국의 대응

- 조선의 신문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윤휘탁

식민지 시기 조선과 만주국은 모두 일본제국의 범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만주국 사이에는 명확한 국경선 관념이 없었다. 또한 조선과 만주국 사이의 국경변연지대(國境邊緣地帶)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책임도 모호했다. 더욱이 압록강과 두만강 ‘변연지대’에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산림지대가 분포하고 있어 조선과 만주국의 치안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항일투쟁 세력은 산림지대에 숨어서 투쟁을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 특히 얼음이 얼어서 강을 건너기 쉬운 겨울이나, 수목과 농작물이 자라서 은닉하기가 쉬운 여름에는 항일투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일부 항일세력은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지대에서 아편을 재배하는 농민들로부터 아편을 강탈하거나 제공받아 항일투쟁을 지속하기도 했다. 더욱이 항일세력은 만주국의 군사토벌과 치안활동이 강화되자, 동부국경을 넘어 소련 영토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때 소련에서는 항일세력을 지원하거나 이용해서 만주국의 치안을 교란시켰다. 이처럼 조선과 만주국의 국경변연지대에서 항일투쟁활동이 활발해지자 민심이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압록강-백두산-두만강으로 이어지는 변연지대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강을 건너 조선의 북부지역으로 피난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과 만주국에서는 국경변연지대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 우선 만주국에서는 조선 식민당국의 협조를 얻어 조선의 고위 경찰관들을 추천받아 경찰경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치안상황이 좋지 않은 여름이나 겨울, 그리고 만주국의 중요한 국가행사가 열릴 때는 만주국과 조선 사이의 치안정보 교류와 협력활동이 활발해졌다. 즉 조선 북부지역의 경찰기관과 만주국의 경비기관이 합동으로 항일활동을 단속하거나 토벌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만주국에서는 항일세력의 자금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압록강 및 두만강 변연지대에서의 아편재배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만주국에서는 항일유격대와 농민을 분리시키고 항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치안공작을 다방면으로 전개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 당국 사이에 긴밀한 치안협력체제가 구축되면서 만주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하게 소멸되어갔다.

**주제어:** 조선, 만주국, 항일무장투쟁, 선(鮮)·만(滿) 국경변연지대, 압록강, 두만강, 치안협력체제

## ABSTRACT

# Japan's Response to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the Border Area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滿洲國)

Yoon Hwytak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Joseon and Manchukuo (滿洲國) belonged to the Japanese Empire, there was no clear concept of borderline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It also obscured the authority or responsibility to crack down o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Moreover, the vast forest areas centered on Baekdusan Mountain were spread around the border between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thus the security capabilities of Joseon and Manchukuo were not adequately enforced. Therefore, the anti-Japanese guerrillas could hide in the forest and continue the struggle. In particular, the anti-Japanese struggle became more active during the winter, when ice was frozen and it was easy to cross the rivers, and when trees and crops grew, which made it easier to conceal. In addition, some anti-Japanese forces continued

the anti-Japanese struggle by extorting or providing opium from farmers growing opium o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Moreover, the anti-Japanese forces fled to the territory of the Soviet Union beyond the eastern borders, as military power and security activities in Manchukuo were strengthened. At this time, the Soviet Union supported anti-Japanese forces and disrupted the security of Manchukuo. As the anti-Japanese struggle became active in the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public sentiment was not amicable. As a result, Koreans living in the border area fled across the river to the northern region of Joseon. Meanwhile, Joseon and Manchukuo began to work closely together to establish border security. First, in Manchukuo, with the help of the Korean colonial authorities, they began to establish a police guard system as recommended by senior Joseon police officers. In addition,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when the security situation was poor, and during important national events of Manchukuo,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Manchukuo and Joseon became active. In other words, police agencies in the northern part of Joseon and security agencies in the Manchuria countries jointly cracked down on anti-Japanese activities or engaged in punitive actions. Manchukuo also banned opium cultivation in the Yalu and Tumen Rivers to block the sources of anti-Japanese forces. Moreover, Manchukuo deployed security operations in various ways to separate anti-Japanese guerrillas and farmers and to overpower the anti-Japanese forces.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a clos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Manchukuo and Joseon colonial authorities,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Manchukuo started to be extinguished rapidly since the late 1930s.

**Keywords:** Joseon, Manchukuo,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border between Joseon and Manchukuo, Yalu River, Tumen River, security cooperation system



# 일제 말 『매일신보』의 조선인 학병 동원 담론의 양상과 특징

윤효정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보도 실태
- III. 진정한 황국신민화의 필수 절차로서 학병 지원
- IV. '국민'의 윤리적 의무로서 강제된 '자기결정'
- V. 학병 '지원' 회피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 VI. 맺음말

## I. 머리말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래 1941년 12월 일제는 진주만 공습을 개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역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sup>1</sup>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일제의 침략전쟁 목적과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전시 동원의 양태 역시 변동시켰다. 또한 연합국의 반격과 전황의 변경에 따라 ‘대동아공영권’의 내용은 수정되었고,<sup>2</sup> 조선의 위상과 역할 역시 조정되고 강화되었다.<sup>3</sup>

이렇듯 조선의 전쟁 수행 역할이 재편되고 제고되는 속에서 1943년 10월 20일 일제는 육군특별지원병입시채용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1917~1923년 사이에 출생한 대학과 고등전문학교의 조선인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징집유예를 해제했다(이하 학도지원병제).<sup>4</sup> 학도지원병(이하 학병) 적격자들은 1944년 시행

---

\* 투고: 2020년 1월 16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6).

1 1941년 12월 이후의 전쟁을 일제는 ‘대동아전쟁’으로, 미국은 ‘태평양전쟁’으로 명명했다. 대동아전쟁은 ‘천황’을 중심으로 내지-동아-대동아로 동심원적으로 확장한 제국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태평양전쟁은 태평양 전장을 유럽 전장과 구분한 미국의 용어였다. 이 두 용어는 제국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자는 군국주의의 색채로 인해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거부감이 크며, 후자는 아시아 지역의 전쟁 상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태평양 전역과 더불어 아시아 대륙의 전쟁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가 제기되었다. 김명섭, 2009,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2, 77~81쪽.

2 이에 대해서는, 이형식, 2018, 「‘내파’하는 ‘대동아공영권」, 『사총』 93 참조.

3 오태영, 2011,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의 위상 변동-인문사 편집부 편, 『대동아전쟁과 반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

4 학도지원병제 실시를 위한 제반 법령의 내용 및 절차는 표영수, 2002,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3, 117~118쪽 참조.

예정이었던 징병제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들로, 학도지원병제의 발표와 시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도지원병제는 법제상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했다. 그러나 ‘지원이라는 이름의 징병’<sup>5</sup>이라는 표현에서 상징되듯 이 제도의 시행에서 자발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 점은 지원에서 징병검사, 입대, 탈영까지 학병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처음 체계화한 강덕상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다.<sup>6</sup> 그는 조선 내 적격자 중 96%라는 높은 지원율 이면에 있었던 반복적인 슬로건을 활용한 언론의 선동, 경찰의 개입과 적격자 가족에 대한 협박, 학교 당국의 강요에 가까운 설득, 친일 협력자들을 동원한 강압적인 권유 등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도지원병제는 적격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 전 요소를 가동시켜 ‘지원할 것’을 강요한 명분상의 지원일 뿐이었다.

이후 표영수는 학도지원병제의 시행을 강제동원의 한 형태로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양학병사건과 같은 집단 저항과 학병들의 부대 탈출 현상에 주목했다.<sup>7</sup> 이에 따르면, 저항과 탈주는 학도지원병제의 강제성을 증명했다. 자발성에 따른 지원이었다면 저항과 탈주는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도지원병제는 법제상 지원제였음에도 강제되었다는 점이 구명되었다. 이후 연구의 관심은 ‘지원’을 강제한 방식으로 옮겨졌다. 류시현은 일제와 조선인 협력자들이 조선 민족을 위해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는 논리와 수치심 유발과 같은 ‘감성동원’의 방식을 전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sup>8</sup>

5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일제 강점기말 조선학도병의 자화상』, 선인, 15쪽(姜德相, 1997, 『朝鮮人學徒出陳』, 岩波書店의 번역본).

6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위의 책.

7 표영수, 2002, 앞의 글, 114~115쪽. 한편 탈출학병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 2016, 「일제 말기 한인 학병들의 중국지역 일본군 부대 탈출과 항일 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79쪽 참조.

8 류시현, 2012,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 『호남문화연구』 52, 110~111쪽(류시현, 2014, 『한국 근현대와 문화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부에 수록).

필자는 ‘지원’을 강제한 방식으로서 윤리에 초점을 맞춘 일제의 학병 동원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이유와 의도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철칙”<sup>9</sup>하에 당위적인 ‘슬로건으로 꾸며낸 자기모순’이라는 평가<sup>9</sup>를 넘어 일제의 학병 동원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료로는 매일신보를 활용했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병 동원은 1943년 10월 20일 관련 법령의 발표일에서 지원 마감일이었던 11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로 아주 짧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월간으로 출판된 잡지 매체들에 비해 일간지인 매일신보가 학병 동원 담론을 파악하는 데 보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매일신보는 근 한 달가량 상당수의 지면을 학병 관련 기사로 채웠다. 사실뿐 아니라 학병 지원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식민 관료들의 언설 등이 보도되는 한편, 조선인 학생 및 가정의 동향과 조선인 지식인층의 독려 언설 및 활동 등이 기사화되었다. 이 글에서 매일신보에 실린 조선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나 기명 수기 등은 조선인층의 독립적인 논리의 측면보다는 매일신보 편집진의 편집 의도와 활용 방식에 주목하여 분석했다.

## II. 보도 실태

매일신보에는 1943년 10월 20일 학도지원병제 발표에 대한 보도를 시작으로 11월 20일 지원 마감 기일까지 32일 동안 사설을 포함하여 총 323개의 기사가 실렸다.<sup>10</sup> 하루 약 10개씩 실린 셈이었다. 그러나 학병 동원을 위한 기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보도 추이는 <표 1>과 같이 크게 세 시

9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앞의 책, 217쪽.

10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에 업로드된 매일신보를 검토했고, 조선어문에 한정했다. 조선어문 신문 지면이 남아 있지 않은 11월 1일과 11일은 제외했다.

〈표 1〉 학도지원병 관련 보도 추이(1943. 10. 20.~11. 20.)

연번	기간	기사 총수	하루 평균 기사 수	주요 이슈
1	1943. 10. 20.~11. 4.	55	3	학도지원병제의 의의
2	1943. 11. 5.~11. 11.	66	9	적격 학도의 자세
3	1943. 11. 12.~11. 20.	202	22	지원 회피자에 대한 경고

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0월 20~11월 4일까지로 이 16일 동안 총 55개의 기사가 실렸다. 많게는 14건까지 실렸고, 10월 23일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 하루 평균 3건 정도의 기사가 보도된 처음 16일간 매일신보의 주된 이슈는 학도 지원병제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였다.

둘째 단계는 11월 5~11일까지 약 일주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총 66개, 하루 평균 9개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적게는 10건, 많게는 12건 정도의 기사가 지면에 담겼다. 이 일주일 동안 매일신보에서 다룬 핵심적인 이슈는 학도 지원의 자격을 가진 조선인 학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였다.

마지막 단계인 11월 12~20일까지 9일간은 가장 많은 기사 수를 드러냈다. 9일 동안 총 202개의 관계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루 평균 22개의 기사로, 기사 수는 기존 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었다. 마지막 9일은 학병 지원을 위한 특집호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매일신보 지면의 주요 이슈는 지원 기피 학도에 대한 처분과 응징 등으로 지원 회피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다름없었다.

이처럼 지원마감일이 다가오에 따라 매일신보의 기사는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학도지원병제를 설명하는 속에서 학도 지원의 명분을 제시하고 미지원자를 압박하는 수순으로 기사를 배치하면서 학도 지원에 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달했다.

한편 학병이 된 학생들에게 다른 지원병들과 달리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간부

후보생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와 사설은 <표 2>에서 보듯이 총 22개에 불과했다. 전체 기사 323개에 비해 비중이 매우 작았다. 즉 간부후보생의 자격 부여 등 대우 문제는 전반적인 학병 관련 보도에서 중심적인 소재는 아니었다. 매일신보의 기사에 당시 식민 관료, 일본인 유력자 및 조선인 협력자들의 견해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때, 당시 적격 학도들에게 간부후보생 자격 부여 문제가 학병 지원의 동기로 작용될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았다.

<표 2> 간부후보생 자격 부여에 관한 기사 및 사설(1943. 10. 20.~11. 20.)

연번	기간	관련 기사 수	기사 총수
1	1943. 10. 20.~11. 4.	13	55
2	1943. 11. 5.~11. 11.	4	66
3	1943. 11. 12.~11. 20.	5	202

또한 이 22개 기사 중 13개 기사가 첫 번째 단계인 10월 20일~11월 4일에 해당했다. 이 시기의 기사 수 55개 대비 24% 정도의 비중이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 기간의 전체 이슈를 좌우할 정도의 절대적인 수치도 아니었다. 즉 간부후보생 자격 부여 이슈는 전체 이슈의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4개, 마지막 단계는 5개로 각각 66개, 202개 대비 6%, 2%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11월 5일 이후 간부후보생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학병에 대한 대우 문제는 지극히 부수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매일신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표현을 일본군 장교가 될 수 있는 ‘특혜’로 이해<sup>11</sup>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일신보의 편집 방식을 보자. 학병 동원을 위한 매일신보의 여러 기사는 크게는 총독, 학무국장 등 식민당국의 언설 또는 사설로 명제를 제시

11 정안기, 2019,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이영훈 외,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110쪽.

하고 조선인 학도 또는 가정의 반응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관변단체 대표자 또는 사회 유명인사들의 설명이 부언되기도 했다. 요컨대 매일신보는 식민당국의 요구를 사설 또는 유력 관료의 발언을 기사화하여 전달한 후 학도와 가정의 여러 사례 제시를 통해 식민당국이 조선인에게 부여한 역할을 조선인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 Ⅲ. 진정한 황국신민화의 필수 절차로서 학병 지원

학도지원병제가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던 10월 20일 매일신보는 이 제도에 대해 ‘반도와 대만 학생’도 “내지 학생과 같이 특별지원병으로 채용되어 간부후보생이 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소개했다.<sup>12</sup>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사설을 통해 ‘반도인 학생 생도’도 ‘내지인 학생과 같이 군무(軍務)’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제도를 환영했다.<sup>13</sup> ‘내지인 학생과 같이’라는 문구는 학도지원병제를 설명할 때 상투적으로 나오는 문구였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내선일체의 완성과 내선구별의 소멸 선언이었다.<sup>14</sup>

22일자 매일신보 1면에 보도된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출진학도장행회’의 모습<sup>15</sup>은 곧 일본 학도들처럼 ‘황군’에 입대할 조선인 학도들의 모습을 예상케 했다. 일본인 학생들은 이미 ‘재학징집연기임시특례’를 통해 징병검사를 눈앞에

12 「特別志願兵으로 採用 高專校在學 半島學徒의 榮譽」, 『每日新報』, 1943년 10월 20일(조간), 3면.

13 「社說 半島學徒의 光榮」, 『每日新報』, 1943년 10월 21일(조간), 1면.

14 고이소 총독은 10월 30일 개최된 ‘대학·전문학교 임전결의대회’에서 내선 구분이 사실상 철폐되었다고 선언했다. 「欣然! 軍門에 突進」, 『每日新報』, 1943년 10월 31일(석간), 1면.

15 「一刻猶豫도 不許 首相 訓示 出陣學徒壯行會盛況」, 『每日新報』, 1943년 10월 22일(조간), 1면.

두고 있는 때였다.<sup>16</sup> 이처럼 조선에서 시행될 학도지원병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황국신민화의 완결을 의미했다. 이는 침략전쟁이 시작된 이래 추진된 황민화 정책<sup>17</sup>의 결산이기도 했다.

일제에 따르면, 내선일체를 완성시키는 제도는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원’의 형태였다. 따라서 학도지원병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책무는 조선인 학도 개개인에게 부과되었다. 식민당국은 조선인 학도들에게 ‘국가의 일원’<sup>18</sup>임을 자각하여 황군에 지원함으로써 황국신민임을 증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26일 보도된 대학·전문학교장 회의 당시 고이소[小磯] 총독의 훈시에 적절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志願이야말로 積極的인 赤誠의 表徵이며 皇國臣民으로서의 信念을 顯現하는 所以로서 百의 理論, 千의 壯語도 다만 이 一行만 尙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야 學徒는 “溫室의 草花”인 境遇를 떠나 嚴肅한 試鍊의 흘로 나서 참으로 自己自身을 人으로서 鍛鍊陶冶할 境遇로 된 것으로서 이리 하여 教育의 眞義를 體得할 好機緣에 處할 수 있는 것을 大悟할 때이며 그 父兄들도 역시 이를 理解하는 大愛로써 그 子弟의 나갈 일을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때다.<sup>19</sup>

이에 따르면, 학병 지원은 황국신민의 정신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적극적인 실천이었다. 학도지원병제는 형식적·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적이지 않았던 만큼 학도 개 개인의 ‘적극적인 적성’과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이 필요했다.

16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앞의 책, 16쪽.

17 전시체제가 황민화 정책에 대해서는 宮田節子 著, 李煥娘 譯,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참조.

18 「社說 學徒總進軍의 秋」, 『每日新報』, 1943년 10월 22일(조간), 1면.

19 「一億必勝의 戰鬪配置 半島學徒蹶起하라」, 『每日新報』, 1943년 10월 26일(석간), 1면.

그리고 학병 지원은 조선인 학도들이 홀로 견뎌야 하는 ‘시련’의 과정이었다. 이 시기 지원병이 되어 전장에 나가는 것은 ‘항국’을 위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이소 총독은 위 훈사에서 ‘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황군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전장에서의 죽음까지 겨안는 행위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시작 이래 언제부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결전’은 1943년 말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1943년 말 결전은 거듭된 결전 끝에 온 ‘정점’으로, 이 결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본민족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는 대대적인 결전이었다.<sup>20</sup> 즉 이 시기 결전은 무수한 생명을 요구하는 ‘소모전’이었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생명이 필요했다. 전사(戰死)는 현실적이었다.

그런데 실제 전황은 일본의 승리보다는 패배를 예견케 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는 일본에게 치명적이었고, 같은 해 과달카날 전투에서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1943년 상반기 일본 대본영에서는 현실적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에 맞서 승리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sup>21</sup> 전황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죽음의 요구는 맹목적이었다.

요컨대 학병 지원은 맹목적인 헌신과 희생의 황국신민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선일체의 실천이라고 했다. 즉 조선인 학도는 학도지원병제라는 제도적 차원의 내선일체를 죽음까지 포괄한 개인의 희생으로 현실화해야 할 과제 앞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학도지원병제는 조선인 학도 개개인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과 이에 기반한 능동적 실천을 통해 그것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학도의 부모 역시 자각과 깨달음으로 학도의 실천을 조력해야 했다.

또한 학병은 다른 지원병들과 달리 6개월의 훈련기간 없이 입대와 동시에

20 「大節義를 體得하자」, 『每日新報』, 1943년 10월 31일(석간), 1면; 「크게 깨우쳐, 蹶起하라」, 『每日新報』, 1943년 11월 5일, 3면.

21 앤터니 비버 지음, 김규태·박리라 옮김, 김추성 감수, 2017, 『제2차 세계대전』, 글항아리, 468쪽, 532쪽, 832쪽.

현역에 편입되어 간부후보생이 될 자격이 부여되었다.<sup>22</sup> 이 점은 특혜보다는 책임의 맥락에 있었다. 한 사설에서 매일신보는 황군의 간부가 될 학도들은 솔선하여 ‘국가’(일본)에 충성할 중대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sup>23</sup> 고이소 총독 역시 위훈사에서 항후 학병에 대한 지도방침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자로서 무대(務待)와 책임(責任)을 자각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매일신보는 다른 이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조선인 학도의 황국신민으로서 자각과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매일신보 지면에 실린 경성세대 법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금본광치(金本光治)의 수기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숨길도 가쁘게 겹겹이 쓴 옷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赤裸裸한 알몸으로 돌아와 참된 道義의 決戰場을 향하여 뛰어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純潔한 血潮로서 새로운 歷史의 創造에 參加하지 않으려는가. 이것은 우리 젊은 青年에게 賦與된 特權인 것이다.

一瞬一瞬 死에 直面하는 嚴肅한 마당에 서지 않고는 참으로 感激과 光榮의 皇民化의 精神을 體得할 수 없을 것이며 一個의 說教師보다도 人生의 荒野에서 惡戰苦鬪하는 劔雷彈雨 가운데 突入하여 비로서 平素보다 몇 十倍의 體驗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青年學徒도 苛烈한 世紀의 試鍊道場에 뛰어들어 貴重한 體驗을 얻음으로서 半島民衆을 皇國臣民으로서의 水準에 끌어올려 참된 內鮮一體의 實現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sup>24</sup>

22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해 학병에게 간부후보생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은 1944년부터 징병제가 시행될 경우 일본어에 서툰 조선인 신병을 이끌 장교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앞의 책, 414쪽.

23 「社說 學徒의 出陣을 祝함」, 『每日新報』, 1943년 10월 24일, 1면.

24 金本光治(城大 法文學部 2年), 「決戰場에 달리는 學徒의 熱情① 皇國大生命에 融合」, 『每日新報』, 1943년 11월 3일, 1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은 부자연스러운 옷들을 벗어내고 알몸이 되는 과정에 비유되었다. 또한 이 수기에 따를 때, 내선일체는 오랜 세월 ‘인습과 낡은 사상에 얽매인 오욕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조선·조선인이라는 구형태에서 일본·일본인이라는 신형태로의 질적인 변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새역사의 창조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금본광치는 이 새 역사를 열 시대적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진정한 황국신민 정신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순간에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내선일체의 진정한 구현은 ‘순결한 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청년 학도만이 이와 같은 실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요컨대 매일신보는 조선인 학생의 입을 빌려 학병 지원이 조선인의 일본인화와 조선의 황민화를 완수하겠다는 조선인 학도의 능동적인 실천 의지를 요구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상 매일신보의 보도에 근거할 때, 학병 지원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조선인 학도의 주체적인 ‘순국’ 결단과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 IV. ‘국민’의 윤리적 의무로서 강제된 ‘자기결정’

학도지원병제의 실시가 예견되자 학도들은 학병 지원의 문제에 직면했다. 학생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오노[大野] 학무국장이 중추원 석상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볼 때, 조선인 학생들의 학병 지원 의지는 그리 높지 않았다.

今般의 特別志願兵은 그 制度 實施의 根本의 意義에 想到할 때 결코 ‘志願’의 文字에 拘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豁然히 自覺할 것이다. 卽 皇國의 至高한 要請에 어찌 日本臣民된 靑年들이 스스로의 恣意에 左右되어 이 無上의

光榮에 浴하는 機會를 놓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sup>25</sup>

위 학무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학병 지원은 사전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었다. 사전적으로 지원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선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무국장은 그 사전적 의미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도지원병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학생들의 태도를 책망했다. 나아가 강한 의문으로 학병이 되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학도지원병제는 법제상 지원제도였음에도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다. 또한 조선군 보도부장은 매일신보 지면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sup>26</sup> 사실 역시 모든 학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sup>27</sup>

법제상 학도지원병제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학도지원병제를 ‘강제’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sup>28</sup> 그러나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은 학병 지원이 적격자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학병 지원의 강제성은 법률이 아닌 다른 차원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었다.

같은 兄弟들이 戰火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는 이때 自己의 個人事情, 또는 家庭의 事情 等を 理由로 自己에게 맡겨진 榮譽의 길을 헛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만 個人의 事情에 不過하다. 그것은 國家目的이라는 至上命令에 依

25 「半島精氣를 滅敵에」, 『每日新報』, 1943년 11월 6일, 1면.

26 「歸省者は 곳 學校로 가라 長屋朝鮮軍報道部長要望」, 『每日新報』, 1943년 11월 6일, 1면.

27 「社說 빨리 志願하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1면.

28 「必勝의 決戰場으로! 學徒出陣을 말하는 座談會① 光榮의 門은 열렸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2면. 金川 매일신보 사장 발언.

하여 解消될 조그마한 事情에 不過하다.<sup>29</sup>

위 글은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나츠야마 마사요시(夏山正義)가 쓴 수기의 일부이다. 이 수기에서 학병 지원은 ‘지상명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지원은 법률상의 명령이 아니라 국가에 속한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적 차원의 규범이었다.

국민의 윤리적 규범으로서 학병 지원은 다른 일본인 학생들의 학병 지원과 대조되면서 정당화되었다. 일본인 학생들이 국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전장으로 출진하는 상황에서 같은 국민(같은 형제)으로서 조선인 학생들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즉 개인의 사정 혹은 가정의 사정이 국민 윤리의 규범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마사요시의 아버지인 나츠야마 시게루(夏山茂)는 한 인터뷰에서 일본 학생들이 전장에 나가는 속에서도 모른 척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의리부동’하다고 했다.<sup>30</sup> 즉 윤리적 차원에서 학병 지원 회피 또는 거부는 국가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산석원(金山錫源)<sup>31</sup> 중좌 역시 한 강연회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현재 힘든 일을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만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사고 또는 내 자식이 안 해도 다른 이들이 할 것이라는 부모의 사고는 국민으로서 그릇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를 하는 이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단언했다.<sup>32</sup>

29 夏山正義(京城法學專門 1年), 「決戰場에 달리는 學徒의 熱情④ 國家있고 個人도 있다」, 『每日新報』, 1943년 11월 7일, 2면.

30 「判斷하라 우리 榮譽 學徒의 갈길은 單하나」, 『每日新報』, 1943년 11월 5일, 3면.

31 金山錫源의 창씨명이다. 그는 육사 출신으로 중일전쟁 당시 중국 전선에 참전했고 지원병 및 학병 권유 활동을 전개했다. 해방 이후 한국군 제1사단장을 역임했다.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앞의 책, 403쪽.

32 「죽음을 두려워말라 盡忠報國의 赤城을 다하라」, 『每日新報』, 1943년 11월 12일, 2면.

한편 학병 지원을 망설이는 자를 ‘낙오자’<sup>33</sup>라고도 불렀다. 낙오자는 황국신민화의 정도에서 뒤쳐진다는 의미였다. 식민당국은 청년 학도의 황국신민화 정도의 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sup>34</sup> 현재 적격 학도들은 ‘병합’ 이후에 태어나 소학교부터 최고 학부까지 다니게 된 ‘천황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은 이들로 국민된 적성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다.<sup>35</sup> 국민 윤리 규범을 체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은 수준 미달의 ‘낙오자’였던 것이다.

요컨대 학병 지원은 윤리 규범의 영역에서 절대적이고 의무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선 학도들은 사적인 가정의 껍질을 떨쳐내고 일본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윤리 규범을 자각해야 했고 ‘자발적 지원’으로 깨우친 자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했다. 이 과정은 부모형제의 편협하고 사사로운 사랑과 간섭에서 해방되어 일본국의 한 국민으로서 학병 지원을 주체적으로 결정해가는 ‘거대한 개인의 혁명’<sup>36</sup>과 다름없었다.

매일신보는 학도의 굳은 결의를 부모에게 전해 허락을 받아 지원한 사례를 보도했다.<sup>37</sup> 이와 같은 사례는 종종 보이는데, 한 학생은 ‘일본 신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간단하게 자신의 결의를 말했다.<sup>38</sup>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한 보도는 학병 지원이 국민의 윤리적 의무라는 점을 잘 드러낸 편집이었다. 이는 가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주체로 선 바람직한 학도상의 표현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매일신보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식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맹세

33 ‘낙오자’는 11월 5일 기사에 처음 등장했다. 「法文系大學，專門校長會議」, 『每日新報』, 1943년 11월 5일, 3면.

34 「社說 빨리 志願하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1면.

35 「하로바빠 決定하라 가느냐, 뒤지느냐 두 길뿐 大野 學務局長 學徒總勵起促求」, 『每日新報』, 1943년 11월 6일, 3면.

36 「判斷하라 우리 榮譽 學徒의 갈길은 單하나」, 『每日新報』, 1943년 11월 5일, 3면.

37 「率先, 志願兵을 志望 延專在學中の 豊川, 松原兩君이」, 『每日新報』, 1943년 11월 6일, 2면.

38 「電報로 志願 中央安鍾錄 君」, 『每日新報』, 1943년 11월 7일, 3면.

한 사례를 보도했다. 대전의 적격자 7명의 부모였고, 이 7명의 학생은 모두 지원서를 제출했다.<sup>39</sup> 이와 같은 사례는 학도들에게 가정의 우려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혹은 가정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렇듯 학도들은 각 가정에 남아 있는 아들에 대한 사적 집착의 인습에서 벗어나 일본국을 구성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학병에 지원해야 한다는 윤리 규범을 강제받았다. 학도지원병제가 법률적 차원에서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도 학병 동원의 강제성은 법률의 영역 밖 윤리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병 지원을 “지원자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과 욕망이 개재된 복잡한 과정”<sup>40</sup>으로 지원자 개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의 결과로 한정 지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

이상에 따르면, 학병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는 국민으로서 윤리 규범을 갖춘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의식수준이 낮은 이들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자에 대한 교육과 계몽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국민 의식·국민 윤리의 교육과 계몽은 ‘격려’의 형태로 사회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가령 종로구 내 유지들(박홍식 등)은 ‘임시특별지원병제도 종로익찬위원회’를 열어 적격 학생들에 대한 권유문 발송, 가정방문, 각 정회총대회, 적격 학생 및 부형들의 간담회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sup>41</sup> 국민총력연맹에서는 도별로 부형 간담회를 계획했다.<sup>42</sup> 각 지방행정 당국도 학병 지원 격려를 위해 분주해졌다. 황해도 해주와 평양의 경우 지방행정당국과 지역 유지들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고,<sup>43</sup> 평양의 경우 ‘관민을 총동원’하여 ‘학생과 부형의 결의 촉진운동’을 시작

39 「大田에서 7名 内地在學生父兄, 府尹에 決意披瀝」,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2면.

40 정안기, 2019, 앞의 글, 108~109쪽.

41 「適格者父兄懇談」,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2면.

42 「必勝의 決戰場으로! 學徒出陣을 말하는 座談會①」, 『每日新報』, 1943년 11월 8일, 2면.

43 「特別志願兵募集 具體策討議코저 懇談會」,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 2면.

했다.<sup>44</sup> 또한 학교는 학교대로 교직원이 가정방문을 하기도 했다.<sup>45</sup>

더욱이 일본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학병에 지원하게 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할 ‘선배격려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이들은 11월 20일 지원 마감일까지 일본에 체류하면서 학도들을 격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만약 한 사람이라도 특별 지원병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도가 있다면 우리들은 정성껏 반도 민중의 기대와 희망을 피력하여 그들의 꺾기를 촉진”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sup>46</sup>

매일신보는 이와 같은 격려에 따라 ‘자발적 지원’을 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가령 앞의 해주 간담회의 모습을 보자. 11월 6일에 진행된 해주 지역 간담회에는 적격 학생들과 그들의 부형이 참석했고, 간담은 부윤, 내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및 경찰서장, 민간 유지 등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 적격 학생의 아버지가 우리의 자식은 우리만의 자식이 아니라 ‘폐하의 적자(赤子)’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자식들을 한 명도 빼지 말고 전장으로 보내자”고 연설하자, 한 적격 학생이 이에 동의하면서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sup>47</sup>

매일신보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일본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한 자기결정으로서 학병 지원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간담회는 행정관료 및 경찰관료의 통제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개진의 폭이 넓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상 매일신보에서는 학병 지원자는 국가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체득한 진정한 국민으로, 미지원자는 비열한 자 또는 낙오자 또는 비국민으로 대조시켰다. 이와 같은 담론 구조는 국민으로서 윤리 규범을 습득하지 못한 자에 대한 간섭

44 「學徒決意促進 平壤서 有力者總蹶起」, 『每日新報』, 1943년 11월 10일, 3면.

45 「普專職員이 總動 生徒家庭을 訪問激勵」,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 3면.

46 「서로 만나 激勵 在內地學生勸懲次父兄들 出發」, 『每日新報』, 1943년 11월 9일, 3면. ‘선배격려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류시현, 2012, 앞의 글 참조.

47 「躊躇말고 愛子들을 戰場으로 보내자! 學徒志願兵採用懇談會盛大」, 『每日新報』, 1943년 11월 10일, 2면.

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이로써 학도지원병제의 형식적 자율성은 윤리의 맥락에서 제한되었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은 ‘격려’라는 이름 하에 침해되었다.

## V. 학병 ‘지원’ 회피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학병 지원은 법률의 영역이 아닌 윤리 규범의 영역에서 취급되었다. 지원 회피 역시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기준으로 다루졌다. 11월 12일 매일신보의 사설은 10일에 있었던 고이소 총독의 담화를 아래와 같이 인용하면서 적격 학도 지원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志願하지 않는 者에 對해서는 勿論 徵用을 하는데 이 徵用이라는 것은 勞務 提供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志願을 拒否하는 者는 結局 皇國臣民으로서의 修練이 不足한 것이니 徹底한 鍊成을 받아야 할 것을 아울러 覺悟하여야 된다.<sup>48</sup>

총독은 미지원자에 대해 징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징용은 처벌일 수 없었다. 법률상 강제적일 수 없었던 지원병제하에서 지원을 회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용은 단순한 ‘노무 제공’도 아니라고 했다. 국가에 봉공(奉公)하는 방법으로서 군무 대신 노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즉 징용은 군무를 거부한 대가로 받는 형벌도 아니고 그것을 대신한 노무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윤리 의식 결핍자에 대한 연성(鍊成)으로 일종의 재교육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총독의 담화가 사설을 통해 전해진 이래 지원 마감일까지 매일신

48 「社說 다시 適格學徒에게」, 『每日新報』, 1943년 11월 12일, 1면.

보는 지원 학도와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미지원 학도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했다. 가령 각 대학, 전문학교의 선배층은 각 도(道)로 격려단을 파견하면서, 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단정했다.<sup>49</sup> 일본군 국민이 가져야 하는 윤리와 도덕 규범은 죽음을 포용했다. 이는 전사한 군인 혼은 몸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정신이 만대에까지 광채를 잃지 않는 데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말로 부연되었다.<sup>50</sup> ‘순국’이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형해화시키는 일본군의 생사일여(生死一如) 철학과 다름없었다.<sup>51</sup>

‘순국’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규범으로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지원을 머뭇거리면서 회피한 자의 생(生)은 기본적인 규범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의 치욕스러운 삶이었고, ‘호국영령’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떨친 이인석(李仁錫) 상등병의 영예로운 죽음과 대조되었다.<sup>52</sup>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미지원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거세어졌다. 한상룡은 그것을 ‘천벌’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형벌은 아니지만, 지원 기피 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일이었다. 또한 그것은 ‘일본혼에 사는’ 선(善)의 길과 대조되는 악(惡)의 길로 비유

49 「우리는 諸君을 밋는다」, 『每日新報』, 1943년 11월 13일, 3면.

50 「社說 死生觀을 고치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15일, 1면.

51 일본군의 생사관은 『戰陣訓』에 나와 있다. 이 텍스트는 1941년 1월 8일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의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대의에 죽는 것’을 ‘대의에 사는 것’과 같다는 生死一如의 철학에 기반해 쓰였다. 이는 육체는 죽어도 혼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철학이었다. 가타야마 모리히데 지음, 김석근 옮김, 2013,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292~294쪽.

52 「어머니 座談會② 百番다시 사라나서 米英을 처부시고야 말자」, 『每日新報』, 1943년 11월 15일, 2면. 일제의 지원병 출신 중 첫 번째 전사자였던 李仁錫의 영웅화에 대해서는, 박수현, 2011, 「일제말 파시즘기(1947~1945) 『매일신보』의 대중선동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56~259쪽; 박민선, 2019, 「전시체제가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선전과 조선인 전쟁영웅화 작업」, 『승실사학』 42 참조.

되었다.<sup>53</sup>

매일신보는 전원 지원 사례들을 보도하면서 미지원자들을 파렴치한 존재로 몰고갔다. 지원 마감 직전, 전원 지원의 사례·예견·제의 기사는 빈번하게 등장했다. 가령 일본에 간 ‘선배격려단’의 오사카 학생간담회의 경우를 보자. 당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3명의 학생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은 여간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자성하면서 “우리 이 석상에서 모두 지원하자”고 제의한 일화가 소개되었다.<sup>54</sup> 국민으로서 수치심의 자각을 보여주는 이 일화는 일본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해간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면서 지원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이 제의로 전원이 모두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51명의 출석자 중 31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전원 지원을 현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게 했다.

도별 지원 현황도 전원 지원을 알리거나 곧 달성될 듯 보도되었다. 함경남도 와 강화군 및 충청남도에서는 적격 학도 전원 지원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sup>55</sup> 각 학교의 상황도 유사한 보도 패턴을 보였다. 보성전문학교에서는 ‘학병 쫓기대회’를 열어 적격자 전원이 모두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했고, 이 대회 종료 뒤 지원세도로 혼잡을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sup>56</sup> 한편 일본의 간사이 대학에서도 적격 학도 전원이 지원서를 제출<sup>57</sup>했고 중국 베이징 대학과 흥아학원(興亞學院)

53 「亞細亞爲해 나서라 聯盟事務局總長 韓相龍 氏 激勵」, 『每日新報』, 1943년 11월 20일, 1면. 선약을 기준으로 한 지원 기피자에 대한 비난은 당시 적격 학도들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盧玄燮은 “황국신민으로서 영광의 好機逸失의 惡을 犯하지 말라는 恐瀆記事들이 다시 내마음을 괴롭힌다”고 회고한 바 있다. 1·20학병사건행위위원회, 1987, 『1·20학병사기』 1, 121쪽.

54 「勇躍31名 大阪激勵會場에서 蹶起」, 『每日新報』, 1943년 11월 12일, 3면.

55 「咸南서 2百名」, 『每日新報』, 1943년 11월 17일, 3면; 「激勵隊兩氏活躍」,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4면; 「忠南에서 150名」, 『每日新報』, 1943년 11월 19일, 3면.

56 「普專學兵蹶起大會 남은 學徒도 遲滯말라」,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3면; 「너도 나도 志願殺到」,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3면.

57 「關大生도 全員志願 懇談會 席上서 67名이 出陣決意」, 『每日新報』, 1943년

의 올해 졸업생 전원이 지원<sup>58</sup>했다는 소식도 기사화되었다.

조선 내 각 지역과 각 대학 및 일본과 중국의 대학에서 들려오는 전원 지원 혹은 곧 모두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학병 지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지원 회피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했고, 여전히 지원을 망설이는 자를 결단력이 부족한 자로 비취지게 했다.

아울러 지원 마감일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부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원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부모를 설득하기보다는 부모와 무관하게 결정해서 지원을 낸 경우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의 손에 양육된 한 학생은 보호자와 상의하지 않고 지원한 후 편지로 그 뜻을 전했다고 한다.<sup>59</sup> 학병 지원의 결정은 부모(보호자)의 양해보다 당사자의 결의가 우선한다<sup>60</sup>는 메시지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모의 반대 혹은 부모와 상의하기 위해서 지원을 미룬다는 사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식민당국의 의지이기도 했고, 미지원자 학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내비치게 했다.

이 외에 전통적인 조선인의 가족문화를 극복한 사례가 다수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는 독자의 지원 사례였다. 한 가정의 4대 독자이고 보성전문학교 법학과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연로한 양친과 여든에 가까운 조모님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은 경우였다. 이 학생은 완고한 조모님에게 20일이 넘게 설명을 거듭한 끝에 승낙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집안 사정 같은 것은 넷째, 다섯째 문제”라면서 ‘출진’이 으뜸이라는 확신을 보였다.<sup>61</sup>

또 다른 사례는 중풍에 걸린 아버지가 외아들의 학병 지원을 청원하러 간 사례였다. 아래 인용문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

11월 18일, 3면.

58 「北京大學과 興亞學院 半島學生全員志願」,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3면.

59 「安崗君도 志願」, 『每日新報』, 1943년 11월 13일, 2면.

60 「老父도 贊成 法大竹山君이 志願」, 『每日新報』, 1943년 11월 14일, 2면.

61 「四代獨子도 出陣」,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3면.

나는 원래 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화11년 봄에 강일 군이 경복중학에 입학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늙은 두 내외는 그애를 전문학교까지 졸업시키려고 별별 짓을 다했지요. 나는 그날그날 노동을 하고 아내는 바느질품을 파는 등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애만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작년 봄부터 중풍에 걸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아내가 여러 가지로 고생하였지요. 그러나 반도학도들에게도 제국 군인이 되어 대동아건설에 출진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병석에서 감격에 넘쳐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그때에 내 아들도 반드시 이 영광스런 전열에 끼이도록 빌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밤에는 본인의 결의도 들었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자식이나 마 성전에 참가케 하여 달라고 병석에서 이러나 구장을 찾아 간 것입니다.<sup>62</sup>

날품팔이 노동과 바느질로 학비를 마련해 전문학교 학업을 뒷바라지한 부모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중풍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사정에 처해 있었다. 이 아들은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부양의 책임도 떠안고 있는 경우였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힘들게 키운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학생의 경우 독자였고, 전문학교 졸업 및 취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부양 책임이 있는 등 ‘가정 사정’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학병 지원을 결의했고 그 부모도 ‘영광’으로 받아 안았다.

이와 같은 예시들은 조선인 가정에 남아 있는 아들 중심의 관념과 가족 부양의 책임이 부차적이고 학병 지원이라는 국가적 요청이 우선적이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를 때, 가정 사정을 이유로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분별력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

다음 사례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음에도 굳은 결의로 지원한 경우이다. 축구 선수 출신으로 팔을 다쳐 불구의 몸이 된 한 학생이 팔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62 「病軀를 이끌고서 獨子の 出陣을 志願한 아버지」, 『每日新報』, 1943년 11월 14일, 3면.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 경찰서로 찾아가 지원하게 해달라고 애원한 일이 보도되었다.<sup>63</sup> 한쪽 팔이 없는 몸이라면 전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지원을 갈망하는 이 모습은 ‘순국’을 ‘광영’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끝난 이상적인 ‘조국의 청년’상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인의 건강을 이유로 한 지원 기피를 이기적일 뿐 아니라 부도덕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이들이 지원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 중에는 ‘청년실업가’도 있었고,<sup>64</sup> 막 입사해 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조선전업주식회사의 신입사원도 있었다.<sup>65</sup> 그는 이제 막 취업했을 뿐 아니라 결혼도 앞두고 있었다. 이 외에 고등문관시험 사법관에 합격한 이도 있었다.<sup>66</sup> 좋은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지원한 졸업생들의 사례는 지원을 ‘당연한 의무’로 이해하고 실천한 황민화의 우수 사례들이었다. 이와 같은 존재는 미지원자를 ‘당연한’ 도덕적 의무를 외면하는 이들로 보이게 했다.

매일신보의 한 기사는 특히 어딘가로 은둔해서 지원 요청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학도들의 경우 윤리 규범을 계몽해 ‘바른길’로 선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숨어 있는 학도들 대신 부형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 대신 지원하고 당사자는 징병 검사 시기에 와도 좋다고 말이다.<sup>67</sup> 부형의 대리 지원은 적격 학생 개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성 침해 행위는 국

63 「팔하나없는 不具목이나 나도 軍門으로 간다 中央大學卒業生 菊本 君의 壯志」, 『每日新報』, 1943년 11월 16일, 3면.

64 「金田君도 志願」, 『每日新報』, 1943년 11월 16일, 2면.

65 「就職, 結婚은 나중」, 『每日新報』, 1943년 11월 18일, 3면.

66 「高文通過는 保留국 城大卒業 栗山君 勇躍 出陣」, 『每日新報』, 1943년 11월 19일, 3면.

67 「20日 지나 後悔말라 그대만 뒤떨어지는가 速히 父兄이라도 대신 志願하라」, 『每日新報』, 1943년 11월 19일, 3면.

민이 지켜야 할 마땅한 윤리라는 이름하에 합리화되었다.

요컨대 매일신보는 지원 회피자들을 개인의 안전과 안정된 행복의 울타리를 넘어 황국이 요구하는 윤리·책임감 등을 깊이 깨닫고 군문 앞에 선 지원자들과 대조시키면서, 한 국가공동체의 규범상 용인하기 어려운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 부각시켰다. 이는 이후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을 ‘국체를 거부한 사상범’으로까지 간주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정신교육과 강제노역에 혹사시키는 등 교육 이상의 ‘징벌적’ 징용의 근거로 작용했다.<sup>68</sup>

## VI.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매일신보를 통해 일제의 학병 동원 담론의 양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일제는 국가공동체의 윤리 규범 차원에서 학병 ‘지원’을 강제했다. 즉 ‘지원’은 자율성이 배제된 정언명령 격의 지당한 의무였다. 적격 학도가 직접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도지원병제의 절차는 이 윤리적 의무 이행에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과 능동적인 실천을 강요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학병 ‘지원’이 천명(天命)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제는 ‘지원’을 ‘천황의 부르심’이라고 했고, 학병들은 ‘운명’이라고 했다.

매일신보는 학병 지원자를 국가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체득한 진정한 국민으로, 미지원자를 비열한 자나 낙오자 또는 비국민으로 대조시켰다. 이와 같은 담론은 후자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지원 마감을 눈앞에 둔 시점, 매일신보는 지원 회피자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규범상 용인하기 어려운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까지 몰아갔다. 이는 대리지원과 같은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 침해를 합리화했을 뿐 아니라 이후 미지원

68 학병 지원을 거부한 ‘應徵學徒’에 대해서는 이상의, 2017,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전문학생·대학생의 학도지원병 동원 거부와 ‘학도징용」, 『역사교육』 141 참조.

학생들에 대한 ‘징벌적 징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일제 말 학병 지원 적격 학생들이 놓인 환경은 이와 같았다. 이들 중 생존한 이들은 해방 이후를 살았고, 침략전쟁의 경험을 수기의 형태로 남겼다. 일제 말 국가공동체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학병 ‘지원’의 형태로 강제받았던 이들의 경험이 해방 이후 분단국가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작용했는가에 관한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자료

『매일신보』

1·20학병사기간행위원회, 1987, 『1·20학병사기』 1.

### 단행본

가타야마 모리히데 지음, 김석근 옮김, 2013, 『미완의 파시즘』, 가람기획.

강덕상 지음, 정다운 옮김, 2016, 『일제 강점기말 조선학도병의 자화상』, 선인.

宮田節子 著, 李熒娘 譯, 1997,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일조각.

다카시 후지타니 지음, 이경훈 옮김, 2019, 『총력전 제국의 인종주의』, 푸른역사.

류시현, 2014, 『한국 근현대와 문화 감성』, 전남대학교출판부.

앤터니 비버 지음, 김규태·박리라 옮김, 김추성 감수, 2017, 『제2차 세계대전』, 글항아리.

이영훈 외, 2019,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 논문

김진우, 2018, 「운명과 원한: 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 52.

김명섭, 2009, 「전쟁명명의 정치학: “아시아·태평양전쟁”과 “6·25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2.

류시현, 2012,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 『호남문화연구』 52.

박민선, 2019, 「전시체제기 일제의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선전과 조선인 전쟁영웅화 작업」, 『승실사학』 42.

박수현, 2011, 「일제말 파시즘기(1947~1945) 『매일신보』의 대중선동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오테영, 2011,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의 위상 변동-인문사 편집부 편, 『대동아 전쟁과 반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4.

이상의, 2017, 「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전문학생·대학생의 학도지원병 동원 거부와 ‘학도 징용」, 『역사교육』 141.

이형식, 2018, 「'내파'하는 '대동아공영권」, 『사충』 93.

조건, 2016, 「일제 말기 한인 학병들의 중국지역 일본군 부대 탈출과 항일 투쟁」,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56.

표영수, 2002,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3.

## 일제 말 『매일신보』의 조선인 학병 동원 담론의 양상과 특징

윤효정

이 글에서는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일제의 학병 동원 담론의 양태와 특징을 살펴 보았다. 매일신보의 보도 내용과 편집 방식에서 볼 때, 학도지원병제는 내선일체 구현의 제도였고, 이는 학병 지원이라는 조선인 학도 개개인의 능동적인 실천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학도 지원은 철저한 황국신민화의 최종 관문과 같은 것이었다.

법제상 학도지원병제는 지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학도의 능동적 실천도 사전적으로 이해한다면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식민당국은 그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원’은 국가공동체의 윤리 규범의 맥락에서 자율성이 배제된 개념으로, 정언명령 격의 당연한 의무였다. 즉 학도들은 윤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스스로 결정할 것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때문에 일제는 당대 학도지원병제를 ‘천황의 부르심’이라고 했고, 학병들은 ‘운명’이라고 했다.

매일신보는 학병 지원자를 국가공동체의 윤리 규범을 체득한 진정한 국민으로, 미지원자를 비열한 자나 낙오자 또는 비국민으로 대조시켰다. 이를 통해 전자와 같은 이상적인 국민상을 제시하는 한편, 후자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정당

화했다.

마감 기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 매일신보는 지원 회피자들을 개인의 안전과 안정된 행복의 울타리를 넘어 황국이 요구하는 윤리의식·책임감 등을 깊이 깨닫고 군문 앞에 선 지원자들과 대조시키면서, 한 국가공동체의 규범상 용인하기 어려운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존재로까지 몰아갔다. 이는 대리 지원과 같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절차를 합리화했을 뿐 아니라, 이후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징벌적 징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주제어:**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 매일신보, 학도지원병, 학병, 아시아태평양전쟁, 내선일체, 황국신민, '국가', '국민', 자기결정, 윤리

## ABSTRACT

# Korean Students Forced to Volunteer for the Japanese Military in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Yoon Hyojung

This article examined aspect and character of a discourse on mobilizing Korean students as soldiers of the Japanese military by *Maeilsinbo*, an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rom October 20<sup>th</sup> to November 20<sup>th</sup> 1943.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dopted ‘Temporary Recruitment Rules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on October 20<sup>th</sup> 1943; the Rules lifted temporary exemption from conscription on Korean students studying at University and college; then, the deadline of the application was November 20<sup>th</sup> 1943.

The Rules meant, according to *Maeilsinbo*, a pivotal system to realize the policy of Naeseon Ilche(Korea and Japan are One) as each of Korean students would fill in an application form of their own accord; therefore, the Rules deserved to be regarded as the final test of subjecting Koreans to Japanese empire which had continued to be implemented since the Sino-Japanese War.

By law, Korean students could volunteer or no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allow their autonomy; they were forced to ‘self-determine’ to join the Japanese army in the name of ‘national ethics’. In short, volunteer was a concept of a moral obligation such as the categorical imperative.

*Maeilsinbo* blamed non-volunteers describing volunteers as an example of Japanese Subject; in addition, it called the Korean students who hesitated to volunteer or did not apply unpatriotic, immoral and selfish people intolerable by the norms of the national community.

This discourse played a role to justify the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by the colonial authorities; police and administrative officers threatened Korean students and their family and pro-Japanese collaborators persuaded them under the cloak of encouragement; final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quisitioned the students who did not volunteer as workers and actually punished them as part of the training of making Japanese Subject.

**Keywords:** Temporary Recruitment Rules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Maeilsinbo*, Korean Student Soldiers, the Asian Pacific War, the Naeseon Ilche(Naisen Ittai, Korea and Japan are One), Subjects of Japanese Empire, Self-determination, ‘National Ethics’

#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과 지역민

임송자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
- III. 한국전쟁기 전라남도 지역민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전쟁이 전남지역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전남 동부지역을 뒤흔들어놓았으며, 이후 제14연대 봉기군과 지방좌익은 지리산과 인근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빨치산과 군경과의 교전이 지속되었던 전남 지역은 ‘준전시’ 상태였다. 따라서 전남지역 대부분의 지역민은 정부수립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한국전쟁기까지 장기간의 전쟁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은 국군·유엔군, 조선인민군·중공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체제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사상전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민에게 미친 영향은 컸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툭질전쟁’으로 얘기되듯이 점령과 퇴각, 퇴각과 수복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역민은 생존을 위한 체제 선택의 모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집단적 희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점령지 점령정책 실시와 더불어 빨치산의 유격전은 사상전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빨치산 세력은 유격전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미약했다.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활동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 발발이었다. 뒤늦게 전쟁 발발을 인지하고 활동을 개시한 빨치산은 각지에서 조선인민군을 지원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전쟁기 빨치산의 활동은 조선인민군이 후퇴한 시기에 규모가 상당히 확대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빨치산은 ‘제2전선’을 형성하여 이승만 정부와 국군,

---

\* 투고: 2020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2월 12일, 게재 확정: 2020년 2월 17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6)

유엔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으며, 이들이 거점지역의 지역민에게 미친 물리적·심리적인 영향력도 상당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 전남지역의 빨치산 활동과 전쟁 과정에서 지역민이 겪게 되는 고통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빨치산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편이 나왔지만,<sup>1</sup> 한국전쟁기 전남지역의 빨치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김영택은 9·28후퇴 후 전남총사령부와 6개 지구의 조직 구조와 활동 그리고 백야전사 토벌작전 이후 조직 정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한국전쟁 초기 조선인민군 점령 과정에서부터 한국전쟁 전 시기에 걸친 빨치산 활동을 다루지는 않았으며, 지역적으로도 전남 서부지역 위주로 서술하고 있어 전남지역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특히 빨치산 활동이나 빨치산에 대한 군 진압작전으로 지역민이 어떠한 처지로 내몰렸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빨치산 활동과 전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지역민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전쟁기의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을 두 시기, 즉 조선인민군이 전남지역을 점령한 시기와 인민군 후퇴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인민군이 남진하여 전남지역을 점령하는 과정, 조선인민군 진격을 지원하기 위한 빨치산의 활동, 조선인민군 후퇴 이후 전남 각지에서 전개된 빨치산 활동, 그리고 군경 진압작전에 의해 빨치산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전쟁기 지역민이 겪게 되는 고통의 실상을

---

1 이선아, 2003. 12,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13; 김영택, 2003. 12,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 10. 5.~1954. 4. 5.): 전남 총사령부와 6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7; 김중준, 2006, 「한국전쟁기 서부경남지역 빨치산의 조직과 활동: 1950년 10월~1951년 6월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아, 2011. 6,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활동과 그 영향」, 『역사연구』 20; 이선아, 2015, 「지리산권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6·25전쟁 직후부터 1951년 '남부군' 결성을 중심으로」, 『지리산의 저항운동』, 선인.

다루고자 한다. 전남지역은 조선인민군의 진주 과정이나 연합군의 수복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컸다. 특히 전남지역은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관계로 군경이 지역에 주둔하여 빨치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겪는 지역민의 고통은 실로 컸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사건, 여러 유형의 동원 실태, 군경에 의해 자행되던 민폐의 심각성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지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빨치산 진압을 위해 폭넓게 이루어진 마을 소개(疏開)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 II.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

### 1. 조선인민군의 전남지역 점령과 빨치산 활동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조선인민군이 38도선 경계를 넘어 남으로 진격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육본)는 광주의 제5사단에 지급전보로 용산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육본의 명령에 따라 제5사단은 즉시 용산으로 이동하여 의정부, 문산 방면에 투입되었고, 사단장 이응준(李應俊)은 사단사령부 장병들을 인솔하여 미아리 방면으로 들어가 패퇴병 수습과 방어임무를 맡았다.<sup>2</sup>

조선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26일에 의정부, 28일 새벽에는 서울을 점령했으며, 7월 초에 남진을 계속했다. 한강을 도하한 조선인민군은 7월 5일에는 오산, 20일에는 대전을 점령했다. 조선인민군의 주병력은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했으며, 7월 13일 예산을 출발한 제6사단[사단장 방호산(方虎山)]은 공주 금강을 건너 호남지방에 진입하여 순식간에 호남지방을 장악해나갔다.<sup>3</sup>

2 李應俊, 1982, 『回顧 90年』, 汕耘記念事業會, 278~279쪽.

3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213쪽.

제5사단이 서울로 이동하여 수도방위에 나섰기 때문에 호남지구의 방비는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민군 제6사단의 작전계획은 온양-예산-장항-군산-이리-전주-광주-목포의 코스로 진격하는 것이었다.<sup>4</sup> 육본은 7월 8일 전남과 전북에 각각 편성관구사령부를 설치했는데 전북편성관구사령관으로 신태영(申泰英) 소장, 전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 이응준 소장을 임명했다.<sup>5</sup> 그러나 조선인민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간병력 대부분이 차출된 호남지역에서 잔여 병력과 신병, 그리고 학도병으로 구성되어 제반 병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T-34 전차와 자주포, 야포 등을 앞세운 조선인민군과 제대로 대적할 수 없었다.<sup>6</sup> 육본은 전선이 계속 남하하자 7월 12일 전남편성관구사령부와 전북편성관구사령부를 광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 전주시구편성관구사령부로 개칭하고 각 사령관에게 지역방어임무를 부여했다.<sup>7</sup> 이어서 7월 17일에는 전주시구편성관구사령부를 전북편성관구사령부로, 광주지구편성관구사령부를 전남편성관구사령부로 개편했으며, 신태영 소장을 서해안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여 이들 두 개의 편성관구사령부를 통할하도록 했다.<sup>8</sup>

서해 방면으로 진입하여 목포와 여수항을 점령하고, 마산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제6사단은 7월 19일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금강을 도하했으며 오후 늦게 만경강 지역까지 진출했다. 이어서 20일 새벽 김제를 점령하고, 오전 11시 무렵에는 전주를 점령했다. 이로 인해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는 남원으로 이동했다. 7월 22일 저녁 7시 무렵에는 영광 방면으로 진격한 제15보병연대가

4 金奭學·林鍾明, 1975, 『光復 30年』 3, 전남일보사, 41쪽.

5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42쪽. 이응준은 1950년 7월 26일 서남지구전투사령관 채병덕이 하동전선을 사찰하던 중 전사하자 그 후임으로 직책을 승계했다. 李應俊, 1982, 앞의 책, 291쪽.

6 전라남도도지편찬위원회, 1993, 『全羅南道誌』 제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40쪽.

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韓國戰爭史』 제2권(개정판), 국방부, 731~732쪽.

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위의 책, 735~736쪽.

고창을 점령했다.<sup>9</sup>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7월 22일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sup>10</sup>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빨치산은 후방 교란활동을 전개했다. 전쟁을 개시한 다음 날 밤에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평양 라디오방송을 통해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총궐기를 호소했다. 그리고 남한 지역 빨치산을 향하여 “유격운동을 한층 맹렬히, 더욱 용감히 전개하며 [...] 해방구를 확대하며 또는 창설하며 적의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 소탕하고 적의 작전 계획을 파탄시키며 적의 참모부를 습격하고 철도, 도로, 교량과 전신전화선 등을 절단, 파괴하며 각종 수단을 다하여 적의 전선과 후방연락을 차단하고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위원회들을 복구하고 인민군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1</sup>

김일성의 연설에 경남북·호남 지구의 몇몇 유격대가 반응을 보였다.<sup>12</sup> 빨치산은 퇴각하는 국군과 경찰을 교란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지리산지구의 한 부대는 7월 13일 새벽 1시경 산청군 오부면 오천리 신기마을에 진주했고, 이에 앞서 함양지구 인민유격대의 유력한 한 부대는 12일 밤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대를 기습했으며, 대남리 일대에 잠복 중인 경찰부대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빨치산 활동은 전남지역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13</sup> 인민유격대

---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9~210쪽.

10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 대한민국국방부 정훈국전사편찬회, B20쪽. 정부는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國防軍史研究所, 1995,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국방군사연구소, 240쪽.

11 김남식, 1984,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443쪽.

12 김남식에 따르면, 김일성의 평양방송에 대해 지리산을 비롯한 경남북·호남지구의 몇 개 유격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심지어 6월 초에 남파된 정치공작원들도 ‘민중봉기’를 일으키지 못했다. 김남식, 1984, 위의 책, 444쪽.

13 정관호에 따르면, 전남도당 산하 빨치산은 조선인민군이 진격해 들어올 때 적 후방 교란작전을 펼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재산 세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의 한 부대는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진주하여 인근 지역을 장악한 후 봉남리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기동부대 100여 명을 공격하여 다수를 사살했다. 또한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에서도 조선인민군 진격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sup>14</sup> 14일에는 장성지구 빨치산의 유력한 한 부대가 경찰지서를 공격했고, 같은 날 순천지구 빨치산의 한 부대는 순천군 상사면 쌍지리를 급습하여 잠복 중인 경찰을 사살했다. 화순지구 빨치산은 14일 밤 이서면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관 다수를 사살한 후 동북면 방향으로 진격하여 15일에는 경관과 우익인사를 사살했다. 구례지구 빨치산은 간전면 중대리로 진격하여 들어가 활동했다. 함평지구 빨치산과 영광지구 빨치산 부대는 연합하여 15일 오전 10시경 영광군 염산면 축동리에 진격하여 주둔 중인 경찰대와 장시간 교전을 벌였다.<sup>15</sup> 7월 17일 장흥, 담양, 화순, 광주, 광양 등지에서도 유격투쟁을 전개했다.<sup>16</sup> 7월 23일 빨치산 50명이 순천의 주암지서를 습격했다가 송광사 입구 쪽으로 후퇴하기도 했다.<sup>17</sup> 이날 장흥에서도 빨치산의 유격투쟁이 벌어졌다. 장흥에서 경찰을 제외한 각급 기관이 후퇴를 서두르고 있을 무렵인 오후 4시경 유치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200여 명의 빨치산이 읍내를 기습했다.<sup>18</sup>

이승만 정부는 전남경찰국장을 지리산지구 경찰대장으로 임명하고 각 지방의 경찰을 동원했다. 그리고 지리산 일대의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곡성, 구례, 거창, 합천, 함양, 산청, 담양, 장성 등 각처에 배치하여 빨치산의 진격을 저지

한다. 마지막까지 남은 재산세력은 도당부 약 30명, 광주지구 약 10명, 구례·광양 약 20명, 보성·순천·장흥 등지에 소수가 살아남아 70~8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정관호, 2010(초판 2쇄), 『전남 유격투쟁사』, 선인, 33쪽.

14 「慶南 全南 빨찌산들 猛攻擊. 傀儡警察 大部隊를 掃蕩」,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17일.

15 「全南地區 빨찌산들의 傀儡警察 掃蕩戰 熾烈」,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18일.

16 「전남인민유격대 적 후방을 교란」, 『해방일보』, 1950년 7월 23일.

17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70~72쪽.

18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92쪽.

하고자 했다.<sup>19</sup> 그러나 정부의 빨치산 저지활동은 속수무책이었다. 7월 22일 제26연대가 장성에서 제대로 전투를 치르지도 못한 채 퇴각했다. 장성을 포기한 군경은 조선인민군 진격을 다소 지연시키고자 광주 입구 산동교를 폭파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이때부터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후 박철수 전남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빠져나갔고, 지역민들은 뒤늦게 피난 대열에 합류했다. 화순 너릿재와 나주로 빠지는 광주-목포 간 도로는 피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산동교에서 최후로 광주 방어작전을 벌였던 군경유격대가 조선인민군에 밀려 쫓기자 피난민의 행렬은 더욱 증가했다.<sup>20</sup> 전남편성 관구사령부 사령관 이응준과 제5사단장 이형석 대령은 조선인민군이 광주로 돌입하기 직전에 광주를 벗어나 화순을 경유하여 벌교로 이동했다. 이날 밤 이응준 소장은 구례와 순천의 방수(防守)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휘소를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동했다.<sup>21</sup>

7월 23일 방호산 지휘하의 조선인민군이 광주를 점령했다. 조선인민군 제6사단이 전라도의 남서부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6사단은 방호산 지휘하의 정예부대였다. 방호산은 중국 내전에서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된 중국 인민해방군 제166사단을 지휘했는데, 그 부대가 바로 제6사단이었다. 둘째, 남한 경찰이 재빠르게 철수했기 때문에 전라도를 신속히 평정할 수 있었다. 셋째, 현지 유격대의 측면 지원활동도 제6사단의 전라도 점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sup>22</sup>

조선인민군의 광주 점령에 이어 김선우를 비롯한 빨치산 간부들이 24일 입성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에서 남파된 김백동, 김상하 등의 선견대가

19 「지리산인민유격대 괴뢰경찰을 소탕」, 『해방일보』, 1950년 7월 24일.

20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39쪽;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앞의 책, 140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앞의 책, 768쪽, 772쪽.

22 브루스 커밍스 지음, 조행복 옮김, 2017,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241쪽.

합류했다.<sup>23</sup> 광주를 점령한 조선인민군은 광주형무소 감방문을 열어 300여 명의 재소자를 석방시켰으며,<sup>24</sup> 일부 병력만 남기고 곧 목포로 향했다. 24일 조선인민군은 목포지역에 무혈입성했다. 대부분의 전투부대가 전남지역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목포를 점령한 조선인민군은 1개 소대병력만 남겨둔 채 낙동강전선에 투입되었다.

7월 24일 남원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은 순천, 구례, 여수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도 손쉽게 점령했다. 순천과 구례는 조선인민군의 동진을 위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국군의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최후의 거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의 방어태세는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7월 25일 순천이 인민군 수중으로 들어간 데 이어 7월 26일에는 여수가 점령되었다.<sup>25</sup> 장흥은 7월 29일 무렵에 조선인민군이 진주했다. 따라서 전남지방의 조선인민군 진주는 7월 23일 광주 입성부터 7월 29일 장흥 입성까지 1주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조선인민군이 진출한 지역에서는 당 건설 및 인민위원회 건설사업이 실시되었다. 당 조직 복구를 위해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에서 교육받은 요원들을 남한에 파견했다. 중앙(서울)에는 남한의 당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중앙당 지도부 격인 ‘서울지도부’를 두었다.<sup>27</sup> 남포당 중앙위원이었던 이승엽이

23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35쪽.

24 金爽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45쪽.

25 「麗水·順天을 完全 解放!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軍總司令部의 報道」, 『조선인민보』, 1950년 7월 29일; 「순천 려수 해방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총사령부의 보도」, 『해방일보』, 1950년 7월 29일;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 戰史編纂會, 1951, 앞의 책, B21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앞의 책, 775~777쪽.

26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앞의 책, 141쪽.

27 권영진, 1990,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43쪽;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0~22쪽; 김남식, 1984, 앞의 책, 446쪽.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지도부’의 일부 성원을 대전에 파견하여 ‘대전지도부’를 구성했다.

‘서울지도부’의 총책으로 임명되어 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당 재건과 건설을 총지휘했다. 당은 하향식 방식으로 중앙과 도, 군, 면 순위로 조직되었다. 조선인민군이 전남지방을 점령하자 전남도당은 광주지방법원 건물을 접수하고 당과 행정기구를 편성하는 일에 착수했다. ‘구빨치’를 기간(基幹)으로 급히 부서를 편성했으며, 그러던 중 8월 초에 도당 위원장으로 박영발(朴永發)이 부임하고,<sup>28</sup> 이후 각 부서 책임자들이 연이어 부임했다. 주요 부서의 책임자는 대개 이남 출신이 맡고, 부(副)책임자는 이북에서 파견된 간부들로 충당했다. 시·군당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임명했다.<sup>29</sup> 직업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동맹, 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 소년단 등 대중단체도 속속 복구되었는데, 이들 대중단체 중에서 북한당국은 농민동맹과 민주청년동맹에 역점을 두어 조직했다.<sup>30</sup>

28 박영발은 일제 때 토건노동자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전평’ 산하 토건노조 위원장, 전평 서울시평의회 조직부장, 서울시당 노동부 부부장, 전평 조직부 부장, 남로당 중앙당 노동부 지도원을 거쳐 월북했다. 박현영의 추천으로 모스크바 고급당학교에 입교하여 3년 수료 후 한국전쟁 때 전남도당책으로 파견되었다. 김남식, 1984, 위의 책, 466쪽.

29 전남도당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영발, 부위원장 김선우(외곽단체 담당)·김인철(당 실무 담당), 조직부장 박찬봉, 조직부 부부장 염형기, 선전선동부장 선동기, 선전선동부 부부장 유운형, 노동부장 오금일, 간부부장 정귀석, 농림부장 이방휴, 경리부장 김오동, 기요과장 이○군, 당증과장 김원배. 각 시군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광주시당 김상중(가명 하중호, 하동 / 하산 직후에는 김채운), 목포시당 김용우(가명 김용원, 나주), 구례군당 양순기(구례), 곡성군당 조영길(구례), 광양군당 이봉옥(광양), 영광군당 김채운(광양), 함평군당 김용범(함평), 장성군당 김병역(장성 / 후에 이성세), 나주군당 박정현(나주), 광산군당 고윤석(광산), 담양군당 권상술(구례), 여수군당 유목운(여수), 순천군당 정호연(구례), 고흥군당 김종채(고흥), 화순군당 박갑출(화순), 보성군당 박춘석(보성), 장흥군당 이재만(장흥), 강진군당 윤국현(강진), 해남군당 김대원(해남), 영암군당 황병택(영암), 무안군당 정상렬(구례), 진도군당 김용길(순천), 완도군당 조형표(완도).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36~38쪽.

30 권영진, 1990, 앞의 논문, 51~52쪽. 농민동맹에 역점을 둔 것은 당시 남한 인구의 80%가 농민이고, 농촌의 반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질서 타파를 위한 대중의 선봉대이며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후비대로서 청년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민주청년동맹 조직을 중시했다.

또한 점령지에서는 당 재건과 함께 임시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도, 군, 면, 리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행정기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임시적인 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합법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선거 실시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으며,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점령지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투 중에 있는 경상북도 8개 군과 경남의 9개 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중앙선거지도부의 발표<sup>31</sup> 미루어보아 전남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점령지역 내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국민의 주권 및 소유권 보호, 사회질서 유지,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지시 등을 실행하는 행정기관이었다. 이 밖에도 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및 노동법 실행, 농업생산량 증산계획 수립, 산업시설 및 수송시설 유지 등의 임무가 부여되었다.<sup>32</sup> 김백동은 조선인민군의 광주 점령 후 도인민위원회와 각 시·군 인민위원회 조직을 서두르고, 도인민위원장은 국기열, 시인민위원장은 강석봉을 임명했다.<sup>33</sup> 국기열은 건국준비위원회 총무부장을 지냈으며, 전남지방 보도연맹 간사장을 맡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 학살에서 벗어난 그는 조선인민군이 진주하면서 전남인민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sup>34</sup> 강석봉은 일제시기 조선공산당에 참여하여 전남도당을 조직하고 도당 책임비서, 중앙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일본에서 6년 동안 피신생활을 했으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한국전

31 김남식, 1984, 앞의 책, 448쪽.

32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4~28쪽.

33 김백동이 도인민위원장을 맡았고 국기열은 부위원장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46쪽.

34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2010,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1), 중원문화, 201~202쪽.

쟁 시기 보도연맹원에 대한 검속을 피해 은신생활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이 광주에 입성하면서 광주시 인민위원장에 선출되었다.<sup>35</sup> 그러나 강석봉과 국기열은 북한군과 함께 들어온 김영재에 의해 4일 만에 해임되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전향했다는 전력 때문이었다.<sup>36</sup>

여순사건의 중심지였던 여수에서도 여수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에 입산했던 빨치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던 좌익세력이 다시 여수로 돌아와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을 지낸 김수평이다. 김수평과 더불어 인민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이창수이다. 이창수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지역 청년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며,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1931년 1월에 여수지역으로 활동기반을 옮긴 인물이다.<sup>37</sup> 남로당 여수시당도 조직되었는데, 이때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인물은 유목윤이었다. 그는 여순사건 발발 이후 백운산에 입산했다가 전쟁과 함께 하산했다.<sup>38</sup>

## 2. 조선인민군 후퇴 이후 빨치산 활동과 군 진압작전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9월 28일 서울에서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밤이 되어서야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도시를 포기하고 동북쪽으로 철수했다.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9일 아침에 38선까지 진출했다.<sup>39</sup> 이에 앞서 1950년 9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모든 당 조직을 지하당기구로 개편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바로 당일 전남도당

35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2010, 위의 책, 26~28쪽.

36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47쪽.

37 임송자, 2019, 2, 「여순사건과 순천지역 좌우의 세력의 동향」, 『역사학연구』 73, 172쪽.

38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앞의 책, 144쪽.

3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앞의 책, 235쪽, 238쪽.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7일 각 시·군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내린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이러한 지시가 말단 하부조직까지 하달되기에는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다. 9·28후퇴로 인해 추진하던 업무가 중단되고 급속히 빨치산 투쟁으로 전환되었다.<sup>40</sup>

전라도 지역은 9월 말, 10월 초에 수복되었기 때문에 약 두 달 동안 조선인민군이 점령한 셈이다. 10월 1일 전남 경찰은 마산에 총집결하여 그곳에서 병력을 둘로 나누어 심형택 경찰국장이 인솔하는 병력은 육로로 하동을 거쳐 광주를 수복하고, 김성복 경무과장이 지휘하는 병력은 해로로 여수에 상륙하기로 결정했다.<sup>41</sup> 이러한 결정에 따라 10월 1일 마산을 출발한 심형택 국장 지휘하의 경찰 부대는 하동을 경유하여 구례에 도착했다. 그러나 광주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병력을 분산시켜 곡성·순천·광양의 경찰서를 탈환했으며, 이어서 10월 3일에 광주에 진주할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과 지방좌익은 다시 산악지대로 잠입했다. 퇴로를 차단당한 조선인민군이나 지방좌익, 그리고 조선인민군의 점령정책에 협력했던 자들이 대거 입산했다. 지리산이나 백운산을 비롯하여 광주 인근의 무등산이나 영광의 불갑산, 장흥 유치 일대의 산악지방, 화순의 백아산과 모후산, 화학산 등으로 입산했다. 광양의 백운산에는 여수, 여천, 순천, 승주, 보성, 고흥 등지의 전남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이 속속 집결했다.<sup>42</sup> 고흥의 팔영산, 천등산, 운암산 등지로도 입산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sup>43</sup>

전남도당은 당 기구를 지하당으로 개편하라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지시에 따라 지도부를 광주 무등산 중심사를 거쳐 화순 백아산 새목[鳥項]으로 옮겼다.<sup>44</sup> 이미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전면적 지하 개편은 사

40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39쪽.

41 광양군지편찬위원회, 1983, 『光陽郡誌』, 광양군지편찬위원회, 340쪽.

42 광양군지편찬위원회, 1983, 위의 책, 340쪽.

43 고흥군사편찬위원회, 2000, 『高興郡史』, 고흥군사편찬위원회, 634쪽.

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일부 조직원들만 잠복시키고 대부분의 역량을 무장유격투쟁으로 전환시켰다.<sup>45</sup> 이들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제1전선에 대해 ‘제2전선’ 형성을 목표로 전열을 정비했다.

10월 5일에 전남도당 조직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지하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전라남도 유격대 조직과 총사령부 개설을 결정했다. 그리고 총사령부 본부를 새목마을로 정하고 도당 부위원장 김선우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sup>46</sup> 도당 조직위원회는 각 시·군당과 지역사령부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에 ‘지구’를 설치했다. 도당 산하 지구조직은 ① 무등산과 백아산을 거점으로 한 광주지구(제1지구): 광주·광산·곡성, 담양 일부, 화순 북부, ② 추월산과 용치 가마골을 거점으로 한 노령지구(제2지구): 영광 일부, 장성 북부, 담양 북부, ③ 유치내산과 화학산을 거점으로 한 유치지구(제3지구): 장흥·나주 동부(동나주), 화순 남부, 목포·해남·강진·영암, ④ 불갑산을 거점으로 한 불갑지구(제4지구): 영광, 장성 남부, 나주 서부(서나주), 함평·무안, ⑤ 모후산, 말봉산을 거점으로 한 모후산지구(제5지구): 화순 동부, 보성·순천·고흥, ⑥ 백운산을 거점으로 한 백운산지구(제6지구): 광양·여수, 구례 일부 등이었다.<sup>47</sup>

44 백아산(810m)은 경사가 가파르고 고지가 여러 개 있어 한 곳을 점령당하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능선이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어 모후산(919m, 화순군 남면 유마리)이나 통명산(765m,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으로의 이동도 용이했다고 한다. 김영택, 2003, 12, 앞의 논문, 132쪽.

45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40~41쪽.

46 김영택, 2003, 12, 앞의 논문, 132~134쪽. 새목마을에 있던 총사령부는 곧 군경의 공격을 피해 백아산 자락의 갈갱이 마을(蘆峙)로 이동했다. 1951년 봄 군경의 대공세를 피해 일시적으로 도당 본부와 총사령부는 모후산과 통명산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온 후, 도 당부는 1951년 8월에 백운산으로 이동하고 총사령부만 갈갱이를 중심으로 백아산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

47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42~44쪽. 지리산에는 지구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구례군당(위원장 양순기)이 그 임무를 겸했으며, 조계산지구(지구책 이상률)를 잠정적으로 두었다가 후에 모후산 지구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도당 산하 지구조직은 이후 다소 변경되었지만 1951년 겨울부터 1952년 봄까지의 군경연합 대공세 때까지 유지되었다.

전남유격대 총사령관 김선우는 ‘구빨치’와 후퇴하지 못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기간으로 총사령부 직속부대를 편성했다. 각 지구와 각 군·면에도 무장유격대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무장유격부대 체계는 1950년 10월 10일경에 정비되었는데, 전남총사령부 간부진은 총사령관 김선우, 부사령관 오금일, 문화부 사령관 이남래, 참모장 김병추(후에 남해여단 책임지도원으로 전출), 부참모장 노창환, 후방부장 조형표 등이었다.<sup>48</sup>

전남총사령부 예하에 화순·보성유격대, 화순탄광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영광유격대, 광주광산유격대, 장흥·광양·장성 유격대, 남해여단, 어버이부대, 담양유격대, 제522부대, 제523부대, 제524부대와 총사령부 직속으로 제1연대, 제3연대, 제8연대, 제15연대, 포부대, 제540부대, 제550부대를 조직했다. 이들은 지리산을 비롯한 백운산,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만들고 국군과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탈취, 지서습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및 방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sup>49</sup>

한편 1951년 7월 덕유산에서 ‘6개 도당회의’가 열렸으며, 회의 결정으로 각 도당 유격대는 이현상의 ‘남부군단’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격부대의 개편이 있었다. 그러나 전남도당의 경우 남부군단 밑에 사단통제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다.<sup>50</sup> 도당 회의가 열린 지 얼마 안 된 8월 31일에 노동당은 중앙정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미해방지구에 있어서 우리당 사업과 조직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남한지역에서 ‘제2전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대 유격대 체제에서 당 사업을 주로 하는 지구당 체제로 개편할 것을 결정했다.<sup>51</sup>

48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45~46쪽.

4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對非正規戰史(1945~196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67~168쪽. 전라남도의 경우 2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인민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50 김남식, 1984, 앞의 책, 460쪽.

51 이러한 결정서는 남한의 재산 현지 당에 즉시 전달되지 못하여 1952년 중반기에 가

빨치산 진압을 위해 파견된 부대가 제11사단(사단장 최덕신 준장)이었다. 제11사단 제9연대는 주로 지리산 일대에서, 제13연대는 덕유산, 회문산, 운장산 일대에서, 제20연대는 전남 서부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했다.<sup>52</sup> 그리고 5개 경비대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방위대는 주 보급로, 주요 시설 경계임무를 계속 수행했다.<sup>53</sup>

지리산지역 빨치산의 상황은 1950년 11월 8일에 열린 국회에서 이판열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sup>54</sup> 이판열 의원은 지리산에 몇만 명의 ‘잔적’이 남아 있고, 백운산에 몇천 명의 ‘잔적’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사방 각 지서, 면사무소가 거의 소각당했고, 우익인사의 가옥도 소실한 상태라고 발언했다. 또한 빨치산은 지리산에 군 본부-군 지단-유격대를 두고 있으며, 그 밑에 선전공작대로 도당부, 군당부, 면당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sup>55</sup> 그가 이러한 지리산 상황을 보고한 것은 “38 이남 괴뢰군 총근거지인 지리산의 긴급 공군 토벌작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이판열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전남지방을 순회하던 중 승주지방에서 빨치산의 기습을 받아 사망했다.<sup>56</sup>

1950년 10월 7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지속된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은 ‘견벽청야’로 불리는 초토화작전이었다. 초토화작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1951년

---

서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당조직 개편 지령이 가장 늦게 전달된 곳은 전북(지리산)이었다. 이런 연유로 제5지구당(낙동강 이서의 경남, 전남북 전 지역 및 제주도와 충남의 논산군 지구 등)은 1952년 10월에 조직되었다. 김남식, 1984, 앞의 책, 465~466쪽.

- 52 백선엽, 1992, 『實錄 智異山』, 고려원, 323쪽.
- 53 陸軍本部戰史監室, 1954, 『共匪討伐史』, 白樺社, 39쪽;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앞의 책, 168쪽.
- 54 이판열은 구례군에서 1950년 5·30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5·30選舉 빛나는 當選者」, 『경향신문』, 1950년 6월 2일.
- 55 국회사무처, 1950, 11, 8,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8회 제46호.
- 56 「이판열 의원 순직」, 『동아일보』, 1950년 12월 13일.

2월 20일 불갑산지구에서 전개된 ‘대보름작전’을 들 수 있다. 군은 1951년 2월 20일 새벽 3시부터 함평군 해보·나산·신광면, 장성군 삼서·삼계면, 영광군 묘량·불갑면 등 7개 방면에서 불갑산을 일제히 포위·진격하는 대토벌작전을 펼쳤다.<sup>57</sup> 이 작전으로 비무장 민간인 1,005명이 희생되고 불갑산지구는 붕괴되었다. 또한 1951년 봄 무등산 귀봉암에 있던 광주지구가 군경의 공세로 무너졌다.<sup>58</sup> 이러한 작전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빨치산 세력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는 1951년 4월 2일 국회에서 정재완 의원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11사단과 특별 경찰대가 합동하여 3월 내로 패잔 산군(山軍)을 완전 소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실은 병력의 부족과 투지의 불충실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추진 못 되었다”고 발언했다.<sup>59</sup>

1951년 봄 빨치산 활동은 상당히 활발한 편에 속했다.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3월 21일 광양읍, 22일과 25일 순천시, 27일 승주군 쌍암면 등지에서 습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습격을 받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빨치산 활동은 격렬했다.<sup>60</sup> 3월 31일에는 곡성군 유격분소가 석곡면 함속소를 기습했다. 4월 5일에는 화순군 유격소소가 화순역전지서를 공격했으며, 4월 6일 오전 1시에는 광주 유격대가 시내로 돌입하여 기마경찰대 본부를 포위 기습했다.<sup>61</sup> 1951년 4월 2일 김양수 의원이 “최근 3월 말까지는 완전 소탕하겠다는 것이 또다시 한 달을 연장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짐작컨대는 한 달 더 둔다고 하더라도 결국 완전 소탕 못 할 것”이라고 발언할 정도였다.<sup>62</sup>

57 김영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151쪽.

58 김영택, 2003, 12, 앞의 글, 144~145쪽.

59 국회사무처, 1951. 4. 2,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57호.

60 국회사무처, 1951. 4. 2,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57호.

61 「도시습격에 자신만만. 순천작전에 참가한 一대원의 담화」·「곡성유격분소의 대담성!」·「화순유격소소 역전 적 40 사살」·「또 광주시 기습. 준엄한 보국의 검 “기마경찰대 본부” 등 소탕!」, 『전남빨찌산』, 1951. 4. 10.

62 국회사무처, 1951. 4. 2,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57호.

그러나 1951년 봄의 대토벌작전으로 인해 빨치산이 입은 타격은 극심했다. 1951년 3월 백야산에서 쫓겨온 본부요원들이 모후산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공격을 받고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으며, 조계산에서 항미소년유격대 30명이 작전을 전개하다 전멸되었다. 1951년 3월 18일에는 유치지구 감만마을에 주둔 중인 남해여단이 제11사단 제20연대 병력의 기습을 받고 전멸했으며, 4월 24, 25일 이들 동안 제11사단과 교체된 제8사단 병력이 화학산, 광덕산, 선왕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빨치산 700여 명이 전사하고 비무장 민간인 2,000여 명이 희생되었다.<sup>63</sup>

국군 제11사단이 전선으로 이동한 후 제8사단이 들어와 전남북 일대의 빨치산 토벌에 나섰다.<sup>64</sup> 이 시기 녹음기로 인해 산악지대 군작전이 곤란한 틈을 타서 전남지역 빨치산은 대규모로 활동을 전개했다. 그동안의 소규모 분산적인 활동에서 200~300명, 혹은 500명 단위의 대부대로 집결하여 마을을 포위, 습격했다. 또한 그동안 주된 활동무대는 산간지역이나 농촌지대였는데, 활동영역을 넓혀 군청 소재지나 읍내를 습격했으며, 더 나아가 광주나 순천의 도시로도 진출했다.<sup>65</sup>

5월 20일 고정수, 유목윤, 박대수 등의 연합부대는 협동작전을 세우고 순천시를 기습공격했다. 순천농업학교에 백골부대 약 300여 명이 주둔하면서 지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백골부대를 습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백골부대는 하동 방면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연합부대는 공격목표를 변경하고 동순천파출소 북문파출소, 역전파출소를 습격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순천시를 포위공격했다. 이에 당황한 군정은 탱크를 동원하여 대적하였고, 군정과 빨치산과의 교전은 3시간 동안 펼쳐졌다.<sup>66</sup>

63 김영택, 2003. 12, 앞의 글, 140쪽, 145~146쪽.

64 1951년 6월 국회에서는 “공비소탕과 민심 안정에 바친 공적”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8사단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국회사무처,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호·제11회 4호, 1951. 6. 2·6. 5.

65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66 「순천시를 포위공격. 당황한 적은 탱크까지 동원」, 『전남빨찌산』, 1951. 6. 15.

6월 2일 밤 김용길 부대 소속 부중대장 김팔이 지휘하는 유격대가 광주시내로 돌입하여 동명동파출소를 습격하여 26명을 사살했다.<sup>67</sup> 같은 날 지리산지구 양순길 부대의 기습파괴조는 구례읍 변전소를 습격했다.<sup>68</sup> 6월 2일 박정현 부대는 나주읍을 진격하여 들어가 지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작전을 전개했다.<sup>69</sup> 그 뒤를 이어 유목윤과 고정수의 연합부대는 6월 5일에 광양읍을 기습했다. 9개 조로 구성된 돌격부대는 광양읍 203부대 본부, 변전소, 청년방위대 본부, 경찰서 토치카를 일시에 습격했다. 이날의 작전으로 청년방위대본부, 203부대본부, 변전소, 경찰 토치카 등이 파괴되었다.<sup>70</sup> 6월 10일 김병익 부대는 전라북도까지 진출하여 그 지방 유격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호남선 철도연선의 주요 도시 거점인 정읍을 일시에 점령했다.<sup>71</sup>

1951년 하반기부터 빨치산 활동은 1949년 하반기의 ‘아성공격’을 연상시킬 정도로 공격규모가 크고 격렬했다.<sup>72</sup> 8월에는 해방 6주년 기념투쟁을 전개했는데, 여수유격대의 광양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8월 10일 여수유격대는 승주군과 황전면 일대에서 교전했으며, 18일에는 광양군 봉강지서 부근으로 진출하여 영농사업 중이던 지역민과 함께 추기 소채파종사업에 협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 8·15해방 6주년 기념군중대회를 가졌다.<sup>73</sup>

67 「용감한 김용길부대 대담히 광주시를 계속 기습. 동명동파출소 소탕! 적 26명 살상」, 『전남빨찌산』, 1951. 6. 15.

68 「구례읍도 돌입. 변전소 등을 완전 파괴. 양순기부대 분산소조투쟁」, 『전남빨찌산』, 1951. 6. 15.

69 「광활한 평야의 요충 라주를 해방! 박정현 모범부대 진격」, 『전남빨찌산』, 1951. 6. 15.

70 「광양읍 기습소탕 유목윤, 고정수 연합부대 진격」, 『전남빨찌산』, 1951. 6. 15.

71 「정읍 해방! 김병익부대와 전북유격대의 예술적 협동작전으로」, 『전남빨찌산』, 1951. 6. 15.

72 1949년 8월 빨치산은 ‘牙城攻擊’으로 불리는 대규모 공세를 취했다. ‘아성공격’이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또는 경찰서, 군사령부 등에 대한 정면공격을 뜻했다. 김남식, 1984, 앞의 책, 417쪽; 이선아, 2003, 12, 앞의 글, 166쪽.

73 「여수유격대 백주 군중대회 개최. 방해하는 적에 육박 돌격」, 『백운로동신문』.

대규모로 펼쳐진 빨치산 작전의 대표적인 예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이르는 시기에 전개된 구례지역 활동이다. 8월 31일 오전 1시 7연대, 14연대, 11연대 등으로 구성된 연합부대는 구례읍 ‘소탕작전’을 개시했다. 구례읍에는 국군 1,500명이 집결되어 있었으며 교육사단인 106사단과 구례 현지 전투사령부가 주둔해 있었다. 연합부대는 일거에 구례중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령부를 점령했는데, 이때 지역민 150여 명이 작전에 가담했다고 한다.<sup>74</sup> 이어서 9월 12일 산동면 주민이 밤 12시를 기하여 중동지서와 밤두재 토치카를 기습했다. 봉기대와 정치공작대의 지도 밑에서 농악을 울리면서 지서공략전에 호응투쟁했으며, 200여 명의 지역민은 직접 무장대와 함께 지서를 포위했다. 이러한 작전으로 14일 아침 원천지서, 중동지서, 밤두재 토치카 등을 비롯한 근방 일대 토치카를 완전히 점령했다. 이러한 활동에 호응하여 토지면에서도 200여 명의 지역민이 팽이, 낫,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봉기했다.<sup>75</sup>

10월에는 화순지역에서 격렬하게 빨치산 활동이 전개되었다. 22일 전남지대 직속 각 연합부대는 화순군 능주읍에서 기습전을 전개했다. 순식간에 읍을 점령한 유격대는 지서, 토치카, 면사무소, 우편국을 비롯한 중요 건물과 시설을 점령했으며, 23일에는 말봉산으로 진입해오는 군부대와 교전했다. 이어서 26일 능주읍을 진격하여 능주 별관을 무대로 한 일대 공방전이 펼쳐졌다.<sup>76</sup>

빨치산 활동이 격렬해지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전선에서 한국군 2개 사단(수도사단, 제8사단)을 차출하여 빨치산 토벌을 위한 ‘백야전전투사령부

---

1951년 9월 1일.

74 「구례를 기습! 괴뢰군 교육부대 섬멸. 적 사살 포로 60 로획 21」, 『전남인민보』, 1951년 9월 20일.

75 「토지면 인민들도 무장폭동. 200여 인민 토치카 3을 격파」·「七련대 용사들의 복수전. 밤두재 토치카를 또 점령」, 『전남인민보』, 1951년 9월 20일.

76 「전남 서부평야의 요충 능주읍을 완전 점령 소탕. 전남지대 연합부대 맹투」, 『전남로동신문』, 1951년 11월 6일.

(Task Force Baik)'(이하 백야전사)를 편성했다.<sup>77</sup>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으로 심각한 보급난을 겪고 있던 빨치산이 동계 대공세를 버틸만 한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계대토벌작전을 펼치고자 한 것이다.<sup>78</sup>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백선엽(白善燁) 사령관의 지휘 아래 전개된 백야전사의 토벌작전으로 빨치산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백야전사 제2기 작전에서 제8사단은 백야산, 화학산을 공격하여 전남도당 사령부의 주력을 격파해나갔다. 그리고 제16연대는 화순군 동북면에서 북쪽으로, 제21연대는 담양군 창평면에서 남동쪽으로 백야산을 포위해 들어갔다. 제107예비연대는 유치지구의 유격대를 공격했다. 군의 포위 공격을 받은 전남유격대는 이를 피해 주변 마을로 분산해 들어갔다.<sup>79</sup>

백야전사의 제3기 작전은 지리산과 더불어 백운산에서 전개되었다. 광양의 백운산에는 전남도당 본부가 옮겨와 있었으므로 백야전사는 이를 집중적인 타격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전남총사령부 휘하의 빨치산은 후방에서 틈을 타 공격하고 빠지는 교란전술을 펼쳤다. 이러한 전술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며칠 지나지 않아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sup>80</sup> 백야전사 작전으로 전남도당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빨치산 세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기관과 사람에 따

77 국군 2개 사단 이외에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사령 김용배 준장),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이성우 경무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신상묵 경무관) 등이 백야전사에 배속되었다. 백선엽, 1992, 앞의 책, 19쪽.

78 빨치산 수뇌부는 이미 백야전사 작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작전이 개시되기 전 지리산을 떠나 섬진강 건너편 광양 백운산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런데 포위 공격이 시작되기 전 지리산을 빠져나간 것은 남부군 사령부 소수 인원과 전북도당 사령부뿐이었다. 이렇듯 이현상이 대규모 포위공격을 눈치채고도 분산·도주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백선엽은 “토벌작전의 규모를 과소평가했거나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선엽, 1992, 위의 책, 22~23쪽.

79 백선엽, 1992, 위의 책, 75~76쪽.

80 백선엽, 1992, 위의 책, 79쪽, 84쪽, 89~90쪽.

라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다. 백선엽은 ‘백야전사령부’ 작전을 수립할 당시 육본에서 알려준 서남지구의 적 총세는 3,000명 정도였으나 약 100일간의 백야전사 작전이 종료되었을 때 사살·생포된 수만도 9,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1951년 12월 말에서 1952년 1월 초에 이르는 시기 전남도당 유격대와 전북도당 유격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북 북부 부대는 약 2,000~4,000명, 전북 남부 부대는 1,500~2,500명, 전남 유격대는 약 2,000명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sup>81</sup>

백야전사 작전이 끝난 후 빨치산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빨치산에 우호적이었던 주민들도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다. 극히 열악한 상태의 궁지로 몰린 빨치산은 산발적으로나마 활동을 지속했지만 그 성과는 미진했다. 3월 14일 제15연대 빨치산 90명(무장 40명, 비무장 50명)이 화순군 이양면의 품평리와 오류리를 습격했다. 화순경찰서는 기동대 30명과 남면 지서원 20명을 동원했으며, 두봉산 형제봉 계곡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15, 16일의 수색전에서 화순경찰서는 사살 66명, 생포 6명의 전과를 기록했다.<sup>82</sup> 전라남도경찰국은 4월 5일 백아산을 본거지로 활동하던 인민유격대 토벌에 나서 상당수의 빨치산을 사살했다.<sup>83</sup> 이때 전남총사령관 김선우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선우는 1954년 4월 5일에 백운산에서 전사했다.<sup>84</sup>

81 백선엽, 1992, 위의 책, 46~48쪽. 전북 북부 부대는 45사단을 주축으로 운장산(전주 동방 쪽) 일대에 포진해 있었고, 전북 남부 부대는 46사단, 53사단 등을 주축으로 내장산, 회문산, 성수산, 장안산 일대에서 활동했다. 朴永發 도당위원장과 金善祐 총사령관의 이원적 지휘하에 있던 전남유격대는 백아산, 조계산, 백운산 일대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82 「和順署 戰果 赫赫, 射殺 66名 生捕 6名」, 『전남일보』, 1952년 3월 20일.

83 「白鴉山作戰에 凱歌, 殘비 據地를 塞源! 總司 等 射殺, 武器도 多數 鹵割」, 『전남일보』, 1952년 4월 8일. 김선우의 처 鄭씨는 광주 출신으로 전남여중 재학 시에 입산했다고 한다.

1953년 봄까지 생존했던 빨치산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백아산, 모후산 등 6개의 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빨치산은 1,000여 명 내외로 추산되었다. 1952년 봄까지만 해도 북으로부터 인원과 장비가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었지만 동계토벌 이후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sup>85</sup> 살아남은 빨치산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면서 활동을 전개해나갔지만 군경의 진압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1953년 3월 남태준(南泰俊) 지휘하의 백운산 빨치산 주력부대 7의2지대, 전남도당 전남독립지대, 순천군당, 광양군당 등이 합세한 무장 130여 명, 비무장 70여 명 등 200여 명이 백운산 열두골짜기에 집합하여 공세를 취하려고 시도했지만 남부지구경비사령부[사령관 이용문(李龍文) 준장]에서 군부대와 경찰전투대 및 전남경찰국 직할 행정경찰부대를 통합하여 대오를 편성한 후 작전을 펼친 결과 빨치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때 36명이 사살되고 13명이 생포되었다.<sup>86</sup> 5월에는 화순경찰서 전투대에서 화순군 북면 방향의 백아산 소지구당을 급습하여 백아산 소지구당 부책을 비롯하여 연락과원 6명을 생포했다.<sup>87</sup> 1954년 2월에는 백운산에 근거를 두고 완강하게 저항하던 전남도당 간부급 26명이 생포 또는 사살되었다.

84 정관호는 1954년 4월 5일에 토벌군의 공격을 받고 사살되었다고 증언했으나 백선엽이 또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백선엽은 1954년 2월 27일에 백운산 아지트가 습격을 받게 되자 수류탄으로 자결했다고 기록했다. 백선엽, 1992, 앞의 책, 368쪽.

85 「昨今の智異山」, 『동아일보』, 1953년 6월 10일.

86 「南警司에 赫赫한 戰果, 白雲山 共비 主力部隊를 殲滅」, 『전남일보』, 1953년 3월 29일.

87 「和順署 戰鬥隊의 殊勳, 生捕 六名 銃器 十五挺 노獲」, 『전남일보』, 1953년 5월 16일.

### Ⅲ. 한국전쟁기 전라남도 지역민

#### 1. 민간인 학살사건과 지역민

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도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하달했다. 비상통첩의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었다. 또한 치안국은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경찰국에 지시했으며,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이라는 통첩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도록 했다.<sup>88</sup>

치안국에서 하달한 통첩에 따라 한국전쟁기 전국 각지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좌익인사에 대한 예비검속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집단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사건은 서울, 인천, 수원, 천안, 원주, 공주, 대전 등지에서 일어났다. 조선인민군이 남진하여 대전으로 진격해 들어오자 남한의 경찰은 형무소 수감자를 끌어내 학살했으며, 이때 사망자는 4,000~7,000명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곳곳에서 행해진 예비검속자 처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미군 장교는 학살이 자행되는 동안 여유롭게 지켜보며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sup>89</sup> 미군의 목인 아래 대전시를 비롯한 금강-대전 방어라인 관내에서도 전대미문의 잔혹한 학살사건이 일어났다.<sup>90</sup>

8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85~86쪽.

8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위의 책, 198~200쪽; 브루스 커밍스 지음, 조행복 옮김, 2017, 앞의 책, 241쪽.

90 「천인 공노할 인민 도살. 살인귀 미제의 출장원 무초가 직접 지휘」, 『해방일보』, 1950년 7월 15일; 「보라! 저들끼리 폭로한 살인귀의 흥행음. 애국자 千二백명 학살. 백성욱 놈이 리승만에게 전보로 보고」, 『해방일보』, 1950년 7월 17일; 「米鬼들의 大田虐殺 眞相. 麗水順天事件 愛國者 등 七千餘名을 虐殺」, 『조선인민보』,

전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광주에서는 7월 초에 보도연맹원들을 광주경찰서, 상무관, 형무소 등으로 소집하여 현장에서 사살하거나 대촌지방이나 증심사 계곡으로 끌고 가 집단적으로 학살했다. 나주지방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광산지역에서도 보도연맹에 가입된 80여 명을 2대의 트럭에 태워 삼도면 송산리(속칭 암탉굴)로 데려가 총살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sup>91</sup> 담양에서도 전쟁 발발 후 상부의 검속명령이 떨어지자 160여 명의 보도연맹원을 경찰서 무덕전으로 연행해 수용했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7월 11일 35명을 색출하여 수북면 대반리 골짜기로 끌고 가 총살했다.<sup>92</sup> 곡성지역의 보도연맹원은 150~200명가량이었는데, 이들을 갑·을·병으로 분류하여 갑중에 해당하는 15명을 곡성을 도립사 인근 야산에서 처형했다. 구례지역의 경우 보도연맹원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창고 등에 구금된 자 중에서 갑으로 분류된 30명이 7월 14일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옥천나들 골짜기에서 학살당했으며, 외국출장소에 구금된 보도연맹원들도 7월 24일 토지면 외국리 섬진강변 모래사장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 순천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예비검속 지시를 받은 순천경찰은 보도연맹원을 지서에서 본서로 연행해 구금했는데, 순천지역 보도연맹원은 1개 지서에 50명씩, 대략 700~800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서면 보도연맹원 약 70~80명은 서면지서 인근 동산마을회관과 서면지서 뒤편 굴속에 한 달간 구금되었다가 일부는 석방되고 나머지는 압곡리 구랑실재에서 총살당했다.<sup>93</sup> 여수에서도 국

1950년 7월 27일; 「피에 주린 악귀들 만행을 계속, 대전에서 七천여 명 살륙, 재감중의 애국자 전부가 희생」·「공주서는 1천여 명 학살, 젓먹이까지 무차별 살륙」, 『해방일보』, 1950년 7월 28일.

9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앞의 책, 129~130쪽;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379쪽. 인민군이 광산을 점령한 후 암탉골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되었다. 9월 2일 내무서원이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7명의 경찰관을 끌고가 처형했다.

92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351쪽.

9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앞의 책, 100~101쪽, 118쪽.

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수경찰서는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보도연맹원을 오동도 앞바다로 끌고 가서 수장시켰다.<sup>94</sup> 울춘면, 삼산면, 화양면, 화정면 등지의 국민보도연맹원들도 희생당했다.<sup>95</sup> 함평, 해남, 완도, 영광, 무안, 영암, 장흥, 지도 지역에서도 보도연맹원 등이 경찰에 예비검속되어 지서와 인근 창고 등지에 구금되었다.<sup>96</sup> 함평군의 경우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을 갑·을·병으로 분류하여 갑은 각 지서에 감금했다가 함평경찰서 유치장과 목포유치장에 수용한 후 목포에서 수장시켰으며, 을과 병은 함평여중에 수용했다가 학교면 얼음재와 나산면 넙태에서 학살했다. 해남에서는 보도연맹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과 요시찰인 중에서 갑·을에 해당되는 사람을 갈매기섬으로 끌고 가 학살했다.<sup>97</sup> 이뿐만 아니라 퇴각하던 군경부대가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지역민을 학살한 사건도 일어났다. 8월 1일 완도로 퇴각한 나주부대가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환영 나온 지역민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10여 명을 총살하고, 나머지 40여 명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sup>98</sup>

조선인민군이 점령하면서 학살과 처형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각 지역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은 지방 좌익과 함께 체제를 정비한 후 우익인사 색출에 나섰다. 이들 중에서 ‘악질분자’로 분류된 자들은 곧바로 처형되기도 했으며, 대체로 조사 과정을 거쳐 광주형무소나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영광군 염산면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으로 지역민이 입은 피해는 더욱 컸다. 전쟁 발발한 달 전인 5월 하순 인민군 1개 소대가 염산면 해안에 상륙했다가 소탕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면에 비해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였다. 영광군 염산면 내에서 황씨 일가 총 142명이 희생된 것을 비롯하여 축동리 장동부락과 동산

134쪽, 276쪽.

94 김계유, 1988, 『麗水·麗川 發展史』, 도서출판 우도, 335쪽.

95 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여수시사』 제1권, 여수시사편찬위원회, 396쪽.

9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앞의 책, 101쪽.

9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위의 책, 117~118쪽.

98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05~107쪽, 113쪽.

부락, 반안리 등지의 우익진영 집안이 집단으로 학살당했다.<sup>99</sup> 우익인사에 대한 처형 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를 둘러싸고 내무서와 유격대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좌우대립의 골이 깊게 패인 전라도 지역에서 많은 지역민이 희생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바뀌고 조선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집단학살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광주형무소는 9월 28일 새벽에 제1차로 70여 명의 우익 인사를 형무소 농장창고로 끌고 가 학살했다. 이때 호남의 대부호 현준호, 미군정기 초대 전남도지사를 지낸 서석병원장 최영욱(崔泳旭), 순천시장 박난순(朴蘭淳)도 희생되었다.<sup>100</sup> 제2차로 화순 출신의 경찰관이나 청년단원이 이십곡리 저수지로 끌려가 처형당했다.<sup>101</sup> 그리고 이날 고흥에서 광주형무소로 이송되던 우익 인사 50여 명이 너릿재에서 희생되었다. 제3차로 광주형무소에서 32명을 끌어내 광산내무서에 수용했으며, 밤에 광산내무서 수용자 60여 명을 2개 소대로 편성하여 장흥유치로 퇴각하면서 끌고 가다가 석방시켜주었다. 28일 밤 광주형무소의 좌익 간수들이 퇴각한 상황에서 수감자 가족에 의해 감방의 벽이 일시에 무너져 이곳에 갇힌 우익 인사 모두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후퇴한 인민군과 빨치산이 편의대를 조직하고 시내에 잠입하여 탈옥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했다.<sup>102</sup> 인민군 후퇴 시기 이러한 학살은 제2군단장이었던 무정에 대한 숙청의 근거가 되었다.<sup>103</sup>

99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299~303쪽.

100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105~107쪽, 168~169쪽, 175~176쪽, 182쪽, 248쪽. 최영욱은 五放 崔興琮 목사의 동생이었다. 박난순은 月坡 徐珉濠와 동향인 고흥군 동강면 출신으로, 1946년 10월 도지사로 취임한 서민호에 의해 광주 副府尹으로 임명되었으며,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4일 순천시장으로 영전되었다.

101 이때 화순내무서에 갇혀 있던 우익 인사 50여 명도 연행되어 처형되었다. 또한 도곡면 우익 인사 30여 명이 효산리 저수지에서, 학도호국단원 김은석 등 30여 명이 화순을 대리의 도살장에서 처형되었다.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408~409쪽.

102 金奭學·林鍾明, 1975, 위의 책, 249~250쪽.

103 권영진, 1990, 앞의 글, 91~92쪽.

국군과 경찰이 지역을 탈환하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다. 군경의 소탕작전에 휘말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화순군에서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경찰의 수복작전과 부역혐의자 색출 과정에서 지역민 80여 명이 좌익 인사나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사살되거나 연행되었으며, 행방불명되기도 했다.<sup>104</sup> 지역민 대부분은 이념보다는 생존을 위해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토벌대나 ‘산사람’을 선택하거나 지지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부역’과 ‘반동’의 위험한 줄타기는 지속되었고, 군경 토벌대와 ‘산사람’ 사이에서 지역민은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감내해야 했다. 토벌대가 머물다 떠나면 이내 ‘산사람’들이 내려와 ‘반동분자’, ‘반동부역자’를 가려내 처벌하고, 반대로 토벌대가 다시 들어오면 ‘빨갱이’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11사단의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집단학살이었다.<sup>105</sup> 제11사단은 1950년 9월 25일 편성을 완료하고 호남 방면 빨치산 ‘토벌’을 위해 대구에서 남원으로 이동해 왔으며, 1950년 10월 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제1기에서 제4기에 걸쳐 회문산, 지리산, 무주구천동, 불갑산, 백아산, 화학산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sup>106</sup> 제11사단 제20연대는 10월 4일 경상남도 삼량진에서 진주를 경유하여 10일 광주로 이동하여 담양, 순창, 정읍, 남원, 함평, 장성, 화순 등 전남 각지에서, 제9연대는 11월 중순 진주로 이동하여 지리산·덕유산지구에서 빨치산 소탕작전에 나섰다.<sup>107</sup> 이 과정에서 담양, 장성, 화순, 영광 등지

10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b,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1쪽.

105 최덕신의 ‘견벽청야’라는 초토화작전에 대해 백선엽은 “대게릴라전의 하지하책”이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감을 키우고 자진 입산자를 늘리는 역효과를 낳게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백선엽, 1992, 앞의 책, 309쪽.

106 陸軍本部, 1987, 『韓國戰爭史料 戰鬥詳報』 59, 육군본부, 171~176쪽.

107 陸軍本部, 1987, 위의 책 참조. 제20연대 제1대대는 10월 15일 담양에 진주하여 담양과 전북 순창 등지에서, 제2대대는 10월 10일 장성에 진주하여 장성을 비롯한 함평과 영광, 전북 순창과 고창 등지에서, 제3대대는 함평과 영광을 수복하고 11월 초순 화순에 진주하여 인근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b, 앞의 책, 167~168쪽.

에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sup>108</sup> 특히 1950년 12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14일까지 육군 제11사단 제20연대는 ‘공비’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전남 함평의 월야·해보·나산에서 마을주민 524명을 집단학살했다.<sup>109</sup> 이러한 학살이 자행되자 순수한 농민들까지 불갑산으로 들어가 ‘산사람’이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sup>110</sup> 1951년 3월 29일 유치내산 일대를 포위 수색한 국군은 입산하여 피신하고 있던 수백 명의 지역민을 사살했다. 4월 9일에는 백아산 빨치산을 진압하러 들어온 국군이 동북면 만수동에서 수백 명을 살상했다.<sup>111</sup>

변진갑 의원<sup>112</sup>은 1951년 3월 22일부터 2주일 동안 전라남북도를 시찰한 후 장성, 영광, 함평, 영암, 담양, 화순, 승주 등지의 실정을 보고했다. 4월 29일에 열린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영광과 장성이 가장 심각했다. 영광은 총 인구가 14만 명인데, 군경이 진주하기 전에 3만 8,000여 명이, 군경이 진주한 후 6,000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장성에서는 총인구 11만 7,000명 가운데 2만 2,213명(유가족 신고 숫자)이 사망했으며, 군경이 진주한 후 어느 정도 희생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인구는 7만 정도라고 발언했다. 이 밖에 담양, 함평에서는 9,877명이, 승주군에서는 7,637명이, 광양군에서는 6,500명이 사망했다.<sup>113</sup>

10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앞의 책, 참조.

109 정관호, 2010(초판 2쇄), 앞의 책, 114~115쪽; 김영택, 2001, 앞의 책, 96쪽; 김영택, 2003. 12, 앞의 글, 138~139쪽.

110 김영택, 2001, 앞의 책, 57~58쪽.

111 「보라! 20세기의 식인종 원수놈들의 야수같은 만행을!», 『전남빨치산』, 1951. 4. 10.

112 변진갑은 1950년 5·30선거에서 전남 장성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五·三十選舉 빛나는 當選者」, 『경향신문』, 1950년 6월 2일.

113 국회사무처, 1951. 4. 29,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68호.

## 2. 여러 유형의 인력동원과 지역민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7월 초에 남진을 계속하자 국군은 병력과 보급 등 후방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군은 전시 병력보충과 노무인력 동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침을 당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력동원이 시급했다.<sup>114</sup> 따라서 7월 22일 긴급명령 제7호로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공포하여 ① 14세 이상의 국민은 향토방위의 의무를 질 것, ② 향토방위의 중핵체로서 각 부락을 단위로 자위대를 조직할 것, ③ 자위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구성할 것 등을 규정했다. 7월 26일에는 “군 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했다.<sup>115</sup> 8월 22일에는 병역법 제58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소집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병 소집을 단행했다.<sup>116</sup> 그러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두모집이나 강제 징·소집 등 임기응변으로 병력을 보충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태에서 전시동원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기 시작한 때는 인천상륙작전 후인 9월 중순 이후이다. 국방부는 전국 각도에 각 지구 병사구사령

114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을 공포하여 징집과 소집을 규정했으며, 9월 1일에는 병역 징집과 동원 업무를 위해 육본에 병무국을, 그리고 각 도청소재지에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했다. 국방부는 제1차로 병역법에 의거하여 1950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자 중에서 지원자를 현지 입대시켰는데 전국적으로 응소자는 2,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군 정원 제한과 국방의 정책적인 문제 등으로 1950년 3월 징병제도가 보류되고 지원병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50년 3월 14일에는 육본 병무국과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가 해체되었다.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33~235쪽.

115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앞의 책, B20쪽, B22쪽, B24쪽;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韓國戰亂一年誌』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7월 27일에 공포한 것으로 기술했다. 한편 ‘비상시 향토방위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8월 1일 폐기 공포되었다.

116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위의 책, B35쪽.

부를 설치하고 11월 초부터 15일까지 후방지역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제2국 민병 등록을 실시했다.<sup>117</sup>

전쟁 발발 직후 국군은 각 연대별, 각 대대별로 피난민이나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노무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각지에서 보국대로 자처하면서 전선의 전후방에서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유엔군은 자체적으로 직접 계약하거나 정부와 국군의 도움을 받아 노무수요를 충당했다. 또한 노무자 규모가 증가하자 민간인운반단이라는 준군사조직을 편제했으며, 1951년 6월에는 민간인운반단의 후신인 노무단을 창설했다. 군에 의해 동원된 노무자들은 지계를 지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나들면서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거나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등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임무를 수행했다.<sup>118</sup> 대한노총에서도 1950년 8월 3일 전시근로의용단을 결성하고, UN군의 진군을 돕기 위해 고령~청도 간의 도로포장공사를 했다.<sup>119</sup>

1950년 12월 21일 정부는 ‘국민방위군설치법’을 공포했다. 중공군의 개입과 공세로 ‘전략적 후퇴’라는 명목의 서울 철수가 불가피하자 청장년들을 남쪽 지역으로 집단 소개시켜 이들을 훈련시키고 단시일 내에 군대를 편성할 목적이었다. 전쟁 초기 조선인민군의 점령지역 청장년들이 강제 징발되어 노무자나 의용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sup>120</sup>

117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40~241쪽

118 國防軍史研究所, 1995, 위의 책, 154~155쪽, 170~171쪽.

119 「전시근로의용단 결성, 錢鎭漢이 단장으로 취임」, 『대구매일』, 1950년 8월 3일(『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전시근로의용단 결성식이 대구에서 거행」, 『대구매일』, 1950년 8월 5일(『자료대한민국사』 제18권); 임송자, 2007,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161쪽. 전시근로의용단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7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노총을 중심으로 근로층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군사원호 작업과 전후에 모든 건설사업에 노력하는 동시에 반란분자의 파괴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감격과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내용의 치사를 보냈다. 대통령기록관 소장자료: 「근로 의용단 결성식에 치사」(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기록콘텐츠-정책기록: 노동 참조).

120 동아일보사, 1975, 『秘話 第一共和國』 2, 홍우출판사, 161~162쪽.

그런데 ‘국민방위군설치법’ 시행 과정에서 동원된 대규모의 청장년이 아사하거나 동사, 병사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청장년들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기간 조직조차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후송작업에 따르는 예산이 영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방위군사령부는 후송작전을 펼쳤으며,<sup>121</sup> 여기에 더해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겹잡을 수 없이 커졌다. ‘죽음의 대열’, ‘해골의 행진’으로 불린 국민방위군의 남하 코스는 서울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진천-충주·보은-제천-문경-상주-성주-거창-마산-고성-창녕-통영-삼랑진…… 등이었으며, 호남의 경우는 전남-남원-구례-진주-하동-사천-곤명…… 등이었다.<sup>122</sup>

전라남도에서는 1950년 10월 19일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2국민병 등록을 실시했다.<sup>123</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방위군설치법’ 공포 이후 전라남도에서도 지역의 장정들을 국민방위군으로 동원했다. 여수와 여천의 경우, 장정들은 동교와 서교, 중앙교 그리고 진남관에 모였다가 방위장교의 인솔로 부산으로 향했는데, 이들을 “보따리부대”라고 불렀다. 동원된 장정들 거의 대부분이 햇바지를 입고 괴나리봇짐을 메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된 여수, 여천지역의 장정들은 하동까지 갔다가 도중에 해산명령을 받고 귀향했기 때문에<sup>124</sup>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장정보다는 피해가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에서 동원된 국민방위군이 언제쯤 해산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21 동아일보사, 1975, 앞의 책, 170~171쪽, 199~200쪽. 국민방위군 편성에 따른 예산안은 방위군이 발족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1951년 1월 27일에야 국회에 상정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규모는 50만 제2국민병 장정의 1, 2, 3월분 식량비와 취사용 연료대와 잡비를 합쳐 모두 209억 830만 원이었다. 장정 1인당 하루 식량 4홉씩 계산하여 200억 원, 그 나머지는 취사용 연료대로 1인당 하루 40원, 기타 잡비 10원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이러한 예산은 피복비, 훈련비, 난방비, 의료비 등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위군 사령부와 전국 시·도 지단 및 51개 교육대의 운영비, 사무비조차 계상되지 않은 것이었다.

122 동아일보사, 1975, 위의 책, 170~172쪽.

123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41쪽.

124 김계유, 1988, 앞의 책, 337~338쪽.

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1951년 2월 17일 국회에 출석한 장경근 국방부차관의 발언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즉 그는 “지금 농사짓는 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시다싶이 전라북도 이런 데서 소집한 사람들은 전부 돌려보내고 [...] 그 이상 소집을 하지 않았습시다. [...] 농사짓는 데 대한 요원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소집한 사람에 있어서도 만 36세 이상은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도 무조건하고 명부만 작성해 놓고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라고<sup>125</sup> 발언했다. 이로써 전북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의 청장년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방위군설치법’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야기하고 수많은 병사의 어이없는 희생을 초래하는 등 악명만 남긴 채 1951년 5월 12일 폐지되었다. 1951년 5월 25일에 병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병력 소집공고제를 채택하여 시행했으며, 8월 25일 병무국을 창설하여 육본 소속의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 예하기관으로 변경하여 병력동원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사건의 영향으로 병력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가두모집이나 강제 징·소집이 지속되었다.<sup>126</sup>

전라남도 여수의 경우, 수천 명의 장정을 모아 제주도나 통영으로 끌고 다니다가 식량이 없어 돌려보낸 일도 있었다.<sup>127</sup> 또한 제2국민병 사건의 악영향으로 대다수의 징병대상자들은 징병을 기피했다. 곡성군 지역구 의원인 조순 의원은 순천에서 2,000명에게 모병 통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응소하지 않아 경찰들이 촌에 나가 강제로 연행하기도 했다고 발언했다.<sup>128</sup> 전라북도의 경우 300명가량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1,000명에게 영장을 발부했고, 500명가량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2,000명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영장을 받은 다수

125 국회사무처, 1951. 2. 17,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27호.

126 國防軍史研究所, 1995, 앞의 책, 242쪽.

127 「兵役事務를一新, 金國防次官國會서 言明」, 『동아일보』, 1951년 7월 29일.

128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가 응소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집대상자의 숫자를 3~4배로 부풀려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sup>129</sup>

또한 지역민들은 학도병이나 의용경찰로도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되거나 군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먼저 학생들에 대한 동원상황을 살펴보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7월 초쯤 『호남신문』에 광주지역 학생들이 군부대 입대를 자원했으나 군부대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적극적으로 학생을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7월 10일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 15연대 소속 장교들은 여수시민 반공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군 입대를 호소했다. 정부요인들도 학생 동원에 나섰다. 7월 중순 무렵 신익희 국회의장,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장관 등 정부요인들이 순천중학교에서 시국강연회를 가졌는데, 이때 다수의 학생이 학도병 지원자로 나섰다.<sup>130</sup> 전국적으로도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학생들의 혈서 지원 소식을 전하면서 학생들을 독려했다. 여수, 순천, 광양, 벌교, 보성, 강진 등 전라남도 남부지방에서 모인 학도의용군은 18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순천 주둔 제15연대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7월 22일 전선에 투입되었다.<sup>131</sup> 1950년 11월 보성지역에서 학도의용군이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보성전투경찰대와 합동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화순지역에서도 학도의용군이 조직되어 활동했다.<sup>132</sup>

지역민은 의용경찰로도 동원되었다. 1951년 7월 11일 조순은 “의용경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치안 유지에 경찰이 부족하고 어찌할 수 없으므로 지방 청년들을 경찰에서 모집을 해서 사적으로 경찰관의 사령(辭令)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다”면서 의용대원의 숫자는 적어도 8,000명은 된다

129 국회사무처, 1951. 9. 29,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66호.

130 金奭學·林鍾明, 1975, 앞의 책, 177쪽.

131 육군본부, 1994, 『한국전쟁시 學徒義勇軍』, 육군본부, 111~113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4~109쪽.

13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위의 책, 287~289쪽.

고 발언했다. 의용대원은 치안이 확보된 지역보다는 주로 빨치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구성되었는데, 화순군의 경우 800~900명, 장흥에서 500명의 의용경찰이 존재했다. 이러한 의용경찰에 대한 비용은 지방민이 부담했다.<sup>133</sup>

정규 경찰과 달리 의용경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었다. 의용경찰대는 생명을 걸고 전투에 참가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의 장비는 상당히 열악했고, 심지어 고무신을 신고 전투에 참가하거나 생명 연장에 필요한 물통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채 토벌작전에 참여했다. 의용경찰은 담요나 이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맨바닥에서 노숙을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해야만 했다. 더욱이 이들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도 못 되었다.<sup>134</sup>

또한 지역민은 지서 경비나 ‘인주(人柱)’의 역할을 했다. 조순 의원은 “매일 같이 지서에 경비(警備)를 나가야 되고, 또한 인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기둥이라고 해서 보초를 세워 놓고 공비가 들어오는 것을 지키라고 해서 밤이면 경비를 나가서 서야 합니다. 거기에 경비를 그 사람들은 물어야 되고, 국체를 사야 되고, 죽도 살도 못 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발언했다.<sup>135</sup> 그리고 그는 10월 15일의 국회 발언에서도 “공비 출몰지구의 백성들에게는 종래에 매월 20일 이상의 부역”을 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sup>136</sup>

인주들은 이러한 고통스런 부역의 의무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빨갱이’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하기 일쑤였다. 예를 들면, 1951년 1월 4~5일 밤 화순군 이양면 금능리-강성리 사이에서 전주가 잘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5일 아침 화순경찰이 출동하여 전날 야경을 섰던 주민

133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전라북도의 의용경찰 수는 8,600명이며, 전국적으로 의용경찰 수는 약 3만 명이다. 국회사무처, 1951. 9. 29,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66호; 국회사무처, 1951. 10. 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67호.

134 국회사무처, 1951. 9. 29,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66호; 국회사무처, 1951. 10. 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67호.

135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136 국회사무처, 1951. 10. 15,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74호.

10여 명을 끌어다 사살했다.<sup>137</sup>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단지 적에게 동조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경찰은 지역민을 살해한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인주의 부역을 짊어진 지역민이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근절되지 않은 군경의 민폐와 지역민의 고통

1951년 2월 19일 국회에서 박정근 의원은 지리산지구에 파견된 3,000여 명의 경찰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1950년 12월 31일 지리산 주변에 파견된 3,000여 명의 경찰이 1인당 300여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비나 교통비 등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sup>138</sup> 이러한 발언을 달리 해석하면 지리산 주변의 지역민이 경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지역민들은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보조금까지 부담했다. 조주영 의원은 경남의 어느 지방에서 강제적으로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보조금을 징수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농가의 자질들이 일선에 나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민은 경찰관 유가족의 보조금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139</sup> 이러한 실태는 경남지방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었다.

1951년 3월 7일 대구에서 열린 특별지방장관회의에서 조병옥 내무부장은 “비상시국을 팔아서 민폐를 끼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엄중단속 처단할 작정”이며, 후생사업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은 엄중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sup>140</sup> 민폐는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경찰원조비, 치안유지비, 의용경찰비, 징병징용사무비 등이 모두 국가예산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지

13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b, 앞의 책, 40쪽.

138 국회사무처, 1951. 2. 19,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28호.

139 국회사무처, 1951. 2. 19,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28호.

140 「民弊를 嚴重 團束. 民主警察로 汚損 없도록. 趙 內務長官 公務員 機敏性 促求」, 『동아일보』, 1951년 3월 9일.

만 신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sup>141</sup>

민폐의 심각성은 영광이나 장성에서 두드러졌다. 1951년 4월 29일 변진갑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영광군의 경우 4,000두의 농우가 있었지만 현재 100여 두 정도이며, 장성에서는 쌀 13만 5,000석 중에서 5만 4,329석을 탈취당하고, 작전으로 인해 소각된 쌀이 5만 4,329석에 이르며, 3,500마리의 소가 있었지만 현재 32마리밖에 없었다. 물론 빨치산에 의해 발생한 피해도 존재했지만 변진갑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지역에 주둔한 국군의 비행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화순과 장성에 주둔한 11사단 20연대가 “토벌보다는 오히려 금품 재물עד다가 더 치중했다고 우리는 안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국민회나 면사무소에서 지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을 곧바로 주둔군에게 상납하는 실태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장성의 북이면에서는 집도 없이 토막생활을 하는 지역민조차 장작 하산작업이나 도로 복구사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142</sup>

이러한 행태는 전라도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95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윤길중 의원은 충남의 경우 지역민으로부터 총 12억 504만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각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회, 경찰후원회, 향토방위대, 국민방위군, 대한청년단, 시국대책위원회, 구국총연맹 등 모든 기관이 “민폐를 일으키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비판했다.<sup>143</sup> 국회는 이러한 민폐를 시정하기 위해 구국총력연맹 해체를 논의했으며, 1951년 6월 9일 송방용 의원 외 23인은 ‘구국총력연맹 해체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구국총력연맹은 1950년 7월 초 대전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조직이었다. 이후 임시 수도 부산에 본부를 두고 각 도에 지부를 두었으며, 군·면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확장했는데, 도에서는 도지사, 군에서는 군수, 면에서는 면장이 구

141 「(사설) 三十餘種의農村負擔을 듣고서」, 『경향신문』, 1953년 1월 24일.

142 국회사무처, 1951. 4. 29,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68호.

143 국회사무처, 1951. 4. 28,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10회 제67호.

국총력연맹의 최고책임자가 되어 강제로 기부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구국’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행되는 비행은 전국적으로 만연했으며, 송방용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북 정읍의 경우 1951년 2~3월 두 달 동안 1억 7,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징수했으며, 김제군 금산면에서는 구국총력연맹과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징수한 액수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는 ‘구국총력연맹 해체에 관한 긴급동의’를 내놓았고, 이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구국총력연맹뿐만 아니라 청년단이나 국민회도 해체하자는 개의를 내놓기도 했다. 윤길중 의원은 “여하한 애국적인 단체라 할지라도 관청의 힘과 결탁해서 회비의 징수, 기타 관청의 힘에 부수해서 권력행사를 행하는 그런 것을 일체 방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는 재개의를 내세웠다. 결국 윤길중 의원의 재개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통과되었다. <sup>144</sup> 그렇지만 구국총력연맹은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했다.

민폐 근절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7월 10일 홍창섭 의원은 인민군은 사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 즉 “부녀자 강간을 안 할 것, 소를 잡아먹지 않을 것, 죄 없는 사람을 잡지 않을 것”을 내세우고 실천함으로써 민심을 얻는 반면에 국군의 민폐가 극심하여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소는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군인 한 사람이 세 마리, 네 마리를 가져가다 노치고 뺏기고 가다 팔어 먹고 집집마다 물건이 있나 없나 뒤져서 이것을 후방으로 실어내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up>145</sup>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비소탕비”, “치안수습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부담했다. 더욱이 이재민도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순 의원은 “전라남도의 이재민들은 토굴 속에서 살면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기아에 헤매고 있고,

144 국회사무처, 1951. 6. 9,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8호.

145 국회사무처, 1951. 7. 10,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2호.

또한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모든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발언했다.<sup>146</sup> 또한 ‘후생사업’의 폐단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극심했는데, 조순 의원은 “홀병감살이라든지 군인 가족이라든지를 구호하는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전남에 심하다”고 주장했다.<sup>147</sup>

1951년 10월 13일 기부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이나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받는 가입금이나 정기회비를 제외하고,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을 제외하고, 여타의 기부금 모집을 엄금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제적 구제품, 천재지변 구호금, 국방헌납금, 상이군경 위문원호금, 학교유지비, 자선사업금에 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무장관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sup>148</sup> 법안을 둘러싼 토의 과정에서 “현행법인 기부금통제법 이것만 가지고라도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sup>149</sup> 1951년 10월 26일에 법안이 통과되고,<sup>150</sup>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 가치가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1952년 3월 27일 서민호는 국회의 국정감사 보고에서 “기부금지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65종의 기부명목으로 100억 원을 증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고급 경찰관리가 요정 출입을 하고 300명이 축첩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족 장례를 7일장으로 치르면서 1,700만 원의 조위금을 받았으며, 조위금을 많이 낸 부하 직원을 영전시킨 전남경찰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sup>151</sup>

146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147 국회사무처, 1951. 7. 11,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23호.

148 「寄附行爲 嚴禁, 禁止法案 國會 上程」, 『동아일보』, 1951년 10월 14일.

149 국회사무처, 1951. 10. 17,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11회 제75호.

150 「國會 學校에는 許諾, 寄附禁止法案 通過」, 『동아일보』, 1951년 10월 27일.

151 「國政監査 內務部 所管: 信賞必罰은 何處在. 寄附名目도 不知其數」, 『동아일보』, 1952년 3월 28일.

1953년 국정감사 보고에 나타난 일반 잡부금의 징수 실태는 전라북도의 경우 51종목에 현금 54억 4,000여 만 원, 현곡(現穀) 1만 9,000여 석, 신목(薪木) 9만 6,000여 속(束), 목탄(木炭) 9,600여 평이었다. 경상남도는 89종목에 현금 2,008억 7,665만 7,000원을 징수했으며, 이 액수는 경상남도 내 시·읍·면 예산총액의 약 8배였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반 잡부금 1조 5,930억 원, 군사관계 잡부금 900억 원, 경찰관계 잡부금 1,775억 원, 사친회 징수액 5,036억 원에 이르렀다.<sup>152</sup>

#### IV. 맺음말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지만, 전쟁으로 인한 상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전쟁으로 남과 북은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고, 특히 민간인 학살 등으로 인해 지역민은 단장지애의 고통을 겪었다. 전쟁이 지역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여 지역민 사이의 갈등구조가 온존하고 있으며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을 아물게 하고, 단장지애의 고통을 치유하며, 지역의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초래된 불편한 진실을 규명하고, 좌우갈등과 색깔론으로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일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남지역을 중심에 놓고 한국전쟁기의 빨치산 활동과 지역민의 처지를 탐색했다.

전남지역은 7월 하순에서 9·28후퇴까지 2개월간 인민군의 점령 아래 놓여 있었다. 제5사단이 서울로 이동하여 수도방위에 나섰기 때문에 호남지구의 방비는 허술했고, 새로 서해안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했으나 기간병력 대부분이 차출된 상태에서 잔여 병력과 신병, 그리고 학도병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조선인민군 제6사단은 방호산 지휘하의

152 「(사설) 稅外稅를 없애라」, 『경향신문』, 1953년 4월 30일.

정예군이었고, 빨치산이 신속히 퇴각하던 국군과 경찰을 상대로 교란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인민군의 전남지역 점령은 비교적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점령지에서는 당 재건과 함께 임시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고, 직업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동맹, 여성동맹, 민주청년동맹, 소년단 등 대중단체도 속속 복구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조선인민군은 9·28후퇴를 단행하고, 전남지역 경찰이 차츰 전남지역을 수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악지대로 입산한 빨치산의 활동으로 인해 장기간 온전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존재했다. 퇴각한 좌익세력과 빨치산은 ‘제2전선’ 형성을 목표로 전열을 정비하고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가 제11사단이었다. 제11사단의 토벌작전은 ‘견벽청야’로 불리는 초토화작전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불갑산지구에서 전개된 ‘대보름작전’을 들 수 있다. 이 작전으로 비무장 민간인 1,005명이 희생되고 불갑산지구가 붕괴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1951년 봄 빨치산 세력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녹음기로 접어들면서 전남지역 빨치산은 대규모로 활동을 전개했다. 1951년 하반기부터 빨치산 활동은 1949년 하반기의 ‘아성공격’을 연상시킬 정도로 공격규모가 크고 격렬했는데, 이러한 빨치산 작전의 대표적인 예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이르는 시기 구례지역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백야전사를 편성하여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빨치산 토벌작전에 나섰다. 백야전사 제2기 작전에서 제8사단은 백아산, 화학산을 공격했으며, 제16연대는 화순군 동북면에서 북쪽으로, 제21연대는 담양군 창평면에서 남동쪽으로 백아산을 포위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제107예비연대는 유치지구의 유격대를 공격했다. 또한 백야전사의 제3기 작전은 지리산과 더불어 백운산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백야전사 작전으로 빨치산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산발적으로나마 활동을 전개했지만 그 성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1953년 봄까지 생존한 빨치산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회문산, 백아산, 모후산 등

6개의 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빨치산은 1,000여 명 내외였다.

한국전쟁기 전국 각지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좌익인사에 대한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전라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순천, 여수, 함평, 해남, 완도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인민군이 점령하면서 학살과 처형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점령군은 우익인사를 색출하고 ‘악질분자’로 분류된 자들을 곧바로 처형하기도 했다. 특히 영광군 염산면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으로 지역민이 입은 피해는 더욱 컸다. 또한 조선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좌익에 의한 집단학살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국군과 경찰이 지역을 탈환하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좌익인사나 ‘부역혐의자’로 몰려 사살되거나 연행되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전남지역은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를 진압하기 위한 군경의 지역 주둔, 그리고 빨치산과 군경과의 교전 과정 등에서 지역민은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당했으며, 한편에서는 ‘반동부역자’로,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이러한 행태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11사단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인데, 담양, 장성, 화순, 영광 등지에서 상당수 발생했다.

또한 지역민은 노무동원이나 군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전라남도에서도 장정들이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되었다. 국민방위군사건 이후 병력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무분별하게 가두모집이나 강제 징·소집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가 극심했다. 또한 지역민들은 학도병이나 의용경찰로도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되거나 군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의용경찰대는 생명을 걸고 전투에 참가하는 존재였지만 의용경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었다. 또한 지역민은 지서 경비나 ‘인주(人柱)’의 역할을 했다. 인주들은 고통스런 부역의 의무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빨갱이’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하기 일쑤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역에 주둔한 군경의 민폐는 심각한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국민회나 면사무소에서 지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주둔군에게 상납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비소탕비’, ‘치

안수습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부담했다. 더욱이 이재민도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후생사업'의 폐단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극심했다. 1951년 10월 26일 기부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지법은 유명무실했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백운로동신문』, 『전남로동신문』, 『전남빨찌산』, 『전남인민보』, 『전남일보』,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국회 입시회의 속기록』, 『국회 정기회의 속기록』

### 단행본

고흥군사편찬위원회, 2000, 『高興郡史』, 고흥군사편찬위원회.

광양군지편찬위원회, 1983, 『光陽郡誌』, 광양군지편찬위원회.

國防軍史研究所, 1995,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국방군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9, 『韓國戰爭史』 제2권(개정판), 국방부.

\_\_\_\_\_, 1988, 『對非正規戰史(1945~196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김계유, 1988, 『麗水·麗川 發展史』, 도서출판 우도.

김남식, 1984, 『남로당 연구』 I, 돌베개.

金奭學·林鍾明, 1975, 『光復 30年』 3, 전남일보사.

김영택, 2001,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 『韓國戰亂一年誌』,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동아일보사, 1975, 『秘話 第一共和國』 2, 홍우출판사.

백선엽, 1992, 『實錄 智異山』, 고려원.

브루스 커밍스 지음, 조행복 옮김, 2017,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 현실문화.

안종철·최정기·김준·정장우, 2010, 『근현대 형성과정의 재인식』 (1), 중원문화.

- 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여수시사』 제1권, 여수시사편찬위원회.
- 陸軍本部, 1987, 『韓國戰爭史料 戰鬪詳報』 59, 육군본부.
- \_\_\_\_\_, 1994, 『한국전쟁시 學徒義勇軍』, 육군본부.
- 陸軍本部戰史監室, 1954, 『共匪討伐史』, 白樺社.
- 李應俊, 1982, 『回顧 90年』, 汕耘記念事業會.
- 임송자, 2007,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보수적 기원』, 선인.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3, 『全羅南道誌』 제9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 정관호, 2010(초판 2쇄), 『전남 유격투쟁사』, 선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a, 11,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
- \_\_\_\_\_, 2009b,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논문

- 권영진, 1990,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점령지역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택, 2003, 12,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 10. 5.~1954. 4. 5.): 전남 총사령부와 6개 지구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7.
- 김종준, 2006, 「한국전쟁기 서부경남지역 빨치산의 조직과 활동: 1950년 10월~1951년 6월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아, 2003, 12,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13.
- \_\_\_\_\_, 2011, 6,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활동과 그 영향」, 『역사연구』 20.
- \_\_\_\_\_, 2015, 「지리산권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6·25전쟁 직후부터 1951년 ‘남부군’ 결성을 중심으로」, 『지리산의 저항운동』, 선인.
- 임송자, 2019, 2, 「여순사건과 순천지역 좌우익 세력의 동향」, 『역사학연구』 73.
- \_\_\_\_\_, 2019, 6, 「전향의 반공주체 형성과 동원-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5.

## 기타

- 대통령기록관 소장자료: 「근로 의용단 결성식에 치사」(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기록콘

텐츠-정책기록: 노동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한국전쟁기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과 지역민

임송자

지금까지 빨치산에 대한 연구는 여러 편 나왔지만, 한국전쟁기 전남지역의 빨치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또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지역민이 어떠한 처지로 내몰렸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빨치산 활동과 한국전쟁 과정에서 지역민이 겪게 되는 고통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의 전남지역 빨치산 활동을 두 시기, 즉 조선인민군이 전남지역을 점령한 시기와 인민군 후퇴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조선인민군이 남진하여 전남지역을 점령하는 과정,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지원하기 위한 빨치산의 활동, 조선인민군 후퇴 이후 전남 각지에서 전개된 빨치산 활동, 그리고 군경 진압작전에 의해 빨치산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 등을 검토했다.

또한 한국전쟁 과정에서 지역민이 겪게 되는 고통의 실상을 탐색했다. 첫째, 한국전쟁기 전남지역의 민간인 학살사건을 살펴보았다. 둘째, 노무동원이나 병

력동원, 그 밖의 인력동원에 의해 지역민이 어떠한 처지로 내몰렸는지를 밝혔다. 셋째, 빨치산 진압을 위해 지역에 주둔한 군경에 의해 자행되는 민폐의 심각성을 탐색했다.

**주제어:** 한국전쟁, 빨치산, 조선인민군, 민간인 학살사건, 국민보도연맹, 인력동원

## ABSTRACT

# Partisan Activities in the Southern Jeolla Region and its Locals during the Korea War

Yim Songja

There are some research articles on partisan activities that have been published so far, but there is still not enough research on partisan activities in the southern Jeolla region during the Korean war. Also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hat look at the situation faced by the locals of the region during the Korean wa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more thoroughly and concretely the sufferings of the locals in the southern Jeolla region during the partisan activities and the Korean war.

This paper looks into the partisan activities of southern Jeolla region in two periods: when the Korean People's Army occupied the region and after the People's Army retreated from the a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People's Army's southward advance and occupation of the southern Jeolla area, partisans' activities to support the Korean People's Army's advance, partisan activities in many parts of

the region following the retreat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how the power of partisans was weakened by repression of the ROK Army and police.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s' suffering in the Korea war. First, the massacres of civilians in the southern Jeolla region has been researched. Second, this paper discusses the situation faced by the locals due to the mobilization for labor, troops and other manpower requirements. Third, this study looks into the serious troubles suffered by the locals due to military and police presence in the region to repress the partisans.

**Keywords:** Korean War, partisan, Korean People's Army (*Joseon Inmingoon*), massacre of civilians, National Guidance Federation (*Gookminbodoyeonmaeng*), mobilization of locals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연구(책임)자 : \_\_\_\_\_ (인)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7호(2020. 3)

초판 1쇄 인쇄 2020년 3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3월 31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